

2011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본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발간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큰 기대와 관심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년간의 제1기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1년 3월 제2기 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스마트폰 가입자 2천만 시대를 맞이하는 한편,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상용서비스 개시로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서비스는 450만명 가입자를 돌파하며 유료방송 시장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미디어 다양성 제고와 동반 성장을 위해 종편·보도채널을 개국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을 승인 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PC로부터 불붙은 스마트 혁명은 스마트TV로 이어지면서, 스마트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스마트 패권’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일궈낸 과거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 창의력과 상상력을 융합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다면 세계 최고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는 제2기 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토대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위원회의 발자취와 2011년 주요 실적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여 명실공히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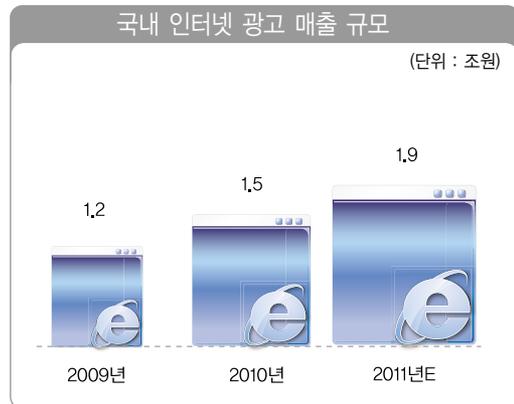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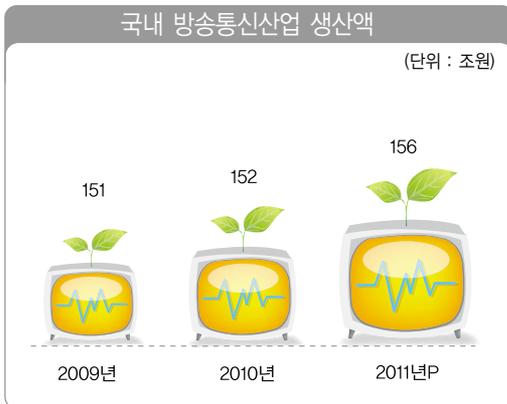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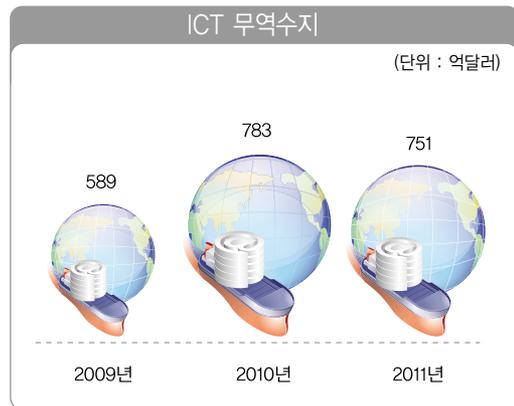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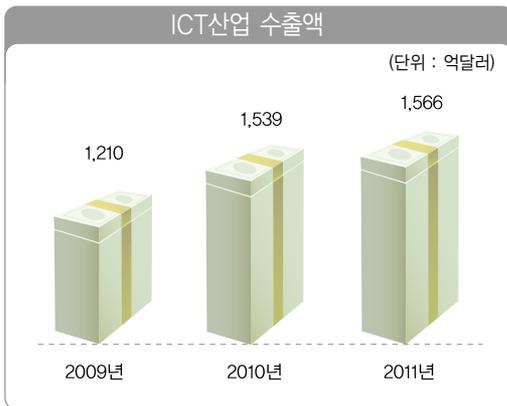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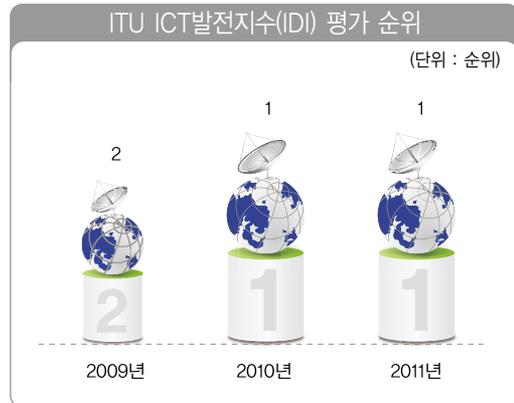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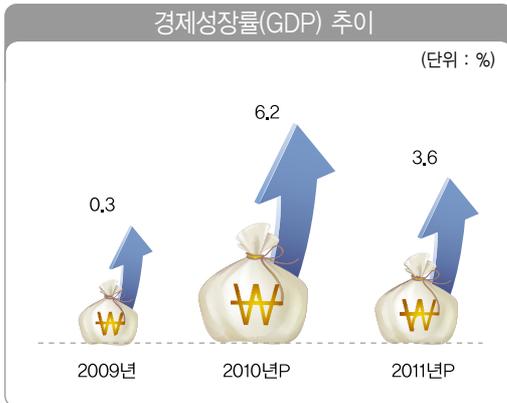
이 계 철

그래프로 보는 방송통신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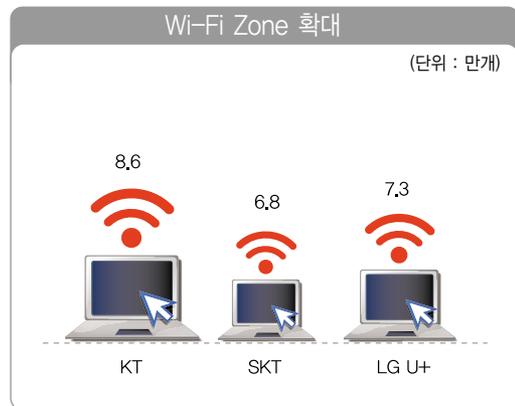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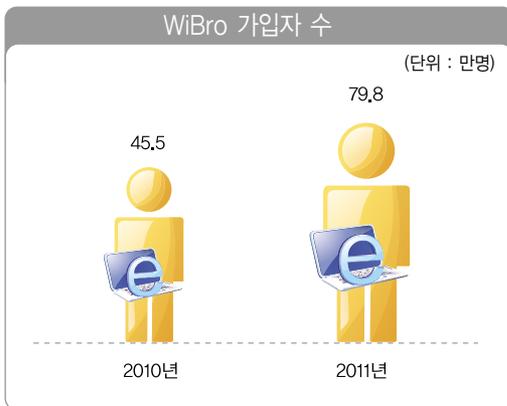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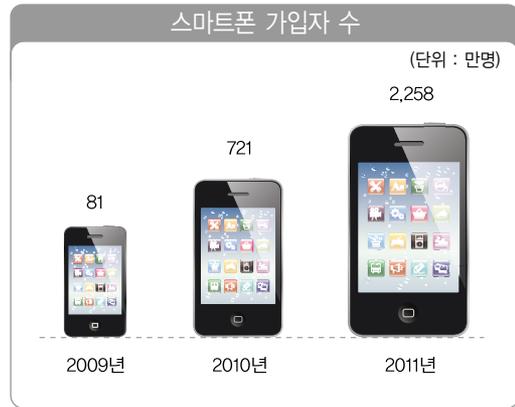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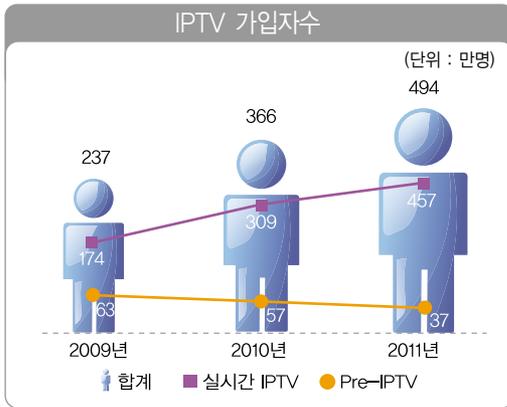
■ 방송통신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o ICT산업 수출액 및 방송통신산업 생산액 등 방송통신 분야의 꾸준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ICT발전지수 순위는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확산으로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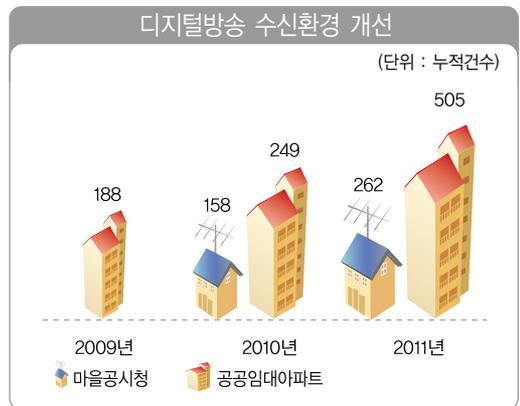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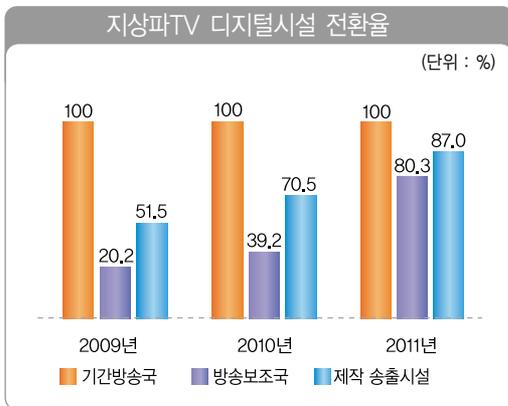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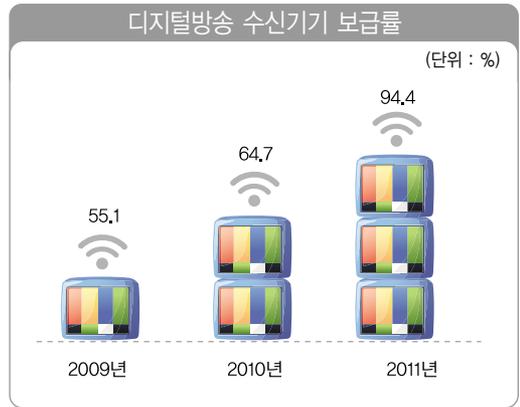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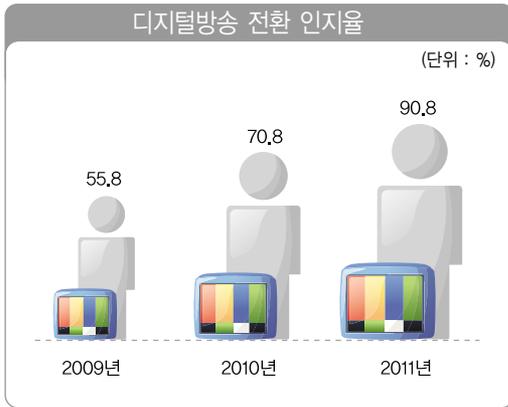
- IPTV는 서비스 개시 이후 3년 만에 457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스마트폰 가입자도 2010년 대비 213% 증가한 2,258만 명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 WiBro 가입자는 전년대비 75.4% 증가하여 79만 8천여 명을 확보하였고, Wi-Fi Zone 확대로 원활한 무선통신 이용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주. 2011년 12월 기준
 KT와 SKT는 Zone 단위로, LG U+는 Wi-Fi AP개수로 통계산출

■ 방송의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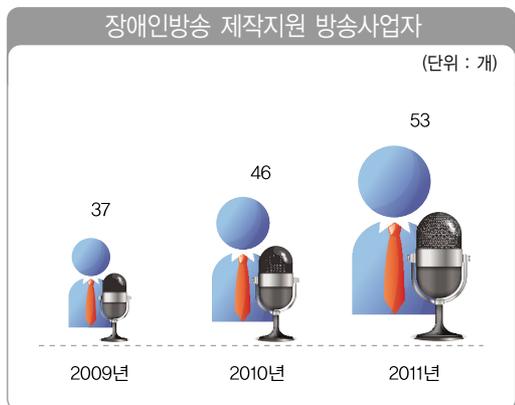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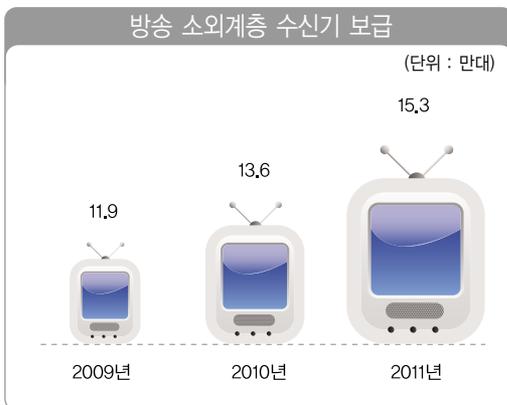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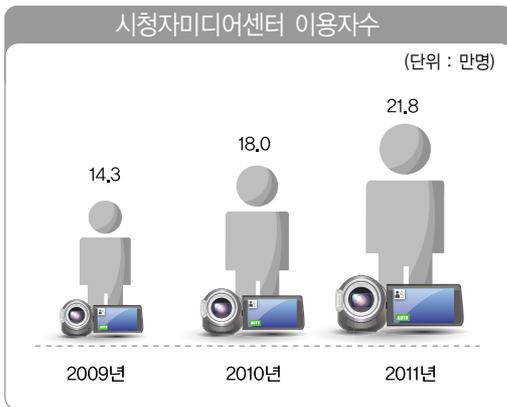
-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009년 55.8%에서 2011년 90.8%로, 디지털방송 수신 기기 보급률은 2009년 55.1%에서 94.4%로 상승하였습니다.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반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 공공임대아파트 및 마을공시청 설비 디지털화 실적

■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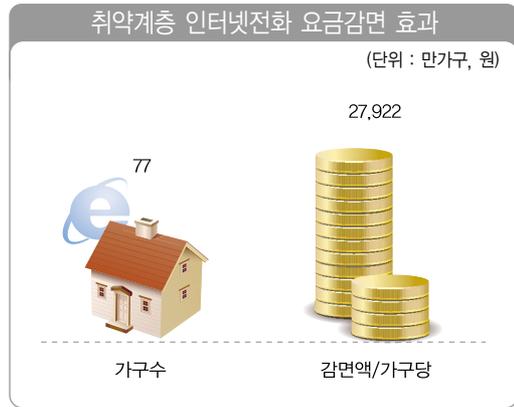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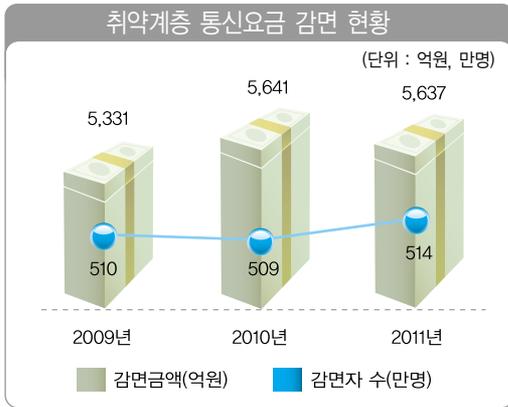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도에 21만 8천여 명에 달하였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방송편수도 385편에서 480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수신기 보급은 2011년 말까지 15만 3천여 대로 확대하였고,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방송사업자도 53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주. 수신기 보급은 누적대수임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이용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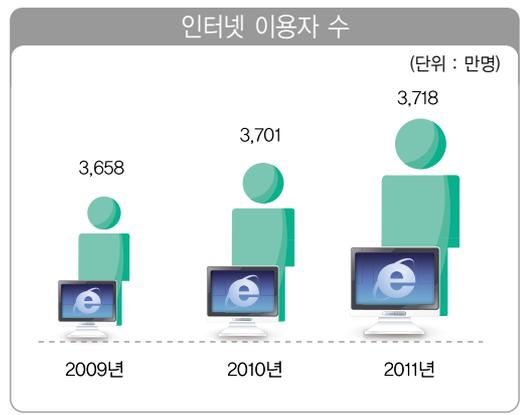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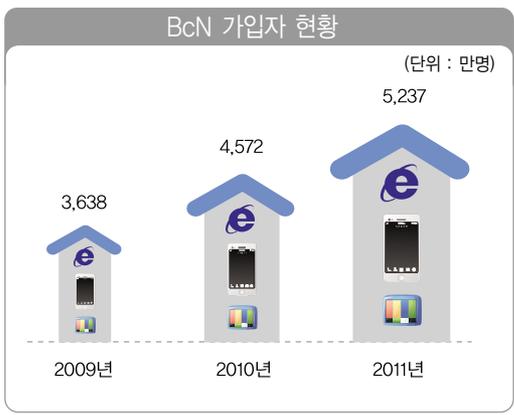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자 수는 5만여 명 늘어난 514만 명이고, 인터넷전화 서비스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77만 가구(가구당 27,922원)가 혜택을 받게 되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2011년 0.3건으로 전년대비 30.2%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통신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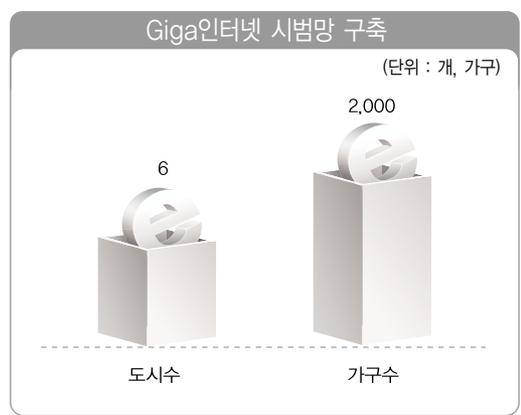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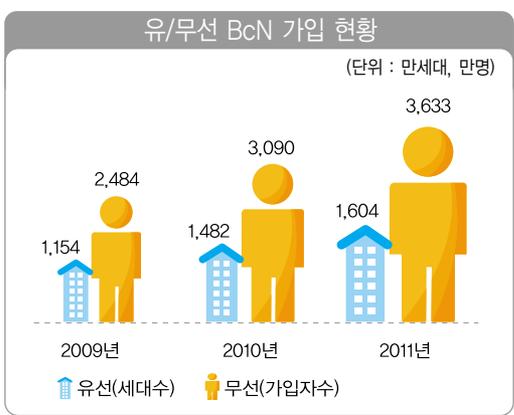
주. MVNO 기본료는 2개사 평균임

■ BcN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품질을 높이는 등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BcN은 5,237만 명(유선 1,604만 세대, 무선 3,633만 명)까지 보급하며 지속적인 방송통신망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수는 3,718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Giga인터넷 시범망 구축을 통해 방송통신망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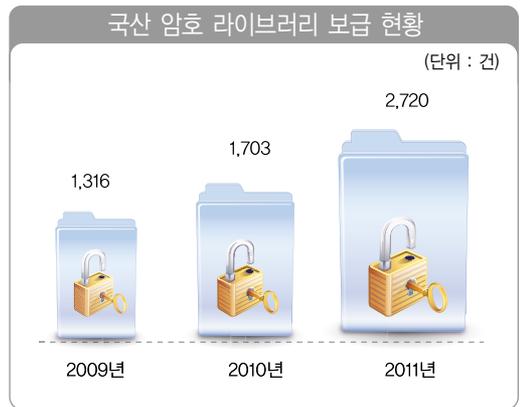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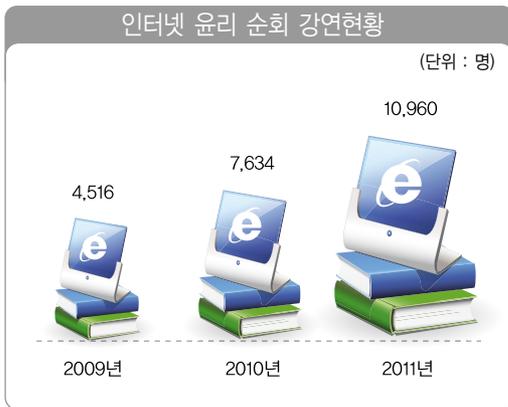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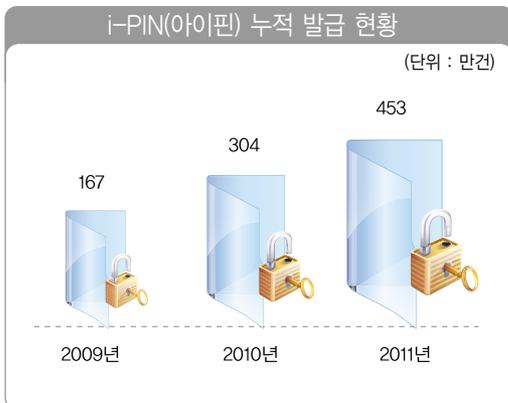


■ 미래 사회의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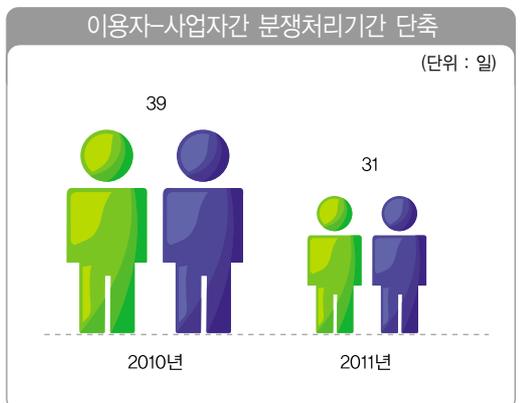
- 인터넷 윤리 제고를 위해 인터넷 윤리 순회 강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국산 암호 라이브러리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 i-PIN 발급은 2011년 약 453만 건으로 2010년보다 약 149만 건이 증가하였고, 방송통신 민원에 대한 분쟁처리 기간도 2010년 39일에서 31일로 8일을 단축하였습니다.



주. SEED, HIGHT, 스마트폰 암호 라이브러리 보급 합계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I. 방송통신 정책환경	1
1. 글로벌 경제현황과 방송통신 시장	3
가. 세계 거시경제 동향	3
나. 세계 방송시장 동향	4
다. 세계 통신시장 동향	7
2. 국내 방송통신 정책환경	8
가. 국내 경제동향과 방송통신시장 동향	9
나.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13
II. 2기 위원회 출범과 정책 방향	15
1. 2기 위원회 출범	17
가. 2기 위원회 상임위원 현황	17
나. 2기 위원회 출범의 의미	18
2. 2기 위원회 정책 방향	18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19
나.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19
다.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20
라.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20
3. 1기 위원회 추진성과	22
가. 1기 위원회 상임위원 현황	22
나. 1기 위원회 정책 추진성과	23

III.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27

- 1. 일반현황 29
- 2. 2010년 주요 성과 39
 - 가.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39
 - 나.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방송 정착 40
 - 다. 이용자 편의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41
 - 라.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42
- 3. 2011년 주요 정책목표 44

IV. 2011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45

- 제1절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47
 - 1.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래 네트워크 기술개발 47
 - 가.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 47
 - 나.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48
 - 다. 와이파이(Wi-Fi)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50
 - 2. 전파자원의 확보 및 공급 51
 - 가. 주파수 적기 공급 51
 - 나.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 54
 - 다. 공공 주파수 이용 효율화 57
 - 라. TV 유희대역 활용 58
 - 3.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 61
 - 가. 국내외 미래 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61
 - 나. 스마트 인터넷 기술경쟁력 강화 63
 - 다.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전환 촉진 64
 - 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66

4. 글로벌 신성장동력 기반 강화	69
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69
나.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	71
다. 녹색 방송통신 환경 조성	74
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	76
마.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80
5. 인터넷기반사회 대응역량 강화	81
가. 인터넷의 사회전반에 대한 영향 대응	81
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82
다. 인터넷 이용원칙 정립	85
제2절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87
1.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87
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87
나.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기반 구축	89
다. 근접통신(NFC) 기반 산업 창출	91
라.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	93
마. 위치정보(LBS) 기반 산업 활성화	97
바. 3D 방송서비스 활성화	98
2. 혁신적 생태계 및 벤처 인프라 조성	101
가. 혁신적 스마트 생태계 조성	101
나. 벤처기업 성장 촉진	102
다. 벤처기업 기술력 제고	104
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지원	107
마.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108
3.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촉진	109
가. 신규방송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 개선	109
나.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112
다. IPTV 서비스의 건실한 성장 지원	113
라.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116
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및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118

4. 공정한 경쟁원칙 확립	118
가. 통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18
나.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 등 사후규제기반 강화	120
다. 방송통신 분야 분쟁조정 기능 강화	122
5.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 확대	124
가.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124
나. 국제 ICT 협력활동 주도	135
다. 방송통신부문 통상협상 대응	145
라. 개도국 지원사업 확대	148
마. 방송통신 남북협력 추진	151
바.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강화 추진	153
제3절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157
1.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기반 마련	157
가. 방송사업 소유·경영 규제 개선	157
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158
다.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체계 확립	159
라. 방송 편성 및 평가제도 개선	161
2. 방송통신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164
가.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지원	164
나. 방송통신산업 전문인력 육성	166
다. 방송통신 콘텐츠의 시장활력 제고	168
라. 외주제작사 역량강화를 위한 방송제도 개선	169
3. 광고시장 확대로 미디어산업 견인	169
가.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및 효율성 제고	169
나. 중소방송 지원방안 마련	171
다. 방송광고(금지품목) 규제 개선	172
라. 스마트광고 기반 조성	172
마. 인터넷광고시장의 활성화 기반 조성	172

4.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174
가.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174
나. 시청자 지원 강화	177
다. 디지털라디오 도입	180
라. 방송장비 산업 육성	181
5. 고품격 청정 공영방송 구현	184
가. 공영방송의 자원기반 선진화 및 공적기능 제고	184
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185
제4절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188
1. 통신서비스 요금부담 완화	188
가. 통신시장 요금경쟁 촉발	188
나. 통신요금 부담 경감	190
다.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유도	192
라. 단말 유통구조 개선	193
마. 전화서비스의 번호이동성 확대	195
바.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편의지수 산정 추진	195
사. 통신망 공동구축	196
2.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강화	197
가.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	197
나.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202
다. 시청자 복지 및 권익보호 강화	202
라. 보편적 시청권 강화	207
마.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207
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	209
가. 이용자 알권리 제고 및 피해구제 강화	209
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16
다. 발신전화번호 표시제도 개선	222
라.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이용자 보호규정 강화	223
마. 전자파 대응체계 강화	223
바. 3D 시청 안전성 제고	225

4. 인터넷 문화선진국 구현	226
가. 선진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226
나. 불법/유해정보 유통차단 강화	229
5.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 강화	232
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확립	232
나. 모바일 보안 위협 대응	239
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41
라. 사이버 보안 글로벌 리더십 확보	243

부 록 245

1. 2011년도 회계 결산	247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250
3. 2011년도 주요 연월표	260
4. 영문 약어	274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278

표 목 차

〈표 I-1〉 주요 국가의 GDP 성장률 전망	4
〈표 I-2〉 세계 방송시장 규모	5
〈표 I-3〉 구성별 세계 TV광고시장 규모	6
〈표 I-4〉 지역별 세계 TV광고시장 규모	6
〈표 I-5〉 전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규모	7
〈표 I-6〉 전 세계 지역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규모	8
〈표 I-7〉 전 세계 이동전화 시장 전망	8
〈표 I-8〉 국내 GDP 추이.....	9
〈표 I-9〉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 전망	10
〈표 I-10〉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10
〈표 I-11〉 국내 IPTV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11
〈표 I-12〉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11
〈표 I-13〉 국내 인터넷 광고 매출액 전망	12
〈표 I-14〉 ICT 산업 수출입 현황	12
〈표 III-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현황	30
〈표 III-2〉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표.....	34
〈표 III-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6
〈표 III-4〉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36
〈표 III-5〉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37
〈표 III-6〉 2011년 정부입법 추진 현황	38
〈표 III-7〉 2011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	38
〈표 IV-1〉 연도별 BcN 보급 실적	47
〈표 IV-2〉 WiBro사업 주요 이행 현황	49
〈표 IV-3〉 연도별 LTE 구축 계획	49
〈표 IV-4〉 이동통신사별 LTE 투자 현황 및 계획	50
〈표 IV-5〉 2011년 Wi-Fi Zone 확대.....	51
〈표 IV-6〉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현황	52
〈표 IV-7〉 주파수 경매대상 및 경매결과	53
〈표 IV-8〉 2011년 주파수 할당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현황	54
〈표 IV-9〉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 개선사항	58
〈표 IV-10〉 TV유희대역 활용 실험서비스 주요내용	60
〈표 IV-11〉 TV유희대역 활용 기본계획 주요내용	61
〈표 IV-12〉 스마트워크 가이드북 주요내용	67
〈표 IV-13〉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준수사항	67

〈표 IV-14〉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주요내용	68
〈표 IV-15〉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 공시 결과	82
〈표 IV-16〉 국내 및 전세계 IE와 IE6 시장 점유율	84
〈표 IV-17〉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86
〈표 IV-18〉 근접통신(NFC)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92
〈표 IV-19〉 국내외 스마트TV 판매량 예측	94
〈표 IV-20〉 2011년도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개발 지원 현황	95
〈표 IV-21〉 스마트TV 주요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과제	95
〈표 IV-22〉 국내 스마트TV 서비스 현황(2011년 11월 기준)	96
〈표 IV-23〉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추진경과	99
〈표 IV-24〉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02
〈표 IV-25〉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 과정	109
〈표 IV-26〉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신규 방송 사업자 현황	110
〈표 IV-27〉 종편·보도 PP 선정 추진 일정	110
〈표 IV-28〉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과 콘텐츠 투자규모 변화 추이	111
〈표 IV-29〉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추진경과	112
〈표 IV-30〉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지원 현황	114
〈표 IV-31〉 2011년 IPTV 관련 주요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과제	115
〈표 IV-32〉 유료 방송매체 가입자 현황	115
〈표 IV-33〉 별정 4호 등록 현황	117
〈표 IV-34〉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시정	119
〈표 IV-35〉 공정경쟁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120
〈표 IV-36〉 사후규제기반 및 이용환경 조성의 세부 정책방안	122
〈표 IV-37〉 2011년도 방송통신 분쟁조정 내용	122
〈표 IV-38〉 방송통신 분쟁이슈 리포트(2011년 5~12월)	123
〈표 IV-39〉 제3회 국제 방송통신 분쟁포럼 주요발표 내용	124
〈표 IV-40〉 2011년도 4G 서비스 동향	125
〈표 IV-41〉 2011년도 모바일TV 서비스 동향	125
〈표 IV-42〉 2011년도 인터넷기반TV 서비스 동향	126
〈표 IV-43〉 2011년도 방송서비스 동향	126
〈표 IV-44〉 2011년도 브로드밴드 서비스 동향	127
〈표 IV-45〉 2011년도 방송통신 기반서비스 동향	128
〈표 IV-46〉 2011년도 전략국가 분류	129
〈표 IV-47〉 2011년도 정보제공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129
〈표 IV-48〉 2011년도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분야	130
〈표 IV-49〉 2011년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로드쇼 개최 실적	131

〈표 IV-50〉 2011년도 해외컨설팅 추진 실적	132
〈표 IV-51〉 2011년도 해외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실적	134
〈표 IV-52〉 ITU 텔레콤 전시회 추진 경위	137
〈표 IV-53〉 역대 APT 총회 개최 현황	138
〈표 IV-54〉 2011년 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IDI) 세부지표 순위	140
〈표 IV-55〉 방송통신장관회의 참석국 및 장·차관 수	141
〈표 IV-56〉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개최 실적	141
〈표 IV-57〉 TEIN 발전 현황	144
〈표 IV-58〉 TEIN 협력센터 설립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145
〈표 IV-59〉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45
〈표 IV-60〉 통신분야 한-미 및 한-EU FTA 협상결과	147
〈표 IV-61〉 방송분야 한-미 FTA 협상결과	147
〈표 IV-62〉 초청연수 사업실적	149
〈표 IV-63〉 개도국 방송장비 지원 실적(2007~2011년)	149
〈표 IV-64〉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사업	151
〈표 IV-65〉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운영	151
〈표 IV-66〉 미국 방문기관별 주요논의 내용	155
〈표 IV-67〉 방송법 시행령상 소유·경영 규제 현황	157
〈표 IV-68〉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추진경과	158
〈표 IV-69〉 한-미 FTA관련 방송법 시행령 및 편성고시 개정 내용	162
〈표 IV-7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점수(안)	163
〈표 IV-71〉 종합편성 PP에 대한 방송평가 배점	164
〈표 IV-72〉 2011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CPRC) 운영 지원 현황	167
〈표 IV-73〉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도입 추진경과	170
〈표 IV-74〉 지상파광고 판매시장 경쟁도입 전·후 비교	171
〈표 IV-75〉 미디어렐 입법에 따른 중소방송 지원방향	172
〈표 IV-76〉 연도별 디지털 전환 실적(2009~2011년)	174
〈표 IV-77〉 난시청 해소 사업 실적	175
〈표 IV-78〉 수신환경 개선 실적	176
〈표 IV-79〉 지역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결과	177
〈표 IV-80〉 2011년 디지털 전환 대국민 홍보 개요	178
〈표 IV-81〉 저소득층 지원현황	179
〈표 IV-82〉 국내 디지털라디오 추진 연혁	180
〈표 IV-83〉 국내에서 검토되는 디지털라디오 전송 방식과 특징	181
〈표 IV-84〉 디지털라디오 주파수 대역	181
〈표 IV-85〉 인증대상 방송장비 선정 및 시험인증 규격개발 실적	182

〈표 IV-86〉 방송장비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실적	183
〈표 IV-87〉 난시청 해소 지원 추진 실적	184
〈표 IV-88〉 연도별 작가, PD 등 교육현황	186
〈표 IV-89〉 연도별 방송심의 제재 현황	187
〈표 IV-90〉 막말, 저품격 방송 관련 법정 제재 현황.....	187
〈표 IV-91〉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관련 주요 합의 내용	188
〈표 IV-92〉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제도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189
〈표 IV-93〉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90
〈표 IV-94〉 지출목적별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 기준).....	190
〈표 IV-95〉 명목가계통신비 추이(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191
〈표 IV-96〉 통신요금 TF 주요 정책방안	191
〈표 IV-97〉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	192
〈표 IV-98〉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방식 비교	193
〈표 IV-99〉 통신서비스의 다양한 편익.....	195
〈표 IV-100〉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요재원 계획.....	197
〈표 IV-101〉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세부 정책방안	198
〈표 IV-102〉 2011년 지상파5사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199
〈표 IV-103〉 방송수신기 보급 세부 정책방안.....	200
〈표 IV-104〉 방송수신기별 달성율 산출내역	200
〈표 IV-105〉 장애인방송 의무화 세부 정책방안.....	201
〈표 III-106〉 도·농간 광대역통합망(BcN) 가입률 비교	202
〈표 IV-107〉 시청자미디어센터 근거 규정	205
〈표 IV-108〉 금지행위 유형중 신설 사항.....	207
〈표 IV-109〉 요금감면 대상 및 기준.....	209
〈표 IV-110〉 방송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수준 평가체계 및 배점	210
〈표 IV-111〉 설명서에 포함되는 주요 보상규정	211
〈표 IV-112〉 서비스별 위약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민원 현황	212
〈표 IV-113〉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 고시 주요 개정내용.....	213
〈표 IV-114〉 2009~2010년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이용률	213
〈표 IV-115〉 사업자별 미환금액 현황	214
〈표 IV-116〉 2011년도 민원 처리 현황.....	215
〈표 IV-117〉 스마트폰 통화성공률	216
〈표 IV-118〉 2011년 방송통신 이용자미래포럼 주요내용	219
〈표 IV-119〉 ARS서비스 점검·평가 결과	221
〈표 IV-120〉 개정된 전자파흡수율(SAR)기준	223
〈표 IV-121〉 3D영상 안정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2.0)의 주요 개선내용	226

〈표 IV-122〉 2011년 인터넷윤리 교실 운영 현황	227
〈표 IV-123〉 2011년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운영 현황	227
〈표 IV-124〉 2011년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	228
〈표 IV-125〉 2011년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현황	228
〈표 IV-126〉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	231
〈표 IV-127〉 DDoS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제공 현황	232
〈표 IV-128〉 인터넷망 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 구축 현황	233
〈표 IV-129〉 악성코드 유포지/경유지 사고처리 건수	234
〈표 IV-130〉 ISMS 인증서 발급 추이	236
〈표 IV-131〉 국산 암호 라이브러리 보급 현황	236
〈표 IV-132〉 2011년도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방송 현황	237
〈표 IV-133〉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사업자 수	239
〈표 IV-134〉 무선랜 보안 운영 현황	240
〈부록 표-1〉 2011년도 회계 결산 총괄 현황	247
〈부록 표-2〉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248
〈부록 표-3〉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248
〈부록 표-4〉 프로그램 총괄현황	249
〈부록 표-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250
〈부록 표-6〉 2011년도 주요 연월표	260
〈부록 표-7〉 영문 약어	274

그림 목 차

〈그림 I-1〉 세계 이동통신서비스 성장률 및 지역별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7
〈그림 II-1〉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2012년 3월 기준)	17
〈그림 II-2〉 1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2008년 3월 기준)	22
〈그림 III-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33
〈그림 III-2〉 비전과 정책목표	44
〈그림 IV-1〉 모바일 트래픽 예측치 산출 결과	54
〈그림 IV-2〉 주파수 소요량 예측치 산출 결과	55
〈그림 IV-3〉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계획	56
〈그림 IV-4〉 TV 유희대역 활용 서비스 모델 예시	59
〈그림 IV-5〉 국제 연구망(TEIN) 구성도	62
〈그림 IV-6〉 스마트 인터넷 발전방향	64
〈그림 IV-7〉 「한국」 등록기간	66
〈그림 IV-8〉 LTE-Advanced 시연 현황	70
〈그림 IV-9〉 국제기구 표준단계별 국내 현황과 투자 방향	72
〈그림 IV-10〉 분야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이용 현황	77
〈그림 IV-11〉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공공정보 제공 현황	78
〈그림 IV-12〉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공공정보 분야별 만족도 설문조사	78
〈그림 IV-13〉 상호작용형 방송통신 신 융합서비스	79
〈그림 IV-14〉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모델(매체간 연동, 영상/스마트폰기반+플랫폼 개방)	79
〈그림 IV-15〉 웹 기술지원센터(www.wtsc.kr)	84
〈그림 IV-16〉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네트워크 구성	89
〈그림 IV-17〉 스마트폰 원격 모니터링 및 UCC 동영상 서비스 화면 예	90
〈그림 IV-18〉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생중계	99
〈그림 IV-19〉 3DTV 방송시스템 분야 특허의 연도별 주요 국가별 특허동향	100
〈그림 IV-20〉 IBS 프로그램 프로세스	103
〈그림 IV-21〉 스마트 노드의 구조도	105
〈그림 IV-22〉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응용서비스 진화 방향	106
〈그림 IV-23〉 중소기업 전용 흡소핑 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	108
〈그림 IV-24〉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로드쇼	131
〈그림 IV-25〉 방송통신 해외 홍보물	132
〈그림 IV-26〉 중남미 쇼케이스	133
〈그림 IV-27〉 중동 쇼케이스	134
〈그림 IV-28〉 APT 12차 총회 및 제35차 관리위원회 참가자	138
〈그림 IV-29〉 제6차 KANZ 장관회의	142

〈그림 IV-30〉 해외공동제작 프로그램	143
〈그림 IV-31〉 국제기구 협력사업	144
〈그림 IV-32〉 개도국 방송통신 초청연수 사업	148
〈그림 IV-33〉 개도국 방송장비지원	149
〈그림 IV-34〉 개도국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개도국 방송장비지원	150
〈그림 IV-35〉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회의	152
〈그림 IV-36〉 남북 방송통신 워크숍(DMZ 안보현장 견학)	152
〈그림 IV-37〉 MWC 2011 국내 ICT기업 부스 방문	154
〈그림 IV-38〉 NAB 2011 '한국의 날 컨퍼런스'	154
〈그림 IV-39〉 미국 주요 ICT기업 면담	155
〈그림 IV-4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미국 출장보고서 「한국 방송통신의 미래를 찾아서」 ..	156
〈그림 IV-41〉 방송시장의 기본구조	159
〈그림 IV-42〉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	160
〈그림 IV-43〉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점수(안)	162
〈그림 IV-44〉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내 방송인프라 구조도	165
〈그림 IV-45〉 모바일광고 플랫폼(MAdP) 인증 기준	173
〈그림 IV-46〉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추이	177
〈그림 IV-47〉 디지털 전환 TV광고 화면 (2011년 11월 27일 ~ 12월 29일)	178
〈그림 IV-48〉 추석맞이 디지털 전환 가두 캠페인 (2011년 9월 9일)	178
〈그림 IV-49〉 취약계층 지원대상 디지털 수상기 전달 모습	179
〈그림 IV-50〉 방송장비 인증제품 전시홍보 사례	183
〈그림 IV-51〉 청소년 언어 특집 프로그램 자료 화면	185
〈그림 IV-52〉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제도 개선방안	195
〈그림 IV-53〉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편익지수	196
〈그림 IV-54〉 장애인방송 제작사업자수 및 소외계층 수신기 보급대수	199
〈그림 IV-55〉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체계도	201
〈그림 IV-56〉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및 참여프로그램 방송편수	204
〈그림 IV-57〉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메인화면	217
〈그림 IV-58〉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e-learning 교재	218
〈그림 IV-59〉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220
〈그림 IV-60〉 제주 우주전파센터 개소	224
〈그림 IV-61〉 3D 시청안전성 권고안 홍보 사례	225
〈그림 IV-62〉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227
〈그림 IV-63〉 인터넷윤리 로고와 캐릭터	228
〈그림 IV-64〉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230
〈그림 IV-65〉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 및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App)	239

I

방송통신 정책환경

1. 글로벌 경제현황과 방송통신 시장
2. 국내 방송통신 정책환경



I 방송통신 정책환경

1. 글로벌 경제현황과 방송통신 시장

2011년 전 세계 경제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에 걸림되고 있지만 방송통신 분야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로 국내 성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마트폰의 확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은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발점이 되는 2011년 세계 경제동향과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세계 거시경제 동향

2011년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경기침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 결과 세계경제 GDP 성장률은 3.8% 성장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非OECD 국가들은 견조한 성장을 보였으나, 성장세는 둔화되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재

정위기로 인해 성장이 약화되었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5월에 OECD가 발표한 2011년 세계 GDP 성장률은 4.2%로 나타났으나, 2011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GDP 성장률은 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1〉 참조)

OECD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4.0%, 비관적으로 2.1%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평균적으로는 3.4%를 예상하였다. 비관적 전망에는 유로존의 깊은 경기침체가 세계경제에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주요 요인은 유로존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황 가능성으로, 이는 무질서한 국가부도(disorderly sovereign default), 과도한 재정긴축(excessive fiscal tightening),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systemic bank failure)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관적 전망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신뢰성있는 해결방안을 통해 시장이 회복되고, 위험을 예방할 경우에 해당된다.

OECD의 2011년 11월 전망에서 한국의 2011년 경제성장률을 3.7%, 2012년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교역 둔화와 투자 부진 등으로 2011년도 경제성장은 위축

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은 점차 회복되어, 2013년에는 성장률이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I-1〉 참조)

〈표 I-1〉 주요 국가의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2011년 5월 전망		2011년 11월 전망		
	2011E	2012E	2011E	2012E	2013E
세계경제	4.2	4.6	3.8	3.4	4.3
OECD 국가	2.3	2.8	1.9	1.6	2.3
미국	2.6	3.1	1.7	2.0	2.5
유로	2.0	2.0	1.6	0.2	1.4
일본	△0.9	2.2	△0.3	2.0	1.6
한국	4.6	4.5	3.7	3.8	4.3

E(Estimate) : 추정치(샘플을 이용하여 모수(parameter)를 추정함 값)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2011. 11), OECD, KAIT 재구성

나. 세계 방송시장 동향

PricewaterhouseCoopers(2011)에 의하면, 세계 방송시장 규모는 2010년에 약 4,14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1년에 4,363억 달러규모에서 2015년에 5,666억 달러 규모로, 약 6.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TV 시청의 증가와 경기회복에 의해 광고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서고, 온라인 시청의 증가로 온라인TV 광고비가 증가하며, 모바일 앱과 태블릿PC의 보급 확대 및 모바일 단말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모바일TV 광고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표 I-2〉 참조)

방송시장은 크게 기존방송과 온라인 및 모

바일 방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방송은 지상파TV, 유료TV(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PPV), 라디오방송 등을 포함한다. 2011년 기준 기존방송이 전 세계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3%에 달하며, 2015년에는 9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온라인 및 모바일 방송시장 규모는 119억 달러로 전 세계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253억 달러로 전 세계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온라인 및 모바일 방송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PwC 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 및 모바일 방송시장의 확대는 OTT, 모바일TV, VOD 등의 높은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표 I-2〉 참조)

〈표 I-2〉 세계 방송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E	2011년E	2012년E	2013년E	2014년E	2015년E	CAGR (2011~2015)
전 세계 방송시장 규모	3,860	4,149	4,363	4,717	4,992	5,393	5,666	6.8%
기존방송	3,777	4,051	4,244	4,570	4,813	5,178	5,413	6.3%
온라인 및 모바일방송	83	98	119	147	179	215	253	20.8%
기존방송 비중	97.8%	97.6%	97.3%	96.9%	96.4%	96.0%	95.5%	-
온라인 및 모바일방송 비중	2.2%	2.4%	2.7%	3.1%	3.6%	4.0%	4.5%	-
전 세계 방송시장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율	-1.2%	7.5%	5.2%	8.1%	5.8%	8.1%	5.1%	-

E : 추정치

주 : 방송의 범위는 지상파TV,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PPV, 라디오방송, 온라인 및 모바일 방송 포함

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PricewaterhouseCoopers, 2011년, KAIT 재구성

전 세계 TV광고시장 규모는 2009년에 1,541억 달러였으나 점차 성장하여 2011년에 1,754억 달러로 전망되었다. 판매 및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TV 이용증가와 경제의 회복은 전반적 TV광고시장에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고화질(high-definition)TV 보급의 성장과 다채널 플랫폼의 확대가 TV광고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향후 TV광고시장은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V광고시장은 2011~2015년 기간동안 연평균 7.3%로 지속 성장하여 2015년에 2,327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표 I-3〉 참조)

이런 성장은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시장에서 두드러졌다. 북미와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웹에 연결된 TV의 가용성, 아태지역에서 온라인TV 시청수준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모든 영역에서 스트리밍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TV광고시장을 더욱 성장하게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과 태블릿PC의 보급률 증가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의 모바일TV를 위한 앱의 런칭은 모바일TV 이용과 광고를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TV광고시장은 크게 방송TV광고와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로 구성된다. 2011년 방송TV광고는 1,71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TV 광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채널TV 광고는 지상파TV 광고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평균 8.8%의 성장을 통해 2015년에는 676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는 2011년 45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으며, 이중 모바일TV 광고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TV 광고는 2011~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34.0% 성장하여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3〉 참조)

〈표 I-3〉 구성별 세계 TV광고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E	2011년E	2012년E	2013년E	2014년E	2015년E	CAGR (2011~2015)
방송TV광고	1,513	1,662	1,710	1,873	1,954	2,154	2,219	6.7%
다채널TV광고	407	451	482	531	576	634	676	8.8%
지상파TV광고	1,029	1,128	1,142	1,252	1,285	1,423	1,442	6.0%
기타	77	83	86	90	93	98	101	4.4%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	28	36	45	57	73	91	108	25.2%
모바일TV광고	5	7	9	13	18	23	29	34.0%
온라인TV광고	22	29	35	44	55	67	79	22.6%
합계	1,541	1,698	1,754	1,930	2,026	2,245	2,327	7.3%

E : 추정치

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PricewaterhouseCoopers, 2011년, KAIT 재구성

주 : 반올림에 따른 합계에 오차가 있음

TV광고시장은 지역별로 북미지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1년에는 747억 달러 규모(방송TV광고 720억 달러,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 2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태평

양, 유럽/중동/아프리카, 남미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TV 광고시장과 온라인 및 모바일 TV 광고시장은 2011~2015년 기간동안 남미지역이 각각 연평균 9.6%, 41.4%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4〉 참조)

〈표 I-4〉 지역별 세계 TV광고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E	2011년E	2012년E	2013년E	2014년E	2015년E	CAGR (2011~2015)	
방송 TV 광고	북미	652	722	720	798	801	874	886	5.3%
	유럽/중동/아프리카	375	403	424	453	478	513	538	6.1%
	아태	371	402	418	458	497	546	583	8.7%
	남미	116	135	147	165	178	221	212	9.6%
	합계	1,513	1,662	1,710	1,873	1,954	2,154	2,219	6.7%
온라인 및 모바일 TV광고	북미	17	21	27	33	41	49	57	20.5%
	유럽/중동/아프리카	3	4	5	7	10	14	17	35.8%
	아태	8	10	12	16	21	26	32	27.8%
	남미	0.1	0.4	0.5	0.8	1.1	1.8	2.1	41.4%
	합계	28	36	45	57	73	91	108	24.8%

E : 추정치

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PricewaterhouseCoopers, 2011년, KAIT 재구성

주 : 반올림에 따른 합계에 오차가 있음

다. 세계 통신시장 동향

2011년 세계 통신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브로드밴드 부문의 성장세가 두각을 나타내었다. Gartner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은 1조 6,567억 달러 규모에 도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2.7%

성장한 1조 7,020억 달러로 전망되었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2.8% 성장하여 2015년에는 1조 8,5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1년 통신서비스가 IT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5년에는 43.1%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표 I-5> 참조)

〈표 I-5〉 전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2013년E	2014년E	2015년E	CAGR (2011~2015)
세계 통신서비스	15,317	15,965	16,567	17,020	17,534	18,073	18,527	2.8%
세계 IT산업	32,237	34,064	35,982	37,588	39,320	41,125	43,008	4.6%
통신서비스 증가율	-3.0%	4.2%	3.8%	2.7%	3.0%	3.1%	2.5%	-
IT산업에서의 통신서비스 비중	47.5%	46.9%	46.0%	45.3%	44.6%	43.9%	4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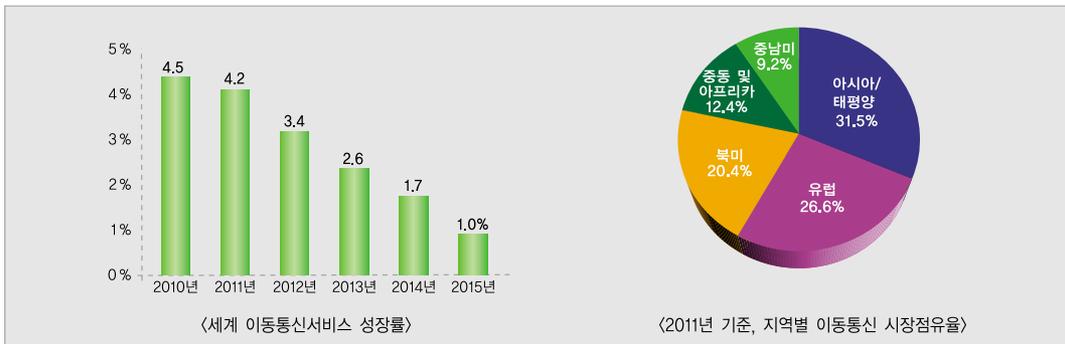
E : 추정치

자료 : Gartner, 2011년 재구성, KAIT 재구성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을 살펴보면,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010년 4.5% 성장하였으나 2011년 이후 차츰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31.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 참조)

2011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9,5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동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2011~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2.2%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1조 400억 달러 시장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6> 참조)

〈그림 I-1〉 세계 이동통신서비스 성장률 및 지역별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표 I-6〉 전 세계 지역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2013년E	2014년E	2015년E	CAGR (2011~2015)
북미	1,834	1,885	1,942	2,009	2,071	2,124	2,166	2.8%
중남미	768	827	879	903	924	932	940	1.7%
유럽	2,533	2,516	2,535	2,554	2,560	2,553	2,543	0.1%
아태	2,641	2,828	3,002	3,137	3,250	3,322	3,347	2.8%
중동/아프리카	980	1,095	1,181	1,261	1,319	1,365	1,404	4.4%
합계	8,756	9,151	9,539	9,864	10,124	10,296	10,400	2.2%

E : 추정치

자료 : OVUM, 2011년, KAIT 재구성

전 세계 이동전화 가입자는 2011년 약 54억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2015년에는 연평균 7.2%가 성장하여 약 7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전화 출하량은 2011년에 약 15억

대가 출하되었으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은 약 4억 7,465만 대가 출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2015년에는 약 10억 대의 스마트폰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7〉 참조)

〈표 I-7〉 전 세계 이동전화 시장 전망

(단위 : 천명, 천대,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2013년E	2014년E	2015년E	CAGR (2011~2015)
이동전화가입자	4,223,082	4,853,458	5,442,700	5,907,595	6,347,515	6,790,300	7,192,140	7.2%
이동전화 출하량	1,246,864	1,378,451	1,492,060	1,546,428	1,620,902	1,700,991	1,773,314	4.4%
스마트폰 출하량	198,665	277,222	474,651	647,144	794,943	925,038	1,041,993	21.7%

E : 추정치

자료 :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2011년 12월, KAIT 재구성

2. 국내 방송통신 정책환경

2011년 국내 방송통신 정책환경은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기의 확산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의 확대와 함께 무선데이터 시장 확산을 이루게 하여 이

동전화 가입자 포화 이후 성장 정체에 놓여있던 통신산업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에서의 종합편성채널 개국과 통신에서의 LTE서비스 개시는 새로운 성장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스마트폰으로 비롯된 시장변화는 2011년에도 이어졌으며, 소셜 커뮤니티를 통

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확산되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가입자가 도입 2년만에 2,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확산으로 본격적인 콘텐츠 수요를 촉발하였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 속에서 방송통신 정책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을 통해 산업의 변화 및 성장을 주도하고자 하였다.

2011년은 네트워크, 스마트 디바이스, 혁신적 사업모델 등이 스마트 생태계를 구성하며 성장의 돌파구로 작용하였다. 향후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스마트 혁명은 소셜 커뮤니케이션, 스마트워크(Smart work), 사물지능통신

(M2M),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ICT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스마트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 국내 경제동향과 방송통신시장 동향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3%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말부터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며 2011년은 약 3.6%(GDP 약 1,0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8〉 참조). 그러나 미국, EU 등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12년 GDP 성장률은 2011년 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I-8〉 국내 GDP 추이

구 성	(단위 : 십억원, %)					평균 (2007~2011)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2011년P	
GDP(실질, 십억원)	956,515	978,499	981,625	1,042,111	1,079,627	1,007,675
GDP 성장률(실질,%)	5.1	2.3	0.3	6.2	3.6	3.5

P(Preliminary) : 잠정치(자료수집 시간관계로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또는 중요 변수만을 가지고 추정함 값)
자료 : 한국은행, KAIT 재구성

2011년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은 약 1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08~2012년 기간동안 연평균 3.4%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은 방통융합

서비스로 2008~2012년 기간동안 연평균 17.0%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송통신기기 시장에서 통신기기 생산액은 2011년 약 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9〉 참조)

〈표 I-9〉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 전망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P	2012년E	CAGR (2008~2012)
방송통신산업	140,730	151,432	151,774	156,161	160,974	3.4%
방송통신서비스	57,991	60,503	63,043	65,622	68,641	4.3%
통신서비스	42,662	43,598	43,636	44,092	44,736	1.2%
방송서비스	9,288	9,519	10,738	11,622	12,645	8.0%
방통융합서비스	6,042	7,386	8,669	9,908	11,260	17.0%
방송통신기기	82,739	90,929	88,731	90,539	92,332	2.7%
통신기기	69,846	76,839	73,218	74,591	75,719	2.0%
방송기기	12,894	14,090	15,513	15,948	16,614	6.4%

P : 잠정치, E : 추정치

자료 : 2011년까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년은 KISDI, KAIT 재구성

2011년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약 5,251만 명에 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232만명이 증가한 5,483만 명이 예상된다. 2012년에는 기존 2G 및 3G 가입자의 LTE 전환에 따라 4G 가입자는 1,350만 명으로 급증하지만 2G 및 3G 가입자수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10〉 참조)

2010년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약 721만 명에 달하였으나, 2011년 12월에 이미 2,258만

명을 돌파하여, 경제활동인구 2,500만명 중 약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2011년 이동전화 가입자(5,251만 명) 중 스마트폰 이용자는 43% (2,258만 명)에 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54.1% 증가한 약 3,4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년 매출액은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10〉 참조)

〈표 I-10〉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E	2012년 성장률
이동전화 가입자수	4,794	5,077	5,251	5,483	4.4%
• 2G	2,318	2,022	1,582	1,136	-28.2%
• 3G	2,476	3,055	3,550	2,997	-15.6%
• 4G	-	-	119	1,350	1,034.5%
매출액	191,456	198,221	199,032	191,998	-3.5%
스마트폰 가입자수	81	721	2,258	3,480	54.1%

E : 추정치

주 : 매출액은 무선망접속료 제외

자료 : 2011년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년은 KT경제경영연구소, KAIT 재구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해당되는 IPTV 서비스는 2011년 가입자가 약 494만 명, 매출액은 6,0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통신3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가입자와 매출이 모두 급증하였다. 2012년에는 상대적으로

가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매출 성장률이 가입자 성장률을 넘어섰는데, 그 이유는 VOD PPV(Pay Per View)의 이용 활성화에 따라 ARPU가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11> 참조)

〈표 I-11〉 국내 IPTV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구 분	(단위 : 만명,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P	2012년E	2012년 성장률
가입자수	159	237	366	494	571	15.6%
매출액	1,140	2,448	4,043	6,033	7,684	27.4%

P : 잠정치, E : 추정치

주 : 2011년 매출액은 추정치임

자료 : 2011년까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년은 KT경제경영연구소, KAIT 재구성

2011년 국내 유료방송 서비스의 가입자수는 1,942만 명에 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2.2% 증가한 1,98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방송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반면, 유료방송 서비스 매출액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선방송 또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IPTV와 위성방송의 수요증가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실적부진으로 인해 결합서비스를 통한 가입자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I-12> 참조)

〈표 I-12〉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매출액 전망

구 분	(단위 : 만명,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P	2012년E	2012년 성장률
가입자수	1,969	1,972	1,942	1,984	2.2%
• 유선 방송	1,523	1,504	1,498	1,452	-3.1%
• 위성 방송	446	468	444	532	19.8%
매출액	23,006	24,107	24,337	24,828	2.0%
• 유선 방송	18,168	19,378	19,441	17,956	-7.6%
• 위성 방송	4,838	4,729	4,896	6,872	40.4%

P : 잠정치, E : 추정치

주 : 위성방송은 일반위성방송과 위성DMB를 포함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각사 IR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KAIT 재구성

2011년 인터넷 광고시장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광고가 급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출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검색 광고 매출액은 약 1조 3천억 원,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액은 약 6천억 원

에 달하였다. 2012년에는 17.1% 성장한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는 2011년과 유사하게 스마트폰에 의한 모바일 광고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I-13> 참조)

〈표 I-13〉 국내 인터넷 광고 매출액 전망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2012년 성장률
인터넷 광고	12,430	15,470	18,979	22,216	17.1%
• 검색 광고	8,287	10,313	12,986	14,489	11.6%
• 디스플레이 광고	4,143	5,157	5,993	7,727	28.9%

E : 추정치

자료 : 각사 IR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우리나라 ICT 산업의 수출액은 세계경제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은 수출액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0년 이후 경기회복을 통하여 2011년에는 약 1,566억 달러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전체 수출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15.5%를 차지하였다. 2010년 보다 수입의 비중이 2.3%p 감소함으로써 수입의존도를 줄

일 수 있었으나, ICT 산업 부문의 수출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ICT 수출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도 ICT 산업의 무역수지는 약 751억 달러로 흑자를 보였으며, 전체 무역수지가 약 308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ICT 산업이 국가 무역수지 흑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14> 참조)

〈표 I-14〉 ICT 산업 수출입 현황

구 분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	전체 수출	3,255	3,715	4,220	3,635	4,664	5,552
	ICT산업 수출	1,191	1,301	1,312	1,210	1,539	1,566
	비 중	36.6%	35.0%	31.1%	33.3%	33.0%	28.2%
수입	전체 수입	3,094	3,569	4,353	3,231	4,252	5,244
	ICT산업 수입	647	697	735	620	756	815
	비 중	20.9%	19.5%	16.9%	19.2%	17.8%	15.5%
전체 무역수지		161	146	-133	405	412	308
ICT 무역수지		544	604	576	589	783	751

자료 : 관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료, KAIT 재구성

나.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2011년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등 개인화·소집단화 된 미디어가 사회의 새로운 소통문화 및 가치를 창출하는 채널로 기능하면서 빅 데이터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콘텐츠 시장은 소비자 니즈에 부합되는 콘텐츠 개발 및 유통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환경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동통신 산업의 가치창출 구조가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경쟁을 기반으로 한 미래 ICT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생태환경은 생존경쟁에서 공진화(Co-Evolution)와 협력적 경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국내의 이동통신 시장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모바일 생태계 중심의 경쟁구조로 급속히 재편됨에 따라 단말, OS/플랫폼,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등은 폐쇄형(Walled Garden) 가치사슬에서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은 신문, 방송, 인터넷과 같은 기존 미디어가 SNS,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등과 결합하면서 이용자 참여공간이 확장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시공의 장애가 사라지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조직간 경계와 진입 장벽이 사라져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한 협업이 활성화되었다.

스마트 기술혁신으로 인한 스마트서비스 이용자들의 생활 패턴 변화는 스마트라이프(Smart life) 시대의 본격적인 출현을 가시화하였다. 최근 라이프 스타일(Life 3.0)은 Always Connected와 모바일, 그리고 스마트 단말 등의 보급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경험, 연결, 교감을 통해 자신과 자신 주위,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모두 보듬어 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며, 개인을 중심으로 한 관계속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 웰빙, 자신을 꾸미는 일 등 개인으로서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Life 2.0에서 벗어나 관계에 중심을 맞추고, 개인을 중심으로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세계를 재구성하는 범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스마트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시장은 Google, Apple, NHN, Daum, 삼성 등의 경쟁 무대가 되었으며,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에 제공되는 스마트 서비스들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의 핵심동인으로 작용하는 스마트 기술은 스마트 경제사회로 변환시키는 근간이 된다. 오늘날 스마트 경제사회는

다음의 3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소프트 경제(지식, 서비스산업)가 중심이 되는 선진 경제로의 전환이며, 둘째는 지식, 문화콘텐츠, 서비스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화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는 진화된 ICT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즉, 스마트 경제사회에서는 스마트 기기 및 서비스의 저변확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소통과 참여가 용이할 것이다.

II

2기 위원회 출범과 정책 방향

1. 2기 위원회 출범
2. 2기 위원회 정책 방향
3. 1기 위원회 추진성과



Ⅱ 2기 위원회 출범과 정책 방향

1. 2기 위원회 출범

가. 2기 위원회 상임위원 현황

〈그림 Ⅱ-1〉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2012년 3월 기준)



이계철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65년)하고, 행정고시(5회)를 통해 체신부에 임용(1967년)되어 경북체신청장(1983년), 기획관리실장(1991년), 정보통신부 차관(1994년),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1996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2000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2002년),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2007년)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재직(2012년 3월~)하고 있다.



홍성규 부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1975년)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방송학 석사학위(1998년)를 받았다. 한국방송공사 정치부 부장(1992년), 보도국 국장(1999년), 특임본부 본부장(2002년) 등을 거쳐 TU Media Corp. 부사장(2004년) 및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좌교수(2007년)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부위원장으로 재직(2011년 3월~)하고 있다.



김충식 상임위원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1977년)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1993년)을 거쳐 일본 게이오대학교 언론학 박사학위(2010년)를 받았다. 동아일보 기자(1978년), 정보과학부장(1995년), 동경지사장(2002년), 논설위원(2005년) 등을 거쳐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신문방송학과 정교수(2009년)로 임용되었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상임위원으로 재직(2011년 3월~)하고 있다.



신용섭 상임위원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1981년)하고, 동 대학원에서 전파공학 석사(2000년) 및 전기전자공학 박사학위(2006년)를 받았다. 기술고시(16회)를 통해 체신부에 임용(1981년)되어, 전파연구소장(2000년), 충청체신청장(2002년)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2008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2010년)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상임위원으로 재직(2011년 3월~)하고 있다.



양문석 상임위원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1993년)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1996년) 및 언론학 박사학위(2002년)를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2002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2006년),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2007년), (사)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2008년) 및 방송통신위원회 1기 상임위원(2010년 7월~2011년 3월)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상임위원으로 재직(2011년 3월~)하고 있다.

나. 2기 위원회 출범의 의미

위원회는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출범 3년간 1기 위원회는 설립 목적에 맞추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송통신의 위상을 높이는 해외 진출 정책 추진 등 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따라서 2기 위원회에서는 1기 위원회에서 수립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아갈 것이다. 즉, 모바일 네트워크 고도화 촉진 및 선순환적 경쟁 구도 확립을 통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수신 환경을 개선하며, 양질의 디지털방송 인프라를 확대·보급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 및 소비자 편익문제를 해

결할 것이며, 종편·보도 채널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1기 위원회가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에 대응해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면, 2기 위원회는 ‘스마트(Smar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마트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다.

2기 위원회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이 두루 방송통신과 I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 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4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2. 2기 위원회 정책 방향

2기 위원회는 ‘세계일류 방송통신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 실현’ 및 ‘방송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누구나 방송통신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①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기업·투자가 모여들고 첨단 서비스가 태동하는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② 스마트 시대를 기회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③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④ 소외받는 사람 없이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 보호 강화’ 등 4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2기 위원회는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2012년까지 Giga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는 100배 빠른 10Gbps를 상용화할 것이다. 또한 LTE에 대한 투자 증대와 WiBro 활용을 증대시켜 무선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며, 광가입자망 기술개발·차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1년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 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700MHz 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하여 주파수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 연구망(TEIN)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립(2011년)하여 유라시아 국제연구의 교두보를 확보할 예정이며,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 수출 지원 및 국내 연구망(KOREN) 고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2기 위원회는 클라우드·사물지능통신·근접통신·스마트TV·T-커머스·위치기반·3D 방송 등 일하고 즐기는 방식에 큰 혁신을 가져올 7대 스마트 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즉, 모바일 앱, 방송통신 콘텐츠, 스마트 광고 등 방송통신 유망분야의 1인 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벤처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R&D자금을 지원하며,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방송통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와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법체계 정립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T)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외에도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구축·운영, 해외정보시스템(CONEX) 운영을 통해 주요국

의 정책 및 시장동향을 신속하게 해외진출기업에 제공할 것이다.

다.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고,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현 「방송법」을 방송에 대한 기본법 성격인 '통합 방송법'으로 개편하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추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상파·PP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콘텐츠 제작경쟁을 촉진시키고, 콘텐츠 제작업체 및 방송사의 제작기반 확충을 지원하여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양질의 방송통신 인력 양성을 위해서 PD·방송작가·방송기술인, 모바일 앱 개발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해 2012년 6월까지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농어촌·산간오지 등의 난시청 해소, 시청자 지원 보완 계획 수립,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케이블방송과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원 안정화를 추진하고,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등을

통해 KBS·EBS를 세계적 수준의 공영방송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시장진입과 MVNO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블랙리스트 도입 및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을 촉진하여 서민들의 통신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장애인·노약자가 방송통신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추가부담 없이 올림픽·월드컵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하며, 저소득층의 인터넷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도 병행해 나아갈 것이다.

이외에도 건강한 인터넷 문화 시민 양성을 위해 유아, 청소년, 성인, 장애인 및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인터넷 활용 교육과 다양한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것이며,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규 단말 보급 확산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모바일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백신 및 보안상대 자가 점검 프로그램 등

을 보급할 것이다.

이처럼 2기 위원회는 위의 '방송통신 기본 계획'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방송통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3. 1기 위원회 추진성과

가. 1기 위원회 상임위원 현황

〈그림 II-2〉 1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2008년 3월 기준)



최시중 위원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1963년)하고,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 및 논설위원(1988년), 편집국 부국장(1993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1994년),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2007년)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1기 위원장(2008년 3월~2011년 3월) 및 2기 위원장으로 재직(2011년 3월~2012년 2월)하였다.



송도균 부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를 졸업(1971년)하고, SBS 보도국장(1992년), SBS 대표 이사(1999년), 한국방송협회 부회장(2001년),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과 석좌교수(2005년)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1기 부위원장(2008년 3월~2009년 9월) 및 상임위원으로 재직(2009년 9월~2011년 3월)하였다.



이경자 상임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1967년)하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1972년)을 거쳐 사우스일리노이대학교 신문학 박사학위(1977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 교수(1977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1995년), 한국방송진흥원 원장(1999년)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1기 상임위원(2008년 3월~2009년 9월) 및 부위원장으로 재직(2009년 9월~2011년 3월)하였다.



형태근 상임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1979년)하고,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1990년)을 거쳐 동양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2011년)를 받았다. 경북체신청장(2000년), 정보통신부 감사관(2003년), 국제협력관(2004년), 정보통신정책국장(2005년), 통신위원회 상임위원(2006년)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1기 상임위원으로 재직(2008년 3월~2011년 3월)하였다.



이병기 상임위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1974년)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1978년)을 거쳐 미국 UCLA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1982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1986년), 서울대학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소장(2000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2006년), 법무부 정책위원(2007년)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1기 상임위원으로 재직(2008년 3월~2010년 3월)하였다.

나. 1기 위원회 정책 추진성과

1기 위원회 3년은 방송과 통신의 성공적 융합을 위한 환경적 제도적 기반을 닦은 시기였으며, 1기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IT 산업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투구하였다. 1기 위원회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와 디지털방송 전환

방송통신융합의 대표적 서비스인 IPTV는 방송·통신계간 이해 조정을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IP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2008년 9월에 IPTV 제공사업자 신규허가 및 IPTV 시험서비스를 실시하였고, IPTV 상용서비스를 2008년 11월에 개시하였다.

위원회는 IPTV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IPTV 가입자 및 콘텐츠 사업자를 확대하여 IPTV 산업 시장 기반을 마련하였고, IPTV 2.0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IPTV 자막 방송 등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IPTV 관련 협회·사업자·지자체가 연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운영하였다. 2009년 2월부터 공부방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913개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 및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 방송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2009년 4월)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09년 9월)을 완료하였고,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기반을 정비하였으며, 지상파 방송을 통해 총 160여회에 걸친 TV광고, 디지털TV 채널배치계획 마련,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고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2009년 6월) 및 시행계획(2009년 12월) 수립, 디지털 전환 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2009년 12월) 수립,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계획(2009년 12월) 수립 등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사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2010년 9월~)을 실시하였고, 디지털방송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디지털방송 전환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2010년 10월)하였다. 더불어 보급형 디지털TV 공급, 저소득층 지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사업자 용자 지원, 수신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 국민이 디지털TV를 시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 이용자 이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위원회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초당 과금방식 도입(2010년 3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20~27%),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선불요금 인하(15.5~23%), 장기가입자 요금인하 등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2009년 9월)을 단행하여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였다.

더불어 저소득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의 통신지원을 위해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감면폭 35%→50%) 및 차상위 계층(감면폭 35%)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통신요금 감면대상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235만 명), 기초생활수급자(약 157만 명), 차상위계층(약 240만 명) 등 약 632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제도 시행,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휴면이동전화 확인서비스 시행, 민원처리지침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3G에 대해서는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만 교체하면 편리하게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USIM 개방제도'를 도입(2008년 7월)하였다.

더불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유료방송 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아시안게임, 축구(A매치), 야구(WBC) 등 국민관심행사 관련해서

는 중계권에 대한 과당 경쟁 금지 부분을 추가 고시(2009년 11월) 하였다.

위원회는 2009년 7월에 발생한 7.7 DDoS 대란을 계기로 IT강국에 상응하는 사이버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수립(2009년 9월)하였다. 또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한 예방적 대응으로 문자 1일 발송한도를 500건으로 제한하였고, 악성스팸 및 저 신용자에 대한 이동전화 개통 수를 제한하여 이동전화 및 이메일 스팸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3) 방송통신시장 경쟁 환경 조성 및 규제 개혁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8년 12월)하였고, '방송통신융합산업'을 17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발굴(2009년 1월)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위원회는 2008년 12월에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였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겸영제한을 완화하여 방송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방송광고판매 독점체계를 개선하고, 취약매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시 전

제 방송 수신료의 25%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가 PP(Program Provider)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도록 유도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 대비 2010년에 외주제작사가 4.9% 증가하였고, 지상파방송 외주제작비는 127억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지상파·종합유선·위성 등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내용·편성·운영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신규 방송채널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하였다. 종합편성채널은 KBS, MBC 등 지상파방송처럼 보도와 교양, 오락, 드라마 등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로, 신규 보도전문 채널과 함께 케이블 가입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채널 선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것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이 선정되었으며,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주)연합뉴스티브이가 선정되었다. 신규 방송채널의 출범은 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송통신 KOREA의 위상을 높이는 해외 진출 추진정책

위원회는 2008년 6월, OECD 장관급 회의인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해외로드쇼 개최, 정부컨설팅 지원,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등을 통하여 WiBro, DMB, IPTV, 방송콘텐츠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품목의 해외진출 촉진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이집트·말레이시아 등에 국내기술로 개발한 T-DMB(지상파 DMB) 시범방송망 구축을 지원하여 유망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위원회는 ITU, OECD, APEC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장단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송통신 국제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장관회의,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WiBro 장비 수출은 2009년 19개국 7,666억 원에서 2010년 22개국 1조 2,317억(추정)으로 증가하였으며, 베트남과 노르웨이에서 T-DMB 시범서비스가 실시되는 등 방송통신 기술의 해외시장 보급이 확

대되었다.

위원회는 2010년에도 개도국에 대한 초청 연수,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다. 초청연수는 21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몽골·라오스·에콰도르 3개국

에는 일반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으며, 베트남·남아공·도미니카 3개국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방송통신 분야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형 ICT 정책을 전파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Ⅲ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1. 일반현황
2. 2010년 주요 성과
3. 2011년 주요 정책목표



Ⅲ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1. 일반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¹⁾,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구의 특성에 맞춰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소관 법률은 16개로 다음과 같다.

- 근거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융합분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2개
- 방송분야 :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5개
- 통신분야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 전파분야 : 전파법 1개

1) 3인의 상임위원 중 1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 2인은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

〈표 III-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현황

법률명	주요내용	연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근거, 구성, 사무조직 • 위원회의 소관사무, 운영방법 및 심의위 설치 	2008. 02. 29 제정 2012. 02. 22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의 진흥·기술기준·재난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2010. 03. 22 제정 2012. 02. 22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분류(IPTV 제공·콘텐츠 사업자) • 진입규제, 사업권역, 소유규제 	2008. 01. 17 제정 2011. 07. 14 개정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채허가·승인·재승인 	2000. 01. 12 제정 2012. 02. 22 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 및 출자 • 임원의 임명, 이사회 구성 	2000. 01. 12 제정 2010. 03. 22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구성 • 방송문화진흥회자금의 설치 근거 	1988. 12. 26 제정 2008. 02. 29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판매 • 중소방송 지원방안 등 	2012. 02. 22 제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 •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2008. 03. 28 제정 2009. 04. 22 개정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분배, 할당, 회수, 재배치 절차 • 무선국 허가·검사 등 무선국 이용절차 	1961. 12. 30 제정 2011. 08. 04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 통신재산 관리 	1983. 12. 30 제정 2012. 02. 22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시장진입, 경쟁촉진·공정경쟁 제도 • 통신이용자 보호제도 	1983. 12. 30 제정 2012. 01. 17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협조 	1993. 12. 27 제정 2009. 11. 02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불법 스팸 전송 금지 	1986. 05. 12 제정 2012. 02. 17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주소자원의 사용·관리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2004. 01. 29 제정 2009. 06. 09 개정
정보통신공사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업의 등록, 설계의 기술기준 • 공사의 분리 발주제, 하도급의 제한 	1971. 01. 22 제정 2012. 01. 17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분류, 시장 진입 제도 •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 정보 이용 	2005. 01. 27 제정 2011. 03. 30 개정

※ 2012년 3월 현재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에 관한 사항
2. 통신에 관한 사항
3.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또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는 해당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위원회는 2011년 8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와 태양흑점 활동에 따른 방송, 통신서비스 장애발생에 대응하고, 지역전파관리소 등 소속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신설 및 기관명 변경, 기능 이관 또는 통합되는 부서의 사무 조정 등 일부 직제를 개정(2011년 8월 19일)하였다.

주요 직제 개정을 통해 위원회 본부의 네트워크정보보호팀과 전파연구소 소속의 우주전

파센터를 신설하고, 전파연구소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기존 네트워크기획보호과(현 네트워크기획과) 소속의 태스크포스(Task Force)로 운영하던 네트워크정보보호팀은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와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커져가는 모바일 보안위협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등을 보강하여 직제상의 공식조직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전파환경의 변화를 관측하여 방송, 통신서비스 장애 등 피해를 예·경보하고, 우주전파 예보 모델개발, 우주전파 전문인력 양성, 태양관측위성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파관리 업무와 방송·통신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전파관리소의 업무수행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전파관리소를 통폐합하여 12개 지역전파관리소를 10개로 축소하였으며,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방송통신 분야 표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인증 등 확대된 기능과 우주전파센터 설치 등으로 강화된 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전파연구소의 명칭을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 사무조직은 2실 4국 6관 32과 4팀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세부조직은 그림과 같다.

〈그림 III-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 색은 임시기구

위원회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Ⅲ-2〉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표

구분		주요업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총괄 및 조직·정원관리 ·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세입·세출 및 결산 · 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소관 기금의 조성·운용
		정책관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총괄, 행정제도 업무 총괄·지원 · 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의 입안, 심사 및 국회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 · 행정심판 및 소송, 법인설립 허가 및 산하단체 임원 선임·승인 관련 업무
		비상계획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보안업무 및 재난관리 · 통신재난관리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의안조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 ·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 · WTO, FTA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남북한간 방송통신 협력 업무 	
	국제기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 ·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 중장기 방송통신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평가 · 방송통신 및 융합관련 자료조사·연구총괄 및 조정
		융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멀티미디어 등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전략수립
		방송통신진흥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프로그램 진흥 및 유통에 관한 정책수립, 방송통신 인력양성 ·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방송통신녹색기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및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 · 방송통신분야 그린IT계획의 수립
	전파기획관	전파정책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 · 전파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정책, 전파감시 및 방송통신 보안업무
		전파방송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및 방송통신, 정보기기 인증정책
		주파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방송진흥기획관	방송진흥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 방송광고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
		디지털방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수립 · 소외지역·계획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 수립 및 시행
		편성평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 수립 · 방송평가 기본계획 및 방송심의정책 수립, 외주제작에 관한 정책

구분	주요업무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서비스 정책 총괄 •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및 공영방송 정책
	지상파방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방송에 대한 정책,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 •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뉴미디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미디어·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방송채널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채널사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서비스 정책 총괄 •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정책, 와이브로 관련 활성화 정책
	통신경쟁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 •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합병, 재판매 제도 관련 정책
	통신이용제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개선 • 통신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분석 및 이용제도
	통신자원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정책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및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운영
	시장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방송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감사 관련 정책
	이용자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 • 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청자위원증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관리, 방송소외 계층 지원 정책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 방송통신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개인정보보호윤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법령 제·개정 • 위치정보 사업자 인·허가 및 보호정책, 건전한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
	인터넷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 인터넷 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지능통신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지능통신, 클라우드 등 인터넷 신사업 활성화 •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추진
	네트워크정보보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종합대책 수립 •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대응체계 구축 및 예·경보 발령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및 언론 브리핑 지원 •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응 • 온라인 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2011년 10월 10일 직제 개정으로 추가)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방송 및 통신분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무관리 •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의전 및 청사의 관리, 방호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으며, 주요 유관 기관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

사, 방송문화진흥회 등 3개 기관으로 설치 근거와 설립목적, 주요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기관명	대표	성명	설치근거	설립목적·주요 기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양유석	전파법 제66조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 정부 수탁 업무 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종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외)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

〈표 Ⅲ-4〉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기관명	대표	성명	설치근거	설립목적·주요 기능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김인규	방송법 제43조 1항	국가기간방송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과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인 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곽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

위원회의 2011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653억 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050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8억 원, 기금 5,445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방송분야) 3,244억 원, 통신분야

5,409억 원이다. 또한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 947억 원, 기본경비 158억 원, 주요사업비 6,564억 원, 내부거래 500억 원, 보전지출 484억 원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역은 〈표 Ⅲ-5〉와 같다.

〈표 III-5〉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총계 <예산+기금>	8,388	8,653	265	3.2%
재원별	□ 예산	3,321	3,208	△113	△3.4%
	• 일반회계	3,256	3,050	△206	△6.3%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5	158	93	143.1%
	□ 기금	5,067	5,445	378	7.5%
	• 방송통신발전기금	5,067	5,445	378	7.5%
분야별	□ 통신분야	5,726	5,409	△317	△5.5%
	□ 문화 및 관광분야	2,662	3,244	582	21.9%
	□ 인건비	907	947	40	4.4%
	□ 기본경비	152	158	6	3.9%
기타	□ 주요사업비	6,698	6,564	△134	△2.0%
	• 방송통신 융합 촉진과 디지털 전환	1,132	1,364	232	20.5%
	•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이용 활성화	984	975	△9	0.9%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정보보호 강화	1,248	900	△348	△27.9%
	• 이용자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231	232	1	0.4%
	• 전파방송산업 여건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774	764	△10	△1.3%
	• 방송통신 연구개발 및 진흥기반구축(R&D)	2,050	1,993	△57	△2.8%
	• 기타 행정 지원	279	336	57	20.4%
	□ 내부거래(회계간·기금간 전출금 등)	500	500	-	-
	□ 보전지출(방송통신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	131	484	353	269.5%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제정(2010년 3월 22일)에 따라 구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지경부) 중 위원회 사업을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2011년 1월 시행)

주 2. 증감, 증감률은 2010년 대비 2011년에 대한 증감 및 증감률임

2011년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편의와 개인정보보호, 공공주파수 관리 및 우주전파 재난 대응, 전기통신사업자의 인·허가/휴·폐업 절차 개선, 방송사업 관련

간접광고 허용과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위한 사업자 사전 확인·고시 등의 정부입법을 추진하였다.

〈표 III-6〉 2011년 정부입법 추진 현황

법안명	국회 제출일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1. 4. 29 (상임위 소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허가 등 의무 면제 개인위치정보 3차 제공 시 즉시 통보 절차 개선
전파법	2011. 12. 2 (상임위 소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외교적 목적의 공공주파수 관리체계 개선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2011. 12. 12 (상임위 소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및 휴·폐지 승인 심사기준 구체화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번호 발신안내 의무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방송법	2011. 12. 27 (미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개념 도입,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허용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기능 방송사업자 사전 확인·고시

또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011년 위원회 야 41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에서는 방송, 통신, 네트워크, 전파 등 4개 분

〈표 III-7〉 2011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

구분	규제개혁 추진과제	추진현황(2012년 1월말 기준)
방 송	1 방송사업 허가·채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개선	고시 제정 진행중
	2 중소시상파방송사업자의 기금 부담금 부담 완화	고시 개정 완료
	3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준 개선	고시 개정 완료
	4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가이드라인 제정 완료
	5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 폐지	시행령 개정 진행중
	6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지급기준 마련 완료
	7 자막고지 허용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완료
	8 국민관심행사 범위 구체화	고시 개정 진행중
	9 외국자본의 출연신청 서류 감축	고시 개정 진행중
통 신	10 방송통신분쟁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완료
	11 MVNO 데이터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	가이드라인 제정 완료
	12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양도·양수, 합병·상속 신고의무 완화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13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절차 간소화	감면시스템 개선 완료
	14 설비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 완료
	15 공공분야 u-City 자가망 연계 허용	고시 개정 완료
	16 통신사업자 손실보전금 원가산정방법 개선	고시 개정 완료
	17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환경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
	18 결합상품 위약금 관련 법령 정비	고시 개정 진행중
	19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심의 준비절차 마련	고시 제정 완료
	20 설비에 관한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인가 규제 완화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21 대리점 위법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면책요건 명확화	고시 제정 완료
	22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완화	고시 개정 완료

구분	규제개혁 추진과제	추진현황
네 트 워 크	2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방법 개선	고시 개정 완료
	24 외국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개선	고시 개정 완료
	25 전문학사의 정보보호 기술인력 자격요건 합리화	시행령 개정 완료
	26 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기한 폐지	시행령 개정 진행중
	27 위치정보 취급대상관리목록 및 보관기간 완화	가이드라인 개정
	28 개인위치정보 미취급 사업자 허가·신고의무 면제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29 개인위치정보의 즉시통보 의무완화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
	30 SNS 사업자·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칙 마련	수칙 제정 완료
	31 건전한 인터넷광고 유통기준 마련	가이드북 마련 완료
	32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기준 마련	가이드라인 제정 완료
	33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시행령 개정 진행중
	전 파	34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35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정기검사 면제		법률개정 진행중
36 산업용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기술기준 완화		고시 개정 완료
37 초소형지구국 설치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		고시 제정 진행중
38 무선중상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완화		고시 개정 진행중
39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방법 개선		시행령 개정 진행중
40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명확화		시행령 개정 진행중
41 주파수 할당·재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명확화		고시 제정 완료

2. 2010년 주요 성과

위원회의 2010년도 주요 전략은 2009년도에 추진한 방송통신융합 기반 조성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다. 위원회가 2010년에 추진했던 주요 정책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2010년 위원회는 방송통신 통합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체계 마련과 2011년 방송통신

발전기금 설치(2011년 시행)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걸맞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0대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2010년 5월)을 통해 미래 유망 방송통신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미래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009년 본격적인 IPTV 서비스 개시 이후, 교육, 국방, 교통 등 대규모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추진하여 2010년 12월 IPTV 실시간 가입자 약 309만 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였다. 민관 합동으로 교육콘텐츠 오픈환경

구축, 법률·민원 상담, 고속도로 교통정보, 농업경영 컨설팅, 식품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품격높은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융합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과 더불어 2012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 송출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2010년 98억 원)하였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미래 유망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투자펀드를 조성(2010년 정부 100억 원)하는 등 3D·양방향 차세대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 지원과 방송통신 시장의 선순환적 성장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경북 울진(2010년 9월), 전남 강진(2010년 10월), 충북 단양(2010년 11월) 지역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을 전면 실시하는 등 아날로그TV 종료에 따른 파급효과,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으로 방송시청에서 소외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송통신 기업이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정부고위급 면담과 정부간 MOU 체결, 로드쇼·쇼케이스 개최, 방송통신장관회의 및 G20 연계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등 국제행사 개최와 더불어 2014년 ITU 전권회의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자별 실천 가능한 절감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2010년 동안 온실가스를 2.5만TOE 감축하는 등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나.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방송 정착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선정으로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및 복지 향상 측면과 새로운 뉴스 포맷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여론다양성 제고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외주제작 등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 제정과 디지털 전환 홍보강화로 디지털 전환 인지율과 보급률이 전년대비 향상되는 등 방송의 디지털전환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기반이 되는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형 방송광고로서 가상·간접광고 도입과 중간광고, 토막광고의 건수규제 폐지 등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로 시청 점유율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에 해당하는 바,

방송광고를 자체심의하거나 위원회에 신고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외주제작·외국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의무편성 비율 준수 기간 변경 등 방송 편성규제 제도개선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중계권 관련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보호에 기여하였다.

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고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PD,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방송언어 순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장르별 방송언어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막말·저품격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지급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도매제공 대가·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시정명령 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개선방안 및 SO-PP간 콘텐츠 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이 조성되었다.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상황과 디지털 전환

촉진, 콘텐츠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규제와 정책방안을 정비하였으며, 위성DMB로 운용할 수 있는 TV 채널수가 전체 운용채널의 1/2에서 2/3까지 완화되었고, 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변경을 제외한 각종 변경허가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방송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2011년도 공익채널 선정기준은 2010년도 공익채널 선정기준인 3개 방송분야별 각각 3개 채널 선정원칙이 유지되어 플랫폼사업자, PP의 공익채널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다. 이용자 편익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국제전기통신연합(ITU-R) WP5D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개(WiBro-Evolution 및 LTE-Advanced)의 차세대 이동통신(4G) 기술이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으며,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를 적기에 할당함으로써 증가하는 무선트래픽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인가받은 요금(결합상품 포함)을 인하하는 경우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금인가 기준이 완화돼 통신사들이 신속한 할인요금제 출시와 활발한 요금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를 위하여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제고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동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파수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MVNO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시행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처리소요 시간을 단축(5일→1일)하는 한편, 이용자 편익과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010번호통합 관련 정책, 이동전화 단말기 교체없이 타 이통사로 가입하는 'USIM 이동'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였다.

음성통화료 과금단위를 기존 10초에서 1초로 전환하여 가입자당 월 600원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였고, 발신자번호 표시(CID)요금 전면 무료화, 실비요금제 개선, 무선데이터요금 개선 등 이동전화 음성과 데이터에 관한 요금개선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 부담이 완화되었다.

또한, 결합상품 요금인가 기준의 완화로 할인폭이 큰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돼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개선,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부담과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명령으로 요금 부담 감소 및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다.

세계 최초 고품질 3DTV 실험방송을 개시(2010년 10월)하여 국민들이 첨단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G20 주행사장에서 3DTV 방송

관을 개관하여 각국 정상과 외신기자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3DTV 기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렸다.

라.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위원회는 미래네트워크 기술 및 방송장비 테스트 등 미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기존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시범망을 구축하고 3DTV와 같은 대용량·고품질의 방통융합 시범서비스를 추가 발굴하여 1,621가구에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어촌 마을 등 전국 어디에서나 IPTV, 인터넷 전화와 같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통합망(BcN)의 농어촌 지역 구축 확대를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상청 사물지능통신 수집체계 효율화 시범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물지능통신 신사업 모델이 확보되었고, 서울시 송파초등학교 일대에 어린이 안심존 서비스 구축, 경포호수 주변에 사물지능통신 그린 쉽터 구축 등 사물지능통신 선도 서비스를 통해 좀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환경도 구축하였다.

위원회는 DDoS 등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침해대응 시스템을 전

면 교체하면서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을 재구축하고 악성코드 분석 등에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악성코드 탐지 점검대상 웹사이트를 확대(20만개→100만개)하였다. 주요 ISP는 인터넷망 연동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DDoS 대응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DDoS 공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이버 대피소를 시범 구축하는 등 안전한 사이버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휴대전화 스팸을 실시간 차단 할 수 있는 스팸차단리스트를 개발·보급하여 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이 감소하였다.

혁신적 미래서비스 제공, 최적의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미래인터넷 기술개발, 지속성장이 가능한 여건조성 등을 포함하는 미래인터넷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새로운 인터넷주소자원(한글 국가도메인 도입, IPv6 전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과 관련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할 전담기구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산하에 설립하여 이용자 편의증진 향상과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 권인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선언문’을 채

택함으로써, 향후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시장 구성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이동전화 대리점 어디서든 편리하게 단말기 AS 접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전화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주요내용 미고지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USIM 이동 제약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이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요금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부당 부과내역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61개 방송사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총 3,528편의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송을 지원하고, 전국 19개 단체의 미디어 교육 활동 지원 및 미디어역기능 예방교재 등 시청자의 미디어 이해능력 함양과 더불어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시청자의 방송복지 구현과 소외계층의 직접적인 방송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자막·수화·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에 총 303억 원을 지원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IV

2011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제1절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제2절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제3절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제4절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IV 2011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제1절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1.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래 네트워크 기술개발

가.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

1) 초광대역융합망(uBcN)의 지속적 구축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구축한 초고속 정보통신망보다 전송속도가 50배 이상 빠른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여, IPTV와 인터넷 영상전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및 상용화하여 확산·보급하고 광대역무선망(HSDPA,

WiBro, Wi-Fi)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 초고속공중망 구축 용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농간 차별없는 전국 규모의 광대역망 구축을 위해 소규모 농어촌의 BcN 구축 추진 및 망구축 현황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초광대역융합망(uBcN) 성과전시회 개최 등 전국 기반의 초광대역가입자망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BcN의 가입자는 2011년 12월 기준 이미 5,237만 가입자(유선 1,604만, 무선 3,633만)를 확보하여 2011년 목표인 4,500만 대비 가입자 737만 명(16.4%)을 초과 달성하였다.(<표 IV-1> 참조)

<표 IV-1> 연도별 BcN 보급 실적

(단위 : 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유선(세대수)	701	939	1,154	1,482	1,604
무선(가입자수)	563	1,547	2,484	3,090	3,633
계	1,264	2,486	3,638	4,572	5,237

2) 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로 유·무선 트래픽의 급증이 예상되며, 현재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고품질·대용량 콘텐츠 및 융합형·실감형 서비스 등 미래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 현재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상용화(2012년) 등 미래인터넷 도입 촉진을 위해 Giga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시범서비스 제공 등 도입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원회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Giga인터넷 상용화 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 통신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방송통신망 고도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미래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FN2020 포럼 및 스마트네트워크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유무선이 융합된 대용량·고품질의 실감형 서비스인 Giga급 N-Screen 서비스, 무선 홈서비스 등 서비스를 신규로 개발하였으며 2011년 11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대구 등 6개 도시를 중심으로 Giga인터넷 시범망을 구축하고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Giga인터넷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대용량·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한 Giga급 인프라 선도 구축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 기반

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Giga인터넷 상용화에 대비하여 고품질·대용량의 콘텐츠 활성화 및 Giga급 서비스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스마트 시대 도래에 따라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 최고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대용량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WiBro, LTE 등으로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과도한 마케팅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축소하여 네트워크 확충,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1년 말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의 7.5조원에서 6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투자는 6.4조원에서 7.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WiBro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9,205억 원(KT 10,908억 원, SKT 8,297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82개 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WiBro망을 구축하였고, 위원회는 2011년 상반기 사업자의 WiBro 구축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표 IV-2〉 참조)

2011년 3월에 WiBro 사업자는 전국 82개

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WiBro망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 제공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KT는 전국 82개 시 및 7개 주요 고속도로(경부, 중부, 호남, 영동, 서해안, 남해, 대구-부산간), SKT는 전국 82개시와 경부고속도로(서울-대전)에 WiBro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WiBro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2010년 66%에서 2011년 88%로 22%p 증가하였다. 2011년 말 현재 WiBro 가입자는 798천여 명으로 2010년 말 455천 명 대비 75.4% 증가하는 등 WiBro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표 IV-2〉 WiBro사업 주요 이행 현황

(2011년 3월말 기준)

구 분	투자비			커버리지(82개시 면적 기준)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KT	10,431억원	10,908억원	104.6%	24.3%	26.0%	107.0%
SKT	8,250억원	8,297억원	100.6%	9.1%	10.9%	119.8%

2011년 7월부터 SKT와 LG U+는 LTE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기존 3G에 비해 약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경쟁적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LG U+는 2012년 1월 전국 84개 시에 구축을 완료했으며, 3월 말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SKT는 2012년 3월 말까지 전국 84개시로 커버리지를 확대할 예

정이다. 한편, 2G서비스 종료 시점이 연기되어 2012년 1월부터 LTE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KT는 현재 서울지역에만 LTE망을 구축했으며, 2012년 하반기에 전국 84개 시, 2013년 중에 전국망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V-3〉 참조)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2011년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2013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전국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 IV-4〉 참조)

〈표 IV-3〉 연도별 LTE 구축 계획

구 분	SKT	KT	LG U+
2011년	전국 27개 시	-	전국 82개 시
2012년	전국 84개 시(3월)	(상반기) 수도권, 6대광역시 (하반기) 전국 84개 시	전국망 (3월)
2013년	-	전국망	-

※ 2011년 82개 시에서 행정구역 변경·확대로 2012년 84개 시로 변경

2012년 2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LTE 가입자는 SKT 129만 명, LG U+ 115만 명, KT 23만 명이다. 현재는 대도시 위주로 가입자가 몰리고 있으나, 향후 전국망이 구축될 경우 지방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가입자도 늘어나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2011년 말까지 LTE 투자를 살펴보면, KT는 1,000억 원, SKT는 1,500억 원 LG U+는 9,112억 원에 이르며, 2012년에는 2조 8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표 IV-4〉 이동통신사별 LTE 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SKT	1,500	7,250	7,400
LG U+	9,112	6,339	2,030
K T	1,000	6,500	2,500
합계	11,612	20,089	11,930

다. 와이파이(Wi-Fi)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1) 와이파이(Wi-Fi) 공동 구축·활용

위원회는 급증하는 무선 데이터의 분산 및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Wi-Fi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Wi-Fi 혼·간섭에 의한 속도저하, 접속불량 등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1년 1월 위원회는 Wi-Fi 혼·간섭 최소화를 위해 Wi-Fi AP 설치 및 채널 설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업자의 Wi-Fi AP간 혼·간섭 최소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 간 혼·간섭 해소를 위한 합의를 체결하여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Wi-Fi AP의 거리 및 위치를 조정하고, AP 채널을 혼·간섭이 적은 채널로 조정하여 공공장소에서 Wi-Fi 혼·간섭으로 인한 속도저하, 접속불량 등 Wi-Fi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Wi-Fi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대한 혼·간섭 실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혼·간섭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1년 7월 위원회와 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간 중복구축 최소화 및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항, 철도, 종합버스터미널, 관공서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 대해 Wi-Fi Zone을 공동 구축·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최근 Wi-Fi 구축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

업자간 중복구축 논란 및 전파혼신, 통신설비의 비효율적 운용 등의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위원회의 중재로 2011년 4월부터 통신3사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신규 구축

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2012년 상반기까지 약 1,000여개 Zone에 Wi-Fi 공동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IV-5〉 2011년 Wi-Fi Zone 확대

(단위 : 개)

구 분	KT	SKT	LG U+	계
2011년 12월	85,922	67,965	72,649	226,536
2012년 12월 (계획)	145,922	93,965	122,649	362,536

※ KT와 SKT는 Zone 단위로, LG U+는 Wi-Fi AP개수로 통계 산출

향후 합의된 지역 외에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Wi-Fi 공동 구축·활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위원회도 통신사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등 Wi-Fi 공동구축·활용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Wi-Fi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Wi-Fi Zone 공동 구축사업에 농어촌 공공장소와 관광지를 포함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모바일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전파자원 확보 및 이용실적이 미미한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등을 통해 주파수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전파자원이 적기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주파수를 할당하고 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 주파수 확보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전파자원의 확보 및 공급

최근 방송과 ICT 분야의 화두는 스마트이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스마트 혁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전파자원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파자원이 풍족했던 과거와 달리 주파수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으나 그 수요

가. 주파수 적기 공급

1)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재할당이란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에게 다시 할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기존에 사업자에게 할당했던 이동통신(PCS, 셀룰러), TRS, 무선데이터, 무선호출,

위성 등 9개 용도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2011년 6월말로 한꺼번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2010년 6월에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KT가 보유하고 있던 1.8GHz 대역 20MHz 폭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동통신(PCS와 셀룰러) 주파수는 대가할당으로, 나머지 TRS·무선데이터·무선호출·위성 등 주파수는 심사할당의 방법으로 재할당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 3월, 재할당 대상인 25개 사업자로부터 재할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16개 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주파수이용계획서 등을 제

출받아 방송통신 분야 등의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평가하였다. 재할당 심사결과 KT 등 13개 사업자는 기준 점수(심사사항별 60점,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동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3개 사업자는 기준 점수 미만을 획득하여 재할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재할당을 통해 정부는 주파수에 대한 사업자의 이용을 촉진하고, 미활용 주파수는 회수하여 타 사업자에게 할당함으로써 제한된 전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표 IV-6〉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현황

주파수 용도	사업자
이동통신(PCS, 셀룰러), 주파수공동통신(TRS),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가입자회선(BWLL), 위성이동통신(GMPCS), 인마세트, 위성서비스(무궁화위성), 해상이동전화	KT, LG U+, SKT 등

2)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2011년 1월에 개정 「전파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도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 제도(이하 ‘경매제’)가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정부산정 대가할당’ 또는 ‘심사할당’의 방법으로 주파수를 사업자에게 할당하였다. 경매제는 기존 심사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기반의 주파수 가치 산정을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입

하게 되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일본,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매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2011년 8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단기적으로 확보가 가능했던 800MHz, 1.8/2.1GHz 대역 총 50MHz에 대해 경매를 시행하였다. 경매 실시를 위해 위원회는 먼저 2011년 6월에 주파수 경매방식(동시오름입

찰방식) 및 최저 경쟁가격 등을 확정하여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하였다. 위원회는 할당계획 수립시 3G 서비스의 국제 공통대역으로 스마트폰 수급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2.1GHz 대역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기 보유 사업자에게는 경매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공고 이후 7월에 경매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동통신 3사(KT, LG U+, SKT)가 주파수 경매참가를 신청하였다.

경매는 8월 17일부터 8월 29일 까지 실시되었으며, 경매 결과 2.1GHz 대역은 경매 시작일 1라운드에 LG U+가 20MHz를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 원에 낙찰 받았으며, 800MHz 대역과 1.8GHz 대역의 경우 SKT와 KT가 경쟁을 벌인 결과(83라운드), 800MHz 대역은 KT가 2,610억 원에, 1.8GHz 대역은 SKT가 9,950억 원에 각각 낙찰을 받았다.(〈표 IV-7〉 참고)

〈표 IV-7〉 주파수 경매대상 및 경매결과

구 분	800MHz	1.8GHz	2.1GHz
할당 대역폭	10MHz	20MHz	20MHz
이용기간	2012년 7월 1일부터 10년	할당을 통지한 일자부터 10년	
용도 및 기술방식	ITU가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3G 이상)		
최저경쟁가격	2,610억 원	4,455억 원	
입찰 신청자	SKT, KT		LG U+
경매 낙찰자	KT	SKT	LG U+
경매 낙찰가	2,610억원	9,950억원	4,455억원

주파수 경매를 통한 50MHz 대역폭 할당으로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부족 문제 해소와 LTE 등 신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자별로 800/900MHz, 1.8GHz 및 2.1/2.3GHz 대역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주파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표 IV-8〉 참고)

금번 경매는 「전파법」 상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²⁾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국내에서도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표 IV-8〉 2011년 주파수 할당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현황

(단위 : MHz)

	800MHz	900MHz	1.8GHz	2.1GHz	2.3GHz	계
SKT	30	-	20*	60	30	140
KT	10*	20	20	40	30	120
LG U+	20	-	20	20*		60
계	60	20	60	120	60	320

주 : *'는 2011년 8월 경매로 신규 할당된 주파수 대역폭

나.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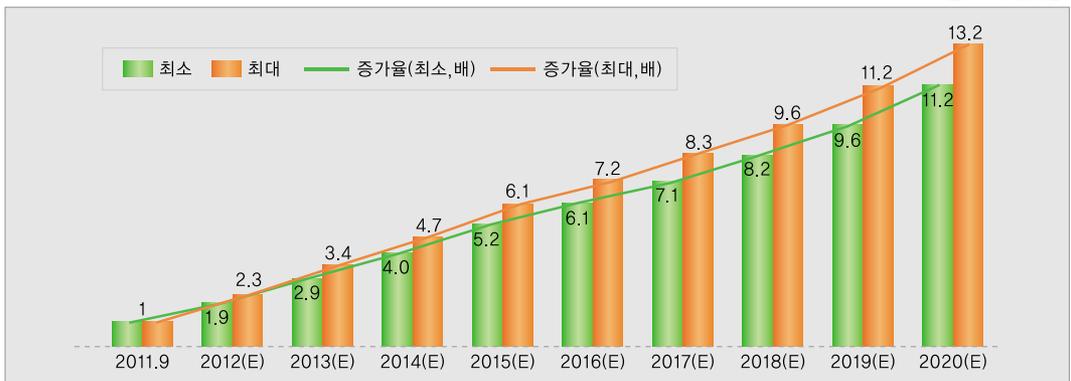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따른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의 확보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향후 5~10년 내에 현재보다 2~3배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스마트폰 시대에 필요한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를

증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에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단’을 구성·운영³⁾하여 오는 2020년까지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과 주파수 소요량을 예측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였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예측 결과,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사물지능통신 및 WiBro 등의 미래 수요를 고려할 때, 2011년 대비 2020년에 약 11~13배로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참조)

〈그림 IV-1〉 모바일 트래픽 예측치 산출 결과

(단위 : TB/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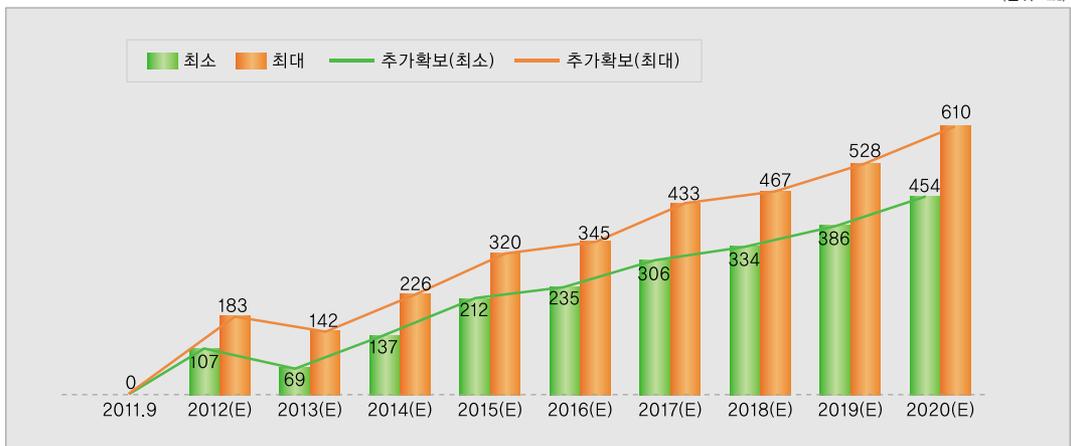
출처 : “광대역 무선통신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공급방안” 연구 결과 (한국전자파학회, 2011년)

3) 서비스, 소요량, 주파수 등 3개의 연구분과와 자문위원 그룹으로 구성

이 같은 트래픽 증가량은 2020년까지의 스마트폰 보급률 및 기술 진화 등과 같은 변화된 통신 환경을 고려하여 예측된 것으로서, 예측된 트래픽 증가량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전체 주파수 소요량을 산출하였다. 주파수 소요

량은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할당된 주파수(WiBro 포함)가 총 320MHz폭인 것(2011년 말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2020년까지 약 450~610MHz폭의 추가 주파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다.⁴⁾ (<그림 IV-2> 참조)

<그림 IV-2> 주파수 소요량 예측치 산출 결과



출처 : “광대역 무선통신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공급방안” 연구 결과 (한국전자파학회, 2011년)

이러한 미래 주파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모바일 광대역용으로 발굴 가능한 후보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후보 대역별로 국제적인 이용추세, 기술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 계획 및 시기 등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2020년까지 600MHz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

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발표(2012년 1월)하였다. 2013년까지 단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700MHz, 1.8GHz 및 2.1GHz대역 등 3개 대역 170MHz폭에 대해서는 시장수요 및 국제 표준화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2년 말까지 할당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산출은 해외 트래픽 증가 추이, 국내 트래픽의 실측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 기기의 다양화 및 사용자 이용 패턴, 타 소요량 산출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음

〈그림 IV-3〉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계획



세부 대역별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그림 IV-3〉 참조)

먼저 700MHz 대역은 2008년에 108MHz폭을 회수하기로 의결한 후, 방송·통신 등 각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와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3년여 간 ① 방송용 ② 통신용 그리고 ③ 방송과 통신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 등 용도 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원회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108MHz폭 중 40MHz폭을 우선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분야별 미래 수요, 디지털 전환 추이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1.8GHz 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150MHz폭이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어 140여개 국에서 2G로 이용 중이며, 폴란드, 독일 등 18개국이 LTE 서비스 개시 또는 준비 중인 차세대 이동통신

의 핵심대역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80MHz폭만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고, 나머지 70MHz폭은 공공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기존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70MHz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선국과 간섭 없이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주파수 공유를 통해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DB접속, 스펙트럼센싱 방식 등 주파수 공유 기술 개발과 상용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대역에 대한 할당방법 및 할당조건 등 주파수 공유에 필요한 세부방안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2012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2.1GHz 위성IMT대역은 미국, 유럽에서 위성IMT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용화하였으나, 서비스 활성화 저조로 인해 동 대역을 지상용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

다. 또한 중국, 일본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위성/지상 겸용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2.1GHz 위성IMT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와 위성/지상 겸용 국가 간에 상호 호환이 가능한 단일 국제표준화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 관련업체 및 글로벌 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2013년까지 단일 표준화 완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GHz 대역, 2.6GHz 대역 및 3.5GHz 대역은 인접 국가와 간섭조정 및 세계 상용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230MHz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IMT용 주파수 추가 분배가 차기 회의(WRC-15)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3년간의 연구를 거쳐 2015년경에는 국제공통의 신규주파수가 분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ITU, APT 등 국제기구 및 인접국가와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200MHz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광개도 플랜’ 추진으로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면 사업자간 40MHz폭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스마트시대에 다양한 콘텐츠·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공공 주파수 이용 효율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파품질이 우수하고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5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용으로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고 민간과 공유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승인요청 주파수의 검토·분석 체계 강화를 위한 사용승인 심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승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 외교 등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주파수 적정 소요량 산출, 간섭분석 및 중장기 주파수 이용정책 등을 고려한 사용승인 심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공 주파수의 보다 효율적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파수의 미사용·미승인 주파수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파수 사용 승인증 발급, 주파수 재승인 및 변경승인 등 주파수 사용승인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파수 사용승인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사용승인 절차, 변경승인 사항, 재승인 심사기준, 무선국 검사 시기 및 방법,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세부 하위법령 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IV-9〉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 개선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개정 이전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 → 주파수 이용 가능성 여부 검토 → 주파수 사용승인 → 무선국 개설·운영 → 주파수 재승인
개정 이후	주파수 사용승인 정의 → 사용승인 신청(신청서) → 주파수 사용승인증 발급 → 시험성적서 제출 → 무선국 개설·운영 → 주파수 재승인 및 변경승인 → 무선국 운용정지 / 사용승인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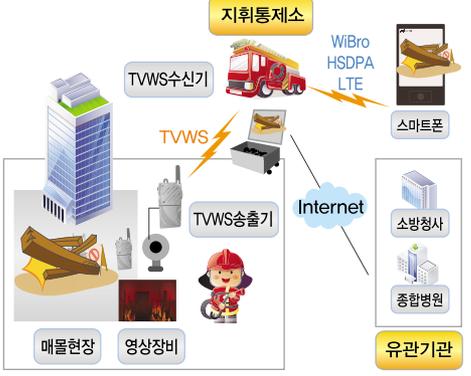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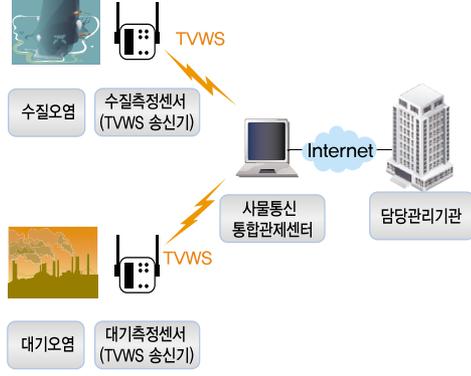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있으나 그간 공공용으로만 사용하던 1.8GHz 대역을 민간과 공유하도록 하여, 추가로 70MHz 대역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발표하였다. 2012년 중에 1.8GHz의 민간/공공 주파수 공유를 위해 간섭분석, 간섭방지를 위한 기지국 간 이격거리 기준 등 세부 공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1.8GHz 대역은 LTE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로서 국제적으로 활발한 이용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장비 및 단말기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 특성이 우수한 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수·재배치만으로는 주파수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GHz 사례와 같은 주파수 공유는 주파수 부족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용 주파수의 민

간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공동으로 CR(Cognitive Radio) 등 공유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라. TV 유휴대역 활용

TV 유휴대역(White Space)은 TV 방송대역(채널 2~51 : 54~698MHz, 총 300MHz)중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해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파수 채널을 지칭한다. 특히, 동대역 주파수는 전파특성이 우수하여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2011년 현재, TV방송국이 밀집된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유휴채널이 1~2개 가량 존재하며, 농어촌 지역은 보다 많은 유휴채널이 있다. 특히, 제주도는 DTV용 38개 채널 중 23개 채널만이 사용되고 15개 채널은 비어 있는 상황이다.

〈그림 IV-4〉 TV 유휴대역 활용 서비스 모델 예시

무선 가입자망	소규모지역 정보전송
 <p>▶ 전파 도달거리가 넓은 특징을 이용하여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 무선인터넷망 구축 ※ 고비용의 위성, 저속의 전화선 등으로만 가능한 인터넷서비스를 무선으로 가능</p>	 <p>▶ 고궁, 박물관, 경기장 등의 특정지역에서 안내 정보, 경기 정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전달 ※ 자가망을 구축하여 기존 이동망, Wi-Fi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보전송 가능</p>
지하재난 영상전송	환경 정보수집
 <p>▶ 전파의 투과율이 좋은 장점을 이용하여 지하 매물 지역의 영상을 현장 지휘소까지 전달 ※ 현재 녹화 후 전송만 가능한 지하 재난현장 영상전송이 실시간으로 가능</p>	 <p>▶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 등을 센서 단말기로 측정된 정보를 TV유휴대역으로 관제센터까지 전달 ※ 현재 센싱정보를 전송하는데 활용되는 이동망을 대체하여 무료로 이용 가능</p>

이에 위원회는 TV 유휴대역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이용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Wi-Fi용, 지역정보제공용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중소

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실험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TV 유휴대역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 TV 유희대역 실험서비스 실시

위원회는 지자체, 공공기관, 방송사 등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TV 유희대역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Wi-Fi 서비스, 재난·재해 서비스 등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제주 컨소시엄과 소방방재청 컨소시엄 등 2개 기관을 실험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

하여, 국내최초의 TV 유희대역 이용 실험서비스인 ‘Super Wi-Fi 서비스(제주)’와 ‘지하 재난·재해 영상 서비스(소방방재청)’를 시작하였다. 실험서비스는 1년 간 계속될 예정이며, TV 유희대역 서비스 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방송서비스 보호를 위해 전파출력 및 간섭 실험 등 기술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표 IV-10〉 TV유희대역 활용 실험서비스 주요내용

명칭	제주 컨소시엄	소방방재청 컨소시엄
서비스	Super Wi-Fi 서비스	지하 재난·재해 영상 서비스
일시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1년 11월 22일부터
지역	제주	남양주
참여기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청, KT, 브로드웨이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아이디폰
주요내용	올레길 7코스 외돌개 주변의 관광정보, 맛집, 탐방 소요 시간 등의 정보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	건물 및 터널붕괴와 같은 지하매몰 붕괴 현장에서 전파특성이 뛰어난 TV 유희대역을 이용하여 지하현장의 영상정보를 지휘통제소 등에 전송하여 구조 활동에 활용하는 실험서비스

2) ‘TV 유희대역 활용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는 2011년 12월 26일, TV 유희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추진 로드맵을 담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2012년에 기술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2013년에는 시범서비스, 2014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TV 유희대역 활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환경에 적

합한 서비스 모델 발굴과 주파수 공유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을 위한 시제품 테스트 환경을 갖춘 지원센터 설치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조업체, 사업자,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TV 유희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11〉 TV유휴대역 활용 기본계획 주요내용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유휴대역 서비스 기기가 TV 방송에 전파간섭을 주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검증을 통해 기술 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를 포함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기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 TV 유휴대역 주파수 이용 시 면허/비면허 허용 정책방향 결정,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을 통한 신규 서비스 용도 추가 TV 방송대역 전파환경 DB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방안, 구축비용 등 타당성 분석 실시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유휴대역 가용채널 DB 구축 매년 설문조사,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DB접속 방식의 시범서비스 실시 TV 유휴대역 활용을 위한 주파수 공유 핵심기술 개발, 관련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접속 방식의 TV 유휴대역 상용 서비스를 실시

3.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

가. 국내외 미래 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1) 국내 연구망(KOREN) 고도화

위원회는 2011년 미래인터넷, 방통융합, 스마트서비스 등 차세대 ICT 기술개발 지원과 국제공동연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개방형 연구망(KOREN,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였다.

KOREN은 초고속 네트워크를 산·학·연 등에 제공하여 네트워크 기술의 시험 검증과 첨단 응용분야 R&D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로 지난 1995년에 개통되었다. 현재 KOREN의 백본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수원 등 6개 대도시 간 10~20Gbps로 구축되어 있으며 KOREN을 통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54개 기관에 최대 10Gbps 회선서비스 및 시험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 7월 KOREN을 통한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망 활용 연구과제를 공모하였으며 유무선 환경 내 이동성 관리 기술 연구, 가상 네트워크 환경 제공 기술 연구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약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연구망은 일반 상용 인터넷망과 달리, 연구 상황 조건에 따라 망의 구성 및 경로 조정이 가능하며, Giga급 대용량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구자들은 KOREN을 이용하여 기술 및 장비의 성능을 분석하고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7월부터 인터넷 상용망을 통해서도 KOREN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 연구망(TEIN) 협력 선도

국제 연구망(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은 아시아·유럽간 차

세대 인터넷 및 응용기술 개발을 비롯, 다양한 분야의 학문 연구와 교육을 위한 IT 기반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목적으로 구축된 아시아 18개국 및 유럽 34개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국제 연구망으로 2001년 12월 개통되었다. 한국은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홍콩-싱가포르 회선구간(2.5Gbps)을 구축하여 TEIN3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0년 10월 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TEIN4 국제 협력사업을 전담하여 운영·관리 총괄기관인 TEIN 협력센터의 국내

설립이 승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TEIN 협력센터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여 2011년 8월 위원회 산하 재단법인 TEIN 협력센터를 설립하였다.

TEIN 협력센터는 국제회선의 안정적 구축·운영, 북미·유럽 등 인터넷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아시아 개도국 지원 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럽·북미 등 선진국과의 인터넷 공동 연구 강화 및 개도국의 ICT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여 아시아 IT R&D 허브로의 도약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V-5〉 국제 연구망(TEIN) 구성도



2011년 1월 위원회는 ‘한·아세안 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연구개발망(TEIN)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 등을 제안하여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 12월 ‘제6차 ASEAN+Korea 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ICT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연구망(TEIN) 활용 지원 등 ASEAN간의 ICT협력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세안은 GDP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 인구 약 6억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서, 2015년까지 연간 8% 이상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청소년 계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 향후 정보통신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급속히 늘어날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세안 통신장관회의의 참석을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활동은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이를 발판 삼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스마트 인터넷 기술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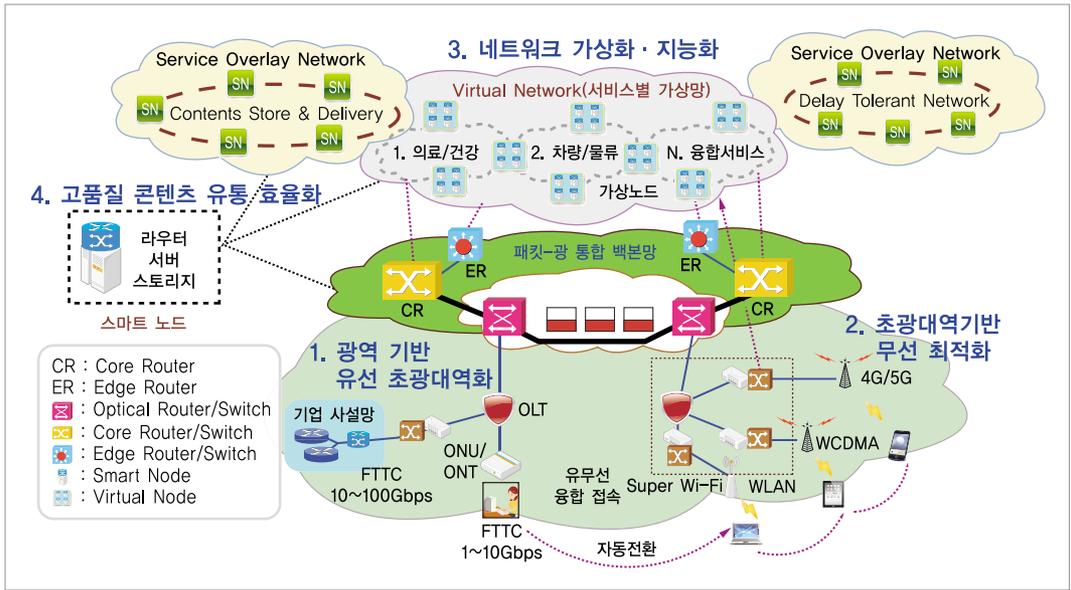
인터넷은 탄생 이래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e-메일·전자상거래·e-뱅킹·전자정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Video 콘텐츠·무선인터넷·사물지능통신 등을 통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함에 따

라 현재 인터넷의 이동성·품질보장 및 보안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보다 100배 빠른 세계 최고속의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6월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방·협업형 스마트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는 등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새로운 인터넷 구조를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국제 테스트베드에 적용·검증 후 국제 표준화 하는 등 현재 인터넷 기술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미래인터넷 기술 연구개발도 집중하였다. 그 결과 2011년 6월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하여 국내 연구망 KOREN에 미래인터넷 플랫폼(FIRST@ATCA)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러시아 제1유선통신사업자인 NW-Telecom 대상으로 WDM/G-PON 하이브리드 PON 시스템 BMT를 수행하여 세계 최초 WDM-PON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한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에서 마련된 기술개발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현에 따른 유·무선 트래픽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속·고품질 기술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그림 IV-6〉 스마트 인터넷 발전방향



2011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다.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전환 촉진

1) IPv6 전환 본격화

전세계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의 2011년 2월 IPv4 신규할당 중지 선언과 아·태지역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2011년 4월 IPv4 신규할당 중지에 따라 국내도 최종할당정책⁵⁾을 시행하여 IPv4주소가 사실상 할당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IPv4 고갈에 따른 주소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Pv4와 IPv6 공존환경에

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2011년 12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IPv6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IPv6전환 본격화를 위해 ▶미래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IPv6활용기반 마련 ▶IPv6종합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분야별 인식제고 ▶중소 사업자 대상 기술지원을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무선망(4G, Super Wi-Fi 등), 사물지능통신, 스마트그리드 등에 IPv6적용을 위한 선제연구 및 전환을 추진하고 분야별 홍보, 인력양성,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포털, ISP, 장비 제조사 등의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IPv6전환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5) 최종할당정책(Final /8) : APNIC에 /8 1개(약1600만개)의 IPv4가 남는 시점부터 기관당 1회에 한해 최대 1,024개 주소만 할당

Korea IPv6 Day의 연례개최를 통해 국내 IPv6전환추진현황을 점검하고 IPv6 적용사업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0년도에 발표한 차세대인 터넷주소(IPv6) 전환 추진계획에서의 각 분야별 전환목표 점검을 통하여 2013년 백본망 전환 완료, 100대 사이트 대상 IPv6전환유도, 제조사 대상 IPv6적용 장비 개발 등을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IPv6전환추진협의회'를 통해 IPv4 신규할당 중지예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IPv6도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2011년 6월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이 참여한 전 세계 IPv6적용 테스트 행사인 'World IPv6 Day'에 국내 네이버(Naver), 다음(Daum), KT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IPv6 적용을 통한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IPv4 인터넷 환경 이후 IPv6도입을 통한 서비스 이용 및 활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한글 국가도메인 서비스 시행

1986년 도메인 도입 초기엔 영문으로만 구성되었던 도메인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비영어권 국가들로부터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0월에 개최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서울 정례회의에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 우선도입 방안을 의결하고 2009년 11월 16일부터 우선도입 신청접수를 시작하였다. ICANN의 우선도입방안은 1단계 국가도메인명 평가, 2단계 관리기관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다국어 국가도메인명 신청(1단계)을 위해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한글 최상위국가도메인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은 '한국'을 2010년 5월 우리나라의 한글 국가도메인으로 정하여 ICANN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년 9월 ICANN은 문자열 검증, 한국 내 이해관계자 집단의 지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을 우리나라 한글 국가도메인으로 확정하였다. 2010년 9월 2단계 '한국'도메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선정 및 ICANN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ANN의 기술·역량평가를 통과하여 '한국'관리권한을 획득하였다.

위원회는 새로운 한글 국가최상위도메인의 도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국'국가도메인에 대한 국내 등록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한글 국가도메인 등록정책 마련 및 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기업, 이용자로 구성된 인터넷주소정책 포럼 운영(14회), 일반인 대상의 공청회 개최(2회) 등 민간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였다. 또한, 추가 도메인 등록으로 인한 등록

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초기 한시적으로 ‘한국’ 등록관리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11년 5월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공공기관,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한글 최상위국가도메인 ‘한국’의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1년 8월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등록을 개시하여 2011년 12월 기준 210,622건이 등록된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공공기관의 등록 활성화를 위한 공문 발송, 아웃바운드 콜 등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이 ‘한국’을 등록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일반인 및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언론 보도, 매체 광고, 이벤트 등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림 IV-7〉 「.한국」 등록기간



‘.한국’ 국가도메인 도입으로 한글 홈페이지주소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나 마케팅 활용도 제고는 물론 국가 인터넷주소자원(.kr) 확장과 이용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정제되어 있던 국내 도메인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1) 스마트워크 활성화 여건 조성

위원회는 2011년 1월 삶과 일의 균형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2015년까지 근로자 30%의 스마트워크 실시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본 추진계획은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정보보호 인증 및 품질등급제 등 안전·편리한 이용활성화 환경 구축 등 3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의 실천과제로서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종합안내서인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 스마트워크 도입·운영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 및 침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를 제정·보급하였다.

〈표 IV-12〉 스마트워크 가이드북 주요내용

구 성	내 용	
스마트워크 개요	• 스마트워크의 정의, 유형, 현황, 필요성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 스마트워크 도입검토 • 스마트워크 프로젝트팀 구성 • 스마트워크 정책수립	• 스마트워크 업무분석 • 스마트워크 업무절차 재검토 • 스마트워크 제도·규칙 마련
스마트워크 유형 별 가이드	• 모바일오피스 • 재택근무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 직장근무(영상회의)	• 개요 • 서비스제공모델 및 기반요소기술 • 도입절차 및 운영 • 도입사례
보안 검토 사항	• 단말, 응용프로그램 및 플랫폼, 네트워크 및 서버 부분 이슈에 대한 보안 검토 사항	
법제도 현황	• 스마트워크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	

〈표 IV-13〉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준수사항

구 성	내 용	
서비스 제공자	인프라 보안	• 안전한 스마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위한 해킹대응,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물리적 보안 등 기술적 보호대책
	공용PC 보안	• 센터 내 공용PC의 기업저장장치,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대한 기술적 보호대책
관리자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 보안	• 악성코드, 분실·도난 등으로부터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 보호를 위한 관리적 보호대책
	인적자산 관리	• 이용자의 안전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의 관리적 보호대책
이용자	침해사고 대응절차	•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
	정보자산 취급·관리	• 정보자산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점검 및 수행할 수 있는 수칙 제공
	인식제고	• 이용자의 지속적인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주의사항, 대응절차 등의 교육 및 학습 활동 수행
침해사고 대응	•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 안내	

또한, 위원회는 2011년 6월 스마트워크 정책설명회, 9월 스마트워크 국제컨퍼런스, 지방도시의 스마트워크 문화확산을 위한 세미나(대구), 12월 SMART! Work & Society 2011 행사 등을 개최하고 스마트워크 소식지인 '스마트워크 뉴스레터'를 격주로 발간하는 등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스마트워크 도입 확대를 도모하였다.

2)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IPTV·디지털 케이블 등 기존 매체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스마트폰·스마트 TV 등 새로운 신규 매체의 대중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도입여건이 성숙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

을 통해 저비용·고품질의 보급형 모델 개발 및 이용을 확대하고자 ① 저렴하고 편리한 보급형 서비스 모델 ② 협업기반의 활성화 모델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2011년 2월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범사업에 적합한 추진분야를 발굴하고 기업의 요구사항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6월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KT,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3개 사업자들은 2011년 올해 각자 구상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이를 상용화 할 계획이다.

독자적인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KT는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IT기기 기반의 실시

간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스마트워크 전용 요금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인천시 소재 1인 창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PC환경에서 다자간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문서, 동영상, 이미지 등을 공유하는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준비 중이다. JDC가 운영할 스마트워크센터는 기존 정부 주도의 스마트워크센터와 달리 국내 최초의 민간 임대형으로, 제주도의 지역특성에 맞게 레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레저 특화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를 다른 지역과 연계함으로써 제주도에만 국한되지 않은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표 IV-14〉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주요내용

사업자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KT	협업 솔루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문서협업 솔루션 통합 커뮤니케이션(UC) 솔루션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벤처기업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태이블을 활용한 회의지원 서비스(프레젠테이션, 브레인스토밍 등) 다자간(PC, 모바일기기 등) 화상회의 서비스 업종간 CUG(Closed User Group) 구성 및 업무지원 서비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레저특화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활용 자료관리 서비스 고화질 화상회의 및 원격 공동 문서작업 지원 솔루션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시범 적용함으

로써, 업계 전반으로의 스마트워크 서비스 확산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글로벌 신성장동력 기반 강화

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 환경이 급진전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발전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선도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을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1년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시행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2010년까지 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방송통신 R&D 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위원회 독자적으로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R&D 기획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였으며, R&D 사업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는 등 위원회 독자적인 R&D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R&D 사업의 시행 원년에 맞게 연구개발의 지원 방향도 새롭게 정립하였다. 대기업위주로 역량이 성숙한 시스템·하드웨어 개발 지원은 지양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

이 활성화될 수 있는 SW·콘텐츠 기반 기술과 스마트TV 등 미래 유망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등 생태계 참여 기업의 동반 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집중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다양한 미래 유망 서비스 창출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에 1,460억 원을 투자하였다. 우선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본격 대비하기 위하여 고화질 3DTV, 현재 보다 4~16배 선명하고 안경없이 3DTV를 시청할 수 있는 UHDTV, 음성·동작으로 작동하고 지능형 검색·양방향광고·증강방송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 TV 기반 기술 등 유망 미디어 기술에 투자하였다. 둘째, 무선인터넷 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물 지능통신, LBS 등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셋째, MRI 수준으로 정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3차원 유방암 진단 기술,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를 선없이 충전·이용할 수 있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 등 전파를 활용한 신서비스 개발도 추진하였다. 넷째, 주파수 이용 효율 제고, 새로운 통신망 구조 등의 구현을 위하여 4G 이후의 변혁적 이동통신(Beyond 4G)과 고속·고품질·보안 보장 등 현존 인터넷의 한계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미래 인터넷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ICT의 역기능 방지, 안전한 사회기간망 등 방송통신을 활용한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하였다.

위원회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Advanced 기술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시연하였다. 시연회에서는 4G 시스템의 고속무선 전송능력을 활용한 고화질 멀티미디어 방송다중 송출서비스(eMBMS), 고속 업로드가 요구되는 개인방송

서비스 등 미래에 실현될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여주었고,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3D 풀HD 영상을 4G 이동통신 기술로 전송받아 차량 내에 설치된 대형TV를 통해 끊김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는 한편 고화질 화상통화도 시연하였다.

〈그림 IV-8〉 LTE-Advanced 시연 현황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기술개발 결과 시연은 세계 최초로 LTE-Advanced 시스템을 개발하여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한 발 앞선 기술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11년 8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3DTV 실험방송과 시연, 전시로 이어졌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경기 상황을 지상파 Full HD 3DTV로 세계 최초 생중계 실험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천리안 위성을 활용하여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스카이라이프 중계방송을 제공하였다.

또한, 5mm 해상도의 정밀도로 편리하게 암

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과 LED 전광판·노트북 등을 전기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다. 모바일 광고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IPTV 플랫폼과 IPTV 셋탑 박스에 탑재되는 비디오 부호화 칩(Soc)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년 6월 인터넷 트래픽 폭증과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하여 네트워크의 양적 확충을 위한 패킷-광 통합 전달망 기술을 'KOREN'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BMT(Bench Mark Test)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9월에는 상용 Anti-DDoS 장비(Safezone-xDDoS) 개발 완료 후, 망 연동구간에 적용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T)에

서 BMT를 실시하였다.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대용량 분산서비스 거부(DDoS) 대응시스템 등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2011년 8월에는 10G급 실시간 DDoS 공격 탐지/대응 시스템을 LG CNS를 통해 상용화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 서버용 DDoS 공격 탐지/대응 시스템(Secure-NIC)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다. 또한 전파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GPS 전파교란 감지장치 실험 시제품을 제작·설치하고 시험 운용한 바 있다. 2011년 5월에는 파주 및 안양에 GPS 교란신호 감지 실험 시제품을 제작·설치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신호감지 시 관련 담당자에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추가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특히 공방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글로벌 IT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공략을 위해서 길목특히 확보를 위한 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현에 따른 유·무선 트래픽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속·고품질의 네트워크 기술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인간중심의 ICT 실현을 위하여 감성에 기반한 UI/UX 기술 개발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 이용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1년 3월 4일 DDoS 공격,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보보

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 및 침해 방지 기술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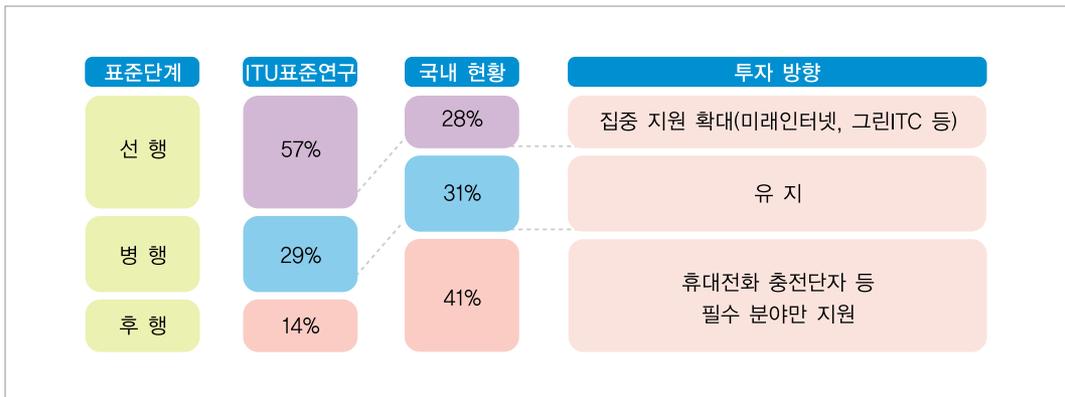
2011년 2월 방송통신 분야의 신규 기술개발·표준화 과제 선정 등 연구 개발 추진계획을 포괄하는 '2011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개발 추진 방향으로 는 방송통신 기술 개발 체질 개선,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방송통신 연구개발 기반 조성이 제시되었다.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 표준 제정 체계 확립이다. 이는 표준 권고, 표준채택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 기관(국립전파연구원)에 위임하고, 표준화 지침 제정 및 국가표준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생활 밀착형 표준화의 본격 추진이다. 휴대전화 한글자판·충전 단자, 시각장애인 관련 표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표준을 발굴하고 적기에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한다. 셋째, 명품 표준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재편한다. 이를 위해 ITU 등 국제기구와의 표준 부합성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표준 창출을 위한 선행 표준 개발을 확대한다. <그림 IV-9>에서 보듯이 ITU 표준연구는 선행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행 표준 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미래인터넷, 그린ICT 등 선행 표준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ITU 기고서 제출 건수는 세계 3위(546건, 10.7%)이나, 표준특허 보유율은 세계 8위(76건, 2.4%) 수준으로 기고에 비해 표준특허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 참여가 적고 실적이 저조한 포럼은 지원을 중단하고, 소규모 포럼 위주에서 산업체의 매칭 참여를 확대하여 대형 포럼 위주로 통합 및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에 집중된 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 과제를 정책지정 위주에서 공모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림 IV-9〉 국제기구 표준단계별 국내 현황과 투자 방향



글로벌 표준과 관련하여 최근 ITU, 3GPP⁶⁾ 등 국제 4G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화 과정에서 자국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및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4G 이동통신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고, 상충되는 의견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소하는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4G 국제 표준화 회의에 기고서를 제출

하고,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고 상충되는 의견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 WiBro 및 LTE 진화기술이 모두 ITU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개발한 WiBro 및 LTE 기술을 4G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6) 3GPP :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해 위원회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4G 국제표준화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위원회 산하에 IMT 주파수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주파수 정책 자문그룹(SPAG)’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실무그룹을 통해 ITU, IEEE⁷⁾, 3GPP 등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언론 홍보를 지속하였다.

또한 국제 표준화 지원 사업으로 국내 이동통신 전문가들이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의장단으로 다수 진출하여 Beyond 4G(4G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선도활동을 강화하였다. 현재 ITU-R WP5D 부의장, 3GPP 최고 의결조직의 부의장 등 14명이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내개발 기술의 4G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최신 스마트폰, LTE 기지국 등 최신 장비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외국 전문가들에게 홍보하였다. 2011년 9월 부산에서 ‘APG-12 5차 회의’, 2011년 9월 서울에서 ‘제29차 한중일 IMT 표준협력 회의’, 2011년 4월 서울에서 ‘3GPP2 HoD/SC/OP’ 등 4회에 걸쳐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였다.

2011년 위원회는 국제 표준화 사업으로 휴대전화 제조사별로 상이한 한글 문자판의 표

준화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삼성전자(천지인), LG전자(나랏글), 팬택(스카이II)의 단말기 교체 시, 소비자는 새로운 한글 입력방식을 학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4×3배열의 자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효율적으로 배열하여 휴대전화, 유/무선 전화기 등 숫자 자판을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제조사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한글자판 국가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휴대전화 제조 3사, 이동통신 3사가 한글 문자판 표준화에 합의하였다.

2011년 3월 관련 업계는 한글자판 표준화 방안에 대해 특허권 무상 공개와 관련 소스코드 제공에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한글자판 국가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천지인 단일표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천지인, 나랏글, SKY 복수표준 채택을 추진하였다. 2011년 6월에는 ‘전화기 한글 문자 자판배열’의 방송통신표준(KCS)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한글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확립과 한글 국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기존 세 가지 상용 방식을 제외한 2단계 미래형 한글 문자판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즉 4×3배열인 12키 이외에 다른 배열을 갖는 기기를 대상으로 미래형 한

7)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글 문자판 표준화를 추진하고, 민간 표준화 포럼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글 자판 배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ITU-T 등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한 한글자판 배열의 국제표준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다. 녹색 방송통신 환경 조성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는 2009년 12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녹색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왔다. 2010년 9월에는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통신 사업자별 전력사용량에 대한 목표량 설정 방안,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기기 및 시스템 관련 절감 방안, 절감 방식별 장단점,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담고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감축 세미나 개최, 녹색 방송통신 기술·사업 인증제 추진, 국내외 녹색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 수행 등 방송통신 분야 저탄소 관리체계 구축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2011년에는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 정책을 구체화해 시행하였다. 녹색인증제 활성화 및 녹색 방송통신 표준화를 추진했으며, 신성장동력으로서 방송통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 기술 R&D 및 시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녹색 방송통신 기반을 강화하고 확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처별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2011년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절감 목표를 15,700TOE⁸⁾로 설정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방송통신사업자 중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였다.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감축 목표 달성 노력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해 감축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의 온실가스 활동 데이터를 조사·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 장기 예측 모형 및 저감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금번 연구 개발 결과는 2012년도 녹색 방송통신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산업 민간참여 확대 및 신속한 성장 유인을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한 녹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 평가 분야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5월에는 녹색인증 고시를 개정해 녹색기술 평가분야가

8)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kl, t, m³, kW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1TOE는 원유 1톤(7.41 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가 기준이 되며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m³에 해당됨. TOE는 최근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위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19개에서 192개로 대폭 확대됐으며, 녹색 인증실적은 2010년에 비해 83%(6건→11건) 이상 증가되었다. 또한 녹색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녹색 방송통신 구현을 위해 600개 방송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홍보물을 발송하고 녹색성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다.

녹색 방송통신 분야 중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략 분야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방송통신 분야(제품·네트워크·서비스, 기관, 국가 등)의 저탄소 환경 영향 평가, 그린 데이터센터 평가·개선, 방송통신 제품 내 희소금속 재활용 표준 등이 개발되었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ITU-T SG5 통신환경 및 기후변화) 표준화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방송통신 분야 제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측정법 국제표준(ITU-T L.1410), 그린 IDC 구축 가이드라인 국제표준(ITU-T L.1300), ICT 제품 포함 희소금속 정보 표지 방법 국제표준(ITU-T L.1100) 등 국내표준 6건과 국제표준 3건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 국제기구인 ITU-T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기고 반영이 4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8개 의장단에 진출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등 녹색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를 통해 2011년 9월 ITU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으로 국제 그린 ICT 심포지움을 개최하

고, ITU-T SG5(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해 34개국,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녹색 선진국가 위상 확보에 기여하였다.

한편, 녹색 방송통신 기반 조성을 위해 고효율·저전력 기반의 방송통신 서비스 기반 핵심 기술개발과 스마트 폰 등 다매체 기반의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의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 9월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SLA 보급, 2011년 12월 클라우드 인증제도 마련 등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 모바일오피스(SMO) 시범사업 실시(2.5억원, ~2010년 11월) 등 원격근무 지원 기술 개발을 지원해 보급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기술에 기반한 저탄소 녹색 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향후 위원회는 방송통신 기술을 활용한 녹색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녹색성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 기술·인프라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영역(에너지관리시스템, 제조·유통 등)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로 Green by ICT(방송통신 기술·서비스로 타 영역 온실가스 절감)를 구현할 것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탄소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한 표준 개발 및 국제적 녹색 방송통신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 위상을 보다 더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방송통신 녹색 서비스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녹색 방송통

신 기반을 확립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

스마트폰 2천만 대, 스마트화된 TV 8백만 대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통신 서비스는 ICT 영역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2011년 9월 기준 스마트폰용 앱은 약 87만 개(애플 앱스토어 43만 개, 구글 마켓 42만 개, 국내 앱마켓 1만 9,000개)로 무선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TV의 디지털화 및 고성능화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케이블 방송 등 아날로그 가입자의 단계적 디지털 전환이 예상되며, TV 고성능화는 셋톱박스(STB) 성능 향상, 편리한 유저인터페이스(UI), 영상통화, 스마트폰·패드·가전 등과의 끊김 없는 연동 기능 등이 추가되면서 급격한 진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OS와 오픈마켓이 결합된 개방형 플랫폼의 성공 경험은 모바일 기기에서 TV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TV, IPTV, DCATV 등 개방형 개발환경과 오픈마켓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TV 앱스토어, KT 올레 IPTV 앱스토어 등이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앱은 1,000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구글TV 2.0, 일체형 애플TV 등 글로벌 기업

들 또한 개방형 플랫폼 기반 TV 서비스 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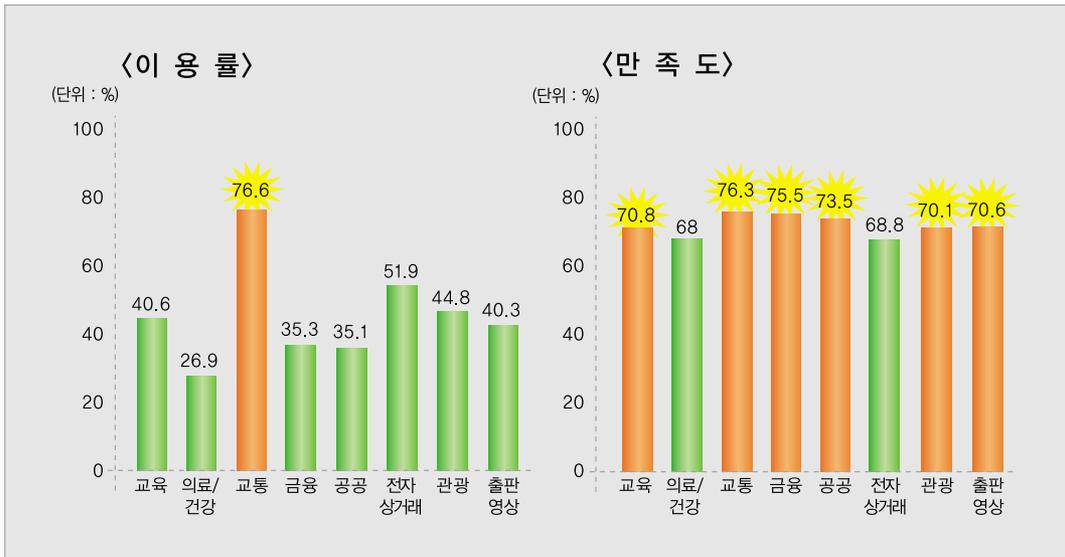
이러한 서비스의 증가는 망 대역폭 속도 증가, ICT 기반의 융합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은 2010년 100Mbps에서 2012년 1Gbps, 2020년 10Gbps로 망 속도가 증가되고, 무선은 2010년 0.5~2Mbps에서 2012년 2~10Mbps, 2020년에는 25~60Mbps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근접통신(NFC),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물지능통신, 인지기술 등의 확대 적용을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비즈니스 창출,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이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융합 확산 분야는 교육, 의료, 관광, 근로, 교통 등이 대표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클라우드, UC(Unified Communication) 등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오피스, 데스크탑 가상화, 실감형 영상회의 등 스마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웅진코웨이가 최근 클라우드에 접속된 태블릿PC를 통해 스마트 세일즈, 헬스플래너 기능 수행, UC를 통한 기업 내 소통, 클라우드를 통한 ERP 등으로 업무를 혁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기반의 강의, 디지털교과서 등은 이러닝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킬 것이다. 서울사이버대는 3천 명을 대상으로 전체 강의 콘텐츠의 50%인 160과목을 스마트기기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IPTV 등을 통한 교육·금융·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어, 향후 주

요 분야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더욱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10〉 분야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이용 현황



2011년 위원회는 방송통신 신 융합서비스 촉진 방안으로 공공정보의 스마트한 활용을 통한 생활편의 증진 및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다. 공공정보 제공기기가 PC에서 양방향 TV, 스마트폰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였다.

첫째, 단말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국민생활

과 밀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병영의 경우 29,300여 개의 내무반, 교육은 6만여 개의 학급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CCTV교통정보·SNS고속도로 앱의 형태로 33만 건 다운로드, 등산 정보는 9만 6,000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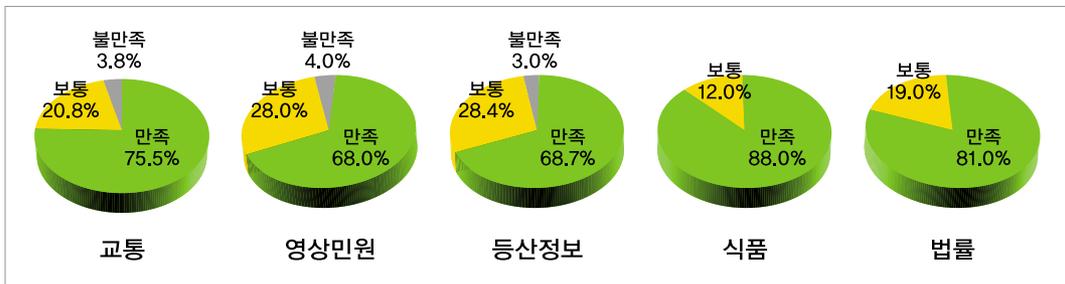
〈그림 IV-11〉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공공정보 제공 현황



교통정보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이 보유한 144개 CCTV 교통영상정보를 KT, SKB, LG U+, 다음, 네이버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500여개 CCTV 영상과 SNS 교통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IPTV 영상민원 서비스를 통해 민원상담 및 8종의 제증명,

280여종의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하는 서비스이다. 2011년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 민원 분야에서 이용자들은 70% 내외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여 공공정보 활용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설문결과 교통은 만족 75.5%, 보통 20.8%, 영상민원은 만족 68%, 보통 28%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12〉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공공정보 분야별 만족도 설문조사



둘째, 공공정보에 있어 정보·기능의 제공 수준에서 이용자의 능동적 활용 가능성을 구현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시도되었다. 고화질 영상통화, N-Screen, SNS 등 시장에 파급력이 있는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의 상호작용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영상민원에서 상호작용에 의한 무방문 서류발급이나 교육의 경우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례로는 민원발급, 법률상담, 영농컨설팅, 다문화가정 커뮤니티 등 TV 영상을 통한 무방문 서비

스를 실현하였으며, TV, 태블릿PC를 방과후 학교 등 교육현장에 활용하여 원격교육, 참여형 교육, 실감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방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신기술 검증 및 상용화 사례로는 2008년 도입한 IPTV 멀티앵글서비스는 KT가 2010년 프로야구 중계에 상용화하였으며, 2010년에 추진한 HD급 영상통화는 SKB, KT가 상용화할 예정이다. 2010년 추진한 브라우저기반 3-스크린 서비스는 2011년 LG U+가 Shoot & Play라는 서비스로 상용화하였다.

〈그림 IV-13〉 상호작용형 방송통신 신 융합서비스



KT 멀티앵글 프로야구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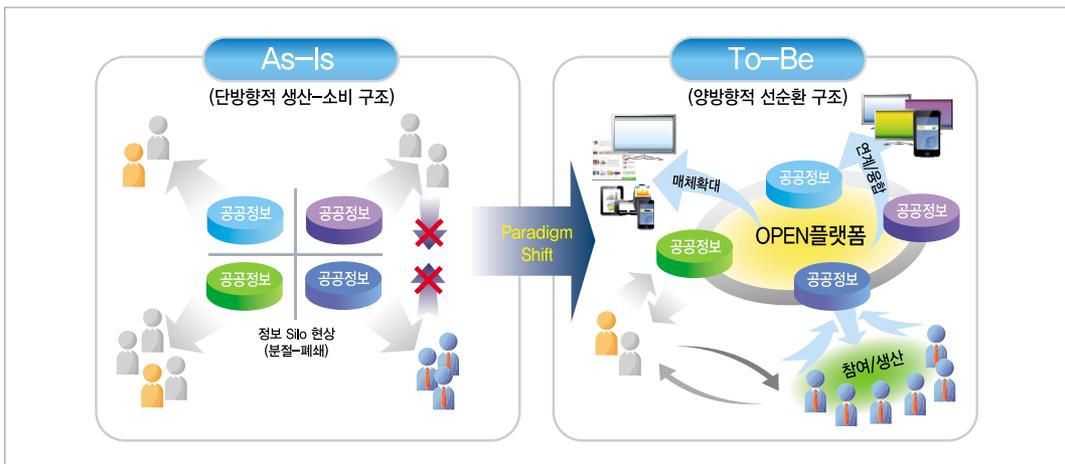


SKB 서울시 영상민원 서비스



LG U+ Shoot & Play 서비스

〈그림 IV-14〉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모델(매체간 연동, 영상/스마트폰기반+플랫폼 개방)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스마트기기
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이용 과정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였으며, 노약자 계층에 TV 기반
의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
고, 분야별 신유형의 융합서비스 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스
마트화하는 ICT 환경 속에서 융합의 활용 가
능성을 검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마.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1) 전파방송 중소기업 지원

위원회는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
내외 산업 현황 정보 제공과 전문컨설팅 및 시
제품 제작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
하였다. 먼저,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체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제
품 상용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유럽형 다위성 수신 초박형 평면 안테나’ 등
14건의 제품을 선정·지원하였으며, 전파방송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경영환경이
열악한 전파방송분야 중소기업의 여건개선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법률, 회계, 노무,
특허, 인증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그

룹을 구성하여 ‘개발 진행중인 기술에 대한
사전 보호방안’ 등 총 19건의 컨설팅을 지원하
였다.

2)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는 마트 및 상점 등에서 도난방지시
스템에 활용되는 자계 유도식 전자기기 및 청
각 장애인을 위한 무선보청기 도입을 위한 기
술기준을 개정하였다. 첫째로, 자계 유도식
RFID의 경우 58kHz, 130kHz, 135kHz, 3MHz,
13.56MHz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동물관리, 교통
카드, 도난방지, 주차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⁹⁾ 이에 대해 산업체로부터 현
행 자계 유도식 무선설비 불요발사 기준이
‘정보기기의 전자파 장애방지 기준’의 가정용
을 적용하여 산업용에 비해 통신거리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전자식도난방지시스템(EAS)용으로
7.4~8.7MHz 주파수대 허용에 대한 요청이 있
었다. 이에 위원회는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자
계 유도식 무선설비의 불요발사 기준을 완화
하여 산업용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도입을 위
한 불요발사 기준값을 추가(30~230MHz : 40dB μ V
/m@10m 및 230MHz~1GHz : 47dB μ V/m@10m)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 주파수 동향과 소
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7.4~8.7MHz 대역의

9) 수동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전자식도난방지시스템(EAS :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이 있으며, RFID는 암호화된 방식의 정보가 저장된 태그를 적용대상에 부착,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기이며, EAS는 출입구나 통로에 설치되어 상품에 장착된 태그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 시, Alarm을 발생시키는 상품보호시스템

자체 유도식 무선기기의 기준을 $9\text{dB}\mu\text{A}/\text{m}@10\text{m}$ ($60.5\text{dB}\mu\text{V}/\text{m}@10\text{m}$)로 상향하는 등 자체 유도식 RFID 기술기준을 개정하였다. 둘째로, 무선보청기 주파수는 전파규칙(RR 5.116)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3,155~3,400kHz 대역에 분배되어 있으나, 국내 기술기준이 없어 무선보청기 기술기준 마련이 요구되었다. 무선보청기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유도식 무선보청기보다 출력이 낮은 미약전계 무선보청기를 수입하고 있어 제품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자체 유도식 무선보청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였다.

5. 인터넷기반사회 대응역량 강화

가. 인터넷의 사회전반에 대한 영향 대응

1) 소셜 플랫폼 활용 촉진

위원회는 스마트폰 보급 및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로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인터넷서비스가 급성장하며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함에 따라 이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소셜플랫폼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전략’을 수립, 2011년 5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 국가·사회 소셜커뮤니케이션 기반 강화 ② 소셜 이코노미 생태계 조성 ③ 소셜트러스트기반의 이용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위원회는 국가·사회 소셜커뮤니케이션 기반 강화를 위하여 국정 기획·집행·평가·홍보 전 단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참여와 실시간 대응성을 강화하는 신 소셜소통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소셜플랫폼의 접근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는 소셜인덱스의 적용 확산을 촉진하고 ▶학습 ▶헬스 ▶재난대응 ▶치안국방 ▶민원 등 주요 기반 서비스와 SNS의 결합 모델을 정립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소셜이코노미 생태계 조성이다. 한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글로벌 크라우드(crowd) 펀딩)를 육성해 이를 중심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자본, 기술 등을 원활히 연계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참여형 소셜펀드(Social Funds)를 활성화시켜 소셜기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환경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로 소셜 트러스트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체계적인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의 접근·활용 격차를 줄이고, SNS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SNS 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판시스템 고도화와 허위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지원해 허위·유해 정보의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또한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원하는 경우 파기 또는 삭제 할 수 있도록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의 자기 통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셜플랫폼이 사회·경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SNS, 모바일 등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의 수요에 대응한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콘텐츠 생산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1) 본인확인제도 시행

인터넷 사용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역기능이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위원회는 2007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였다. 2009년에는 악성댓글 등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9년 1월 본인확인 조치의무 적용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비스 유형에 제한없이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1년에는 총 133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14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다.

〈표 IV-15〉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 공시 결과

(단위 : 개)

포털	언론/미디어	쇼핑/경매	엔터테인먼트	인터넷서비스	생활/레저	금융	비즈니스	교육	계
13	51	24	22	21	6	4	3	2	146

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소통환경의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여, 본인확인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의 공개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내 이용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이용자도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우리나라는 인터넷 활용 강국이지만 이면에 액티브X 과다 사용¹⁰⁾, 높은 구버전 웹브라우저 사용 등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서비스 제공자, 개발자,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위원회는 2011년 3월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 확산과 웹 브라우저 이용 다양화 및 웹 환경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이용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웹서비스 제공자 및 개발자 대상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 확산을 위하여 액티브X 사용 없이 전자서명이 가능한 기술을 금융권 중심으로 적극 보급하고 액티브X 주요 구현 기능인 보안, 파일처리기술, 그래픽·차트 표현, 멀티미디어 재생 등에 대한 대체기술(12개)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 5월 공공·금융·포털·게임 등 국내 주요 100대 사이트를 선정, 그 중 20개 사이트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

으며, 2014년까지 금융(로그인, 방화벽), 포털(전자결제, 파일업로드), 게임(키보드 보안) 등 사이트 특성에 맞는 직접적인 액티브X 대체기술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주요 100대 사이트는 물론 P2P 및 개인 쇼핑몰 등 취약 사이트 기술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의 웹표준 및 액티브X 대체기술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관련 유관협회를 통해서 동일한 기술 교육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IE¹¹⁾에 편중된 웹브라우저 이용환경과 구버전인 IE6 사용률이 높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1년 7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및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구버전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및 멀티 브라우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 게임사(엔씨소프트, 한게임)로 캠페인을 확대 전개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85곳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캠페인 안내 공문발송) 캠페인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IE6는 물론 IE 자체 점유율도 크게 줄어들었다.

10) 국내외 웹사이트의 액티브X 사용여부 조사결과, 국내는 100개중 72개, 국외는 20개중 1개 사이트 사용. 2010년 8월, KISA

11) IE 시장 점유율(한국 92.32%, 전 세계 45.11%), IE6 시장 점유율(한국 19.84%, 전 세계 4.37%), 2011년 3월,

<http://gs.statcounter.com>

〈표 IV-16〉 국내 및 전세계 IE와 IE6 시장 점유율

(단위 : %)

구 분	IE 시장 점유율			IE6 시장 점유율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12월		상반기	12월
국내	94.32	92.62	80.98	36.56	19.75	7.99
전세계	51.77	44.75	38.65	9.06	4.27	1.78

출처 : <http://gs.statcounter.com>

한편 웹 브라우저 이용 다양화 및 웹환경 고도화를 위하여 웹 기술지원센터(www.wtsc.kr)를 구축하여 각종 브라우저별 기능 소개와 다

운로드, 액티브X 대체기술, 웹표준 기술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IV-15〉 웹 기술지원센터(www.wtsc.kr)



위원회는 글로벌 선진 인터넷 이용환경 구현을 위해 차세대 국제 웹표준기술(HTML5¹²⁾) 기반의 액티브X 대체기술 보급과 웹 표준 기술 확산 활동을 W3C 국제 표준화에 연계할 수 있도록 웹 표준 전문가 발굴(DB구축)을 병행하였다. 또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웹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웹 표준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웹 표준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개발된 우수 웹사이트 및 웹 응용에 대한 포상을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의 웹 어워드 시상 분야에 표준화 부문을 신설하여 표준 적용 우수 사이트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

12)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version5) : 기존 텍스트와 그림 중심으로 표현되는 기술 중심인 HTML4에 멀티미디어 기능, 게임 및 이미지 편집 등이 웹 자체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국제 표준으로 W3C에서 국제 표준화 추진 중임

로 추진하는 실행 모델을 설정하여, 정부는 액티브X 대체기술 보급과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액티브X 사용은 줄이고 보안성은 높이며,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표준 환경이 조성돼 국내 웹 사이트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 인터넷 이용원칙 정립

1) 망 중립성

최근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경제·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핵심적 기반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트래픽 급증과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의 포화, 신규서비스 출현 등에 따라 통신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지속적인 정보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논의의 중심에 망 중립성이 있다.

‘망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 및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 종류, 발신자와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 효율적 망 이용을 위한 트래픽 관리 및 인터넷 이용의 기본원칙(투자비 분담 등)에 대한 논의로 진화하고 있다.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해 통신사업자는

트래픽 혼잡 관리와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비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콘텐츠사업자 등은 인터넷 망의 개방성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 5월에 ‘망 중립성 포럼’을 구성하고,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망 중립성 포럼’은 학계, 통신사, 인터넷사업자, 제조사, 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하였다. 포럼은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을 진단하고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하여 업계, 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공정책자문(Public Consultation)도 실시하였다. 공공정책자문을 통해 기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망 중립성 포럼’의 논의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통신사업자, 학계 전문가, 블로거 및 IT 전문가 등에게 발송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논의와 의견수렴 결과, 미국, EU 등 해외 규제기관의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망 중립성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1단계로, 인터넷 망의 중립성과 이용자

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탈적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2011년 12월 26일) 하였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목적, 기본원칙(5개), 관리형 서비스, 상호 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원칙의 내용은 <표 IV-17>과 같다.

<표 IV-17>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이용자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하여야 함
차단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한편,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형서비스 제공이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ICT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상호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자

율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과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 중립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상기 가이드라인 시행결과를 고려하여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 mVoIP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2단계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절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1.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1)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위원회는 현재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통신업체, IT 서비스업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고 있으나, 글로벌 업체의 시장 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합치 못하는 법·제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 수요 기반 취약 등으로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2011년 5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본 전략은 초기 단계의 국내 시장을 견인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②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 : 클라우드의 선도적 도입 ③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글로벌 IT Hub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육성 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클라우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을 개선하고, 인증제·서비스 수준 협약 (SLA) 가이드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가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여, 국가 IT 인프라의 효율화, 예산 절감 및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 표준화,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및 테스트베드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튼튼한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Global IT Hub로의 도약을 위해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를 접목,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클라우드(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육성하는 한편, 해외 데이터 센터의 유치, 클라우드에 대한 인지도 향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와 유관기관 민간, 학계 영역이 함께

클라우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관·연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중심으로 2011년 5월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1년 총 2회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계획 및 추진 성과, 2012년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최근 주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표준, 망 중립성, 애플 iCloud 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 요건 (교육/의료/금융 등 사업 인허가), SLA 등 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및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확산,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클라우드 관련 국내·외 기술과 정책을 공유 및 홍보, 국제협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한·일 클라우드 정책 대화, 한·중·일 아시아 클라우드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였다. 한·일 클라우드 정책 대화에서는 2010년 3월 열린 한·일 양국의 장관급 면담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한·중·일 아시아 클라우드 국제포럼을 통해 클라우드 관련 각국 정책,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법·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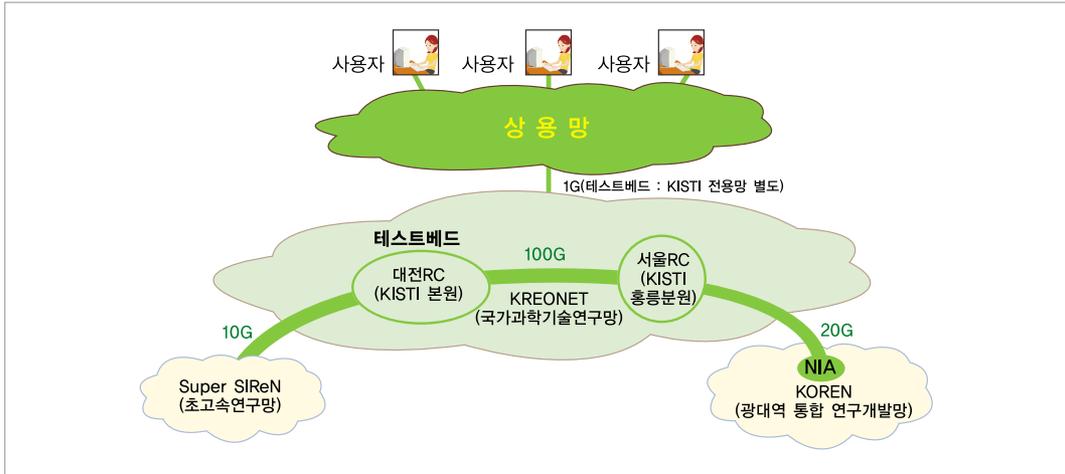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위원회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는 2009년 12월 발표한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 11월 정부 예산 20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센터 내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2011년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솔루션 등을 개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현재 1,624개 CPU 코어에 달하는 x86서버 203대, 181.5테라바이트(TB) 용량의 스토리지와 1Gbps급 전용회선을 구축한 상태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에서는 ① 다양한 응용 서비스 모델 및 응용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험·검증하기 위해 가상화된 IT 자원(서버, 스토리지, OS 등) 지원, 클라우드 관련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가상화 관리 S/W 등을 시험·검증하는 경우 ②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③ 일반인 및 일반기업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데스크톱 가상화,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CRM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 중에 있다.

〈그림 IV-16〉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네트워크 구성



위원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 실현을 목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는 보다 많은 중소 IT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하고 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융·복합 신규 서비스를 창출·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기반 구축

1) 사물지능통신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위원회는 국내 사물지능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모델 보급·확산을 통한 산업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1년 5월 사물지능통신 장비와 서비스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사

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는 총 예산 19억원을 투입하여 5개월여에 걸쳐 구축되었으며 사물지능통신 모듈 및 단말, 플랫폼 S/W, 각종 응용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하여 각종 센서,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계측·분석 장비, 모니터링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사물지능통신 중소벤처기업들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사물지능통신 환경에서 시험하여 사업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같은 애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며, 기술 및 문제점 개선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의 서비스 개발 기간 단축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2) 사물지능통신 확산환경 조성

방송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주위 환경, 상태 정보 등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지식정보 서비스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위원회는 2011년 12월 사물지능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농가의 재배시설을 원격 모니터링

하고, 도시민들의 귀농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 팜(SmartFarm)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스마트 팜 서비스를 통하여 농가의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의 온도, 습도, 광(光)양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 농업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가지, 고추, 단호박 등 10종의 다양한 작물 재배방법을 스마트폰, 태블릿PC, IPTV, 스카이라이프 등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림 IV-17〉 스마트폰 원격 모니터링 및 UCC 동영상 서비스 화면 예



이 서비스는 위원회가 지원하여 KT, 광양시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소재의 20개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와 광양시의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130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12년부터 상

용화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 등의 새로운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新유형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할 계획이다.

3) 차세대 사물지능통신의 핵심기술 확보 추진

위원회는 미래 통신시장의 블루오션인 사물지능통신 시장을 선점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WiBro/LTE 기반 사물지능통신 단말 표준 플랫폼 개발’, ‘초저전력(1nJ/bit, Nano Joule/bit) 통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였다. ‘WiBro/LTE 기반 사물지능통신 단말 표준 플랫폼 개발’ 과제는 차세대 새로운 킬러 서비스로 예상되는 사물지능통신의 단말기 표준을 개발하는 것으로 새로운 모바일 통신 환경에서 사물지능통신 단말의 무선접속, 인증/보안, 품질보장, 원격제어 등의 플랫폼을 위한 표준 규격을 제시하고, 이러한 플랫폼이 구현되는 S/W 및 H/W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 및 테스트 환경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사물지능통신 단말기 생산업체의 단말기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저전력(1nJ/bit) 통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과제는 미래 스마트 모바일 통신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재 보다 약 50배 정도 향상된 저전력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인 50nJ/bit를 1nJ/bit 수준으로 개선하고, 저전력 송수신에 적합한 극소형/인체부착 안테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nJ 기술은 극소형/인체부착 안테나 기술

과 더불어 그동안 무선 센싱 기술에서 전력 제공의 한계로 인해 적용·확대가 어려웠던 바이오센싱, 수생태 환경 모니터링, 초정밀 융합 BT 분야 등에 사물지능통신 모바일 센싱 기술이 더욱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초저전력 기술과 극소형/인체부착 안테나 기술이 원격의료에 접목될 경우 인간 생체정보의 장기적인 원격 전달이 가능해져 지속적인 상태 관리를 통해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될 기술로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근접통신(NFC) 기반 산업 창출

1) 근접통신(NFC) 기반 Mobile Smart Life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위원회는 2011년 3월 스마트·모바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근접통신(NFC)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 ‘근접통신(NFC) 기반 Mobile Smart Life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과거 2000년대 초부터 모바일 결제 기반 구축이 추진되었으나 이통사, 카드사 등이 모바일 결제시장 주도권 확보에 따른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표준화 미흡, 중복 투자 등 문제점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및 NFC 기술의 활용 가능성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NFC 기반의 모바일 결제 및 응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스마트 모바일 근접통신(NFC) 서비스 선도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新 Mobile Smart Life 서비스 기반 조성 ▶Mobile Smart Life 응용 서비스 발굴 및 보급 촉진 ▶차세대 모바일 결제 및 응용서비스 시장 선도 등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NFC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인 ‘Grand NFC Korea Alliance’를 구성하여 인프라 확산분과, 시범사업분과, 기술개발분과, 응용서비스 표준화분과 등 4개 분과를 두고 인프라 확산

방안 등 세부 액션 플랜(Action Plan)을 ‘Mobile Smart Life 활성화 계획’에 담았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상에서 독립적으로 구현되던 각종 응용서비스가 휴대폰 하나에 융합되어 교통/카드/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모바일 서비스가 Smart Life서비스로 진화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 통신업계, 금융 및 단말·칩셋 제조사 등이 新서비스 및 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18〉 근접통신(NFC)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3대 분야	핵심과제	주요내용
新 Mobile Smart Life 서비스 기반 조성	스마트 모바일 결제 공동 인프라망 전국 확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C 협의체(Grand NFC Korea Alliance) 구성 및 운영 ※ KISA : 협의체 구성 및 분과 활동, MOIBA : 사무국 역할 수행 • 모바일 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해 공동펀드 조성 및 결제기 보급 추진
	모바일 전자결제 가능 탑재 단말기 보급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모바일 단말 제조 시 NFC 등 무선전송(RF) 기능구현 가이드라인 제작·권고 • 기존 단말기에 대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안기술 보급 및 홍보 추진
	NFC 기반 모바일 응용 서비스 관련 표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C 국제표준 산업체 활용 권고 • NFC 기반 응용서비스를 위한 국가표준 개발 • NFC 기반 응용서비스 표준화 추진을 위한 포럼 신설
Mobile Smart Life 응용서비스 발굴 및 보급 촉진	모바일 단말기간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 제작 및 제도 개선 추진 • 모바일 단말기간 결제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 • 솔루션 개발·보급 및 시범서비스 추진
	개인정보 및 인증 관련 응용서비스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인증 등을 활용하여 통합 인증 및 사용자 맞춤형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시범서비스 추진
	정보제공 및 광고 관련 응용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기반 서비스 등과 접목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맞춤형 광고, 응용서비스 발굴 및 시범 서비스 추진
차세대 모바일 결제 및 응용서비스 시장 선도	안전한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단말 도난/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 플랫폼 기술 개발 • 악성트래픽에 대한 사용자 보호기술 개발 •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보안 플랫폼 S/W 개발
	스마트지갑 (Smart Wallet)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C 기반의 지불·인증을 위한 스마트지갑 기술 개발 • 스마트 지불 및 통합 인증 기술 개발
	NFC 기반 응용서비스 발굴 테스트베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C 결제기, 단말기 등의 호환성 확보 및 서비스 성능 등을 사전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2) 근접통신(NFC) 기반 시범사업 추진

위원회는 NFC 결제 및 응용서비스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11월 이동통신 3사, 카드 11사, VAN 3사, 6개 주요 가맹점 CEO 등과 함께 ‘명동 NFC Zone’을 선포하고, 다양한 NFC 기반의 시범 응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명동 NFC Zone’ 시범사업은 약 3개월(2011년 11월~2012년 2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커피숍, 편의점, 패스트푸드, 화장품 매장 등 명동 200여개 매장에 NFC 모바일 결제 인프라가 설치되어, NFC가 탑재된 단말기와 모바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결제 및 쿠폰 다운로드, 스마트주문 등의 시범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었다.

본 서비스는 2011년 3월 구성된 민·관 협의체인 ‘Grand NFC Korea Alliance’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 카드사, VAN사, 가맹점 등의 상생 협력모델로 NFC서비스를 실제로 시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동통신사는 NFC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카드사는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VAN사는 NFC 복합 결제기를 개·대체하는 한편, 가맹점은 NFC가 POS(Point of Sale) 시스템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NFC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결제 및 응용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

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 서비스 사업자, 제조사(NFC 칩, 태그 등) 등은 선도적인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을 마련하여 글로벌 진출의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

스마트TV는 디지털TV에 운영체제(OS) 및 인터넷접속 기능을 탑재하여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VOD·홈쇼핑·게임·검색·날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한 이용자환경(UI/UX)에서 이용할 수 있는 TV를 통칭하며, 인터넷 풀브라우저가 가능한 OS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 PC·모바일 등 타 단말과의 연동이 용이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2011년도는 기기 측면에서 스마트TV 출시 원년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한 해였다. 국내의 경우 2011년도 판매량은 54만 대로 전체 TV시장 238만 대 중 22.7%를 점유하였으며, 2012년 80만 대, 2013년 131만 대로 판매 속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2011년도 판매량은 5,600만 대로 전체 TV시장 245백만 대 중 22.9%를 차지하고 2012년에는 7,200만 대, 2013년에 1억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의 <표 IV-19>는 국내외 스마트TV의 판매량을 예측한 수치이다.

〈표 IV-19〉 국내외 스마트TV 판매량 예측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E	2013년E
세계 (백만대)	스마트TV	38(17.3%)	56(22.9%)	72(26.7%)	100(33.3%)
	평판TV	182(82.7%)	189(77.1%)	198(73.3%)	200(66.7%)
	합계	220	245	270	300
국내 (만대)	스마트TV	29(12.8%)	54(22.7%)	80(32%)	131(50%)
	평판TV	197(87.2%)	184(77.3%)	170(68%)	131(50%)
	합계	226	238	250	262

E : 추정치

출처 : DisplaySearch & iSuppli, KT경제경영연구소

급성장하는 스마트TV의 시장 현황과 전망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스마트 성장동력 창출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스마트TV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TV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표준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스마트TV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는 크게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 수립, 스마트TV 생태계 조성, 차세대 서비스 모델 발굴,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첫째, 2011년 4월 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스마트TV 경쟁력 제고와 국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3개 부처

간의 수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12월, 2011년 1월, 2011년 3월 IT 특별보좌관 주재로 세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TV 기술개발·표준화, 시범사업 실시 및 협력적 생태계 구축, 콘텐츠 육성·킬러콘텐츠 창출, 네트워크 고도화 및 법·제도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스마트TV를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스마트 미디어 관련 관계자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미래 정책수요 발굴 및 업계 간 협력을 유도하였다. 2011년 3월 지상파·유료방송·인터넷·통신·기기제조 기업의 임원급 인사 및 학계·유관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자 포럼 운영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스마트TV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기기제조·솔루션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선정을 통해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속적으

로 지원하였다. 2011년 2월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4월 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7억 7,000만

원 규모로 스마트TV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IV-20〉 2011년도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개발 지원 현황

지원대상	참여 업체	개발 서비스 내용
KLabs 컨소시엄	KLabs, CJ헬로비전, C&M, 현대HCN, CMB, 알티캐스트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된 스마트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개발하여 주요 SO 중심으로 시범운영 예정
SBS 컨소시엄	SBS, LG전자, 에어코드, 아르고, 인포테크	SBS 프로그램과 연동한 시청자 참여형 양방향 서비스(방송정보보기, 소셜검색, 투표 등)를 TV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
SKB 컨소시엄	SKB, LG U+, 지니프릭스	다양한 IPTV 플랫폼에 통합사용이 가능한 Polling Service 시스템 및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넷째, 2011년 기술개발·표준화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TV의 핵심기술이자 파급효과가 큰 음성·동작인식, 검색, 증강방송, N-Screen 전송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였다. 2011년 6월 지상파·IPTV·케이블·기기제조사 등 유관 업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TV 표준화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9월에는 14개 표준화 추진 후보과제

를 발굴하고 TTA의 ICT 표준화 전략맵에 반영을 추진하였다. 표준화 주요 분야로는 방송과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 및 전송 표준,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전송 표준, N-Screen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공유 표준 등이 있다. 스마트TV를 위한 주요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과제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스마트TV 주요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과제

분야	주요 기술
플랫폼 사용자 인터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광고, 콘텐츠보호 등 응용서비스 플랫폼 기술 콘텐츠 검색 및 기능 제어를 위한 동작·음성인식 기술
콘텐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선호 및 상황지식 기반의 콘텐츠 검색·추천 기술 시청자의 현실감 및 생동감을 향상시키는 증강방송 기술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와 다양한 단말 간 콘텐츠 시청이 가능한 전송 기술

위원회는 다양한 스마트TV 서비스 확산을 위해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스마트TV 경쟁력 제고와 국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업계 간의 공동협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 사례를 만들어 업계 전반에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 스마트 미디어 관련 관계자로 구성된 포럼운영을 통해 업계·학계·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 미디어 산업 전반의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였다. 스마트TV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

한 산업계의 참여유도를 통해 스마트TV 생태계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스마트TV 기술표준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확대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세계 스마트TV시장 기술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국내 TV 전체 판매량 중 스마트TV의 비중은 2010년 12.8%에서 2011년 22.7%로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스마트TV 판매량에서 삼성이 1위, LG가 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기업의 스마트TV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표 IV-22〉 국내 스마트TV 서비스 현황(2011년 11월 기준)

	삼성 스마트TV	LG 스마트TV
기기		
OS	자체 OS (Bada)	자체 OS (넷캐스트 2.0)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체형 : LCD 42/55, LED 32/ 40/45 인치 (69만원~800만원) 셋톱박스형 ‘블루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체형 : LED 32/40/42/55 인치 (87만원~941만원) 셋톱박스형 ‘스마트TV 업그레이더’
주요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TV앱스 (TV용 앱 558개) SBS, EBS, MBN, 연합뉴스 등 SNS, 게임, 교육, 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G 앱스 (TV용 앱 353개) KBS, 연합뉴스, KBO프로야구 등 SNS, 게임, 교육, 정보 등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젯(메인 화면), 웹브라우저 제공 터치스크린 리모컨 DLNA 기반 올쉐어 (기기 간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보드 (위젯 형태) 매직 모션 리모컨 (감지센서) DLNA 기반 스마트쉐어 (기기 간 연동)

향후 위원회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관련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TV 표준화 방향 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업체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반 구성을 통한 표준화 전략, 대상과 범위, 추진체계, 기본일정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 위치정보(LBS) 기반 산업 활성화

1) 위치정보(LBS)산업 육성기반 조성

위원회는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기반 산업인 위치정보(LB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위치정보 법률 상담 및 허가·신고 지원, 산업통계 구축,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LBS 아이디어 공모전,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였다.

2011년 9월 위치정보관련 산업이 이미 IT시대의 핵심서비스 산업으로 대두된 시점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위치정보관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LBS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운영은 LBS산업협회가 맡았으며 ▶사업자 신고 관련 상담 및 운영지원 ▶위치정보 관련 통계작성 및 동향조사 ▶위치정보관련사업자 공동 애로사항 지원 ▶불법사업자 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 통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 LBS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종합 정보제공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LBS비즈니스지원센터를 통해 LBS 사업자간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공동 애로사항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 12월 LBS 산업 (예비)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미래 산업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펼치고자 LBS App & Web IDEA 2011 공모전, 정책 토론회, 전략 컨퍼런스를 통합한 'Viva! LBS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신규 우수 LBS 콘텐츠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LBS 산업 진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LBS 도약을 위한 필수 성공전략을 알아보는 컨퍼런스 등이 함께 개최되었다.

2) 위치정보(LBS)사업자 규제 개선

위원회는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즉시통보, 벌칙 조항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1년 1월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①위치정보 사업유형 다양화에 따른 위치정보 중개사업 가능 ②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

에게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의 기록 및 보존의무를 면제 ③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 위치정보 제공사실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개인 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보의무를 면제, 이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통신단말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하거나 통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④LBS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육성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위반 여부 및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⑤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현재 심사 중에 있다.

바. 3D 방송서비스 활성화

1) 지상파 고화질 3DTV 실험방송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3D 등 실감 미디어가 차세대 방송서비스 및 TV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로 부상함에 따라 위원회는 고화질 3DTV 방송기술 개발 및 실험방송 실시로 3DTV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3DTV 방송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0년 10월~2011년 12월까지 기존 채널에서 추가 주파수 필요 없이 HD급 3D 방송과 2D 방송이 동시에 가능한(역호환성 보장)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세계 최초로 개시하는 등 국제 방송표준·기술을 선도하고 3D 시청안전성 확보를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채널을 통해 고화질 3D 생중계를 함으로써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의 앞선 방송기술을 알리고 향후 상용서비스 도입 관련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다. 실험방송 특성상 3D 생중계 수신은 3DTV와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수신용 셋톱박스가 설치된 150여 곳에서 고화질 3D로 시청되었으며, 일반 DTV만 있는 가구는 지상파 66번 채널을 직접 수신할 경우 고화질 2D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성 SkyLife 1번 채널 및 KBS 대구육상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를 중계하고 서울역·김포공항·코엑스 등에서도 시민들에게 시청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상파방송사는 2012년에 실제 지상파 방송국에서 운용중인 채널과 설비를 활용하여 고화질 3D를 송출하는 등 시범방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실제 방송환경을 고려한 2D/3D 연동송출 및 수신단계에서의 재생상태, 역호환성 보장 여부 등 정합테스트를 진행하고, 가전사에서도 고화질 3D 방송이 수신되는 TV를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그림 IV-18〉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생중계



〈표 IV-23〉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추진경과

2010년 10월 29일	고화질 3DTV 실험방송 개시 방송매체 : 지상파4사, 위성, 케이블(현대HCN, CJ헬로비전)
2011년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고화질 3D 생중계
2011년 말	기존 3D 실험방송 종료
2012년	지상파 방송채널을 통한 고화질 3D 시범방송 예정

2) 차세대 방송 기술 개발

위원회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에 힘입어 안경 없이 3D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무안경 3D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차세대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개발과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 HD급 무안경 3DTV 실험방송 및 4k(3840×2160 해상도)급 UHD TV 실험방송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2008년 3D 시장에서 안경 방식과 무

안경 방식의 비중은 73 대 27이지만, 2015년이 되면 45 대 55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께 본격적인 무안경 3DTV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³⁾

3) 고화질 3D 방송방식의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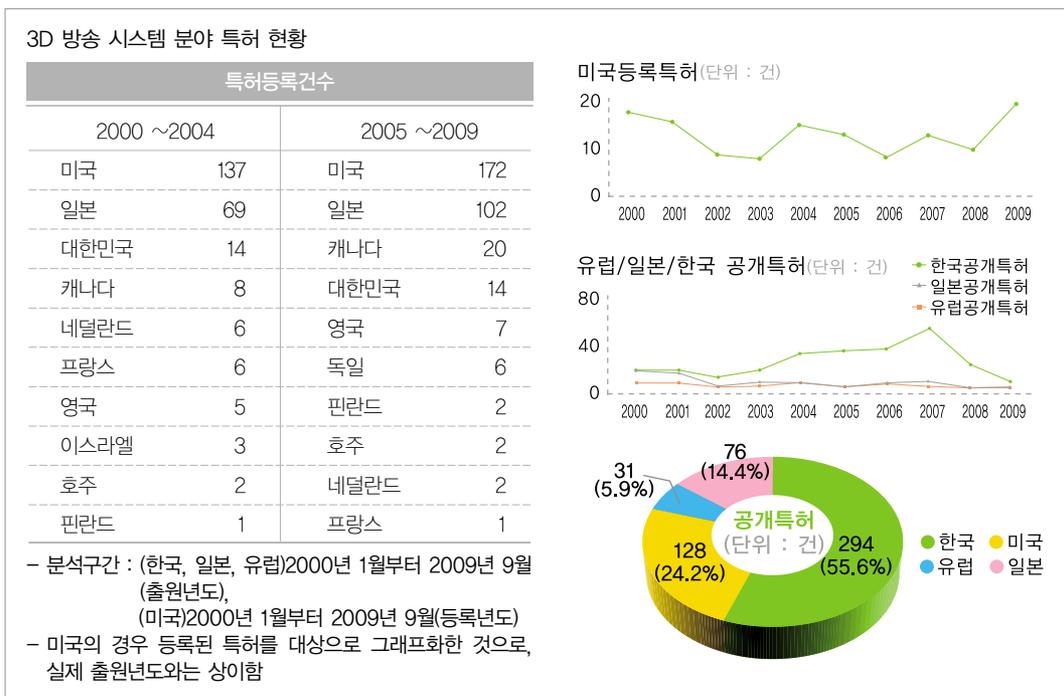
위원회는 3D 방송 활성화 및 국가 3DTV 산업 발전을 위해 3DTV 방송 표준에 대한 각계의 소통과 세계 3D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1년 6월 ATSC의 국내 3D 방송방식 표준 제정을 위하여 새로운

13) 출처: http://www.displaybank.com/_kor/share/index.html

SG그룹 생성을 위한 3DTV NWIP(New Work Item Proposal)을 제안하였으며 2011년 7월 ATSC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또한, 2011년 8월 최종 승인된 ATSC 3DTV NWIP를 토대로 3DTV SG(Specialist Group)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지상파 3DTV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MPEG에서도 2010년 7월 미팅

(93차)을 시작으로 Frame compatible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시그널링에 대한 표준화 수행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3DTV와 관련된 특허 출원은 방송시스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이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IV-19〉 3DTV 방송시스템 분야 특허의 연도별 주요 국가별 특허동향



출처 : 고화질 3DTV 방송활성화 백서

4) 3D 서비스 진흥

위원회는 3D 서비스 진흥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먼저, 세계 최

초 3D 관련 박람회인 ‘서울국제 3D페어(2011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SETEC)를 개최하여 ‘3D를 통해 세계를 보다(See the world through the 3D)’ 라는 주제 아래 3D산업 관

런 세계적인 기술과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심포지엄/세미나, 전시회,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11 전파방송 산업 진흥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3DTV 홍보 및 진흥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내에 '3DTV 방송 진흥 센터'를 설립하여 55인치급 LED 3DTV와 셔티글라스, 편광안경 등을 설치하여 3DTV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화질 3DTV 실험방송(지상파, 위성, 케이블방송)의 성공적 수행과 국내 3DTV 방송 조기 활성화 및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

2. 혁신적 생태계 및 벤처 인프라 조성

가. 혁신적 스마트 생태계 조성

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기존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가 ICT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최근 ICT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플랫폼(OS, 앱스토어 등) 분야 및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부가통신사업 분야 중 인터넷포털 시장의 온라인 광고시장, 노출(Display) 광고 시장 등에 대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포털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장분

석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경쟁상황 평가 대상으로 확대하여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콘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되고, 콘텐츠 사업자 및 개발자의 주요 타겟 시장이 일반폰 기반의 무선포털에서 오픈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애플 등 해외 사업자 중심의 오픈마켓 시장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자를 유인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의 활성화와 사업자·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11년 6월 30일에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은 ①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②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다.

〈표 IV-24〉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모바일 콘텐츠 대가 및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모바일 콘텐츠의 대가(판매가격)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함
 - 모바일 콘텐츠를 정기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개발자간 협의하여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
 - 동반 해외진출 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언어번역 등 현지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조정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못하도록 함
-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
 - 오픈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정산관련 통계자료·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
 - 개발자 약관 변경 시 일반 내용의 경우 최소 7일 전,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고지 필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앱 등록 거부 시 사유를 공개해야 함
 - 개발자 또는 해당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음
 - ※ 개발자 등록, 메뉴노출(추천앱 선정 등),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정산율 등의 차별 금지
 -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적인 결함(버그) 등이 발견될 경우, 개발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해당 콘텐츠를 수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

나. 벤처기업 성장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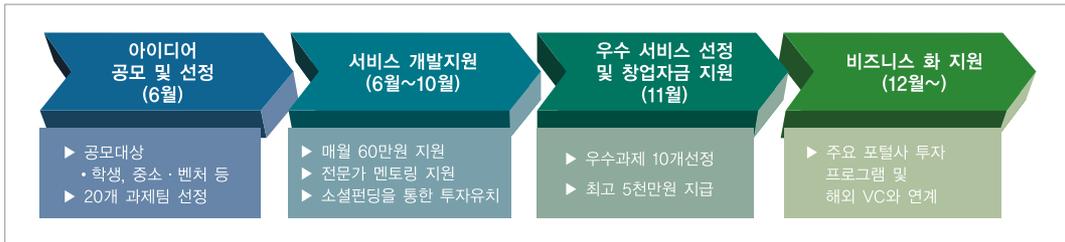
1) 인터넷 비즈니스 스타트업(IBS) 육성

위원회는 성장 정체기에 있는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의 중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과 기반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인터넷서비스 발굴 및 비즈니스화 지원과 오픈 플랫폼(Open API 등 포함) 활용 교육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비즈니스 스타트업(IBS, Internet Business Startup)'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투자 리스크가 높은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신규 인터넷서비스 발굴 및 비즈니스화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인터넷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선정, 서비스 개발 지원, 우수

서비스 창업자금 지원, 비즈니스화 및 서비스 홍보 지원 등 체계적이고 선순환적인 스타트업 발굴·지원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대학생 5팀과 일반인(기업 포함) 15개팀 등 총 20개팀을 선정하여 약 5개월 동안 개발지원금(월 60만원), 기술 및 비즈니스 분야 1:1 전문가 멘토링, 개발자 네트워킹 데이, 특허출원 및 소셜펀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IBS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서비스 10개를 선정하여 총 1억 7천 5백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내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엔젤투자자, IT투자전문가 등으로부터 컨설팅 및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11월 IBS Market Day 등을 개최하였다.

〈그림 IV-20〉 IBS 프로그램 프로세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 및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창출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개발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 플랫폼(Open API 등 포함) 활용 교육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교육 수혜도가 높은 서울·경기 지역 외에도 부산, 대전, 전라도,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 약 400여명의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에서 제공하는 Open API, 오픈 소스 등에 대한 정책소개를 포함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지역의 공공기관 및 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2)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위원회는 2010년 6월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이동통신사, 포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 민·관 13개 기관 간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와 스마트 모바

일 앱 개발 지원을 위한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Smart Mobile Application Center, SMAC)’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였다.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는 2011년 8월 방배동(KT)과 상암동(LG U+) 등 2개소가 추가되어 수도권에 총 6개소의 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모바일 앱 개발자 테스트 환경 및 개발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의 우수한 모바일 앱 개발자들에게도 앱 개발 인프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충청, 호남, 강원, 경북, 경남 등 5대 광역경제권에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역 거점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모바일 앱개발지원 웹사이트(온라인 SMAC : <http://smac.kr>) 등을 통해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11년 9월 초급 개발자를 위한 초급 앱 개발 교육용 VOD, 개발 환경 준비하기부터 앱 개발 프로그래밍 방법, 앱 마케팅 및 디자인 방법 등 초급 개발자에게 필요한 VOD 100여건 제공(KT)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급 이상의 앱 개발자 총 150명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4개지역(부산, 대구, 광

주, 대전)에서 모바일 앱 기획, 마케팅, 모바일 UI/UX 설계 등을 교육(KT)하여 스마트 모바일 앱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포털사에서 실무전문가로 교육추진단을 구성하여 총 320명을 대상으로 오픈 API 활용교육 등 신규 인터넷 서비스 개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역 앱 개발자 육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앱 개발자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 지역 내 강사를 육성(총 45명, SKT) 함으로써 지역의 모바일 IT 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미취업자, 학생 등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스마트 모바일 분야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앱 개발 성공사례, 현재의 기술 트렌드 등의 내용으로 서울, 부산 등의 4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산학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센터(SMAC)를 확대, 구축함에 따라 열악한 앱 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스마트 모바일 개발자를 양성함으로써 국내 스마트 모바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 벤처기업 기술력 제고

위원회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R&D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중소기업 R&D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다.

이는 크게 방송통신 미래혁신기술 개발 R&D,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R&D, 차세대 방송통신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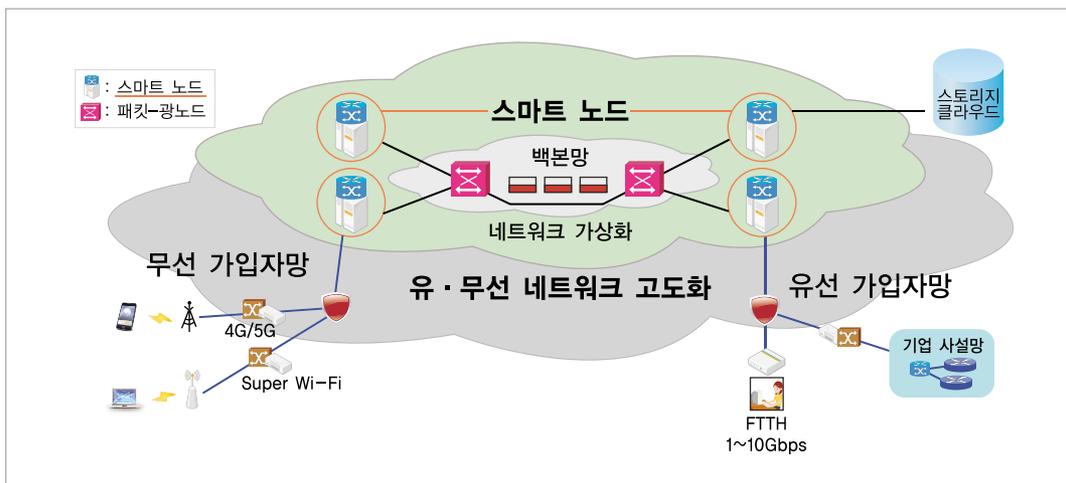
모바일 빅뱅·스마트·클라우드로의 변화 등 방송통신 생태계 변화에 따라, 기존 시장의 붕괴 및 신시장의 출현으로 중소기업 시장 판도의 재편이 현재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 패러다임 전환기에 열린 기회를 활용하여 향후 부각되는 영역에서 신시장 창출, 약화되는 영역에서 기업의 업종 전환 유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방송통신 생태계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 하청구조에서 네트워크-기기-콘텐츠가 연계되어 대기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생태계 주체 간 동반성장이 중요시 되는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개발을 위한 R&D투자는 미국의 10%, 일본의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외형적인 성장 추세에 비해 방송통신 분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사업자/ISP 등의 수요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이 강점을 갖는 분야의 R&D를 추진하여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통신 중소기업의 미래 잠재수요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

계 조성하고, 특히 비즈니스모델 기반으로 기술개발 수요 등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의 결과가 시장에 즉시 적용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방송통신 생태계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R&D 과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R&D 생태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과제의 발굴과 지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IDC 기반 기술 개발, 스마트 노드 라우터 기반 기술 개발 지원 등이 있다. 스마트 노드는 기존 라우터의 데이터 라우팅 및 전달, 서버의 데이터 저장·프로세싱 기능을 모두 가지는 다목적 스마트 네트워크 장비로서,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여 초 대용량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처리·유통하는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통합 기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그림 IV-21〉 스마트 노드의 구조도



또한 기존 기술, 서비스 및 제품 등의 구현 방식·사용방식·응용방식을 달리하는 혁신 기술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 과제로는 초소형 기지국 관련 기술, 디지털 초협대역 무전기 개발 등이 있다. 대기업은 대형 시스템 위주의 강점을 갖고 있으며, 초소형 기지국은 중계기 관련 기술을 갖는 중소기

업이 강점을 갖는 부분으로, 기술개발 시 국내 중소 장비업체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초협대역 무전기의 경우 국내 중소 무전기 업체들은 디지털 핵심 기술 및 단말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여력이 부족하여 기술 상용화를 위한 애로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다양한 BM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반 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콘텐츠·서비스 시장은 중소기업의 시장 영역으로 대기업 위주의 하드웨어(단말, 시스템) 경쟁력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변화하는 시장의 패러다임에 뒤늦게 따라갈 경우 하드웨어 경쟁력도 상실하여 이동통신 선진국의 지위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라도 신규 시장선점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시급히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신규 시장 창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을 수출 주력 상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기상용화 및 서비스 선도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비즈니스모델 등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을 실현·검증

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차세대 이동통신 응용서비스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이동통신(4G)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고, 차세대 이동통신과 다양한 통신망과의 연동성 확보 등 차세대 융합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응용서비스 개발을 위해 4G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한 서비스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 분야로는 모바일 단말 UI/UX, 3D 증강현실 등 위치기반서비스, 지능형 검색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 기술 개발, 모바일 실시간 게임, 다자간 모바일 게임, 다중단말 간 협업 기술, Mash up 서비스 등 모바일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모바일 헬스케어, 차량 간 통신 등 타 분야 결합 융합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IV-22〉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응용서비스 진화 방향

구 분	현재(~2010년)	2~3년 후 (2012~2013년)	5년 이상 (2015년~)
응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모바일 게임 단순 텍스트 검색 위치기반 서비스 모바일 보안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실시간 게임 맞춤형 검색 Mash-up 서비스 단말기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간 모바일 게임 지능형 검색 3D 증강현실 서비스 무선서비스 보안
SW플랫폼	개별 범용운영체제	다중 SW플랫폼 지원	다중 단말간 협업 지원
기 기	 피쳐폰 / 스마트폰	 스마트북 / e-북	 웨어러블 기기
이통망	3G(300K~14Mbps)	3.9G(30~100Mbps)	4G(100~600Mbps)

융합 인프라 기반기술 개발은 4G 이동통신 기반 신규 서비스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통신 인프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4G 시장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데이터 폭증, 에너지 효율화, 투자·수익의 최적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범용 통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이종의 무선접속기술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용 단일 백본망기술(패킷게이트웨이) 개발, 특정 무선접속 규격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른 무선접속 규격으로 실시간 변경해주는 기술(SW기반 범용 중계기) 개발 등이 포함된다.

차세대 방송통신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R&D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내비게이션 등의 방송통신 기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핵심 공통기술로 떠오름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중 블루투스, ZigBee, NFC, Wi-Fi 기술은 성장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크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다. 그러나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테스트장비가 고가이므로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Wi-Fi의 경우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준장비는 Wi-Fi Alliance(Wi-Fi 국제표준기구)의 회원사만 구입이 가능하고, 장비를 운영하려면 최소 5주간의 현지 교육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연간회비

는 미화 1만 5,000달러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및 노하우, 인력, 시장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에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 기술지원 환경 구축 및 운영,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 기술지원의 경우 차세대 WPAN 기술지원 환경 구축·운영(블루투스, ZigBee 등), NFC 기술지원 환경 구축·운영, 차세대 Wi-Fi 기술지원 환경 구축·운영이 포함된다.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사업화 지원은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제공, 애로기술 지원, 시험기술 지원으로 나누어 R&D가 추진된다.

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지원

위원회는 기존 개별 산업내에서의 경쟁이 ICT 생태계간의 경쟁으로 변화함에 따라,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소 기업간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통신사업자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이 공생발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상생협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9월 9일 주요 인터넷 기업,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관련 협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상생협의체’를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 교육 및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웹비즈 스타트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KIF(Korea IT Fund)¹⁴⁾를 IT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10개의 KIF 자펀드 결성에 이어, 2011년에는 10개의 자펀드를 추가로 결성하였다. 특히, KIF는 ICT 생태계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스마트폰 등 무선 IT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IC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이 IT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과 개발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였다.

SKT의 모바일 IT 전문가 양성을 위한 ‘T-Academy’에서는 2011년 7,24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KT는 중소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2011년 7,942명이 오프라인 교육을, 7,130명이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들은 중소 IT 기업의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공간, 테스트 서버, 단말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KT의 이코노베이션 센터, SKT의 모바일 장비 테스트 센터, LG U+의 LTE 오픈 이

노베이션 센터가 있다.

마.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체는 판로 확보와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도 역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여 위원회에서는 2010년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의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2011년 3월에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IV-23〉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승인 심사기준 (안) 토론회



주. 2011년 1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 토론회’

14) 2002년 통신사업자(SKTEL, KT, KTF, LGT)가 3,000억원을 출자하여 조성

위원회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위해 먼저 2010년 11월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1월에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홈쇼핑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는 일련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방안을 바탕으로 4일 동안의 심사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9일 (주)쇼핑원(現 (주)홈앤쇼핑)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IV-25〉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 과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 의결 (2010.12.13.)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 (2011.1.26.)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공고 (2011.1.26.)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류 접수 (2011.2.16.)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 의결 (2011.2.21.)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011.3.6.~3.9.)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 (2011.3.9.)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의결 (2011.6.22.)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된 ‘(주)쇼핑원’은 2011년 9월 ‘(주)홈앤쇼핑’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2011년 12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시험방송을 운영한 뒤 2012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주)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전국 89개 종합유선방송망을 이용하여 약 2,063만 가구에 상품 광고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 (주)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 판매 제품의 80%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하고 마진을 최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에 전면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상품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품추천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선정하였다.

(주)홈앤쇼핑처럼 본격적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의 도입은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은 물론, 홈쇼핑 분야에서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촉진

가. 신규방송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 개선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도입

매체간 융합으로 인해 신규 매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최근에는 방송 콘텐츠의

수요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방송 환경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신규 채널을 도입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

권을 늘리는 한편, 전체 방송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2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신규 방송 사업자를 선정 한 바 있다.

〈표 IV-26〉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신규 방송 사업자 현황

구분	종합PP			보도PP	
법인명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주)연합뉴스티브이
채널명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최대주주	조선일보사	중앙미디어네트웍	동아일보사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

2011년에는 이들 신규 채널들이 본격적으로 정규 방송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규 방송 사업자들은 2011년 3월~5월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각각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승인장을 교부받은 뒤 12월 1일 동시에 개국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송 채널 외에 5개의 새로운 채널들이(종합편성채널 4개와 보도전문채널 1개) 방송시장의 경쟁 구도에 합류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신규 방송사업자의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경쟁상황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보도 PP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 SO-PP간 콘텐츠 거래 관행 개선

〈표 IV-27〉 종합·보도 PP 선정 추진 일정

- '종합·보도PP 선정 추진일정' 위원회 보고 (2010.5.18.)
- '종합·보도PP 승인 기본계획(안)' 위원회 의결(2010.9.17.)
- '종합·보도PP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위원회 의결(2010.11.10.)
- '종합·보도PP 선정 추진일정' 위원회 의결 및 신청공고 (2010.11.10.)
- 종합·보도PP 승인 신청 접수 (2010.11.30.~12.1.)
- '종합·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2010.12.23.~12.31.)
- '종합·보도PP 승인 대상법인 선정' 위원회 의결 (2010.12.31.)
- '종합·보도PP 승인((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연합뉴스티브이)' 위원회 의결 (2011.3.30.)
- '종합PP 승인((주)채널에이)' 위원회 의결 (2011.4.20.)
- '종합PP 승인((주)매일방송)' 위원회 의결 (2011.5.6.)
- 종합 4개사 및 보도채널 1개사 동시개국 (2011.12.1.)

유료방송 시장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시장 내 콘텐츠 대가 산정 등의 문제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간의 공정거래 관행과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한 유료방송 시장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

준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을 지원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PP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송출 채널수에 비해 시장진입 사업자수가 많기 때문에 PP와 SO간에는 SO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거래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PP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지급률과 지급대상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콘텐츠 거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문형 비디오(이하 VOD)의 시청 증가로 인해 VOD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대상별로 지급 비중에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자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콘텐츠 거래관련 문제점을 인식하여 위원회에서는 SO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콘텐츠 대가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콘텐츠 거래 관행 개선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써, 먼저 2011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 동안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재허가 조건을 부여한 95개

SO를 대상으로 2010년 중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적을 점검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SO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 기본채널, 유료채널 및 VOD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중, MSO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등을 점검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2010년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 점검 결과에 의하면 95개 SO 모두 지급기준인 25%를 초과하여 평균 26.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적 점검과 함께, 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SO와 PP 간의 적절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O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프로그램 사용료의 증가는 PP의 콘텐츠 투자 및 그에 따른 시청점유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회는 SO-PP간 수익배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 개선안은 2008년 이후 SO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온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대해 그 동안의 성과와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익배분 기준안을 담았다.

〈표 IV-28〉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과 콘텐츠 투자규모 변화 추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	21.5%	25.2%	26.0%
PP의 콘텐츠 투자규모(제작+구매)	5,236억원	5,374억원	7,696억원
PP의 시청점유율	38.2%	39.6%	39.7%

개선된 지급기준 정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지급비율(25% 이상)을 유지하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실제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VOD 이용의 증가로 인해 VOD 지급비중이 증가하면서 기본채널(실시간PP)에게 지급되는 몫이 축소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수익 배분대상에서 VOD를 선별적으로 포함하였다. 그 결과 기본채널과 무료 VOD만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유료채널과 유료 VOD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선안에서 도출된 적정 비율은 향후 재허가 대상 SO에게 최소 조건으로 부과·적용될 것이며, 해당 SO는 이후 2년에 걸쳐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표 IV-29〉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추진경과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 점검 (2011. 4.)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 (2011. 8.)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안 마련 (2011. 11.)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안 방통위 의결 (2011. 12.)

앞으로도 위원회는 SO-PP간 수익배분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SO 재허가시 조건으로 부과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급 기준 정비시에 다시 반영할 예

정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SO가 부담하는 콘텐츠 비용이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PP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국내 여타 유료방송사업자 및 해외 SO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SO-PP간 상생협력 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방송사업의 허가·재허가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2011년도에는 이와 관련하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국 및 신규 라디오 방송국 허가를 신청한 방송국들에 대한 재허가 및 허가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역MBC 법 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및 최다액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도 의결하였다.

우선 2011년 9월 중에는 11월~12월초에 허가가 만료되는 티브로드 중부방송, 씨앤앰 우 리케이블TV, JCN울산중앙방송, 영서방송 등 SO 4개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10월 중에는 12월에 허가가 만료되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 6개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대상 방송사업자는 KBS, MBC, SBS, YTNDB, 한국DMB, U1 미디어였으며, SO 및 이들 DMB 방송사의 재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반영하였다.

12월에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인FM, 아리랑제주FM, 제주FM, 부산영어FM, 광주영어FM의 5개 지상파 FM 방송국과, 공주, 분당, 광주, 성서, 관악, 마포, 영주의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대해서는 11월 중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광주FM과 교통창원FM이 신규 FM 라디오 방송국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창원MBC(주)와 진주MBC(주)의 법인합병 변경허가와 (주)경인방송, (주)경기방송, (주)광주방송의 최대액출자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심사를 추진하였다.

이상의 방송국 허가 및 변경 승인을 위해 위원회는 이전 3개 년도 동안의 재허가 백서 및 신규허가 의결안건을 참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상 방송국의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심사사항에 반영하였다. 특히, 지상파·공동체 라디오 재허가의 심사에서는 4주간에 걸쳐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사에서 신청인의 의견청취도 실시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방송사의 의지를 확인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지역 MBC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시 발생 가능한 방송의 지역성 저하, 해당 지역민의 소외감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해 합병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심층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건의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허가 시 지역성 보장을 위한 조건과 권고 사항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방송사업 재허가 및 변경 승인과 관련된 2011년 중 위원회 성과의 특징을 요약하면, 관련된 학회 및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심사 기본 계획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허가 심사에 관한 의견청취시 관보와 홈페이지 외에도 재허가 대상 매체의 방송 중 안내 및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재허가에 관한 사항을 적극 공고하여 시청자 의견 수렴을 도왔다. 또한, 연초 '방송학회'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시 방송평가와의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방송평가의 배점을 500점에서 400점으로 낮추었다. 지역방송의 변경허가 의결 시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건의문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보도 프로그램 편성 등 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한 것도 이러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다. IPTV 서비스의 견실한 성장 지원

IPTV는 상용서비스 출범 3년 만인 2011년 12월 가입자 약 457만 명을 달성하고 유료방송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 이어, 사업자의 콘텐츠·인프라 투자확대 촉진, 신규 서비스 개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2011년 위원회는 IPTV 관련 콘텐츠, 네트워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 촉진을 위해 IPTV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며, IPTV 기반 교육,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융합서비스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차세대 IPTV 기술선점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등 필수 요소기술 R&D 지원 및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첫째, 2011년 3월 위원회는 2010년 IPTV 제공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네트워크 투자, 콘텐츠 투자 현황, 매출·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행 점검을 추진하였다. 이행 점

검 결과 2009~2010년 2년 간의 전체 투자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계획 대비 103.1%를 달성하였으며, 사업자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입자의 매출폭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위원회는 IPTV를 포함하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지원 현황은 <표 IV-30>과 같다.

<표 IV-30>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지원 현황

서비스명	참여기관	주요 서비스 내용
스마트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다문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LG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HD 화상상봉 서비스 • 50여개의 다문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주부 및 자녀를 위한 원격 영상 교육 제공
라이브 쌤(교육)	KT (통영시, 부산시, 두산동아, 팜즈커뮤니케이션, 스마트교육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용 디지털학습지를 태블릿PC 및 IPTV 간 연동서비스로 제공 - 방과후 학습을 실시간 TV 영상으로 기기 간 연동을 통해 제공
SMART Farm Life (농업)	KT (광양시, 텔레콤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원격 생산재배 시스템 제어 서비스 • 농작물 재배 Planning 서비스
완주군 꾸러미 서비스 (식품)	SKB (완주군, 소리나무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밥상꾸러미 식단 홍보 서비스

셋째, 위원회는 2011년 129억 원의 예산으로 차세대 IPTV 기술선점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등 필수 요소기술 R&D 지원 및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2011년 1월부터 IPTV 3사·기기제조사 등 유관 업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IPTV 표준화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2009년에 마련된 표준

화 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표준화 주요 분야는 자바 및 브라우저 기반 미들웨어 표준, 장애인 방송, 서비스 탐색 등이다. 특히, 그 동안 유료방송의 장애인방송 전송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V-31〉 2011년 IPTV 관련 주요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과제

분야	주요 기술
플랫폼 사용자 인터페이스	• 차세대 소셜 IPTV 기술 개발, 개방형 미들웨어 및 보안 플랫폼 기술 개발
콘텐츠·서비스	• 차세대 소셜 IPTV 기술 개발
네트워크	• IMT-Advanced 모바일 IPTV 핵심기술 개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IPTV 가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 포화된 시장 상황에서도 공공서비스 발굴, 콘텐츠·설비 투자확대 등으로 타 유료방송 매체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출범 2년 8개월 만인 2011년 8월 400만 가입자를 돌파하고, 2011년 12월 기준 약 457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이는 2011년도 가입자 목표치인

412만 명을 10%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로 서비스 차별화와 품질경쟁을 촉진시켜 정체되어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PTV 3사는 2년 6개월간 콘텐츠 5,946억 원, 설비 투자 1조 6,636억 원 등 전체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였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IV-32〉 유료 방송매체 가입자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월	비고
케이블방송	1,501만	1,505만	1,508만	1,497만(6월)	최근 소폭 감소
위성방송	234만	246만	283만	316만(9월)	점진적 증가
IPTV	5만	174만	309만	457만	빠르게 증가

* IPTV가입자 현황에서 Pre-IPTV가입자 수는 제외

또한 IPTV 관련 업계 간의 공동협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 사례를 만들어 업계 전반에 IPTV 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였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에 융합서비스 수요조사 및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시장의 요구에 맞는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활동을 돕고 국민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N-Screen, 영상통화 등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를 촉진하였다.

향후 IPTV는 포화된 유료방송 시장에서 기존 케이블방송 및 위성방송 등과 지속적으로 경쟁하면서, 스마트TV의 도입으로 상호 협력 및 경쟁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IPTV 융합서비스 활성화 시범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시범서비스와 상용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IPTV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라.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도록 통신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 및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다양한 사업자도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2010년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재판매 사

업자(MVNO¹⁵⁾)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 도입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제도의 조기 안착 및 도입 목적 극대화를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2010년 9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별정 4호 등록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30개 사업자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진입을 위해 별정 4호로 등록하였으며, 2011년 7월을 기점으로 한국정보통신(주), (주)한국케이블텔레콤, (주)아이즈비전 등 3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5)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 또는 설비 등을 도매로 제공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표 IV-33〉 별정 4호 등록 현황

사업자 명	기존 영위사업
(주)한국케이블텔레콤 (KCT)	(기간)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망 임대사업
(주)은세텔레콤	(기간) 국제전화, 시외전화, 국제/시외 전기통신화선설비 임대,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인터넷접속 서비스
(주)몬티스타텔레콤	(별정 2호 LG U+) 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 인터넷
(주)에스로밍	해외로밍, 국내휴대전화 렌탈, 인천공항로밍 위탁운영,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유통, MVNO 서비스
(주)인스프리트	모바일 솔루션 개발업체
(주)에넥스텔레콤	(별정 2호 KT)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단말기 임대 및 판매사업
한국정보통신(주)	인터넷결제, 신용카드조회
케이디씨정보통신(주)	시스템통합, 네트워크 통합, 휴대형멀티미디어플레이어(아이스테이션)
(주)케이티스	콜센터사업, 114번호안내, 별정통신(인터넷재판매, 선불카드), 인터넷사업(전화번호 검색), CS(고객민원센터) 업무(Olleh 상품 상담서비스)
(주)에버그린모바일	(별정 2호 KT) 이동통신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주)	(기간)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1599 전국대표서비스
(주)아이즈비전	국제전화선불 재과금
(주)케이티링크	이동통신판매 통신설비
(주)씨엔커뮤니케이션	(별정 2호 LG U+) 이동통신서비스
대성홀딩스	도시가스, 별정 2호(스카이프)
(주)씨브이네트	유비쿼터스 전문업체
큰사람컴퓨터(주)	(별정) 인터넷전화서비스
(주)티브로드홀딩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강서방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서대문방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기남방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새롬방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노원방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
에이치케이텔레콤(주)	국제전화 선불서비스
(주)유니컴즈	별정통신사업자
(주)더체인지	교육컨설팅전문업체
(주)프리텔레콤	(별정 2호 KT) 이동통신서비스

또한 위원회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 회계,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전달 방안을 2011년 1월부터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2011년 3월에는 SKT에게 도매제공 표준이용 약관을 마련토록 하여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에 따라, 신규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기존 이통사에 비해 저렴한 요금상품을 출시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 요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및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위원회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및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011년 12월 1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 개선안의 경우, 위원회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및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을 마련하였고, 주파수 할당을 받아 기간통신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무선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공고 기간 중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하여 현행법 상 허가신청과 주파수 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에 따라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M&A) 제도는 소규모 인수합병 등 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추진하였다.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시행 일정에 맞추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4. 공정한 경쟁원칙 확립

가. 통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 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불공정행위 시정 및 제도개선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 되고, 통신시장 포화로 가입자 유지·유치를 위한 부당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간 경쟁이 가열

되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불법적 행위를 통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 혜택 극대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첫째, 급속히 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적극적 감시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하였다. 이동통신사의 단말

기 보조금 지급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하여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는 한편, 단말기 보조금의 규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유선3사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이동통신 요금연체자에 대해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의 직권해지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연체자 직권해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표 IV-34〉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시정

구분	세부 추진 내용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자·할부보증보험료 면제, 현금 지급,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 •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계약서에 기재 •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수수료 분담액을 유통망에 배포되는 정책서에 분리·기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유선3사의 초고속인터넷 경품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품 및 요금감면은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관련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 •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가입자간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한 모집수수료 등 경품 관련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 지급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경품 등 위약금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
이동통신사의 요금연체자에 대한 차별적 직권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 마련,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 KT는 추가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이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토록 이용약관에 반영

둘째,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안) 제정으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였다.

〈표 IV-35〉 공정경쟁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구분	세부 추진 내용
보편적시청권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방송권자가 방송수단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검증 등에 관하여 규정 • 중계방송권자들은 해당 국민관심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여야 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 • 중계방송권 거래 거부·지연 금지행위 규정 • 중계방송권자등이 국민관심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차별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기준을 제시

2) 통신사업자 회계검증

통신회계제도는 상호접속 제도, 보편적서비스 제도,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제도, 전기통신서비스요금 제도,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의 도매대가와 연구개발부담금 등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정책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생성, 정리, 제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항은 영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또는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정확한 회계정보에 근거한 통신

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 음성 및 인터넷전화 통화량 검증 등을 통하여 통신요금, 접속료, MVNO, 설비제공제도 등의 통신정책 정립을 지원하였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분담금의 산정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이 외에도 차세대망 구축,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접속료 산정 등 합리적인 정책 방안의 정립에 필수적인 음성 및 인터넷전화의 통화량 예측을 위하여 '2011년도 통신서비스 통화량 예측'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통신정책의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 기반마련에 기여하였다.

나.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 등 사후규제기반 강화

방송·통신 융합현상, 방송의 디지털화 등으로 방송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IPTV, DMB 등 대체매체의 등장으로 방송시장의 경쟁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행위

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는 사업자간 금지행위 규정이 있으나 「방송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어 분야별 형평성 결여 및 규제공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시장에 적용할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과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사후규제기반을 조성하였다. 더불어, 방송통신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불공정 행위 유형의 복잡·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동향분석,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 및 불공정행위 시 처리절차·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위원회는 사후규제기반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시행하였다.

첫째, 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금지행위 규제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정위와의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관련 협의안 국회 설명(2월~3월),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6월),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모니터링(10월), 개정 「방송법」 대비 시행령안 마련

및 위원회 보고(12월)를 추진하였다. 또한 「방송법」 금지행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금지행위 연구반’을 상시적으로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였다.

둘째, 사업자 불공정행위의 처리절차·기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방송법」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3월)하여 부처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6월)를 거쳐 고시 제정안을 시행(9월)하였다.

셋째,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 국내·외 사후규제 동향 관련 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4월~, 매월)하였다. 이러한 분석보고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방송환경 하에서 국·내외 산업 및 규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제공되어 합리적인 사후규제 정책에 기여하였다.

넷째, 방송통신 관련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제도·조사사례분석 등 사후규제 특별교육(1일, 85명), 전문가 초빙교육(8회, 160명), 특별전문교육(2회, 60명)을 실시하였다.

〈표 IV-36〉 사후규제기반 및 이용환경 조성의 세부 정책방안

구분	세부 추진 내용
방송시장의 금지행위 규제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 공정위와의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관련 협의안 설명(2월~3월) •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6월)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및 「방송법」 개정 대응(10월) • 개정 「방송법」 대비 시행령(안) 마련 및 위원회 보고(12월) • 「방송법」 금지행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금지행위 연구반' 운영(상시)
불공정행위의 처리절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제정안 마련(3월) • 고시 제정안 부처협의 및 규제위 규제심사(6월) • 고시 제정안 관보 게재 및 시행(9월)
합리적 사후규제 정책마련을 위한 동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 국내·외 사후규제 동향 관련 분석보고서 발간(4월부터 매월)
방송통신 관련 조사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조사사례분석 등 사후규제 특별교육(1일, 85명) • 전문가 초빙교육(8회, 160명) • 특별 전문교육(2회, 60명)

그 결과 「방송법」 개정으로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 위반시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7월 14일 공포, 2012년 1월 15일 시행)하였고, 「방송법」에서 위임된 금지행위의 유형, 자료제출 요청 방법, 과징금 상한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를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질서 확립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다. 방송통신 분야 분쟁조정 기능 강화

위원회는 복잡·다양해지는 방송통신 분쟁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개선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첫째,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분쟁 조정대상을 기존 방송사업자간 분쟁조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및 IPTV사업자간 분쟁조정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KT-skylife-SBS간 재송신분쟁, 채널편성관련 분쟁 등을 조정·처리하였다.

〈표 IV-37〉 2011년도 방송통신 분쟁조정 내용

구분	사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결과
방 송	6월 KT-skylife-SBS간 재송신관련 분쟁조정	KT-skylife	SBS	조정성립
	8월 씨제이이엔엠-티브로드홀딩스간 채널편성관련 분쟁조정	CJ E&M	티브로드홀딩스	조정성립
통 신	3월 시내전화 번호이동 및 부당요금 청구 취소	금호사옥	SK브로드밴드(주)	알선합의
	7월 전용회선 위약금 취소	이재광	(주)LG U+	합의취하
	8월 명의도용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주)KT	김재원	합의취하

둘째, 방송통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통신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사업자간 평균분쟁 처리기간을 전년도 39일 대비 8일 줄여든 31일로 단축하였다.

셋째, 다양한 현장채널을 통해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자 간담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 분쟁예방과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고, 해외 방송통신 분쟁 동향 분석 등을 위해 ‘방송통신 분쟁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다.

〈표 IV-38〉 방송통신 분쟁이슈 리포트(2011년 5~12월)

구분	내용
통권22호 2011. 5.	스마트폰 확산과 이동통신 요금 분쟁 - 버라이즌의 데이터 요금 정책관련 분쟁(USA) - 통신요금 정액제 전환 및 데이터 이용량 제한(Canada)
통권23호 2011. 6.	소셜커머스 분쟁 현황 - 견본과 다른 소셜 커머스 상품 분쟁(Japan) - 페이스북에서 상사 비판은 해고 사유 판결(France)
통권24호 2011. 7.	방송통신 분쟁 조정 법제 - 프랑스의 방송통신 분쟁 조정 법제 - 독일의 방송통신 분쟁 조정 법제
통권25호 2011. 8.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의 수신료 분쟁 - IPTV 및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가격분쟁(Japan) - 타임워너케이블과 지역 방송사의 재전송료 분쟁(USA) - 4G 모바일 상용화 관련 정부와 규제청의 갈등(France)
통권26호 2011. 9.	개인정보 유출과 각국의 대응 - 개인정보유출통지법 발의 배경과 쟁점(USA) - 유럽의 개인정보 유출 통합 규제방안 논의(Germany)
통권27호 2011. 10.	모바일 인터넷 분쟁 현황 - ISP와 소비자간 인터넷 트래픽 분쟁(Canada) - 유료채널 LCI의 무료 채널 전환 논란(France)
통권28호 2011. 11.	영상물 저작권 분쟁 - 비아콤과 유튜브의 저작권 소송 경과(USA) - 영상물 저작권 분쟁과 저작권 보호센터의 대응(China)
통권29호 2011. 12.	소셜미디어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 페이스북과 FTC의 프라이버시 보호 합의 도출(USA) - CRTC의 이용량에 따른 과금(UBB) 결정과 파장(Canada)

넷째,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여 국내·외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분쟁조정제도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관련 국내·외 담당자 등과의 정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회 국제 방송통신 분쟁포럼'을 개최하였다.

〈표 IV-39〉 제3회 국제 방송통신 분쟁포럼 주요발표 내용

발표내용	발표자
일본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조정 사례	Yoko KAGAMI (총무성TDSC)
캐나다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조정 사례	Randy HUTSON (CRTC)
영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조정 사례	Yih-Choung TEH (Ofcom)
프랑스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조정 사례	Thierry VACHEY(CSA)
한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조정 사례	박동주 팀장(방송통신위원회)

5.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1) 방송통신 주요서비스 동향

위원회는 세계 방송통신 시장 전망과 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WiBro, DMB, IPTV, 방송콘텐츠, 브로드밴드 등 5대 수출 전략품목 중심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또한 최근의 방송통신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LTE, 스마트TV 등 새롭게 부각되는 추가분야를 발굴하여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새롭게 추가하는 지원 분야는 4G 이동통신(WiBro/LTE), 모바일TV(DMB/ATSC-MH), 인터넷 기반 TV(IPTV/스마트TV), 방송(콘텐츠/채널), 브로드밴드 및 방송통신 기반서비스(정보보호/전파관리)로, 방송통신 주요 서비스별 2011년도 동향은 다음과 같다.

가) 4G 서비스

WiBro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과 후발 사업자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전망이며, LTE는 세계 80여개 통신사업자가 도입을 추진 중으로, 기존에 3G망을 보유한 선발 사업자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표 IV-40〉 2011년도 4G 서비스 동향

품목	구분	내용
4G	분류 및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MAX : 고정형 Wimax에 이동성 보완. 삼성전자, 인텔 주도 • LTE : WCDMA 의 3G 기술에서 발전. 에릭슨, 노키아 등이 주도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MAX 가입자 수 2011년 6월 1,980만 명(Maravedis) • LTE 가입자 수 2011년 1,200만 명 추정(Maravedis, 2011.10.)
	서비스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E 단말 예코 시스템 확대: 2011년 10월 기준 LTE 지원 단말 출시 건수가 269건으로 2월 대비 200건 가량 증가(GSA) • WIMAX 사업자의 TD-LTE 전환 : Clearwire(미국), Yota(러시아), P1(말레이시아), Vivid Wireless(호주), FarEasTone(대만) 등 주요 글로벌 WIMAX 사업자가 TD-LTE 구축 선언
	진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12.) 인스프리트, 디아큐버에 3G, 4G, Wi-Fi 등의 네트워크 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솔루션 수출 • (2011.7.) KT, 이란 WiBro 사업자 Mobinet과 함께 WiBro 시장 진출 • (2011.6.) 무선장비업체 벡텍스와의어리스, 불가리아 Max Telecom과 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 (2011.2.) 삼성전자, 사우디 Mobily에 LTE/WiBro 상용 장비 공급 계약 체결 • (2011.2.) 서원인텍, 사우디 Mobily에 약 993만 달러 규모의 WiBro CPE 수출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CONEX), VeyondStrategy(2011년)

나) 모바일TV 서비스

DMB는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으나 실험방송이 진행중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조만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며, ATSC-M/H는 2012년 본방송 예정인 미국 시장을 비롯하여 DTV 전송방식이 ATSC인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 진출이 기대된다.

〈표 IV-41〉 2011년도 모바일TV 서비스 동향

품목	구분	내용
모바일 TV	분류 및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B, DVB-H, One-Seg, ATSC-M/H, CMMB : 디지털 기술 방식 • 3G 이동통신 및 무선 네트워크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가입자 수 2억 7,100만 명 추정, 2014년 7억 9,200만 명 전망(RNCOS, 2011.8.) • 스트리밍 기반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0년 2,110만 명에서 2015년에는 2억 7,72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ABI Research, 2010.6.)
	서비스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B : 한국·노르웨이에서 상용 서비스 제공, 네덜란드·캄보디아 등에서 DMB 추진, DMB 추진 연합 IDAG(International DMB Advancement Group)의 가입 사업자가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등지로 확대되면서 DMB 확산 조짐 • ATSC-M/H : 미국 방송 사업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OMVC(Open Mobile Video Coalition), MCV(Mobile Content Venture), Mobile500 Alliance 등 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추진 중 • One-Seg : NTT가 추진하고 있는 휴대단말 전용 멀티미디어 방송 표준인 ISDB-Tmm (Terrestrial mobile multi-media) 기반
	진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해에너지어링, 가인정보기술 등이 DMB 관련 솔루션 및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함 • 노르웨이, 캄보디아 등이 DMB 본 방송을 실시 중이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 국에서도 DMB 서비스 실험방송을 진행중이거나 검토 중 • (2011.12.) 라온텍이 일본 ISDB-Tmm 표준용 RF칩 'MTV808'을 세계 최초로 출시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CONEX), VeyondStrategy(2011년)

다) 인터넷기반TV 서비스

IPTV 서비스는 향후 스마트TV와의 경쟁관

계 가능성도 존재하나, 스마트TV와 함께 선진국 시장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IV-42〉 2011년도 인터넷기반TV 서비스 동향

품목	구분	내 용
인터넷기반TV	분류 및 정의	•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TV서비스로 IPTV, 인터넷TV, 스마트TV 포함하는 개념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6월 IPTV 가입자 수 5,000만 명(broadband Forum) • 2011년 Connected TV 출하량 6,000만 대 추정(Display Search, 2011.7.) • 2011년 IPTV 셋톱박스 출하량 2,100만 대 추정(In-Stat, 2011.10) • 2011년 스마트TV 출하량 2,518만 대 추정(Topology Research Institute, 2011.10.)
	서비스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HbbTV 확산: 범유럽 개방형 인터넷기반TV 플랫폼인 HbbTV가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확산, 스위스 등에서도 추진 중 • OTT(Over-The-Top) : PC에서 이용하던 인터넷동영상(OTT) 서비스가 Connected TV, 스마트TV의 등장으로 TV로 확산되는 추세
	진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러, 현대디지털테크 등의 업체에서 IPTV 셋톱박스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13개국에 수출 • (2011.3.) 훌캐스트, 인도 Bharti Telemedia에 디지털 셋톱박스 공급 • (2011.9.) 휴맥스, 네덜란드·러시아·터키 등 유럽 주요 방송사에 스마트 셋톱박스 공급 • (2011.10.) 넷메이커, 일본수출용 리눅스 기반 셋톱박스 수출 • (2011.10.) 기룡전자, 일본에 디지털 셋톱박스 12만대 수출 • (2011.11.) 인사이드디지털, 미국에 호텔 및 리조트용 독자 브랜드 스마트 TV 1,000만 달러 수출 • (2011.11.) 기룡전자, 300억 규모의 유럽형 셋톱박스 수출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CONEX), VeyondStrategy(2011년)

라) 방송(콘텐츠/채널) 서비스

방송콘텐츠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등의 한류열풍이 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방송채널은 KBS World, 아리랑 TV 등 비 수익형 채널 진출과 함께 CJ 등의 수익형 방송채널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 IV-43〉 2011년도 방송서비스 동향

품목	구분	내 용
방송	분류 및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방송 서비스 : 지상파, 케이블, 위성 • 컨버전스 방송 서비스 : 인터넷기반TV, OTT(Over-The-Top), 모바일TV
	시장 동향	• 방송시장 규모 :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모바일 등을 모두 포함 2011년 3,930억 달러(PWC, 2011.6.)
	서비스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creen 서비스 확대 :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사업자, 통신사, OTT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시청 할 수 있는 N-Screen 서비스 확대 • 3D 콘텐츠 확산 : 중국의 3D 시범 채널 개시, 미국 3D 콘텐츠 JV 3net 등의 사업 확대, 기타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도 3D 채널 및 콘텐츠 확산
	진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수출금액 30억 원 달성 • (2011) 상반기 해외 SBS콘텐츠허브의 드라마 수출액 438억 원 • (2011.5) 성인가요채널 아이넷TV가 인도네시아 Lejel의 LBS TV와 함께 한국 및 인도네시아 음악 전문 채널 'LBS-Net TV' 를 개국 • (2011.7.) SBS '그대웃어요' 가 최초로 인도에 수출 • (2011.7.) EBS가 콜롬비아 교육부와 교육방송국 설립 MOU 체결 • (2011.7.) CJ오쇼핑과 중국 SMG 합작사 동방CJ, 중국 전국 방송 사업권 획득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CONEX), VeyondStrategy(2011년)

마) **브로드밴드 서비스**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은 정부차원의 인프라 고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진국은 FTTH의 도입을 확대할 전망이다.

KT 등 국내 기업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외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FTTH 수출은 일본에서 미국 등으로 다변화 추진 중이다.

〈표 IV-44〉 2011년도 브로드밴드 서비스 동향

품목	구분	내용
브로드밴드	분류 및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DSL방식 : 전통적인 전화시스템의 음성 서비스에 구리선 활용 • 케이블방식 : 케이블 TV망을 활용 • FTTx방식 : 지역교환설비로부터 근접하게 광전송을 신설하는 방식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가입자수 7억 명(BuddeComm, 2012.1)
	서비스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수단으로의 브로드밴드 확산 :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브로드밴드 및 초고속 인터넷 보급 정책 추진 • 광네트워크 확대 : 미국 AT&T, Verizon, 브라질 TIM Brasil, 우루과이 Antel, 멕시코 Telmex, 영국 BT, 스페인 SPTe, 대만 Chunghwa Telecom, 중국 China Telecom, 호주 NBN 등 데이터 콘텐츠 이용 증가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FTTH 추진 확대 • 망 중립성 규제 확대 : 미국, 네덜란드, 칠레 등에서 망중립성 규제 채택, 시행
	진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브로드밴드 수출액은 15억 6천만 달러(한국수출입은행)로 2010년에 비해 11.2% 증가 • (2011.3.) 나노트로닉스, 약 135억 원 규모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용 모듈 수출 체결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CONEX), VeyondStrategy(2011년)

바) **방송통신 기반서비스(정보보호/전파관리)**
세계적으로 사이트 해킹, DOS 공격 등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기술, 인력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욕구가 증

대되고 있으며,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은 전파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전파관리장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표 IV-45〉 2011년도 방송통신 기반서비스 동향

품목	구분	내용
정보 보호	분류 및 정의	• 암호, 인증, 감시 등의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군을 생산하거나 관련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범죄를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시장 동향	• 2008년부터 연 12.2%로 성장하여 2013년 961억 달러 규모 전망(IDC/RNCOS, 2010)
	서비스 동향	• 국가 단위의 정보보호 기술 개발 :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 정책을 통한 정보보호 관련 기술 활발히 진행 • 융합보안 시장 확대 : 4G 이동통신 시대 진입에 따른 유비쿼터스 사회의 차량, 국방, 의료, 금융, 건설, u-물류·항만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요소로 융합보안에 대한 향후 시장수요 확대
	진출 현황	• (2011.11.) 안철수연구소, 일본 스마트폰 보안사업 진출 • (2011.12.) 카이스트-빛스캔, 일본 IW에 원격 사이버 보안 기술 수출 • (2012.1.) 마크애니, 카타르 행안부에 문서보안 수출 • (2012.1.) 시큐아이닷컴 일본에 VoIP 융합보안장비 수출
전파 관리	분류 및 정의	• 전파혼신 방지, 불법전파 감시 등의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시장 동향	•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 개도국은 전파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전파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중
	진출 현황	• (2011.7.) 전파관리소가 라오스 우편통신청에 78만 달러 규모의 이동전파종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CONEX), VeyondStrategy(2011년)

2) 국가별 협력시스템 구축

위원회는 해외 진출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2011년 6대 전략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국가별로 적합한 진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해외 진출 대상 국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적합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

로 위원회는 1기에 구축된 폭넓은 협력기반을 발판으로 각 국가별 수요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 대상 전략국가를 더욱 세분화하여 전략국가를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국가별로 세분화된 전략화를 바탕으로 민관 공동의 협력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46〉 2011년도 전략국가 분류

구분	국가수요군		민간수요군		협력수요군	
기준	우리나라와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국가군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가 있는 국가군		향후 시장 확보를 위한 협력 추진이 필요한 국가군	
대상 국가	미얀마	차관급 회담(5월)	말레이시아	SKT 등 지속진출	중국	거대시장 보유
	이란	장관급 회담(5,7월)	인도네시아	기업 진출 수요 큼	호주	선점 필요 시장
	르완다	장관급 회담(5월) - MoU 체결(5월)	콜롬비아	EBS 컨설팅 추진	카자흐스탄	한류의 CIS 거점
	에콰도르	장관급 회담(5월) - 정책자문실시(2월)	네덜란드	DMB 상용화 관련 진출 수요 큼	인도	거대 시장 보유
	브라질	장관급 회담(5월) - 인프라 구축에 국내 기업 참여 제안				

3) 방송통신 해외 정보제공 및 상담 컨설팅

위원회는 해외진출을 희망하지만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 및 방송통신 사업자 등에게 관련 시장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급속도로 변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해

외진출시스템 CONEX(www.conex.or.kr)를 통해 해외진출 유망국가 32개, 정보수요국가 22개 등 총 54개국의 스마트4G, 인터넷기반 TV, 방송서비스 및 콘텐츠 등 방송통신 10개 품목에 대한 정책 및 사업자 동향 등 심층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상 국가 및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47〉 2011년도 정보제공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대륙	해외진출 유망국가(32개)	정보수요 국가(22개)	대상품목(10개)
아시아/태평양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니,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4G 한국형모바일TV
미주/대양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호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기반TV 방송서비스 및 콘텐츠
서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독일,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영국,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동유럽/CIS	러시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통신 정보보호
중동/아프리카	가나, 남아공, 르완다,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사우디,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관리 인터넷서비스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CONEX)

또한 위원회는 방송·통신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시장 동향, 규제 제도, 특허 및 바이어정보 등 상담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방송통신 유망 중소기업을 공모·선정하여 컨설팅 기업과 1:1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도 지원하였다.

〈표 IV-48〉 2011년도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분야

구분	지원 내용
수출 지원	• 타겟 국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진출 지원
기술 제휴	•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선싱 등) 해외 파트너 알선 및 현지지원
수출 무역대행	•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판매·판로개척 대행
현지법인 대행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원활히 하기위한 해외 현지 법인업무 대행
수출역량 컨설팅	• 중소기업 수출구조(역량)분석, 마케팅전략, 시장진출 실행계획 수립
기타 컨설팅	• 상기분야별 지원사항외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업 (단, 방송통신 해외진출 컨설팅기업역량 범위내에서 신청기업과 합의된 사업)

4) 해외 로드쇼 개최

로드쇼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서비스와 기술 등을 대상으로 전략국가에서 포럼, 시연회를 개최함으로써 해당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특히 4G, 디지털방송, 브로드밴드 등에 대한 전략

적인 해외진출지원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위원회는 전략국가에서 로드쇼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였다. 2011년에는 민·관 합동으로 호주, 이란, 브라질, 베트남 등 주요 전략국가에서 융합 로드쇼를 총 8회 개최하였다. 2011년에 실시한 해외 로드쇼는 다음과 같다.

〈표 IV-49〉 2011년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로드쇼 개최 실적

구분	일자	장소	참여기업(분야)
1	1.11	필리핀 마닐라	DMB Alliance(DMB), SKT(모바일브로드밴드), KT(스마트TV), ETRI(Open IPTV)
2	4.27	호주 호버트	삼성전자(4G, 스마트TV), KT(Mobile IPTV, 클라우드 컴퓨팅), SK브로드밴드(TPS), ETRI(재난 T-DMB), 현대U&(통신솔루션), SKT(Multi Screen Personal Media)
3	7.2	이란 테헤란	KT(클라우드컴퓨팅), ETRI(IPTV), LG전자(스마트TV), SKT(RCS)
4	10.26	캄보디아 프놈펜	이노그리드(클라우드 컴퓨팅), ETRI(차세대IPTV), A&D(전파관리), 디투에스(디지털방송), 경안전선(통신서비스)
5	11.8	브라질 상파울루	디엠브로(DMB), KT(4G), MBC(방송콘텐츠), 삼성전자(스마트TV), 현대U&(통신솔루션)
6	11.10	콜롬비아 보고타	디엠브로(DMB), KT(4G), MBC(방송콘텐츠), LG전자(스마트TV), 현대U&(통신솔루션)
7	12.5	베트남 호치민	SKT(4G, WiMax), LG CNS(디지털방송), 삼성전자(4G, 스마트TV), 코어트러스트, A3 시큐리티, 이글루 시큐리티, 모니터랩(정보보안)
8	12.7	미얀마 양곤	SKT(4G, WiMax), KT, A&D(전파관리), 디투에스(디지털방송), 코어트러스트, A3 시큐리티, 이글루 시큐리티(정보보안)

〈그림 IV-24〉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로드쇼



5) 방송통신 해외 컨설팅 지원

위원회는 WiBro 등 우리 방송통신 기술·서비스에 적극적이고 실제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현지 정부 및 기업에게 동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F/S, Feasibility Study)하거나, 시험 서비스(P/P, Pilot Program)를 제공하

는 정부간 컨설팅 사업을 총 7회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성 분석과 시험 서비스를 통하여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기술과 서비스의 해외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에 실시한 정부간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V-50〉 2011년도 해외컨설팅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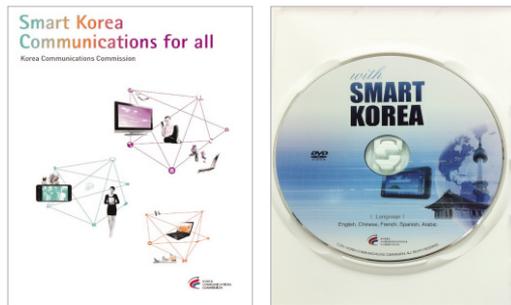
회차	제안사	대상국	프로젝트	해외파트너	사업기간
1차	EBS	콜롬비아	(F/S) EBS 모델 진출	교육부, RTVC	4.18~8.17
	A&D ENG	키르기스스탄	(F/S) 전파관리시스템	통신청	4.18~8.17
2차	KT	몽골	(F/S) 전파관리시스템	통신규제위원회	7.11~11.10
	DMBro	멕시코	(F/S) T-DMB 도입촉진	국가통신위원회	7.11~11.10
	KCSA	카자흐스탄	(P/P)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교육부, IITU대학	7.25~12.24
3차	LG CNS	인도네시아	(F/S) 디지털방송시스템	TVRI	9.19~12.18
	Snet	인도네시아	(F/S) WIMAX	PT.Internux	9.14~12.20

6) 신한류 확산

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서비스 및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 'K-POP' 등 신한류의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방송통신서비스 홍보 동영상(DVD 2,000부) 및 브로셔(7,000부)를 제작하여 제2기 위원회의 비전과 6대 전략서비스(4G, 모바일 TV, 인터넷기반TV, 브로드밴드, 정보보안/전파관리, 방송콘텐츠)를 소개하고, 해외진출 사업 및 국제행사, 정부간 협력 등에 활용하였다. 특히 홍보 브로셔 'Smart Korea Communications for all' 는 세련된 디자인과 시각적인 구성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고, 홍보 동영상 'with Smart Korea' 는 5개국어(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더빙 제작하여 언어권별 맞춤형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홍보물은 주요 전략국가의 코트라 무역관, 해외 문화홍보원 등 37곳(1,850부)에 배포하여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CF용 영상물

을 별도 제작하여 아리랑 TV와 CNN Asia Pacific을 통해 전세계로 송출함으로써 방송통신 강국 대한민국을 널리 홍보하였다. 또한, 2011년에 제작한 홍보물들은 2012년 3월에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시에 배포하여 한국의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IV-25〉 방송통신 해외 홍보물



7) 글로벌 유통 확대

국내 시장은 전세계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매우 시급하

고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방송콘텐츠의 해외 시장 개척의 시급성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반 제공을 위해 글로벌 유통 확대를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국내 앱스토어와 세계 앱 도매장터(WAC, Wholesale App Community) 간 연동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콘텐츠 수출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지원하였다.

8)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

위원회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CIS 중남미, 중동, 동유럽에서 총 4회 개최하였다. 기존의 쇼케이스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국한된 반면, 2011년도 사업의 특징은 우리 방송콘텐츠의 불모지였던 CIS(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남미(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중동(터키, 이집트, UAE), 동유럽(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 방송콘텐츠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K-POP' 등 전세계적 신항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글로벌 시장의 수요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방송콘텐츠 진출시장의 다변화 및 진출확대를 위한 적기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 쇼케이스에는 KBS미디어, MBC, SBS콘텐츠허브, EBS, 아리랑TV, YTN, CU 미디어 등 주요 방송사업자들이 참여하여 현지 방송사 방문·면담, 방송프로그램 상영회, 비즈니스 상담회 및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한류확산에 기여하였다.

'CIS 쇼케이스'는 2011년 카자흐스탄의 '한국의 해'를 맞이하여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한·카자흐스탄 수교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5월 2~7일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하여 811,440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하였다. '중남미 쇼케이스'는 중남미 지역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7~26일간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에서 개최하여 907,500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하였다.

〈그림 IV-26〉 중남미 쇼케이스



〈그림 IV-27〉 중동 쇼케이스



‘중동 쇼케이스’는 중동지역에 한류를 확산 시키기 위해 10월 26일~11월 4일 간 터키, 이집트, UAE에서 개최하여 987,600달러 상당

의 수출상담을 하였다. 또한 연예인(이선호) 팬 사인회를 병행하여 현지 한국 드라마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표 IV-51〉 2011년도 해외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실적

구분	장소	일자	내용	성과
CIS 쇼케이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미디어, MBC, SBS등 총 3개사 참가, 총 22건 상담 •카자흐 하바르 TV, 31 Channel 및 우즈벡 통신정보청, NTRC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상담액 811,440달러 달성 - 카자흐 56만 달러, 우즈벡 25만 달러
중남미 쇼케이스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8.1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미디어, MBC, SBS, EBS, 아리랑TV 등 총 5개사 참가 총 72건 상담 •브라질 Rede Globo, Rede Record, 페루 American TV, 콜롬비아 Caracol TV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상담액 907,500달러 달성 - 브라질 31만 달러, 페루 35만 달러, 콜롬비아 24만 달러
중동 쇼케이스	터키, 이집트 UAE	10.26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KBS미디어, MBC, SBS, KBSN, CU미디어, YTN 등 7개사 참가 총 57건 상담 •터키ATV, 이집트 ERTU, UAE MBC 등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상담액 987,600달러 달성 - 터키 55만 달러, 이집트 10만 달러, UAE 33만 달러 수출상담
동유럽 쇼케이스	루마니아 폴란드	11.27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KBS미디어, MBC, SBS •루마니아 PRO TV, TVR 면담 •폴란드 TVP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상담액 515,000달러 달성 - 루마니아 47만 달러, 폴란드 4만 달러 수출상담

‘동유럽 쇼케이스’는 유럽지역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7일 ~12월 3일간 루마니아, 폴란드에서 개최하여 515,000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하였다.

또한, 우리 방송콘텐츠의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한류 확산과 방송콘텐츠 해외진

출 상시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12월 12일 ~17일간 베트남, 필리핀에서 ‘방송콘텐츠 Festival’ 행사를 개최하여 1,180,000달러 상당의 수출상담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한국의 방송산업 현황에 관한 주제발표와 참가 방송사(KBS, MBC, CJ E&M,

아리랑TV, YTN) 소개 및 출품콘텐츠 브리핑을 통해 콘텐츠 판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에도 대륙별·문화권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 국제 ICT 협력활동 주도

1) 국제기구 의제대응 체계 강화

위원회는 OECD, ITU 등 다자 국제기구 및 APT, ASEAN, APEC 등 지역협력 기구, 그리고 AIBD 등 방송 국제기구의 핵심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방송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 기술 표준화에 우리기술 반영 등을 위해 국제기구의 방송통신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원회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산하작업반 회의, 무역위원회(TC) 회의에 참석하여 방송통신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2008년 OECD 서울장관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6월

27~28일)된 인터넷 경제에 관한 고위급회의에서 정보보호를 주제로 하는 차기 2013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정례회의에서는 사물지능통신 및 보편적서비스 관련 보고서에 우리측 정책적 성공사례를 반영하는 등 주요 의제 논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ITU의 6선 이사국이자 ITU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전권회의의 차기회의(2014년) 개최국이 되어 ITU 주요 회원국으로서의 위상과 이에 따른 책임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동안 ITU 이사회(10월 11~21일) 및 각종 이사회작업반(2월, 4월, 5월, 6월, 10월)에 참가하여 ITU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위원회는 2011년에도 각종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63차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에서(프랑스 파리, 10월 27~28일) 우리나라 정인억 박사가 부의장으로 재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연속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의장단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국제 ICT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1차 정보보호 작업반(WPISP,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회의(12월 1~2일)와 제30차 정보경제작업반(WPIE,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회의(12월 7~8일) 및 제46차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 작업반(WPCISP) 회의(12월 5~6일)에서는 우리나라 정태명 교수(성균관대학교)와 남상열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내찬 교수(한성대학교)가 각각 2012년도 부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CCP와 ICCP 산하 4개 작업반 전체에 부의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의장단 진출을 통해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각 작업반의 국제적인 논의에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정책개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U에서는 전파부문(ITU-R),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및 전기통신개발부문(ITU-D)의 3개 부문의 총 21개 연구반(Study Group)에서 14명의 의장단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ITU-R 부문에서는 WRC 준비회의, 전파통신자문그룹(RAG,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연구반 6(방송), 연구반 7(과학)에서 국립전파연구원 위규진 전파환경안전과장, 성향숙 연구관, 김경미 연구관, 한국천문연구원 정현수 그룹장이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ITU-T 부문에서는 연구반 2(번호 및 망관리), 연구반 3(과금 및 요금정책), 연구반 5(전자파관리/환경), 연구반 11(신호방식), 연구반 12(서비스품질), 연구반 13(미래네트워크), 연구반 16(멀티미디어), 연구반 17(정보보호) 및 아시아태평양 과금 그룹에서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의 강성철 전파업무2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의 박기식 박사, 이병남 박사, 이형호 박사, 이재섭 박사, KT의 이인섭 부장과 김홍수 부장, 한국외대의 정성호 교수, 순천향대의 염홍열 교수가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ITU-D에서는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TDAG,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서보현 박사가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ITU의 3개 부문 내 의장단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글로벌 전파, 정보통신 표준화, 정보통신 개발협력과 관련된 이슈 논의를 주도하며, ITU내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2) 국제기구 회의 개최 및 참가

위원회는 2010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ITU 전권회의에서 차기 2014년 ITU 전권회의(PP-14)를 유치한 바 있다. 2011년 한해동안 위원회는 PP-1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 단계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후보도시 선정위원회(5월)와 ITU 사무총국의 후보도시 실사(8월)를 거쳐 2011년 10월 ITU 이사회에서 PP-14 개최도시(부산광역시)와 개최일정(2014년 10월 20일~11월 7일)이 확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1년 ITU 이사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라봉하 국제협력관은 PP-1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ITU 및 부산광역시와 협력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약속하고

이사회를 요청하여 승인을 획득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이영환 기획실장도 개최도시 선정에 대해 ITU 사무국과 이사회에 감사를 표명하고, PP-14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PP-14 개최도시 결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위원회는 향후 행사 준비에 있어서 ITU 및 개최도시와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이며 조직적인 PP-14 준비를 추진할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2011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

Telecom World 2011’ 전시 행사에 한국홍보관을 구성하여 방송통신 5대 품목(WiBro, DMB, IPTV, 브로드밴드, 방송콘텐츠) 기술 및 서비스를 시연·홍보하였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원텔레텍 등 총 7개사가 참여, 10개의 부스가 운영되어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 위상을 알리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차기 전권회의(PP-14) 개최국으로 국제회의 회원국 및 참가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산업의 인지도 및 국격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IV-52〉 ITU 텔레콤 전시회 추진 경위

년도	추진현황
2008	ITU 텔레콤 아시아(방콕) 및 아프리카(카이로) 전시회 한국관 운영(총 18개사 25개 부스)
2009	ITU 텔레콤 월드 전시회(제네바) 한국관 운영(8개사 11개 부스)
2011	ITU 텔레콤 월드 전시회(제네바)한국관 운영(7개사 10개 부스)

※ 2010년 행사는 취소되어 개최되지 않음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2011년 11월 APT 총회 및 관리위원회 개최국으로서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2011년 3월, 9월), 한-ASEAN 통신장관회의(2011년 1월, 12월), UN ESCAP 총회(2011년 5월), 등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정보통신 정책 논의에 참여하였다. 2009년 APT 관리위원회에서 유치한 APT 총회는 3년 마다 개최되는 APT 최고위 의사결정회의로 금년 APT 제12차 총회 및 제35차 관리위원회가 2011년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36개 정회원국 및 2개 준회원국의 정보통신장·차관을 포함해 298명이 참여하였다. APT 총회에서는 한국이 의장후보자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노영규 전 기획조정실장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노영규 전 기획조정실장의 주재하에 회원국은 APT의 지난 3년 동안의 활동을 검토하고 향후 3년간의 전략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분담금 단위액 조정, APT 규정개정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APT 12차 총회를 통해 APT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이 선출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관리위원회 참여증진을 위한 ‘펠로십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라오스 우정통신부 장관 및 네팔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양

자회담을 통해 IT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통신 개발 분야 진출에 관해 논의하였다. 금번 2011 APT 제 12차 총회 및 제35차 관리위원회를 통해 아태 지역에서 IC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수행 및 국격을 제고할 수 있었고 협력 네트워크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표 IV-53〉 역대 APT 총회 개최 현황

차수	년도	장소	차수	년도	장소
창립총회	1979	태국	7차	1996	말레이시아
2차	1981	태국	8차	1999	이란
3차	1984	한국	9차	2002	인도
4차	1987	호주	10차	2005	파키스탄
5차	1990	중국	11차	2008	말레이시아
6차	1993	인도네시아	12차	2011	한국

〈그림 IV-28〉 APT 12차 총회 및 제35차 관리위원회 참가자



매년 개최되는 한-ASEAN 통신장관회의(TELMIN)의 경우, 2010년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장관회의가 미뤄지면서 2011년 두 차례의 한-ASEAN 통신장관회의가 개최되었

다. 제5차, 6차 한-ASEAN 통신장관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 추진을 위한 ICT 마스터플랜 수립에 기여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한-

ASEAN ICT 파트너십 협력사업'을 채택하여 인프라 활용 협력, 신기술 및 서비스 확산 협력, 역량배양 협력과 지식공유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제43차, 44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에 참여하여 우리의 선진적인 ICT 정책을 홍보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APEC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APEC TEL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차세대네트워크 정책현황, 그린 ICT 정책동향, ICT 분야 우리나라 통상정책 등을 소개하여 APEC 회원체의 관심을 널리 확보하고, ICT 역기능 방지 프로젝트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 APEC 사이버 보안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편, 위원회가 역내 방송 분야 국제기구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였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7월 25~28일)된 2011 AIBD 10차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년 임기의 집행이사국에 2009~2011년에 이어 만장일치로 재선되었고, AIBD 회원국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방송 전문인력의 초청연수 프로그램 및 방송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아태지역 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해외진출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 국제 ICT 발전지수 제고

위원회는 방송통신 규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1년 9월 15일 발표한 ICT 발전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52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ITU의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 간의 ICT 발전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지수로서, 국가 간 ICT 발전경로, 디지털 격차,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1년 ICT 발전지수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스웨덴이 2위를 차지하였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ICT 발전지수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역량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이용도 부문에서 세계 1위이며, 역량(2위), 접근성(10위) 부문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지표별로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1위),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1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4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였다.

〈표 IV-54〉 2011년 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 (IDI) 세부지표 순위

부 문	세부지표	지표순위
ICT 접근성 (10위)	①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4
	②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67
	③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	70
	④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17
	⑤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
ICT 이용도 (1위)	⑥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10
	⑦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4
	⑧ 인구 100명당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1
ICT 역량 (2위)	⑨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35
	⑩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2
	⑪ 성인 문자해독률	18

4) 정부간 글로벌 협력 확대

위원회는 세계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및 미래 방송통신 산업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1년 5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19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 7차 방송통신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와 연계로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를 11일부터 12일까지, ‘월드IT쇼’를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였다. 장관회의는 ‘스마트 사회와 모바일 혁명’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정책과 비전을 논의하며 스마트 사회를 대비한 모바일 혁명에 관한 국제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데 그

뜻을 함께 했다. 더불어 11일부터 12일까지 ‘스마트 빅뱅: 새로운 기회(Smart Big Bang; New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국내외 방송·통신 정책 입안자, 기업 대표들 및 전문가 56명이 연사로 참가하여 각국의 방송·통신 정책과 산업동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일반참가자는 1,440여명에 달하였다.

2011년 장관회의는 방송·통신 분야의 우리나라 최대 전시회인 ‘월드IT쇼’와 연계되어 개최되었다.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리는 동 전시회는 ‘Get IT Smart’를 주제로, 19개국 국내외 방송·통신 전문 업체 440개사가 참석하여 첨단 기술을 비롯한 3D TV, 스마트 TV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시연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미래상을 한 눈에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홍콩, 일본, 중국 등 세계 70여개사의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방송·통신 컨버전스로 인한 스마트 사회와 모바일 혁명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첨단 방송·통신 기술 서비스를 홍보하고 해외진출을 보다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면서 경제외교의 새 장을 열었다.

〈표 IV-55〉 방송통신장관회의 참석국 및 장·차관 수

구분	참석 국가	계
장관급	한국, 브라질, 에콰도르, 우르과이, 필리핀, 이란, 동티모르, 부탄, 르완다, 에디오피아, 카메룬	11개국
차관급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골, 아제르바이잔	8개국

〈표 IV-56〉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개최 실적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행사명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08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09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0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1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구KEI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형태	방송통신장관회의 연계	방송통신장관회의 및 월드 IT쇼(전시회) 연계 개최	G20 정상회의와 연계 개최	방송통신장관회의 및 월드IT쇼(전시회) 연계 개최	
논의주제	컨버전스의 구현·인프라 및 기술 서비스, 콘텐츠,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미디어 컨버전스시대의 트렌드 분석 및 향후 기업의 방향과 비전 제시	Digital Future of Smart Society	Smart Big Bang ; New Opportunities	
규모	세션수	11개	12개	15개	10개
	참관자	2,023명	2,209명	2,200명	1,441명
	참관자 만족도	83%	90%	90%	91%

그리고 위원회는 특정 국가와의 지역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 하나는 한국·호주·뉴질랜드 장관급 회담인 'KANZ Broadband Summit'이다. 'KANZ'는 2003년 한국-호주 Broadband Summit으로 개최되었으며, 2차 회의 때부터 뉴질랜드가 참여하여 3개국의 지역 회의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금년에는 '제6차 KANZ Broadband Summit'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동 회의기간 중 'Digital Future'란 주제로 국가별 연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방송통신 세미나 및 방송통신 전략포럼 홍보를 위한 로

드쇼를 개최하였다.

두 번째는 '제10차 ASEAN TELMIN(2011년 1월 13~14일)'과 이와 연계한 'CJK 장관회의'(한·중·일 장관회의, 1월 14일)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SEAN 통신장관회의'를 통해 한-ASEAN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기반을 조성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연계한 'CJK 장관회의'에서는 한국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국의 시귀화 공업정보화부 차관, 일본의 야마카와 테츠오 총무성 차관이 참여하여 협력약정의 개정을 비롯한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기존 8

개로 나누어진 워킹 그룹을 재구성하여 총괄하는 실무협의체와 이를 통해 운영되는 6대 협력 분야를 정의 내렸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포럼 등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협력 및 글로벌 기업의 초기 시장 선점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존 민간 표준화 협력활동을 정부간 협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림 IV-29〉 제6차 KANZ 장관회의



5)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위원회는 국제 방송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방송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2011년 총 4개사에 4편의 방송프로그램 해외 공동제작을 지원하였다. ‘생명의 땅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의 드넓은 열대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미지의 생물과 그들의 생태를 소개함과 동시에 희귀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벌이는 국제

기구들의 치열한 현장을 담아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범지구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Jazz가 흐르는 유럽, 나운선을 찾아서’는 재즈의 본고장 유럽을 한국 유명 뮤지션이 방문하여 재즈에 대해 탐방하는 재즈기행 다큐멘터리를 제작함으로써 보고 들을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유럽 재즈의 매력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생로드’는 인삼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신라,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세계로 뻗어나간 무역로(진생로드)를 발굴, 복원하여 고려인삼이 전해졌던 길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덴싱 인 아시아’는 아시아춤의 원형을 수집하여 아시아춤이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공통의 뿌리로 이어진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위와 같이 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해외 공동제작을 통해 프로그램 및 대상국가의 다원화를 도모하였다. 특정 장르·지역에 편중된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해외 유통구조 개선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2011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어 EU 27개국과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2012년에는 EFTA(4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EU(27개국) 등 총 33개국과 공동제작이 가능하여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의 다원화가 기대된다.

〈그림 IV-30〉 해외공동제작 프로그램

〈EBS '생명의 땅 캄보디아'〉



〈한국HD방송 '댄싱로드 인 아시아'〉



〈OBS '인삼로드'〉



〈폴라리스 '재즈가 흐르는 유럽, 나윤선을 찾아서'〉



6) 국제기구 등과 협력 활동 확대

위원회는 월드뱅크, APCICT, ITU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UN 산하의 ICT 전문 교육기관인 APCICT와 아태지역 ICT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포럼 및 정보보호·프라이버시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방송통신 분야 개도국 인력양성 수행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월드뱅크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방송통신 기술·정책 지원, 정보보호 자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4월 월드뱅크 신규 ICT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방글라데시 정보보호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모로코 브로드밴드 도입과 전자정부 촉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정부부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조지아 브로드밴드 도입과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알바니아 브로드밴드 정보보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ITU와는 개도국의 무선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한 로드맵 마련, 표준화 격차 해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자문프로그램 운영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ITU 개발부문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선 브로드밴드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을 체결하였으며, 표준화부문에서는 개도국의 표준화 격차 해소를 위해 태평양도서국통신연합(PITA)에 대한 표준화 자문을 수행하고, 표준화격차 해소 워크숍 개최 및 표준화역량 측

정지수 개발을 위한 개도국 대상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등 ITU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IV-31〉 국제기구 협력사업



7) 유라시아 정보 네트워크 협력센터 개소

위원회가 여러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 2010년 10월 ‘ASEM 정상 회의’에서 ‘제4차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협력사업’을 운영·관리할 협력센터의 한국 내 설립을 공식적으

로 승인받았다. 위원회는 ‘2010년 정식 승인 이후로 2011년 2월 TEIN3 기술위원회(홍콩)에서 정관 초안 합의를 이루었고, 8월에 TEIN 협력센터 법인 등록 및 개소를 하였다. 이후 직원 채용과 각 지자체에 TEIN 협력센터 유치에 대하여 각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로 결정하였다.

〈표 IV-57〉 TEIN 발전 현황

구분	TEIN	TEIN2	TEIN3	TEIN4
사업기간	2001.12~2006.1.	2004.1~2008.12.	2008.1~2012.9.	2012.1~2015.12.
사업형태	한·불 양자협력	유럽·아시아 다자협력	유럽·아시아 다자협력	유럽·아시아 다자협력
비용분담 모델	한국(50%) 프랑스(50%)	유럽(80%), 개도국(20%) 비개도국(자체)	유럽(70%), 개도국(30%) 비개도국(자체)	유럽(50%), 개도국(50%) 비개도국(자체)
참여국가	한국, 프랑스	한·중·일, 호주, 동남아 등 아시아 10개국	한·중·일, 호주,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19개국	한·중·일,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 몽고, 미얀마 등 아시아 22개국 이상 목표
관리기관	KISDI(한국) RENATER(프랑스)	DANTE(영국)	DANTE(영국)	TEIN 협력센터(한국)

한국 내 TEIN 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유라시아 국제연구의 교두보를 확보 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GENI), 유럽(FP 7), 일본(AKARI) 등 선진국과 미래 인터넷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ICT 선도국으로의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ICT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여 아시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58〉 TEIN 협력센터 설립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기간	추진 내용
2010. 2.	TEIN3 기술위원회(시드니)에서 향후 TEIN4 사업을 관리할 TEIN 협력센터의 한국 설립을 공식 제안
2010. 10.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브뤼셀)에서 TEIN 협력센터의 한국 설립을 승인하고, TEIN4 사업 관리 권한 부여
2010. 11.	방통위·유럽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간 실무회의에서 계약 및 조직 구성 방안 등 세부 원칙 합의
2011. 2.	TEIM3 기술위원회(홍콩)에서 정관 초안 합의
2011. 8.	TEIN 협력센터 법인 등록 및 개소
2011. 8.~9.	지자체 장소 공모(서울시 선정)
2011. 12.	직원 채용
2012. 1.	TEIN4 사업 개시

다. 방송통신부문 통상협상 대응

1) FTA 협상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에 따라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필두로 총 8건의 협상을 타결하여 이중 7건은 발효되었고

1건은 국회비준을 마치고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7건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위원회는 FTA 협상 상대국의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FTA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방송통신분야 FTA 협상에 참여하여, 전략적 진출 대상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V-59〉 한국의 FTA 추진 현황

구분	거대 경제권 및 주요 교역국	시장 교두보	자원 부국 등
협상 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EAN(2009.5.) 인도(2010.1.) EU(2011.7. 잠정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레(2004.4.) 싱가포르(2006.3.) EFTA(20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루(2011.8.)
국회비준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2011.11.국회비준) 		
협상진행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2008.3. 13차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2010.5. 5차 협상) 멕시코(2008.6. 2차 협상) 콜롬비아(2011.10. 5차 협상) 터키(2011.3. 3차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GCC(2009.7. 3차 협상) 뉴질랜드(2010.5. 4차 협상)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 GCC(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방송분야 FTA 협상의 경우 시청각 산업에 압도적 경쟁우위를 가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청각 산업의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방송분야는 통상적으로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대국과 공동제작 협정 체결하는 형태로 양국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신분야 FTA 협상의 경우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의 협상시 외국인 투자허용 한도 등의 통신시장 개방 문제가 주된 협상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위원회는 관련업계 의견수렴 및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방송통신분야 협정문 재번역, 경제적 영향 재분석, 국회비준 지원대책 추진 등을 거쳐 11월에 국회비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FTA 이행협의를 진행 중으로 2012년 3월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와의 협상은 협정문 재번역 및 국회비준 지원 대책 추진을 거쳐 7월에 잠정 발효되었으며, 페루와의 협상은 국회비준 지원대책 추진을 거쳐 8월에 발효되었다. 호주와의 협상은 지금까지 총 5차례 수행되었으며 2012년 상반기에 제6차 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와의 협상은 총 3차례 진행되었으며 2012년 상반기에 제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콜롬비아와의 협상은 총 5차례 수행되었으며 2012년 중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협상 타결국가에 대해서는 FTA 이행 상황 및 규범적합성을 모니터링하여 통상마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비한 'FTA 추진전담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상대국의 통상환경 연구 및 효율적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내 방송통신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IV-60〉 통신분야 한-미 및 한-EU FTA 협상결과

구분	국내법 개방수준	한-미 FTA 개방이후	한-EU FTA 개방수준	
외국인투자 제한 (기간통신 KT·SKT 제외)	직접투자	49%까지 가능	49%까지 가능	좌동
	간접투자*	49%까지 가능	공익성 심사 통과시 100%까지 가능 (유예기간 2년)	좌동
국경간 공급 제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협약을 체결해야 함	좌 동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 중계 부문에 한해 상업적 협약 체결 의무를 면제 (국내 지점간 위성 중계 제외)	

※ 외국인(개인, 법인, 정부)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투자하는 것
- 현재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15%이상 지분 소유한 국내법인을 통해서는 49%까지만 투자 가능하나, 한미 FTA 결과에 따라 '공익성 심사' 통과시 100%까지 투자 가능(유예기간 2년)

〈표 IV-61〉 방송분야 한-미 FTA 협상결과

구분	국내법 개방수준	한-미 FTA 개방이후	
PP에 대한 외국 인투자(중편 보도 홈쇼핑 제외)	직접투자	49%까지 가능	49%까지 가능
	간접투자*	49%까지 가능	100%까지 가능(유예기간 3년)
편성 쿼터	비지상파(SO·PP등)의 장르별 국내편성 쿼터	• 애니메이션 : 35% • 영화 : 25%	30% 20%
	수입물중 1개국 편성 쿼터	•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경우 각각 수입물 총량의 60%	80%로 상향

※ 외국인(개인, 법인, 정부)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통해 PP에 투자하는 것
- 현재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50%이상 지분 소유한 국내법인을 통해서는 49%까지만 투자 가능하나, 한미 FTA에 따른 시장 개방시 100%까지 투자 가능(유예기간 3년)

2) WTO 협상

WTO DDA 협상은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되고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WTO 협상 동향과 악과 적극적인 협상대응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월, 6월, 9월, 11월 4차례의 협상에 참여하여, '양허안 협상', 'ICT 서비스 교역원칙', '국제 모바일

로밍요금', '통신서비스 및 시청각서비스 분류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한편, WTO 사무국은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무역정책검토보고서(TPR)를 작성하여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 중 우리나라에 대한 검토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11년 8월에 동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WTO측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보고서에 부정적인 내용이 실리지 않도록 대응하여 향후 통상이슈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3) 통상현안 협의

위원회는 2011년 5월과 9월, 2차례의 한·미 통상현안 협의에 대응하여, 미국측이 제기한 '전파법 개정내용', 'TTA의 역할', '방송통신기자재 인증마크', '전기 안전 시험 인증' 등과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한·EU 공동위 협상에 대응하여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EU측이 제기한 'CAS 표준채택', 'EMC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라. 개도국 지원사업 확대

1) 개도국 방송통신 초청연수 사업

위원회는 개도국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사업을 실시하여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ICT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

고 있다. 1998년 APT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사업으로 출발하여 2011년 14년째를 맞이하였다. 2011년에는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및 디지털융합과정 등 21개 과정을 운영하여, 85개국 439명의 연수생을 초청하였다.

〈그림 IV-32〉 개도국 방송통신 초청연수 사업



그리고 연수생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현지 동창회를 개최하고(2011년 3월 라오스, 4월 필리핀), 분기별 웹진을 제작·발송하는 등 초청연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초청연수 사업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연수생 DB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추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및 정부간 교류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방송통신 인적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62〉 초청연수 사업실적

년 도	2008	2009	2010	2011	계
국가 수	74	48	74	85	138
과정 수	27	23	21	21	273
연수생 수	415	339	450	439	4,037
예산(백만원)	4,000	2,900	2,900	2,450	

2) 개도국 방송장비 지원사업

위원회는 2007년부터 저개발 국가 중 FTA 또는 방송협력 MOU 체결국을 중심으로 방송장비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국가간 방송분야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국산 방송장비의 인도적 지원을 통한 한국 ODA 사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상반기에는 '통가'에 재

난방송용 안테나시스템을 무상 구축·지원하여 통가 전 지역에 지진, 화산 및 쓰나미 등 재난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반기에는 '미얀마'에 촬영장비, 인코더, 변환기 및 편집장비 본체 등 국내외 방송장비를 전달함으로써 미얀마의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역내 방송 분야의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 및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기반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63〉 개도국 방송장비 지원실적(2007~2011년)

연 도	지원국	지원 장비
2007	라오스	SD급 카메라 1식, 오디오 레코더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08	라오스	SD급 카메라 1식, 위성 업컨버터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09	캄보디아	SD급 카메라 1식, 비디오 스위치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10	캄보디아	HD급 카메라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라오스	SD급 카메라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11	통가	재난방송용 안테나 1식
	미얀마	인코더, 디코더, HD-SD 변환기, 방송용 카메라

〈그림 IV-33〉 개도국 방송장비지원



3)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한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있어 정부의 정책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도국의 방송통신현황 분석과 한국의 통신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수혜국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정책자문사업은 2~3회에 걸친 전문 자문단의 현지자문 및 수혜국 정책결정자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초청자문 등을 통해 수혜국의 현황을 분석, 수혜국에 적합한 방송통신 발전 로드맵 혹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책자문을 통해 제공된 방송통신발전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의 실질적인 이행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약 4개월간 중장기 파견하여 현지에서 수혜국 정부에 상시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중장기 파견사업도 함께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개도국 정책자문 사업으로 캄보디아 전파관리 정책자문, 우루과이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자문, 미얀마 정보보호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방송통신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 라오스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책 전문가 파견, 에콰도르 정보보안 전문가 파견 및 세르비아 통신인프라 발전 정책 현지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특히 에콰도르와 라오스의 경우 2010년 수행한 정책자문의 후속협력으로 2011년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행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에콰도르는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조직구축의 성과를, 라오스는 우리 기업의 전파장비 수출을 이끄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송통신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은 개도국의 방송통신 부문 발전 지원을 통해 방송통신 리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형 방송통신 발전모델의 확산을 통한 친한국적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V-34〉 개도국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개도국 방송장비지원



마. 방송통신 남북협력 추진

1) 사업현황

남북간 방송분야 교류는 '남북방송영상물 소개모임(2003년 평양, 2005년 금강산)', '남북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2005~2007년 11건)', '국제 스포츠 경기의 북한 중계지원(2003~2006년 4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통신분야 교류는 '금강산지역(1998년 11월~) 및 개성공단(2005년 12월~)의 유선전화서비스 제공' 과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2005~2007년 총 557가족)', '남북 IT 학술행사(2006~2007년 2회)', '북한 IT 인력 교육(2006년 3회 100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표 IV-64〉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사업

구분	교류사업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방송영상물 소개모임(2003년 평양, 2005년 금강산) 남북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2005~2007년, 11건) 국제 스포츠 경기의 북한 중계 지원(2003~2006년, 4회)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산 지역(1998년 11월~) 및 개성공단(2005년 12월~)의 유선전화서비스 제공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2005~2007년 총 557가족) 남북 IT 학술행사(2006~2007년 2회) 북한 IT 인력교육(2006년 3회 100명)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행위로 남북간 직접교류 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위원회는 남

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남북간 우선협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연구·발굴 중에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연구·발굴한 내용을 토대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2001년 6월부터 남북간 상호 이해와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하기 위하여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2011년 1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1년 5월 기존의 남북방송교류추진위를 확대 개편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를 구성하고, 위원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중 교류추진위원회 회의를 분기 1회(총 4회) 개최하여, '남북 교류현황 및 추진방향', '북한 통신인프라 중장기 구축방안', '남북 방송통신교류 추진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시 우선 협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연구·발굴하였다.

〈표 IV-65〉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운영

구분	일자	내용
1차 회의	6. 22	교류추진위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 남북 교류현황 및 추진방향
2차 회의	8. 24	남북 통신교류 추진방안 북한 TV 방송 디지털전환 동향
3차 회의	10. 25	북한 통신인프라 중장기 구축방안 북한 주민의 한민족 방송 청취 실태
4차 회의	12. 27	남북 방송통신교류 추진방안 김정일 사망과 2012년 남북관계 및 북한정세

〈그림 IV-35〉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회의



3) 남북 방송통신 포럼 운영

위원회는 산·관·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분기 1회(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대북 단파방송 현황과 전망, 북한주민의 외부 미디어 수용현황 등을 주제로 남북관계 현안과 방송통신 교류협력 전망 관련 연구결과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4) 남북 방송통신 워크숍 개최

위원회는 당초 방송통신관련 북측 관계자, 남측의 전문가, 학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학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측관계자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12월에 남측 관계자만이 참여하는 ‘남북 방송통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에서는 DMZ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

고, 세미나를 통해 ‘북한 통신부문 현황과 향후과제’ 및 ‘북한 방송부문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림 IV-36〉 남북 방송통신 워크숍(DMZ 안보현장 견학)



5)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정책연구

위원회는 ‘북한통신망연구회’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북한지역 통신 인프라 중장기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 연구는 남북간 효율적인 통신인프라 통합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남북 통신교류협력 정책 수립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언론학회를 통해 새터민 대상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한 ‘북한주민의 방송통신 활용실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 연구는 북한주민의 방송통신 활용실태 조사와 남북 교류협력 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남북 방송교류협력 정책수립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강화 추진

1) 사업현황

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역별 주요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를 통한 협력의제 발굴, 협력사업 추진, 주요정책교류 등 협력활동 지원과 이를 활용한 민간 협력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총 12회에 걸쳐 17개국을 방문하였으며, 다자간 협력약정 체결, 양자면담,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주요 기업 CEO 면담 등을 통하여 한국의 방송통신 기술홍보 및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방송콘텐츠 신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였다.

2)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1) 참관 및 글로벌 방송통신 기업방문

위원회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11)' 참관을 통해 2011년도 방송통신 융합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였으며, 세계적인 미디어그룹 방문을 통해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196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45주년을 맞는 세계적인 전자제품박람회로서 2011년에는 전 세계 2,700여개 업체가 참여

하였으며, 130여개 국가에서 18만여명의 인원이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CES 전시회 참관 및 국내 참가기업 간담회개최, 드림웍스, CJ아메리카, 실리콘밸리 진출 국내 방송통신기업 방문 등을 통하여 미주 미디어 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3) 이동통신국제전시회(MWC 2011) 참관 및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11년 2월에 개최된 세계적 규모의 스페인 '이동통신국제전시회(MWC, Mobile World Congress 2011)' 참관 및 간담회를 통해 2011년도 방송통신 기술 발전 트렌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동통신국제전시회(MWC)'는 세계 주요 이동통신업체가 모두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회로서 80개국 240여명의 장관 및 규제당국 고위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약 1,360개의 업체 및 49,000여명의 모바일 사업 관련자가 참석하였다. 대표단은 MWC 참가기업과의 면담 및 스페인 Telefonica 임원진 면담 등을 통하여 LTE 서비스, 동영상 정보변환 솔루션 등에 대한 시범서비스 참관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였으며, 참가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각 업체별 대표 정부간 협조요청사항 및 통신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림 IV-37〉 MWC 2011 국내 ICT기업 부스 방문



4) 미국 방송장비기술전시회(NAB 2011) 참관 및 국가홍보관 운영

위원회는 2011년 4월에 개최된 세계 최대의 방송 장비·기술 전시회인 'NAB(National Association Broadcasters) Show 2011'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NAB Show'는 1922년부터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전문전시회로서 2011년도에는 152개국 1,500여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92,000여명이 참관하였다. 위원회는 '국가홍보관' 운영 및 '한국의 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였으며, NAB 전시관 참관 및 해외 방송통신 기관과 면담을 통해 미래 방송통신 동향을 파악하고 상호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림 IV-38〉 NAB 2011 '한국의 날 컨퍼런스'



5) 미국 방송통신 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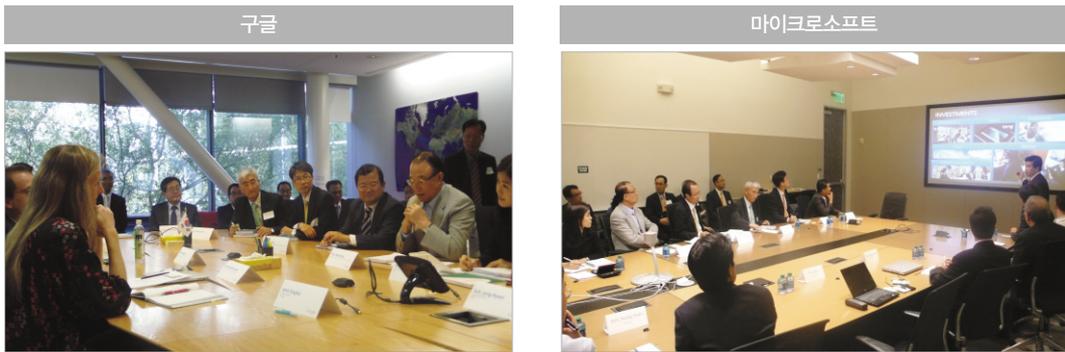
가) 미국 정부(FCC) 및 글로벌 ICT기업 방문
 2011년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에 있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을 이끌며 반 애플 전선을 강화해온 구글이 전통적인 휴대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ICT 시장은 격변의 시기를 겪었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스마트 모바일시대를 이끌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CT업계의 흐름과 미국 정부의 미래 전략을 살펴서 우리의 ICT전략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세계 ICT 변화의 중심인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미국 FCC와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통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인터넷 정책 등 미래 방송통신 정책방향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타임워너, 구글, 이베이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 및 인터넷기업 등을 방문하여 스마트TV·개인정보 등 방송통신 최신 동향과 글로벌 기업의 광고 및 운영전략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인터넷·정보보호·미디어 등 방송통신 유관 분야의 미래 발전 방향 분석을 통해 우리 유관 산업의 미국 진출을 모색하였다.

〈그림 IV-39〉 미국 주요 ICT기업 면담



〈표 IV-66〉 미국 방문기관별 주요논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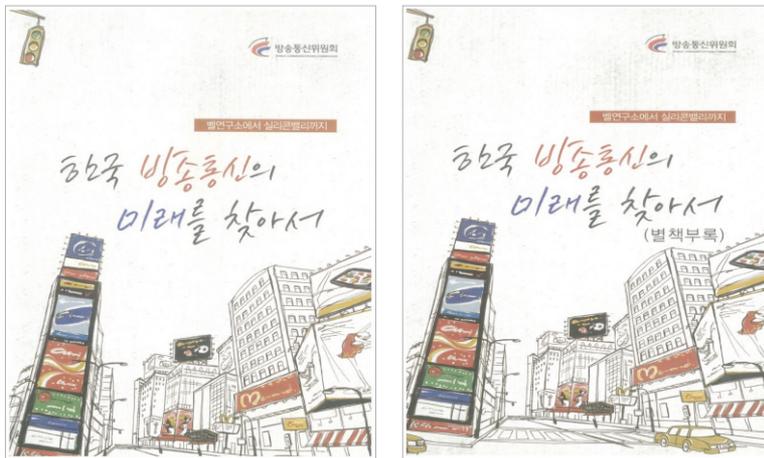
방문기관	주요논의 내용
통신정보관리청(NTIA)	브로드밴드 확산, 주파수 할당 정책방향 및 디지털 전환 정책 등
미연방통신위원회(FCC)	한국 클라우드 현황, 브로드밴드, 주파수정책, 미디어규제, 공공안전 등
타임워너	타임워너 경영전략 및 한국과의 파트너십 등
벨전화연구소	글로벌 인재 확보, 센서 네트워크, 센서 디바이스 등
구글	실리콘밸리 운영시스템, 스마트TV, NFC, 구글월릿 사업현황 등
이베이	모바일커머스 발전방향, 한국과의 협력 등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등
드림웍스	미래 3D콘텐츠 산업전망예측 및 대응방안 등
월트디즈니	복합미디어 기업으로서 성공요인 분석 등

나)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미국방문 보고서 책자 발간

위원회는 미국 출장 방문기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집과 출장 이후 결과를 정리한 ‘한국 방송통신의 미래를 찾아서(부제: 벨연구소에서 실리콘밸리까지)’ 보고책자를 본서와 별책부록으로 발간하였다. 본서는 타임워너, 드림웍스 등 미디어·콘텐츠 기업과 구글,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기

업, 연방통신위원회, 통신정보관리청 등 방송통신 정책기관 방문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조사 자료집인 별책부록은 방문기관 및 관련산업을 방송통신정책부문, 미디어부문, 광고산업부문, 인터넷부문, R&D 부문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 ICT의 흐름과 우리의 미래를 짚는 ‘융합산업 백서’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V-4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미국 출장보고서 「한국 방송통신의 미래를 찾아서」



제3절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1.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기반 마련

가.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그동안 국내 방송법령에서는 중복적인 소유·겸영 규제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복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2011년 중 사전 규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방송 분야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추진하였다.

〈표 IV-67〉 방송법 시행령상 소유·겸영 규제 현황

대상	주체	지상파	SO	위성	PP
지상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소유 : 7% • 쌍방소유 : 5% • 사업자수 : 10%(DMB 제외) 	• 33%(주식)	-	-
지상파 D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사업자수 3-5(1/3), 6이상(1/5) 	• 33%(주식)	-	-
SO		• 33% (주식)	• 1/3(가입가구), 1/3(구역)	• 33%(주식)	• 1/3(구역)
위성		• 33% (주식)	-	• 33%(주식), 1개(사업자수)	-
PP		TV·R·D PP별로 각 3%(사업자수), 6개 미만(6개까지)	TV·R·D PP별로 각 1/5(사업자수)	TV·R·D PP별로 각 1/5(사업자수)	• 33% (매출액, 홈쇼핑제외)

※ 특정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는 전체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 이내

위원회는 소유·겸영 규제제도의 재정비 과정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되, 방송 시장에서 중소 방송사업자가 경쟁력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선정하였다.

학계 및 정책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직적인 사전 진입규제의 최소화는 물론, 방송플랫폼 시장, 방송콘텐츠

시장 등 시장별 수평적 규제의 적용이 우선적인 개선안으로 부각되었다. 동시에, 수직적 결합 규제는 최소화 하면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등 개별적·사후적 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 도입 당시의 취지가 현재 상황에서도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이상의 개선방안들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송법」 개정, 「통합 방송법」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첫번째 단계로, 2011년 5~6월 동안 소유·겸영 규제 개선에 대해 방송사업자별 현재 시장 여건, 규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아닌 시장상황에 대한 방송의 특수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보완 사항을 파악하였다.

위원회는 공청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방송사업 소유·겸영규제 개선 최종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중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위원회는 방송분야와 관련된 경쟁 및 규제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는 IPTV를 포함하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SO, 위성방송 등)가 시청자를 모집하는 '가입자 확보 시장'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PP가 자신의 채널을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송채널 거래 시장' ▶외주제작사 등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 ▶방송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방송광고시간을 판매하는 '방송광고 시장' 등 4개의 단위 시장으로 구분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였다.

〈표 IV-68〉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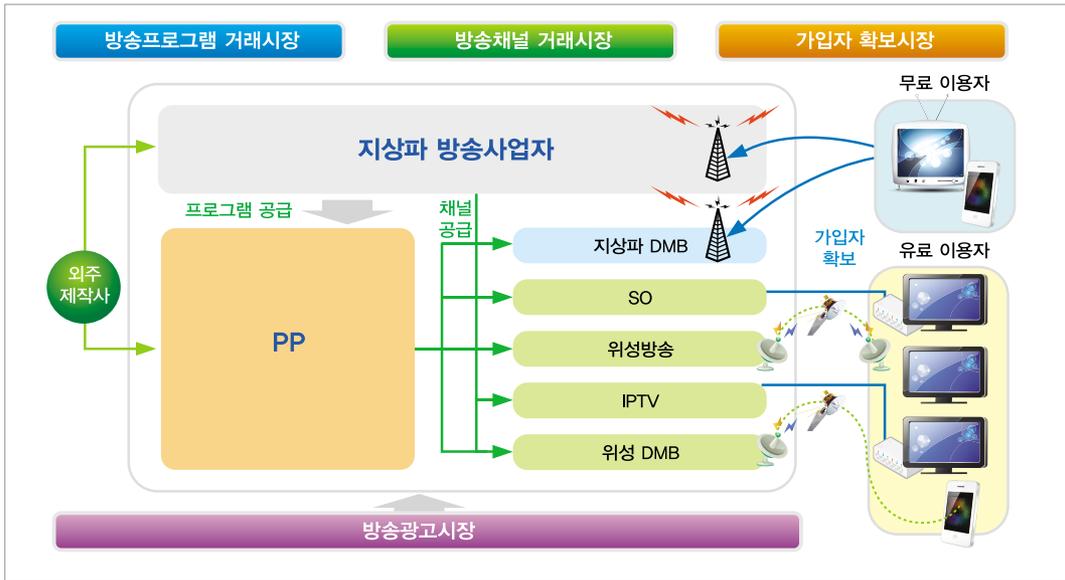
- 200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실시 (2010.5.~2011.2.)
 - ※ 방송 분야 경쟁상황평가 최초 실시
- 200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2011.2.)
- 201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 위원회 보고(2011.5.)
- 201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 방안 위원회 보고(2011.9.)
- 201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실시(2011.10.~12.)
- 201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2012.2.)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유료방송 가입자확보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SO의 가입자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방송구역이 전체 77개 중 66개(2009년 7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성 및 경쟁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 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에서는 공급(지상파 3사)과 수요(유료방송플랫폼) 모두 시장 집중도가 높아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2차 유통시장에서는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지상파방송 3사를 통해 계열 PP에게 공급되는 등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지상파방

〈그림 IV-41〉 방송시장의 기본구조



송 3사의 시장 지배력이 광고시장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12년에 진행될 '2011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주요 경쟁 이슈를 ▶종합편성채널 시장 진입 ▶新유형 방송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영향력 평가 등으로 분석하고 경쟁상황의 평가 시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쟁상황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체계 확립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일간신문 등의 방송사업 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를 함께 도입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해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AGB닐슨을 조사업체로 선정하고, 조사의 신뢰도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조사 대상 패널을 2010년 3,000가구 이상에서 2011

년 3,2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시청점유율의 최소 분석단위를 1분에서 30초로 축소하였다. 향후에는 조사 패널을 총 4,000 가구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다매체·디지털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해 이동매체 시청율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조사회사가 수행하는 시청점유율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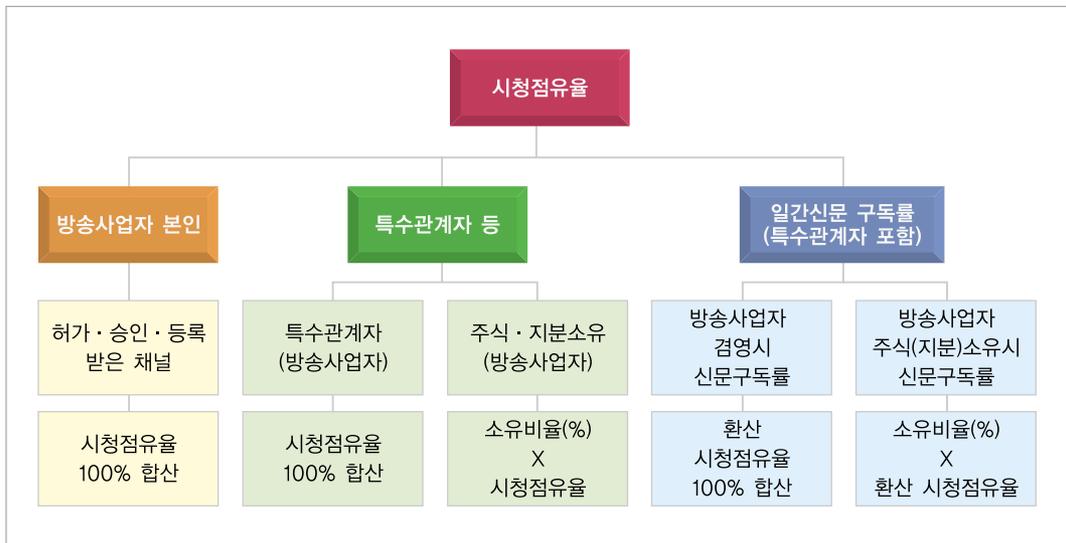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하여 계산한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

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더한다.

위원회는 시청률 전문 조사기관인 TNmS(주)에 위탁하여 실시한 2010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및 (사)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 구독가구 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분석하여 2011년 7월에 201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산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점유율이 36.2%로 나타났으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로서 시청점유율 제한(30%)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사업자 중에는 시청점유율 제한 수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

〈그림 IV-42〉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



한편, 현행 「방송법」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2012년 말까지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TV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시장에서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는 독일과 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는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개발 사례가 없다.

이를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신문·방송 언론계 전문가 및 일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매체속성 및 매체 이용행태 등에 관한 설문 등 실증적 조사를 통해 지수 산출 모형을 검토하였다. 또한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합산 영향력 측정대상 매체 유형의 범위, 매체별 이용점유율 지표 및 매체간 가중치 지표 산출모형 등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지수 개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앞서 2011년 7월에는 독일의 ‘미디어 영역집중조사위원회’(KEK)를 방문하여 독일의 시청점유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시청점유율 제도 및 매체간 합산영향력 지수 개발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협력체제의 기반도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모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지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시청점유율 규제와 합

계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으로서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 합리성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라. 방송 편성 및 평가제도 개선

1) 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편성 규제 정비

2011년 5월과 11월에 한-EU, 한-미 FTA의 비준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 경제도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원회도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어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방송편성에 관한 각종 규제들을 재정비하였다.

우선 한-EU FTA 합의사항에 따라 한-EU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을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미 FTA 합의사항에 따라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일부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하였다. 둘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은 현행 25%에서 20%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현행 35%에서 30%로 각각 완화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표 IV-69〉 한-미 FTA관련 방송법 시행령 및 편성고시 개정 내용

개정 항목	개정이전	개정이후	법령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60%	80%	시행령, 고시
SO·위성·PP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25%	20%	고시
SO·위성·PP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35%	30%	고시

2) 국내제작 및 해외제작 프로그램 인정 기준 정비

위원회는 현행 방송프로그램 편성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및 외국 1개 국가 제작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구별기준을 정비하였다.

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1년 12월 23일 ~ 2012년 1월 11일)를 통해 구체적인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프로그램 중 투자재원

기준으로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를 총점(22점)의 60% 이상(14점) 획득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세부적인 점수 산정은 제작의 전 과정을 기획·연출/연기자·출연자/제작 작업으로 구분하여 기획·연출 9점, 연기자·출연자 5점, 제작 작업 8점을 각각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같은 점수 배정은 기획·연출과 연기자·출연자의 점수 비중을 높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 과정의 주도적 역할 여부에 비중을 두어 국내제작물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이다. 보다 세부적인 분야별 점수산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V-43〉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점수(안)

기획·연출(9점)		연기자·출연자(5점)			제작 작업(8점)				합계 (22점)
기획·제작 (3)	시나리오 (3)	연출 (3)	주연 (3)	조연 (2)	영상 (2)	음향 (2)	미술·CG (2)	편집 (2)	

또한, 복수의 국가가 제작에 참여한 영화 및 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캐릭터

(1점) 등 총 5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인 국가의 제작물로 분류하고, 2개 이상 국가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만일 2개 이상 국적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제작사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을 개선하였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16점(30점 만점) 이상인 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국내에서 100% 투자하고 일부 작업과정을 외국에 하청을 주는 경우 20점

이 적용되어 국내 업체가 불리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전 기획단계의 점수를 상향(10~12점→14점)조정하고,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의 중요성을 감안, 저작권과 수익분배권을 보유한 작품에 한정하여 신청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표 IV-7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점수(안)

구 분	2D		3D		스톱모션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저작권/수익분배권	2	-	2	-	2	-
사전제작	12	14	10	14	10	14
제 작	11	12	13	12	13	12
후반제작	5	4	5	4	6	4

한편, 국내제작 3D 영화의 공급이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3D 전문채널의 영화 편성비율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위원회는 「방송법」상 제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하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방송법」상 새로이 출범한 종합편성PP 사업자에 대한 평가 실시와 2012년 12월 3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 인증방송장비의 국내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하여 방송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송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평가대상은 허가·승인 대상인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홈쇼핑·종합편성 PP이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시 40% 비율로 점수에 반영되고 있다.

2011년 12월 첫 방송을 시작한 종합편성 PP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12년도 방송분부터 방송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새롭게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방송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IV-71〉 종합편성 PP에 대한 방송평가 배점

구분	지상파 TV	종합 PP	보도 PP
내용 영역	300	210	120
편성 영역	300	215	130
운영 영역	300	275	250
계	900	700	500

한편,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앞두고 디지털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배점은 지상파TV는 100점(총점 900점에서 1,000점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50점(총점 500점에서 550점으로)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평가항목을 지상파TV의 경우 2013년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국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큰 수요가 예상되는 방송장비 시장에서 방송장비의 신뢰도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관련 국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행 운영 영역의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 방송기술투자 평가' 항목에 '인증제품 투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배점은 지상파TV 5점, 그 외 매체는 지상파TV의 2/3로 환산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12월 30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되었으며, 2012년도 방송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방송통신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가.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지원

위원회는 2009년 6월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 2010년 12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 구체화된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법·정책 등을 적극 이행하고, 방송콘텐츠 업체들을 위한 안정적 제작기반 구축을 통하여 명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구축 추진, 콘텐츠 제작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방송콘텐츠의 기획·제작·송출·유통 등 가치사슬 전반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 중소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응한 방송콘텐츠의 제작·송출·유통 등의 통합 지원시설로서 차세대 방송콘텐츠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예정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향후 구축된 인프라는 중소·영세 PP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44〉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내 방송인프라 구조도



2011년 1월에는 건설공사와 방송장비 공사 간 연계 강화 및 방송 인프라의 최적화를 위한 '방송인프라(장비) 구축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2월에는 (주)대우건설을 지원센터 턴키 업체로 선정하였으며, 3월에는 우선 시공(Fast Track)분 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7월에는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입찰공고를 냈으며, 9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1~12월에는 건설공사 실시 설계 적격심의 및 본공사 계약을 추진하였다.

둘째,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명품 다큐 및 양방향 콘텐츠, 3D 콘텐츠, 공공·공익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

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단막극 지원을 통해 실험적인 드라마 제작 유도 및 신인 작가, 배우, 연출자 등 신규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3D, 양방향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및 콘텐츠 대외 경쟁력을 높였다.

단막극 제작지원을 통해 신인배우 8명, 신인작가 9명, 연출 데뷔 PD 12명 등 신규인력을 양성하였으며, 'KBS 화평공주 체중감량사'는 시청률 8%대를 달성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MBC 심야병동의 경우 미드형식의 '시추에이션 드라마'라는 새로운 단막극 형식을 시도하여 타 채널에 유통시키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기여하였다. 방통융합 콘텐츠인 양방향 콘텐츠 제작지원의 경우 프로야구 양방향 중계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800만 명이 시청하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멀티앵글·멀티코멘터리¹⁶⁾ 형식 상용화 등 국내 양방향 콘텐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시청률 경쟁으로 편성에서 소외되기 쉬운 공공·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 확대 및 공적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작여건이 열악한 지역방송사 또는 PP에게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제작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을 지원하고, 특히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 방송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순환의 대동맥 역할과 유통 기능 등을 포함한 통합적·유기적 지원시스템이 되도록 순조로운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방송통신산업 전문인력 육성

위원회는 2011년 1월 현업 방송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 전문교육 강화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신 방송 트렌드에 맞추어 스마트 미디어·3D방송 등 신기술 공

통교육, PD, 방송작가, 방송기자, 방송기술인 등 방송 직군별 맞춤형교육 및 사물지능통신, 스마트TV, 미래이동통신, 4G방송 등 차세대 모바일·미래서비스 분야 전문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 2월에는 자유 경쟁공모를 통해 PD, 방송작가, 방송기자, 방송기술인 등 직종별 맞춤형교육 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맞춤형교육 수행기관의 경우 PD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PD교육원, 방송작가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기자는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은 방송협회, 한국케이블기술인연합회가 선정되어 각 방송직군별로 현업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업 방송인을 대상으로 콘텐츠 기획·마케팅, 3D 입체영상 제작, 스마트TV 포스트 프로덕션 분야 등 방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공통교육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현업 방송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기술 공통교육과 직군별 특성화 전문교육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차세대 모바일분야와 미래 성장동력인 융합기술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수준 높은 방송통신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2011년까지 2,425명의 방송콘텐츠 제작인력을 양성하여 목표치인 2,110명의 115%를 달성하였다. 또한 사물지능통신, 스마트TV, 미

16) 멀티코멘터리 : 양 팀을 각기 편파적으로 응원하는 해설 방송을 선택하여 시청가능 형태의 서비스

레이동통신, 4G방송 등 미래서비스 분야에서
의 고급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및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제공하였
다. 이를 통해 1,160명의 융합방송통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목표치인 950명의 122%를
달성한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전략적으
로 대응하고 학문적인 이론 연구가 필요한 정
책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방송통신 산업 발전
을 선도하고 융합형 방송통신 서비스 모델 발
굴 및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융합방송통신 전문인력 양
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전파, 방송, 융
합 분야 5개 대학원(이화여대, 성균관대, 연세
대, 서울대, 한양대)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CPRC)의 석·박사급을 지원함으로써 고급
인력 양성에 기여하였다. 지원 결과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구 및 해외연구기관과 유기
적인 협력을 통하여 기술, 경제, 정책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방송통신 산
업의 효율적인 전략수립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72〉 2011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CPRC) 운영 지원 현황

주관대학	연구센터명 (연구내용)	세 부 과 제	참여학생 (대학원생)	지원 기간	지원 규모(억원)
연세대	방통융합과 주파수공학 정책연구센터 (주파수 공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융합 시장활성화 및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 방안 연구 • 컨버전스 시대의 효율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 • 방통융합 환경에서 주파수 활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 	17명	2009~ 2012	3.8
성균관대	시장중심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센터 (방통융합정책 : IP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PTV를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 모바일PTV 비즈니스 모델 연구 • 모바일TV 등 미래 차세대 융합서비스 기술 발전체계 연구 • 모바일PTV 활성화를 위한 실증 연구조사 	16명	2009~ 2012	3.8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정책 연구센터 (미디어분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산업 구조 재편 방안 •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공정경쟁 규제 체계 개선 방안 •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15명	2009~ 2012	3.8
서울대	스마트미디어 융합정책 연구센터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 스마트미디어 환경의 산업 생태계 동력 강화 연구 • 스마트미디어 시장 선진화 정책 및 규제 연구 • 스마트미디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연구 	23명	2011~ 2014	3.8
한양대	클라우드서비스 정책연구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구축 및 시장 활성화 정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 기술 연구 • 클라우드 기반의 융합서비스 기술 연구 •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구조 및 비즈니스 연구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촉진 및 활성화 정책 연구 	17명	2011~ 2014	3.8

다. 방송통신 콘텐츠의 시장활력 제고

위원회는 민간의 콘텐츠 분야 투자유도, 콘텐츠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콘텐츠 시장활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특히 국내외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방송통신 콘텐츠의 시장활력 제고를 위해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DDS)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PP 등 영세한 방송콘텐츠사업자의 방송 콘텐츠를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홍보, 유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1년의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은 글로벌 플랫폼 구축, 저장장치 증설, 홍보 및 마케팅 강화이며, (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해외진출에 필요한 영문 사이트를 업데이트하여 개발하였고, 해외사업자들의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UI(User Interface)를 개선하였으며, 디지털 영상 콘텐츠 증가로 인해 저장장치인 스트로지의 용량을 증설하였다.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내의 각종 회의체 및 협의체를 통해 DDS 활용방안을 홍보하고, 회원사 직접 방문 교육을 추진하였다. SO, PP 콘텐츠 제작·구매, 기술 관련 실무

책임자로 DDS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콘텐츠 공급 지원·정보 공유, 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PP 등 영세 방송콘텐츠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콘텐츠를 보존, 유통할 수 있는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방송콘텐츠 영상 자료 및 원천 소스를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콘텐츠 제작비 절감 및 방송사업자의 부가수익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한 방송통신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위해 '신한류 확산을 위한 방송통신 선도국가 이미지 제고', '방송콘텐츠 해외 유통 지원',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모바일·방송 콘텐츠에 대한 전문 투자펀드 운영과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계 지원을 모색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정보, 편성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프로그램 정보 활용·유통 기술 표준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류의 글로벌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방송콘텐츠 수출 확대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내 앱스토어와 WAC 연동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WAC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이동통신사의 스토어에서도 콘텐츠를 판매하도록 연동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라. 외주제작사 역량강화를 위한 방송제도 개선

그동안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이 외주제작 시장의 규모는 확대하였지만, 이와 같은 편성 비율의 확대만으로는 제작시장의 활성화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는 외주제작 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요소 투입 정도를 감안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작역량을 갖춘 외주제작사가 육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입법예고된 기준에 따르면 ①작가 계약체결 ②주요 출연자 계약 체결 ③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 ④제작비의 30%이상 조달 ⑤제작비 집행 및 관리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경우에만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교양분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주 시청 시간대 편성을 유도하고 非드라마 분야 외주제작사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주제작 산정기준을 일부 정비하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편성시간의 110%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협의체 구성 및 촬영 원본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영세한 非드라마 제작사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활성화를 촉진하

였다. 또한 방송3사와 드라마제작사가 합의한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으로 출연료 미지급을 방지하여 외주제작 참여자를 보호하였다.

넷째,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협찬을 허용하여 방송사의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의 경쟁을 통한 제작활성화 및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다만, 서울 권역 지상파 방송 3사 제작협찬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으로 제한하여 중소 외주제작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3. 광고시장 확대로 미디어산업 견인

가.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및 효율성 제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도록 한 「방송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09년 12월까지 개선토록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위해 7개 관련 법안의 심의 등 국회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전문가 연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판매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입법 이전 공백기에 방송광고 판매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광고 거

래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고, 방송광고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어 왔다. 특히, 2011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SBS가 광고판매의 독자영업을 선언함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로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한해 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44회에 걸쳐 설명하

고 법안소위 심사(9회)를 지원하는 등 국회 입법 작업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1년 12월 27일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간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11년 12월 31일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하여 2012년 1월 1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고, 이어 2012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2012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표 IV-73〉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도입 추진경과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 「방송법」 제73조의 KOBACO 지상파광고 독점규정에 대해 2009.12.31까지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선고
2009년 5월~2011년 6월	7개 법안 발의 및 방통위 의견 제출(2009.12.10.)
2009년 12월	방통위, 지상파방송광고 거래에 대한 권고
2010년 1월	방통위, 지상파방송광고거래지원센터 운영
2009년 12월~ 2011년 12월	공청회, 법안소위 등을 통해 주요쟁점 조율 ※ MBC 공영웹 위탁지정 여부, 종편의 웹 의무위탁 여부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입법 지연
2012년 1월 1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방위 법안소위 의결
2012년 1월 5일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
2012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2012년 2월 22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광고 독점체제가 본격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자율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제정 법률은 민영 미디어렐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허용한 것 이외에도, 방송 시장내 크로스 미디어 광고판매의 허

용, 방송광고 수수료의 탄력성 확대 등 기존의 경직적인 방송광고 판매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방송광고시장은 다양한 광고 기법 및 광고상품을 만들어지고, 미디어렐의 적극적인 영업과 탄력적인 판매방식 등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74〉 지상파광고 판매시장 경쟁도입 전·후 비교

구분	독점체제	경쟁체제
판매주체	• KOBACO	• 공영립, 민영립 경쟁
판매대상	• 지상파 광고 판매로 한정	• 지상파 이외 유료, IPTV 광고 판매
광고요금	• 시급별 고정요금제 기반 - 요금 탄력성 부분적 가미	• 시청률, 시장수급에 기반한 광고요금 및 광고탄력성 확대
영업방식	• 독점체제로 인한 수동적·경직적	• 경쟁도입으로 능동적·유연적
수수료	• 경직적인 방송광고 수수료 - 수탁수수료 14%, 대행수수료 11%	• 수수료 탄력성 확대 - 수탁수수료 20% 이하 - 대행수수료는 수탁수수료의 70% 이상

위원회는 제정 법률의 시행 시점(2012년 5월)에 맞춰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전환·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민영립 허가를 실시하여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나. 중소방송 지원방안 마련

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도입시 광고매출의 감소가 우려되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중소방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중소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등을 통해 광고판매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도입시 시장논리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인해

중소방송의 재정적 어려움 및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훼손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중소방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공청회를 2011년 5~6월동안 총 8회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2011년 8월 중소방송 지원 기준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중소방송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미디어랩 허가시 중소방송 지원계획의 적정성 심사 및 허가조건 부과, 중소방송 광고 결합판매에 대한 미디어랩 의무부과 등으로, 관련 지원방향은 2012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년 2월 22일 제정)의 내용을 기초로 향후 결합판매 할당 고시 제정 등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표 IV-75〉 미디어법 입법에 따른 중소방송 지원방향

- ① 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전파료는 미디어법 허가요건·조건으로 지원
- ②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
- ③ 네트워크 지역방송사의 자체광고 판매 지원
- ④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부담 완화 추진, 방송사에 제작 협찬 허용(2011년 8월), 중소방송에 기금 감면 검토 등

다. 방송광고(금지품목) 규제 개선

위원회는 생수(먹는 샘물)의 지상파 TV광고 금지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다. 특히, 생수의 경우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17년 이상 지상파TV에서 광고가 금지된 품목이다. 위원회는 생수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2011년 9월에 환경부에 제출하여 규제 개선 협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12월, 환경부는 생수의 지상파 TV광고를 금지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먹는 샘물의 방송광고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생수의 케이블TV 광고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50억 원 규모로, 향후 생수의 지상파 TV광고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일반 생수 이외에도 프리미엄 생수 등 다양한 생수 상품이 지상파 TV에서 광고를 실시하여 방송광고시장의 전반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라. 스마트광고 기반 조성

위원회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방송통신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광고산업 육성을 통한 미디어산업 및 내수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광고 기반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1년 상반기에 ‘스마트 미디어 시대 광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9월에는 ‘광고시장 활성화 및 스마트시대 광고산업 육성전략 컨퍼런스’를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스마트 미디어 시대 광고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2011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스마트광고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표준화, 기술개발, 디지털광고 제작시설·인력양성 등을 담은 스마트광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현재 2015년까지의 광고시장 전망과 함께 스마트광고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마. 인터넷광고시장의 활성화 기반 조성

1) **신유형의 인터넷·모바일광고 육성 지원**

위원회는 차세대 인터넷·모바일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적극적인 발굴·육성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해 2011년 10월 ‘인터넷·모바일광고 테스트패널’을 구축하여 애드앤티, 바우스 커뮤니케이션 등 총 5개 이용신청업체에게 新

유형 광고모델에 대한 시범서비스 및 효과측정 등 필드테스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모바일광고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모바일광고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10월 '모바일광고 플랫폼(MAdP: Mobile Advertising Platform) 인증'을 도입하였으며, 12월 메조미디어의 'MMAN(엠멘)'과 디엔에이소프트의 '리얼클릭' 등 2개 플랫폼을 최초로 인증하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5개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3개의 업체는 심사 중에 있다.

모바일광고 플랫폼은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환경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데이터 분석부터 타겟팅, 효과분석, 리포팅까지 제공하는 통합 광고시스템으로, 모바일광고의 원활한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모바일광고 플랫폼 인증은 광고주 및 이용자에 대한 모바일광고의 신뢰도 향상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플랫폼의 기능적 안정성·운용의 투명성·이용자 보호의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에 대해 부여된다.

〈그림 IV-45〉 모바일광고 플랫폼(MAdP) 인증 기준



2) 인터넷·모바일광고 유통구조 및 이용 환경 선진화

위원회는 인터넷·모바일광고 기업들의 상생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모바일광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스마트 애드&앱 Networking Day'를 2011년 각 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2011년 10월 실무자를 위한 법제도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

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을 제작·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인터넷광고 공통적용 법률 ▶인터넷광고 품목별 법률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인터넷광고심의세칙 등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또한 2011년 11월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광고 정보제공 웹서비스'를 구축하여 유관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04시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디지털 TV 방송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시청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가.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1) 디지털 방송 송신환경 구축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가 송신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점

검, 독려함으로써 2011년말 기준으로 기간방송국은 100%, 방송보조국은 80.3%, HD 제작·송출 시설은 87.0%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 특히,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시 방송보조국을 2012년 6월까지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디지털 전환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상파방송사들의 HD프로그램 제작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지역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지상파방송사가 HD 편성비율을 85% 이상으로 높였다.

케이블TV의 경우 94개 SO의 제작송출시설 등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전송망 시설의 95.7%를 디지털로 전환 완료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말까지 전송망시설의 96.6%를 디지털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표 IV-76〉 연도별 디지털 전환 실적(2009~2011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	목표
기간방송국(64국)	100%	100%	100%	-
방송보조국(1,127국)	20.2%	39.2%	80.3%	68.1%
제작·송출시설(1,941개)	51.5%	70.5%	87.0%	80.8%

2)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

위원회와 KBS는 디지털TV 방송보조국 구축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도서·산간, 농어촌지역의 자연적 난시청 및 도심의 고층건물 등에 의한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해 소출력

중계기를 구축(30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와 KBS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소출력 중계기 구축 사업에 모든 지상파방송사가 참여하기로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출력중계기 구축을 통한 난시청 해소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와 KBS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아날로그TV 마을공시청 설비를 디지털 설비로 교체(83개소)하고, 신규 디지털 난시청 해소를 위해 디지털 마을공시청 설비를 신설(21개소)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디지털 방송 시청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S가 설립한 '디지털시청 100%재단¹⁷⁾' 과 스카이라이프(Skylife)는 도서, 산간 등 절대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위성수신기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 시청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와 디지털시청100%재단, 스카이라이프(Skylife)는 아날로그 TV방송 수신은 양

호하였으나 지형 또는 기술적 특성에 의해 디지털 TV방송이 수신 되지 않는 신규 디지털 난시청 가구에게 위성수신기를 무상 임대(2014년 말까지)하기로 합의,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규 디지털 난시청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난시청 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382개 유인도서 약 6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TV시청행태, 송수신환경 등 '도서지역 TV시청환경조사'를 실시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송수신환경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난시청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IV-77〉 난시청 해소 사업 실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	목표
마을공시청설비 개선(개소)	-	158	104	100
소출력중계기 구축(개소)	-	14	30	30
위성수신기 보급(가구)	57,510	5,410	20,415	20,000

주 : 2009년도까지는 누적현황, 2010년, 2011년도는 해당연도 현황임

3)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위원회는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공시청설비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전국 150세대 이상 약 1만 3천개 아파트 단지의 공

시청설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¹⁸⁾를 반영하여 공시청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청설비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지원 내용 및 공시청설비 점검·보수 관련 법제도 등도 전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있다.

17) KBS는 산간·벽지 등 절대 자연적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수신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시청 100%재단'을 설립(2010.12.14)

18) 150세대 이상 12,597단지의 공시청설비 전수조사를 실시, 디지털 전환 완료 단지 43.9%(5,536단지), 아날로그 공시청 설비 보유 단지 18.7%(2,349단지), 훼손 및 케이블 TV 단체계약 시청 단지 37.4%(4,712단지)로 조사됨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위원회와 LH공사, SH공사 공동으로 아날로그 공시청설비를 디지털로 개선하여 입주자들이 디지털 TV방송을 깨끗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정부지원을 본격화하여 SH공사와 경기도개발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시청설비를 디지털로 완전 전환하였고, 2012년에는 LH공사 잔존 아파트와 지역개발공사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시청설비를 상반기 중에 디지털로 전환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영아파트의 공시청설비 개선은 KBS와 건축주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디지털시청 100%재단'도 민영아파트 공시청설비 개선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민영아파트 공시청설비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의 공시청설비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청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78〉 수신환경 개선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	목표
공공임대아파트(단지)	188	61	256	62
민영아파트(단지)	665	218	288	200

주 : 2009년도까지는 누적현황, 2010년, 2011년도는 해당연도 현황임

4)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실시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에 이어 제주도의 아날로그 TV방송이 2011년 6월 29일에 종료되었다. 제주도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아날로그TV방송이 종료된 것으로 위원회는 제주도에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위원회는 저소득층이 보급형 디지털 TV를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보조(10만원)하거나 디지털 컨버터를 무료로 제공하였

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기술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컨버터 설치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제주도민을 상대로 자막고지방송을 1,291회, 가상종료를 170회 실시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이전 전체 제주도 가구의 1.3%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미전환 가구들도 후속조치기간에 정부지원을 통하여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

〈표 IV-79〉 지역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결과

구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	
종료일	2010년 9월	2010년 10월	2010년 11월	2011년 6월	
전체가구수	23,109	18,414	14,709	217,711	
정부지원가구수	1,213(5.2%)	1,271(6.9%)	534(3.6%)	21,770(9.9%)	
타겟	자막고지방송	116	50	36	1,291
홍보	가상종료	16	6	2	170

나. 시청자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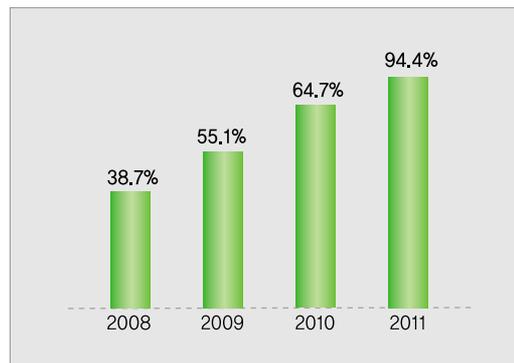
1) 대국민 홍보 강화로 인지율 및 보급률¹⁹⁾ 제고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90.8%,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은 94.4%(잠정)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목표인 인지율 87%,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8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서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다양한 기법의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였다.

위원회는 인지율 및 보급률 상승을 위해 TV 광고, 신문광고, 포스터·리플릿, 버스 음성광고, 반상회보 게재, 명절(설·추석) 귀성객 대상 가두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대국민 홍보에 진력하였다. 또한 정보접근 취약지역인 농·어촌 대상 홍보를 강화하

기 위해 체험차량 2대를 활용, 지역장터 및 노인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체험·상담·교육)를 총 344회(연인원 117,076명 참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 대상 자막고지방송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자막고지방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IV-46〉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추이



19) 아날로그 TV방송 이상의 화질이나 동등한 화질로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한 가구의 비율

〈그림 IV-47〉 디지털 전환 TV광고 화면 (2011년 11월 27일 ~ 12월 29일)



〈그림 IV-48〉 추석맞이 디지털 전환 가두 캠페인 (2011년 9월 9일)



〈표 IV-80〉 2011년 디지털 전환 대국민 홍보 개요

구 분	추진 현황
TV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246회(유료) · 지상파4사 144회 · 지역방송사 1,102회 ※ 이외 지상파방송사별 자체 무료 편성
신문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지, 무가지 등 8개 매체 16회(5.2~5.24)
인쇄물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3.4만부) · 리플릿(2.7만부) 배포 • 설 · 추석 가두 캠페인(2.1, 9.9)
미디어 연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너머 남촌에는(4.20, KBS) · 전국노래자랑(4.24, KBS) • SBS 생방송투데이(12.6, 12.16, 12.23)
대중교통 안내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21개 정류소(5.25~6.24, 1일 42,064회) • 서울 · 경기 28개 정류소(9.25~10.24, 1일 33,504회)
인터넷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브랜드 검색, 오버추어 광고 등)
체험차량 활용 찾아가는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장 등 344개 장소에서 117,076명 대상 홍보
농 · 어촌 마을버스 외벽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376대(691개 노선)
참여와 협력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상회보 의뢰(매월) · 가정통신문 발송(2.24, 9.30) • 수도권 '노인돌보미' 대상 교육(9~10월, 700명) • 농민신문 광고게재 3회(5.13, 5.25, 9.7) • 정부 전광판 광고(6월~11월) · TBS 라디오 음성광고 및 TV공익 광고(8월~)

2)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

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²⁰⁾, TV수신료를 면제받는 가구(국가유공자 및 시청각장애인 가구 등) 중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였다.

이에 전국 15개 광역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신청 접수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홍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에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17개를 구축(2012년 1월 기준)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상담, 정부지원 내용 안내, 기타 각종 민원응대를 위해 디지털방송콜센터

를 운영하고 상담인력을 86명으로 확충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 서울부터 시작하여 저소득층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컨버터를 무상제공하거나 DTV 구매보조금(10만원)을 지원하고, 안테나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8월에는 인천, 경기, 1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2012년 1월 12일을 기준으로 91,040가구가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34,403가구에 지원을 완료하였다.

〈그림 IV-49〉 취약계층 지원대상 디지털 수상기 전달 모습



〈표 IV-81〉 저소득층 지원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신청 접수			지원 완료		
	계	컨버터	DTV	계	컨버터	DTV
서울	23,114	4,774	18,340	13,983	2,128	11,855
경기	15,993	4,578	11,415	8,111	1,874	6,237
인천	4,104	1,281	2,823	1,931	438	1,493
수도권외	35,805	16,678	19,127	7,350	3,208	4,142
계	91,040*	10,633	32,578	34,403	7,648	26,755**

* 우편접수 12,024건 포함

** DTV 지원완료 후 시스템 미입력 3,028건 포함

20)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는자

다. 디지털라디오 도입

방송의 디지털화가 시작되면서 국내 지상파 텔레비전은 2012년 이후 완전 디지털로 전환될 예정이며, 케이블·위성 등의 다양한 매체가 디지털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 논의는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되어 2001년 DAB 방식으로 표준을 정했으나, 2004년 DAB 기반의 DMB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백지화 되었다. 이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방송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 라디오 추진 준비반(이하 추진 준비반)'이 운영되었으며, 추진 준비반에서는 방송방식 간 비교실험방송을 통해 국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라디오 방송 기술 표준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위원회의 지원으로 FM 라디오 서비스를 위해 국제 표준 기술인 DAB, DAB+, T-DMB Audio, HD Radio, DRM+를 중심으로 실험 및 필드테스트를 실시하여 각 기술의 특징 및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에 산·학·연·방송사 등 관계 전문가로 '디지털라디오 도입 추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방식별 기

술·서비스·경제성 등 장·단점 비교분석 및 디지털라디오 도입추진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향후 그 간의 논의를 종합해 디지털라디오 도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내방송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라디오 방송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표 IV-82〉 국내 디지털라디오 추진 연혁

1997년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출범
2001년	'디지털라디오추진위원회', '디지털AM정책 연구반' 설립
2004년	'라디오방송 디지털 전환정책연구반'
2008년	'디지털라디오 추진 준비위원회' 출범
2009년	디지털라디오 비교실험방송 실시 (실험실테스트)
2010년	디지털라디오 비교실험방송 실시 (필드테스트)
2011년	디지털라디오 방송방식별 기술·서비스·경제성 등 장·단점 분석 및 설명회 개최
2012년	디지털라디오 방송방식 선정 (예정)

현재 FM 라디오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라디오 방식으로는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DAB 계열(DAB, DAB+, T-DMB Audio), DRM+의 방식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HD Radio 방식, 그리고 일본에서 서비스가 예정되는 ISDB-Tsb 방식이 있다.

〈표 IV-83〉 국내에서 검토되는 디지털라디오 전송 방식과 특징

구분	주파수 사용	특징
DAB DAB+ T-DMB Au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유럽 방송통신 표준 기관인 ETSI의 표준 •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 VHF Band-III 대역을 사용하고 6MHz 대역폭을 3개 블록으로 구분하며, 블록(1.536MHz)당 다수의 오디오 및 데이터 프로그램을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식
HD 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2002년 미국 FCC에서 최종 승인 • 미국의 독자 개발 기술로 현재 미국 디지털라디오 방송 표준 • 아날로그 FM 라디오 대역의 최우 73~96kHz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올 디지털 방식이 있음
D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ETSI 승인 •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 • 30MHz~174MHz 대역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한 방식으로, 기존 FM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음 • 표준 채택한 국가가 없음

〈표 IV-84〉 디지털라디오 주파수 대역

밴드	주파수	디지털 시스템
LW, MW, SW	< 300 MHz	DRM
Band I	47~68 MHz	DRM+
Band II	87.5~108 MHz	HD-Radio, DRM+
Band III	174~230MHz(230~240MHz)	DAB, DMB DVB-T
Band IV/V	470~860MHz	DVB-T/H
Band L	1,452~1,492MHz	DAB, DMB Satellite Radio

라. 방송장비 산업 육성

세계 방송장비 시장 규모는 약 630억 달러 수준으로 업계 특성상 세분화·전문화되어 각 분야별 소수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다. 국내 방송장비 시장은 약 1.6조원 규모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방송통신 융합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하고 있으나, 2011년 지상파 국산장비 신규투자율은 31.8%로 아직까지도 외산의 비중이 높은 실태다. 국산 방송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전략적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시험인증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인증제 등 국산 방송장비 제조사의 품질 향상 유도 또한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국산 방송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²¹⁾에서 신규 인증대상 규격을 개발하고 시험인증서비스를 제

21) 2010년 11월 15일, 위원회는 방송장비 국산개발 활성화 지원, 방송장비의 표준규격 및 시험기술 개발, 방송장비 시험인증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를 개소하였다. 본 센터는 전체 센터운영 및 인증 대상 방송장비를 선정하는 ‘기술협의회’, 시험규격을 개발하는 ‘시험규격개발위원회’, 인증 여부를 심사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하였다. 또한,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시험연구원 자격을 획득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방송장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외 방송장비 전시회에 인증제품을 전시하는 등 국내 방송장비에 대한 홍보 활동도 수행하였다.

1) 방송장비 인증대상 선정 및 규격개발 확대

위원회는 2010년부터 매년 국내 방송장비 수요 및 제조사 현황을 감안해 인증대상 방송장비를 추가 선정하고, 선정된 방송장비별로 시험규격을 개발해오고 있다. 2011년은 2차년도로 3D 입체 모니터, A/V라우터, MPEG-2 인코더, DMB 중계기, DTV 소출력 중계기, 광전송장치 등 총 6종의 추가 인증대상 선정 및 규격 개발이 이루어졌다.²²⁾

〈표 IV-85〉 인증대상 방송장비 선정 및 시험인증 규격개발 실적

구분	2010년(9종)	2011년(6종)
인증대상 방송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용 비디오 모니터 • 그래픽 문자발생기 • 비디오 서버 • 디지털 방송장비(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신기, 중계기, 변조기, 수신기 • H.264 인코더 • DMB 데이터 인코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입체모니터 • MPEG-2 인코더 • DMB 중계기 • DTV 소출력 중계기 • A/V 라우터 • 광전송장치

2) 방송장비 인증을 위한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위원회는 인증대상 방송장비별로 시험인증 시설을 구축하고, 개발된 규격을 기반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시험인증 서비스 대상 방송기기는 2011년 기준 방송용 비디

오 모니터, 변조기, 중계기 등 15종으로 총 74종의 테스트 장비를 구축, 전문적인 시험인증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였다. 2011년 11월 기준 총 167개 방송장비 시험 항목에 대해 70건의 시험인증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7개 업체에 인증서가 수여되었다.

22) 인증 대상 선정은 방송사, 제조사, 학계, 위원회, TTA 등의 각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기술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선정된 각 방송장비별로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험규격개발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논의를 통하여 시험규격을 개발하였다.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시험규격을 승인하고, 인증시험 결과 검토 및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하였다.

〈표 IV-86〉 방송장비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실적

년도	시험분야	시험항목	시험환경구축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실적
2011	6종	16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보유장비 49종 • 신규구입장비 2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인증서비스 70건 • 인증서수여 7건 : 진명통신(중계기, 변조기), 답스(변조기), 씨에스(변조기), 컴픽스(그래픽 문자 발생기), 오픈스택(H.264인코더), TV로직(방송용 비디오 모니터)

3) 방송장비 수요자 - 생산자 연계 강화

위원회는 공개적인 전시 기회가 없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장비업체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요자-생산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방송장비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를 통해 국내 인증을 획득한 우수한 국내 방송장비를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토록 함으로써 국내 방송장비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각각 국내와 세계 최대의 방송장비 분야 전시회인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 Equipment Show; KOBA, 2011년 6

월 14일부터 17일까지)’와 ‘국제방송박람회(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IBC, 2011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에서 인증 받은 국내 방송장비를 전시함으로써, 국내 인증 기기의 활발한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국내 인증 제품이 해외에서도 신뢰성 있는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방송장비 생산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장비 수요처의 올바른 제품 선택 및 구매 확산을 도모하고자 방송장비 온라인 유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제품별 주요 기능,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국내외 납품실적, 구매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IV-50〉 방송장비 인증제품 전시홍보 사례



향후 위원회는 방송사 수요 장비뿐만 아니라 전파방송, 스피커, 앰프 등 전체 방송장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방송사 수요 장비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디지털 방송장비, 전파관리시스템 등 개발도상국 수요가 높은 전파방송 장비 전반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5. 고품격 청정 공영방송 구현

가. 공영방송의 재원기반 선진화 및 공적 기능 제고

2011년 중 위원회는 1981년 이후 동결되어 온 수신료의 현실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재정기반을 선진화하고 KBS의 공적책임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0년 연말 KBS에서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여 승인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011년 2월 22일 국회에 제출, 국회 승인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신료 면제신청 절차 개선, 선

납 절차 규정 명시 등 수신료 관련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각종 민원 제기사항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KBS로 하여금 수신료 인상분의 사용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확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광고 축소, 추가적인 자구노력 시행 및 채널별 회계분리 실시 방안 등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영방송 재정기반의 선진화 노력 외에도 위원회는 모든 주민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기간방송인 KBS를 통해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1년 말에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는 농어촌 산간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위성수신기 보급 목표를 2010년 대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스카이라이프, KBS와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난시청 해소용 위성수신기 보급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계층들의 디지털 방송 시청권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모든 국민이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표 IV-87〉 난시청 해소 지원 추진 실적

세부 성과지표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2011년 실적
위성수신기 지원	8,104 가구	5,410 가구	20,415 가구
민영공동주택 지원	130 단지	218 단지	288 단지
단독/다세대 주택 지원	-	241 건	1,963 건

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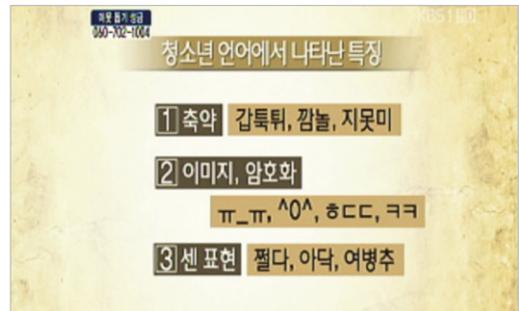
1) 언어순화 캠페인 추진

방송매체가 시청률 제고를 위해 흥미 위주의 비속어, 욕설 등을 여과없이 내보내면서 시청자의 올바른 언어사용 및 어린이·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방송의 품격 제고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먼저, 청소년 언어 순화 등 유익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와 협조하여 공익광고 ‘가족의 가치’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광고는 2011년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상파 4사와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방송되었다.

또한, 방송언어 순화와 관련하여 가정의 달(5월)과 한글주간(10월 9~15일)에 지상파 3사 등과 협력하여 자막고지 홍보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언어 특집 프로그램 ‘알쏭달쏭 청소년 회색언어’도 편성하여 2011년 12월 24일에 방영하였다.

〈그림 IV-51〉 청소년 언어 특집 프로그램 자료 화면



2) 바른 방송언어상의 신설

위원회는 바른 언어를 구사하는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바른 방송언어상’을 특별상 부분에 신설하였다. 신설된 ‘바른 방송언어상’의 초대 수상팀은 SBS 아나운서팀으로 결정되었다. SBS 아나운서팀은 국립국어원과 공

동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방송언어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었다. SBS 아나운서팀은 그간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들의 바른 언어 사용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3) 방송언어 순화교육 확대

위원회는 방송관계자의 방송언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방송PD, 방송작가 등을 대

상으로 방송언어 순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지난 2010년에는 총 855명을 교육하였으며, 2011년에는 1,220명으로 교육인원이 늘어났다.

〈표 IV-88〉 연도별 작가, PD 등 교육현황

연도	현업 방송인			PD			방송작가		방송기자	성우, 애니온서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10	2011	2011	2011
교육과정	7	22	20	13	7	13	4	2	5	1
목표인원	420	400	480	240	200	200	80	140	150	-
교육인원	663	556	546	296	219	296	80	140	216	22
수행기관	KCA	RAPA		한국PD교육원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기자연합회	RAPA

4)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 활성화 추진

위원회는 방송사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저품격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방송언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능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사 사장단 간담회(3회), 지상파방송 편성·심의책임자 회의(11회) 등을 개최하여 방송사가 스스로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방송심의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2월), 케이블TV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12월) 등을 통해 방송사가 방송제작 단계부터 방송제작자가 스스로 사용언어를 정화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게하는 지침을 마련해 방송사의 자율심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5) 막말·저품격 드라마 등에 대한 사후심의 강화

위원회는 사전 예방책 외에도 저품격 프로그램들의 방송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심의를 실시하고,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사후 제재조치도 강화하였다.

강화된 심의에 따라, 2010년 675건이었던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를 2011년에는 808건을 적발하였으며, 2010년 218건이었던 법정제재는 2011년 404건을 부과하였다. 특히, 2010년 1월 2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11년부터 막말, 저품격 드라마 등 중한 심의규정 위반사례의 경우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2010년 전무했던 과징금 부과가 2011년에는 12건으로 늘어나는 등 사후심의를 처벌 강도도 더욱 강화했다.

〈표 IV-89〉 연도별 방송심의 제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과징금	-	-	-	12
법정	사과·중지·징계	38	42	38	106
제재	주의·경고	195	346	180	286
	소계	233	388	218	404
행정	권고	197	413	253	297
지도	의견제시	26	156	204	107
	소계	223	569	457	404
	합계	456	957	675	808

〈표 IV-90〉 막말, 저품격 방송 관련 법정 제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막말	소 계	17(7.3%)	29(7.5%)	30(13.8%)	59(14.6%)
(방송언어)*	과징금·사과·중지	6	4	7	20
	주의·경고	11	25	23	39
저품격드라마	소 계	1(0.4%)	4(1.0%)	13(6.0%)	25(6.2%)
(선정·폭력)**	사과·중지·징계	-	1	1	2
	주의·경고	1	3	12	23
	전체 제재 건수	233	388	218	404

* 방송언어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및 제52조(외국어 등) 위반

** 저품격드라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5조(성표현), 제36조(폭력묘사), 제37조(충격·혐오감), 제38조(범죄 및 악물묘사) 위반

제4절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1. 통신서비스 요금부담 완화

가. 통신시장 요금경쟁 촉발

위원회는 2011년 4월 4일 구성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전담반’ 운영을 통해 2011년 5월 16일에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서비스 개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담반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단말수급 방안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간 설비연동 ▶설비설치비용에 대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부담방안 등 사업자간 주요 협상 이슈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단말수급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초기에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 2012년 6월까지 SKT가 재고 단말을 지원토록 하였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간 자율협상 대상이었으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 Multimedia Message Service) 등 통화와 관련된 15종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합의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제출한 설비구축 일정에 따라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IV-91〉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관련 주요 합의 내용

구분	합의내용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단말수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6월까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재고단말을 지원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매달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에게 재고단말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공개 • 재고단말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와 제조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가 적극 중재
통화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등 통화관련 부가서비스 15종을 제공하기로 합의 •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독자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가 적극 협조
설비설치일정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HLR, UCMS(USIM Card Management System) 등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구축해야 하는 설비에 대해 표준규격을 공개 •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는 표준규격이 공개된 설비에 대해 2011년 말까지 투자·구축 • 선불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지원
설비의 설치비용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사업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 말까지 설비설치 비용을 유예

위원회는 2011년 5월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011년 7월 20일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위원회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제도마련을 위해 추진한 법령 개정, 고시 제정 등의 여러 조치에 이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확립되었다.

〈표 IV-92〉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제도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1.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행(2010. 9. 2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2010. 10. 1.)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 2010-42호)」 제정(2010. 11. 15.)
3. SKT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수리(2011. 3. 9.)
4.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2011. 5. 16.)
5.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의결(2011. 7. 20.)

가이드라인은 ① 다량구매할인을 ②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③ 자가소비 ④ 재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다량구매할인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시장진입, 의무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이동통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 20만 명 이상시 1%~가입자 120만 명 이상시 6%로 추가 할인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31~47%)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도매제공 고시에 따라 기준할인율은 의무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②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물지능통신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전체 가입자 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도입 편익이 일반 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사업초기 1년간은 자가소비 예외를 인정하여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초기 가입자 확보가 원활하도록 하였다.

④ 재제공에 대해서는 재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별정4호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재제공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재제공 사업자의 파산 등에 대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와 재제공 사업자 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재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표 IV-93〉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내용
다량구매할인을	가입자 20만 명 이상 1%~가입자 120만 명 이상 6% 추가할인
데이터 전용 MVNO 도매대가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 추가 할인
자가소비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20% 초과 금지(1년간은 적용유예)
재제공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만 재제공 가능, 재제공 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 부과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및 위원회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지원 정책을 통해, 다양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SKT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인 한국케이بل텔레콤(KCT), 아이즈비전 등은 SKT 선불요금 대비 20% 이상 저렴한 요금상품을 출시하였고, 한국케이بل텔레콤(KCT)은 기존 이동통신사 기본료(11,000원) 대비 최대 50% 저렴한 요금상품(기본료 5,500원)을 출시하였다. 또한, KT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인 프리텔레콤은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기본료를 절반이상 할인한 요금상품(기본료 4,500원)을 출시하였다. 데이터 전용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은 저렴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자영업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한국정보통신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저렴하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유선망이 취약하던 재래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나. 통신요금 부담 경감

위원회는 서민생활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이후 가입비 인하, 초당 과금 시행 등 통신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통신 물가지수는 101.14(2008년)에서 98.4(2011년)로 2.74%p 낮아지고 가계 소비지출 중 가계통신비 비중이 6.43%(2007년)에서 5.80%(2011년)로 0.63%p 낮아졌다. 다만,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고가 단말기 증가, 이용자 수 및 이용량 증가로 가계에서 지출하는 통신비는 월 13만 9천원(2007년)에서 월 14만 7천원(2011년)으로 증가하였다.(〈표 IV-95〉 참조)

〈표 IV-94〉 지출목적별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 기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94.52	97.13	100.0	104.0
통신	101.14	100.97	100.1	98.4

출처 : 통계청

〈표 IV-95〉 명목가계통신비 추이(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비지출	2,163.6	2,308.5	2,310.3	2,435.1	2,531.4
통신비	139.1	138.5	136.1	142.5	146.9
통신비 비중	6.43%	6.00%	5.89%	5.85%	5.80%

출처 : 통계청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보급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요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는 2011년 1월 13일 서민물가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노인층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시장 진입 정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신요금 TF를 구성·운영하여 통신요금 기본료 및 문자요금 인하 유도,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유통개방 제도) 도입을 통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의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표 IV-96〉 통신요금 TF 주요 정책방안

- 통신요금 부담 경감 :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통신요금 점진적 인하 유도 등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 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유통개방 제도) 등
- 통신시장 경쟁 촉진 :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활성화 지원 등

이와 함께 인가 사업자(SKT)는 TF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을 토대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6월 2일에 발표하였다. 요금인하 방안에는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 원 인하와 함께 문자(SMS) 50건을 무료 제공하기로 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음성·문자·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조절하는 스마트폰 선택형(조절형)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통신사업

자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인가 사업자인 SKT가 먼저 시행하고 KT, LG U+가 뒤이어 시행하였다. 기본료 인하와 문자 50건 무료 제공은 SKT는 2011년 9월, KT의 경우, 기본료는 2011년 10월 21일, 문자는 2011년 11월 1일부터, LG U+는 기본료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문자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

을 위해 일시정지 요금 개선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였으며, 이에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기간 동안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SKT 2011년 10월 1일, KT, LG U+는 2011년 12월 1일부터 군 입대자들의 이동전화 일시정지의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SKT 3,030원(2G는 2,720원), KT 2,960원, LG U+ 3,460원을 이동전화 번호유지 비용 등의 사유로 요금을 부과하여 왔다.

다.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유도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 마다 사용요금이 지불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나 국내 가입자는 2011년 9월말 기준 82.4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5,212만 명)의 1.6%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선불요금제 이

용률은 평균 47%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단말기와 SIM 카드가 분리되지 않는 CDMA(2G)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었고 이용자는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유인이 적었다.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선불요금제 가입·충전 불편, 무선인터넷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한, 선후불간 번호이동 제약 등 불편함도 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선불요금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대국민 설문조사(2011년 3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원회 트위터를 통한 의견 수렴(2011년 7월)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이동통신사,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의 내용은 <표 IV-97>과 같다.

<표 IV-97>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

선불요금제 시장의 경쟁 촉진	이동통신 사업자 -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기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조성
선불요금제 이용 편리성 제고	선불요금제 가입절차, 충전 방식 및 장소 등 이용자 불편 사항 개선
선불요금제 제공 서비스 확대	음성, SMS 이외 무선인터넷,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등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불 데이터 정액제 등 이용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 출시 유도
선불요금제 홍보 및 부당영업행위 방지	정부, 사업자가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적극 추진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 실적 관리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하지 않도록 제한 선불폰 개통거부 등 부당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 실태 지속 점검

라. 단말 유통구조 개선

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가입자 식별카드(USIM²⁴⁾)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유통개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대부분의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식별카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유통개방 제도)를 운영해 이동통신사 이외에 제조사·유통업체 등 별도의 유통채널이 발달되고 유통망에 구매 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의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자사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 제도를 운영해 이동통신사 이외에는 유통망이 거의 없는 폐쇄적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야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표 IV-98〉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방식 비교

구분	폐쇄형 제도	개방형 제도
관리방식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가 등록된 단말기만 통화를 허용	신고된 단말기만 통화를 차단
유통 주도권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시행국가	한국, 터키	미국, 유럽, 남미 등

특히,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동통신사,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국내외 단말 제조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개발, 제조사

의 단말기 생산,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2년 5월부터 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유통개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유통개방 제도)를 도입한다.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이

24)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가입자 식별카드

동통신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통신을 차단하는 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유통개방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등록되지 않는 단말기의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는 이용자가 기억하였다가 분실/도난시 신고하여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되, 이동통신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도난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표기 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관리함에 따라 국산 단말기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외부에 표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표기 방식 개선을 통해 국내 제조사도 이용자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하기로 하였다.

셋째,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통합관리 센터를 구축하고 해외 이동통신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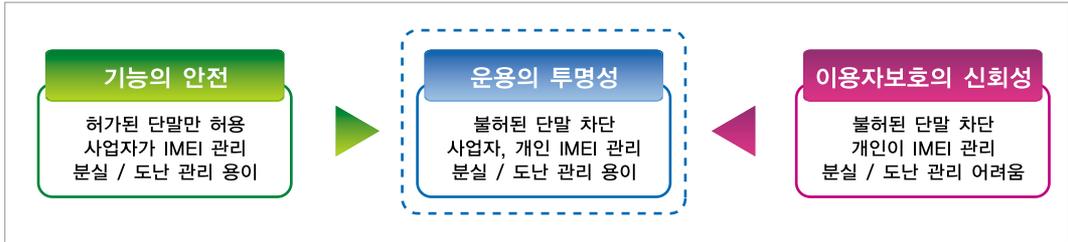
고된 단말기의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해외 이동통신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단말기 구매방식에 제약 없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이동통신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섯째,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Multi Message Service)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동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규격을 국제 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표준화 기구)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단말기 가격 경쟁이 유발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IV-52〉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 전화서비스의 번호이동성 확대

위원회는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와 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전화서비스 번호이동 대상 확대를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서비스 번호이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동전화의 경우는 기존 서비스와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 서비스간 번호이동을 2012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바.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편익지수 산정 추진

위원회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통신이 기존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통해 금융·교육·오락·SNS(사회관계망서비스)·LBS(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편익을 누리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신비 개념의 재정립과 통신의 다양한 편익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지수화를 추진하였다.

〈표 IV-99〉 통신서비스의 다양한 편익

구분	편익 유형	구분	편익 유형
금융	뱅킹, 증권거래, 쇼핑·전자상거래 등 → 탐색·교통비용, 수수료 절감	SNS	메신저,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트위터 등)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소통 및 정보공유
교육	온라인·모바일 강의, e-book 등 → 편리한 시간·장소에서 수강·구독	LBS	길안내·교통정보, 위치기반정보제공 등 → 주변지역 교통 및 생활편의 정보 획득
오락	음악, 동영상·TV, 게임 등 → 원하는 콘텐츠의 구입·보관·휴대 용이	전자정부	민원서류 열람·발급 등 → 교통비, 수수료 등 절감
정보	뉴스, 생활정보, 지식검색 등 →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에 접근	음성통화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 기초적 통신수단 제공

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운영하고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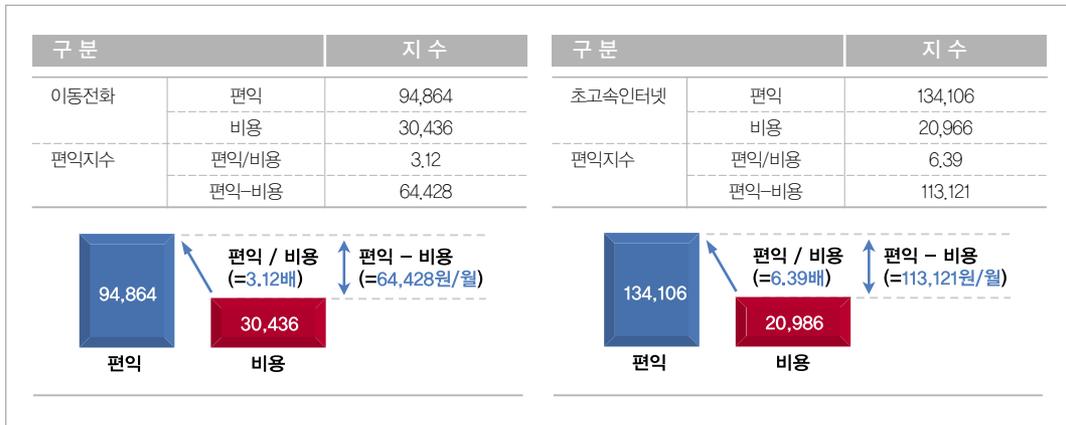
새로운 통신비의 개념을 ‘통신문화비’로 제시하였다. 즉, 통신서비스는 음성통화 등 기본적 통신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문

화적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의 개념도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 즉 통신문화비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익을 측정한 결과, 월평균 편익이 이동전화(1인당) 94,864원, 초고속인터넷(가

구당) 134,106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계통신비(통계청 발표, 2011년 2분기)와 비교하여 편익지수를 산정한 결과, 월평균 비용 대비 편익이 이동전화 3.12배, 초고속 인터넷 6.39배로 나타났다. 결국,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합하여 한 가구가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누리는 순편익(편익-비용)은 월평균 177,55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3〉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편익지수



앞으로 위원회는 통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누리는 편익을 증가시키는 한편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낮춤으로써 통신편익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수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타 분야 비교 등도 추진할 계획이며 변화된 통신비 개념이 통계분류체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 통신망 공동구축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규택지나 대규모 재건축 부지 등에 관로, 철탑 등 전기통신설비를 신규로 구축하는 지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자간 공동구축을 진행할 수 있다. 공동구축은 전문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전산자료 등을 통해 전국의 택지/신도시, 도시개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신규로 개발되

는 지역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에 총 17건의 공동구축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약 48억 원의 구축비용을 절감했다.

현재 위원회는 자율적인 협의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구축에 대해 사업자간 공동구축 협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은 공동구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사업자들이 공동구축 협의를 의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공동구축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중복투자 문제가 개선되고 망고도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강화

가.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

방송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기기 대중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의 확산 등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

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등의 수신기 보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 수에 따른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은 예산제약 등의 문제로 한계점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방송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지상파4사(KBS, MBC, SBS, EBS)를 중심으로 장애인방송(자막, 화면해설, 수화)을 실시해 오던 것을 지역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SO, PP, IPTV, 위성방송)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아날로그 방송수신기를 디지털 방송수신기로 전환 보급하고, 통신중계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당 정책의 추진재원으로 2011~2013년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기금) 101억 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기금) 121억 7천만 원, 통신중계센터 운영(일반)에 15억 원의 재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IV-100〉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요재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안)	2013년(안)	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기금)	29.2	34.2	37.6	101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기금)	33.1	34.6	54	121.7
통신중계센터 운영(일반)	-	-	15	15

※ 2013년 예산은 계획으로서 미확정

1)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위원회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대를 맞아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폐쇄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 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2011년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 운영 결과, 방송사의 의견 및 장애인방송 이용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계획과 지원방향, 시행일정, 지원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운영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방식을 예산배정 방식에서 공모를 통한 심사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장애인 미디어액세스 관련 선진국의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정책사례를 연구하여 장애인 방송접근 정책수립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에 반영하였다.

셋째, 시각 장애인 400명, 청각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와 방송편성표에 따른 시청 모니터링 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및 향후 사업 개선에 반영하였다. 이번 조사는 실질적인 정책지원 대상인 장애인을 표본으로 심층인터뷰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장애인 방송 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표 IV-101〉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세부 정책방안

구분	세부 추진 내용
사업추진계획 마련 및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도 사업 운영 결과, 방송사의 의견 및 장애인방송 이용실태조사 등 반영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사업 운영 사례분석' 실시 • 사업심사 평가 방식 변경(공모/심사평가 등)
장애인 미디어액세스 관련 선진국 정책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 관련 정책사례연구
장애인 방송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장애인 400명, 청각 장애인 300명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와 방송편성표에 따른 시청 모니터링 조사 및 전화조사 실시

전술한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2011년도에는 중앙지상파 및 지역지상파(KBS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44사, 보도·공익·일

반 PP 3사, SO 6사 등 5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하여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의 경우 자막방

송이 96.9%까지 향상되었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사업의 대상사업자도 확대(46개사→53

개사 지원)되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IV-102〉 2011년 지상파5사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구분	KBS1	KBS2	MBC	SBS	EBS	평균
자막방송	100.0	100.0	92.0	93.5	98.7	96.9
수화방송	9.0	4.5	5.5	6.1	5.7	6.2
화면해설방송	8.3	11.6	6.3	5.2	7.3	7.8

(단위 : %)

※ 2011년 12월말 기준

〈그림 IV-54〉 장애인방송 제작사업자수 및 소외계층 수신기 보급대수



2)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방송(자막, 화면해설)수신기 성능 개선 및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에 대한 방송수신기 보급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 수신기 보급에 효율성을 기하였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 수 통계' 현황 자료를 조사하여 방송수신기 보급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해당 전문가와 사업관련 기관, 사업수

행단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방송수신기 성능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수신기 성능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수신기 성능개선과 사업 수행 시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다.

셋째,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개선사항 및 사업수행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을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 개선 등을 보급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전국의 난청노인 302명과 청각장애인 339명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 및 시각장애인 308명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방송수신기 보급 사

업에 대한 평가자료 및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2011년도에는 전국 시·군·구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장애인용 수신기 보급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대중매체(KBS, MBC, OBS, SBS)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2011년도에는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수신기 9,000대, 시각 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300대, 난청 노인용 수신기 3,000대 등 총 16,300대를 보급하였으며 2011년까지 누적보급 대수는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합하여 152,500대를 달성하였다. 이는 2011년도 전체 시청각 장애인 수 대비 누적보급률 목표인 14.5%를 초과한 15.2%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IV-103〉 방송수신기 보급 세부 정책방안

구분	세부 추진 내용
방송수신기 보급 홍보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군·구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장애인 수신기 보급신청 홍보 • KBS, MBC, OBS, SBS를 통한 수신기 보급 홍보 스크롤 자막방송

〈표 IV-104〉 방송수신기별 달성율 산출내역

구분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성과목표	17.7%	11.3%
성과실적	18.9%	11.6%
	누적보급대수(53,965대)	누적보급대수(30,676대)
	청각장애인수(284,710명)	시각장애인수(264,604명)
달성율	107.1%	102.6%

※ 산출내역 : 자막107.1%×0.5 + 화면해설102.6%×0.5 = 105.5%

한편,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수행단체 및 방송사에 대한 현장방문(연 2회)과 방송수신기 활용 및 장애인방송 편성·이용 실태조사(연 1회)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수행 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또한,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집행실적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해 방송수신기 보급대상자의 보급

을 독려하고, 예산집행 회계검사 실시 등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3)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위원회는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장애인방송의 편성 대상·목표·시기 등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2011년 6월 30일)하여 장애인방송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제정 시 방송시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역방송사 및 유료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목표 달성기한 연장요청 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제공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을 개정(2011년 7월 14일 공

포)하고, 후속조치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사업자 및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2011년 10월 15일)·공포하였다. 아울러,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대상사업자의 범위·편성 대상·기간 및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2011년 12월)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대부분 방송매체에서 장애인방송 기술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서로 다른 기술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일부 유료방송에서는 지상파의 장애인방송을 재전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기술표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기술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단체, 방송사 및 가전사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플랫폼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TTAK.KO-07.0093 : 시청각장애 보조방송서비스 표준)을 제정(2011년 9월)하였다.

〈표 IV-105〉 장애인방송 의무화 세부 정책방안

구분	세부 추진 내용
「방송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제공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2011년 7월 14일 공포) •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대상사업자 및 방송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2011년 10월 15일 공포) 및 고시 제정(2011년 12월)

4) 통신중계 지원

위원회는 장애인의 효율적 통신서비스 중계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통신중계 센터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고

시를 제정하였으며 고시에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통화지원을 위해 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비장애인 간 실시간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통화품질 기준, 중계사 자격요건 등의 기준을 명시하였다.

〈그림 IV-55〉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체계도



나.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1) 농어촌 망 구축

도·농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 및 보편적 방통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익성 부족으로 망 투자를 기피하는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위

원회는 2011년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BcN 구축 확대를 위한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효율적 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국 농어촌 지역 BcN 구축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구축비용 융자지원 및 망 구축 의무부과 등의 정책도 추진하여 2011년 12월 기준, 농어촌은 86%, 도시는 98%에 BcN이 구축되었다.

〈표 IV-106〉 도·농간 광대역통합망(BcN) 가입률 비교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어촌	44	56	63	76	86
도시	61	74	83	90	98

이와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소규모 농어촌 지역 BcN 구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망 구축을 촉진하고 유도하여 농어촌지역 서민들도 언제든지 BcN을 통해 다양한 방통통신융합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도시와 같은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농어촌 BcN 특화서비스 모델 5종을 발굴·개발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망 구축 확대 및 특화서비스 발굴·보급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어촌 BcN 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위원회는 2011년 농어촌 주민의 BcN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작물 원격 모니터링, 농업기술, 의료, 교육 영상컨설팅, 환경관제 등 농어촌 생활밀착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 및 보급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3월 농어촌 BcN 특화서비스 모델 검토

다. 시청자 복지 및 권익보호 강화

최근 들어 IT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간의 미디어 활용 격차와 역기능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고령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 新미디어 소외계층 양산에 따라 이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소통 도구인 미디어의 접근 및 활용 기회의 제공이

중요해졌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 ‘사회통합 등의 공생 발전’이 국정 기조로 부각되면서 ‘따뜻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구축’이 위원회의 핵심과제로 설정되는 등 소외계층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권을 신장하고, 미디어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통해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세부적으로 지역 시청자 및 소외계층의 방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실질적 상시 지원시설로서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광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용혜택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 홍보 활성화를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하여 강사 양성과 교재 개발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소외계층의 방송환경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소외계층의 정책적 수요 파악과 정책방향 설정을 모색하였다.

1)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시청자 복지 구현

위원회는 소외받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산과 광주에 건립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더불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역의 시청자 복지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다양한 경로의 의견 소통 및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수렴 통로를 마련하여 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센터 운영 직원과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꾀하였으며, 2011년도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를 확대·운영하여 지역 관계자들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런 의견수렴과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하반기에 스마트 미디어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방송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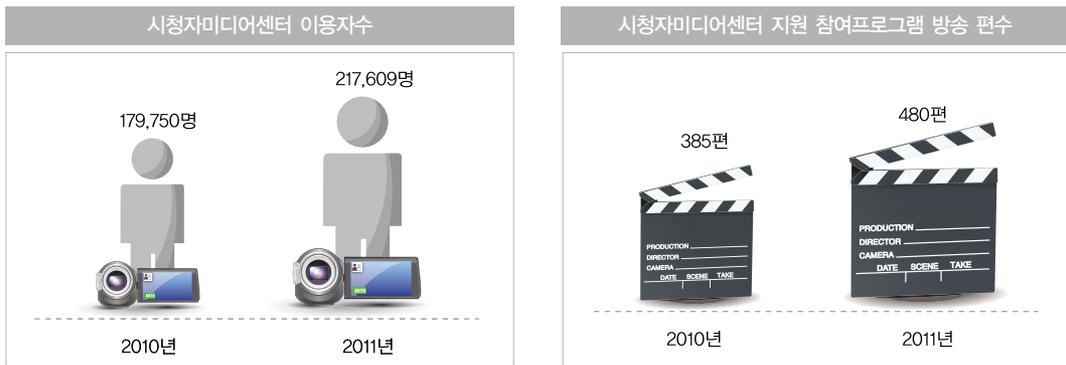
둘째, 지역적 차별 없는 보편적 시청자 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광역권 허브센터로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권역 내 원거리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소규모 미디어시설을 지역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호남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다자간 MOU 체결, 센터 원거리 지역민들을 위한 미디어제작 장비 위탁 운영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

셋째,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청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년 대비 21%가 증가된 217,609명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480여편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제작·방송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미디어교육’, ‘창의적 미디어체험’ 등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

설하였으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모전(지역 방송사 연계)’, ‘장애인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지역 교육청 연계)’ 등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예산절감과 이용 활성화를 달성하였다. 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송으로 수용자 중심의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참여프로그램 제작 멘토와 동

아리 운영 확대를 통해 자체 동호회 활동 이용자가 172명(2010년 대비 95명 대비 81%)으로 증가하는 등 ‘교육 → 제작참여 → 동아리활동 → 교육’으로 이어지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들의 선순환적인 이용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그림 IV-56〉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및 참여프로그램 방송편수



또한 노년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 운영 및 참여 독려를 통해 그동안 시행하였던 미디어교육 및 방송제작 지원 활동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실버영상제, 장애인미디어페스티벌 등 소외계층에 특화된 영상제작 공모전을 시행하여 소외계층의 방송제작과 이를 통한 의사 표현 활동을 독려하였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봉사단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미디어 재능 기부와 이를 통한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런 기획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영화감독이 탄생하고 각종 공모전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소외계층들이 참여하여 수상하게 되었으며, 광주시

사회봉사대상에서 노인 미디어봉사단이 광주 시장상(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과 위상도 높아졌다.

끝으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기금의 단위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예산 확보가 불안정했으며,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백서 제작·배포, 정책 공감대 형성 등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대외 홍보와 입법 지

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및 설치 근거를 담은 「방송법」이 개정(2012년 1월)됨으로써 시청자미디어

어센터를 기본 인프라로 한 시청자 복지 구현 체계를 다지는데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

〈표 IV-107〉 시청자미디어센터 근거 규정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② 정부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미디어교육 체계화와 소외계층의 방송환경 조사

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통한 미디어교육의 시행과 함께 미디어교육의 체계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다양한 지역적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미디어교육 및 방송환경조사 단체를 공모하였다. 법률 및 미디어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였다. 덧붙여 사업 전담 회계사를 선정하여 예산회계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연 1회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지원사업의 체계성 정립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였다.

해외의 선진적인 미디어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NAMLE' 국제미디어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연구 결과를 확보하였다. 특히,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미디어교육 정책과 시청자 권익 관련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석학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위원회가 발간한 미디어교육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전시를 통해 위원회 지원 사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과 유아 미디어교육 시행, 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등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우 미디어교육 기반이 미비하여 미디어

어교육의 지역적 편차가 나타남에 따라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을 통해 미디어교육 편차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해당 지역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교와 연계하여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 결과, 서울과 대전 지역에 총 38명의 미디어교육 강사가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수료된 강사들의 인종과 해당 양성과정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수료생을 대상으로 ‘국공립대학 평생교육협의회’가 인증한 미디어교육 지도사 자격시험을 개설하여, 양성된 미디어교육 강사에 대한 외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의 열악한 미디어교육 강사풀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다.

끝으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자료의 미비와 대외적 관심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송환경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이나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환경, 특정 지역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환경 등 그동안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소외계층 및 주제에 대한 여론 환기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 확보가 가능해 졌다.

3)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한 시청자 권익보호 강화

IT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디지털전환,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라 시청자들의 방송시청 환경이나 불거리가 풍족

해지면서 시청자들이 바라는 요구수준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의 서비스 수준이나 방송프로그램 품질은 여전히 시청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청자불만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다.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IPTV사업자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9월 9일)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2011년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에 따른 허위·과장 영업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고,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통해 단체수신 계약 시 개별 세대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 행위를 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과징금 2건, 시정명령 9건, 경고 15건, 주의 7건) 처분을 통해 시청자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자

회의를 통해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자가 직접 자율적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청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도하였다. 이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단체수신 계약 시 개별 가입동의 개선, 서비스 이용요금의 후불제 정착,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가입자 동의 개선 등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청자가 질 좋은 유료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매월 방송통신민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시청자 보호대책을 논의하는 등 시청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보편적 시청권 강화

전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국제 이벤트에 대한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1월, 보편적 시청권²⁴⁾ 보장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0년 SBS의 올림픽·월드컵 단독중계 과정에서 방송시간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을 추진하였다.(2011년 12월 27일 국회 제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에 ‘추가비용 부담 없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시청수단에 더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신청에 따라 가시청 가구비를 등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를 사전 확인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조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확인 제도 신설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였다.

〈표 IV-108〉 금지행위 유형중 신설 사항

-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비용 부담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사전 확인된 방송사업자를 하나 이상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간주)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과 연관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

마.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0호는 보편적역무를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3항은 보편적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24) 보편적시청권(방송법 제2조제25호)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

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보편적역무 지정시 고려사항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사회복지 증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정보화 촉진,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들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보편적역무의 내용을 유선전화 서비스와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및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 취약계층 요금감면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내용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2012년 1/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위원회는 매년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 이용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14만 명이 유·무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에서 약 5,637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표 IV-109〉 요금감면 대상 및 기준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발전공로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11년 최저생계비 : 1,439,413원(4인 가구)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 가입비 면제 • 월 총 사용액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 가능액 21,500원
무선호출	• 기본사용료 30% 감면	• 기본사용료 30% 감면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 및 기준

○ 대상 : 자활사업참여자, 회귀난치성질환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급자, 유치원교육비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으로 양육비와 학비 수급자

○ 기준 : 이동전화에 대해 가입비 면제, 월 총 사용액(기본료+통화료)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한편, 기존 보편적역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던 도서통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되,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의 경영효율화 도모를 위해 손실의 90%를 보전하도록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도서통신 제공사업자는 손실보전이 도서지역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제공사업자가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

가. 이용자 알권리 제고 및 피해구제 강화

새로운 형태의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요구되고, 지속적으로 복잡·다양해지는 방송통신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용자의 방송통신 이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용자들이 획득하기 어렵거나 간과하기 쉬운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보완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알권리 제고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방안을 실시하였다.

1) 방송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수준 평가

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해결을 위한 사업자의 업무체계와 노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방송통신 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수준 평가'를 8개 방송 및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시범평가 대상 사업자는 2010년 위원회 민원접수 상위 8개 사업자로 통신 분야에서 KT, SKT, SKB, LGU+, 유료방송 분야의 C&M, 티브로드, CJ 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이용자보호 업무수준 평가'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는지, 불만사항이 재발

되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그간 위원회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5월부터 2개월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조직 운영, 사내교육 등 관리체계 ▶이용자불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정부 가이드라인 자율준수 등의 예방활동 ▶이용자 불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불만대응 현황 ▶이용자 불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불만대응 현황 ▶이용자 만족도(정부 민원발생현황 포함) 등 65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수행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이를 지원하였다. 방송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수준 평가체계 및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110〉 방송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수준 평가체계 및 배점

구분	배점	중분류	문항수
관리체계	150	전사 차원의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16
	50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4
불만예방활동	230	정부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10
	70	정보제공, 이용자교육 활동	4
불만대응	50	이용자 불만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7
	150	불만처리 현황	8
이용자만족도	120	방송통신위원회 민원발생 평가	4
	180	이용자만족도 조사	12
계	1,000점		65

이러한 이용자보호 업무수준 시범평가를 통해 위원회는 이용자불만 해결을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경쟁을 촉진시키고, 평가대상으로 선정될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활동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민원감소 및 이용자 불만해소에 기여하였다.

2) 휴대전화 보험 관련 이용약관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고가 휴대전화

분실·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 보험’을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전화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2011년 8월부터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하였다.

〈표 IV-111〉 설명서에 포함되는 주요 보상규정

-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상접수를 해야 보상해줌
- 보상구비 서류로 ‘통화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휴대전화 보험 가입 후 5일 이내(SKT의 경우 2주)에 분실·도난 등 사고(‘근접사고’) 발생한 경우임[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 가입 다음날 오전0시(LGU+의 경우 가입 즉시) 이후 사고 발생시점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있어야 보상해줌
- 분실·도난 등 사고시 보상 구비서류로 경찰서의 확인서가 필요함(해외사고 보상이 가능한 KT의 경우 해외 사고시 현지 발행 사고증명서 Police report 필요)
- 분실·도난 등 사고 발생시 없어진 휴대전화와 동일 기종 단말기로 교체해줌(현금보상·업그레이드 기종 교체 불가). 휴대전화 본체를 제외한 부속물(USIM카드, 케이블, 어댑터, 안테나, 이어폰, 설치된 S/W 등)은 보상에서 제외됨
- 분실·도난 등 사고시 보상센터에 보상접수를 하고 휴대전화사업자에게 ‘분실신고(발신정지 포함)’를 해야 함

인터넷을 통한 보상접수 및 전화(ARS)를 통한 보상 예약접수도 가능해졌다.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보상접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항상 접수를 받고,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휴대전화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휴대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아도 휴대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보험 가입을 약정기간 가입자에게만 허용하고,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2011년 12월부터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

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서비스 명의를 변경하면 휴대전화 보험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1년 8월부터는 명의변경 할 때 휴대전화 보험유지여부에 대해 휴대전화를 받는 사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되었다. 또한 보상처리 기간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명시하여 이용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즉, 기존에는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접수(구비서류 완비)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였다.

3) 통신요금고지서에 예상 위약금과 약정기간이 기재되도록 고시 개정 추진

위원회는 사용한 만큼 통신요금이 부과되었는지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필수 고지사항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해 위약금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부담하게 될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토록 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기재토록 하였다.

〈표 IV-112〉 서비스별 위약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민원 현황

구분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IPTV	케이블	총계
민원 전체	8,249	21,914	1,803	992	3,316	36,274
위약금 관련	2,381	372	404	254	323	3,734
비중	28.9%	1.7%	22.4%	25.6%	9.7%	10.3%

201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통신민원 36,274건 중 10.3%(3,734건)가 위약금 관련으로 해지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해지할 때까지 정확한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위약금 관련 민원을 해지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좀 더 합리적인 이용자선택을 유도하였다.

또한, 고시 개정안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항목을 읽어봐도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마다 용어, 기재위치 및 순서가 달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소비자단체 의견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위해 위원회가 표준고지서를 마련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고시 개정안에는 결합상품 고지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비스 요금이 한 개의 고지서에 기재되는 경우에도 필수 고지사항을 생략하지 말고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 통신사업자는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장애인을 위한 요금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IV-113〉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서비스별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함(제3조 제1항 제3호)
-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 이용약관상의 표현 활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방법을 제시함(제4조 제1항)
-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함(제5조)
-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제2항)

4) 이동전화 마일리지 개선

위원회는 2011년도에 보다 많은 이용자가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 이용자 고지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개선은 기존에 시행되던 마일리지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에 따라 시행되었

다. 즉, 위원회는 지난 2009년 5월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여 마일리지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마일리지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2010년 기준 10.1%)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1년도에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IV-114〉 2009~2010년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이용률

(단위 : 억원)

구 분	SKT		KT		LG U+		계/평균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전체 누적 마일리지(A)*	1,760	1,379	1,532	1,578	323	284	3,615	3,241
사용 마일리지(B)**	160	154	102	154	12	19	274	327
마일리지 이용률(B/A)	9.1%	11.2%	6.7%	9.8%	3.7%	6.7%	7.6%	10.1%

* 전년도말 기준 사용가능한 마일리지(사용·소멸분 제외)와 당해연도 발생 마일리지 합산

** 당해연도에 사용한 마일리지

위원회는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그간 일부 계층만 활용하여 실제 활용도가 낮았던 마일리지 제도를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쉽게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요금항목이 음성통화, 부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까지로 확대되고, 마일

리지를 이용한 자동 요금결제 서비스도 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요금부담 완화에도 기여하였다.

5) 미환금액 환급활성화 방안 마련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금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

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으로 2011년 12월말 현재 약 136만 건, 107억 원에 달한다.

〈표 IV-115〉 사업자별 미환급액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유선통신사				무선통신사				총계
	KT	SKB	LG U+	소계	SKT	KT	LG U+	소계	
건수	163	11	26	200	165	44	897	1,106	1,360
금액	14	10	2	26	46	18	17	81	107

* 2011년 12월말 현재

2011년도에 시행된 환급 활성화 방안에는 ▶유·무선 미환급액 통합 조회·신청 사이트 구축 ▶유선전화 번호이동시 요금상계 및 유선분야 미환급액 기부제도 도입 ▶미환급액 보유자의 주소 정보 등 현행화 및 우편·전화 안내 강화 ▶연중 지속적인 홍보 활동 실시 ▶귀속처리 중지 및 사업자 자체 환급활동 강화 ▶미환급액 환급 지원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환급활성화 방안의 제도개선으로 이용자의 미환급액 조회·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하는 한편, 환급을 위한 사업자간 협조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환급 신청이 보다 활발해지고 남아있는 미환급액이 조기에 해소되는 한편, 요금 상계제도나 기부제도 등을 통해 미환급액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이동전화 청소년요금제 제도개선

청소년들의 부주의로 인해 이동전화요금의 과다하게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요금상한제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요금상한에는 음성·영상·문자서비스·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되고, 제휴제공·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 요금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이용할 경우 과다요금의 부과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동전화 청소년요금제 주요 개선내용에는 ▶요금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수신자부담서

비스 사용금액을 SMS로 이용자(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통보 ▶일반요금제로 전환 시 안내 강화 ▶가입 시 요금발생과 관련된 주요 사항 고지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이동전화 청소년요금제 개선방안을 통해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해주도록 하여 요금제 사용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7) 방송통신 민원처리 강화

위원회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방송통신민원협의회 운영 및 신속·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실태점검 등의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1년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비스 만족도 결과,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2010년 23위(보통)에서 2011년 5위(우수)로 18단계 상승하여 민원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방송통신 접수민원은 총 43,338건(방송 6,118건, 통신 37,2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2,425건) 증가하였으며, 그 중 방송민원은 5.7%(370건) 감소한 반면, 통신민원은 8.1%(2,795건) 증가하였다.

접수된 민원(43,338건) 중 42,454건(98.0%)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민원은 6,019건(98.4%), 통신민원은 36,435건(97.9%)이었다.

이중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한 민원은 28,608건이며 요금감면, 환불 등을 통해 18,718건이 해결되어 65.4%의 구제율을 나타냈다.

〈표 IV-116〉 2011년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방송	467	387	463	492	540	606	665	618	480	471	445	385	6,019
통신	2,565	2,076	2,578	2,447	3,006	3,369	3,165	3,466	3,122	3,087	4,408	3,146	36,435
합계	3,032	2,463	3,041	2,939	3,546	3,975	3,830	4,084	3,602	3,558	4,853	3,531	42,454

8)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위원회는 2011년도에 방송통신서비스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시행

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2010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평가결과’와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스마트폰 음성통화품질 측정결과’를 추가

하여 시행하고 해당 품질평가 결과를 2011년 4월 25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품질평가 대상은 스마트폰 음성통화, 3G 휴대전화, 3G 데이터, Wi-Fi, WiBro,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융합서비스(IPTV)를 선정하였다. 2011년도의 품질평가는 총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스마트폰, 3G

휴대전화, 인터넷전화)와 한국정보화진흥원(초고속인터넷, 3G데이터·Wi-Fi, WiBro, IPTV)에서 수행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2011년도에는 최근 들어서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스마트폰의 품질평가를 추가하였는데, 스마트폰 간 통화성공률(97.6%)은 일반휴대전화 간 통화 성공률(98.7%)보다 낮은 결과(△1.1%)를 보였다. 스마트폰 간 통화에 있어서도 음성통화만 하는 경우(98.3%)에는 일반폰(98.7%)과 별 차이가 없으나 데이터를 사용중에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97.2%)에는 통화성공률이 크게 저하(△1.5%)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117〉 스마트폰 통화성공률

일반→일반	일반→스마트	스마트→스마트			전체 평균
		평균음성	통화만	데이터사용중	
98.7	98.6	97.6	98.3	97.2	98.0

위원회는 2010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번 품질미흡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품질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품질평가 결과는 이용자보호 관련 중요 정보가 게시되는 위원회 주관 웹사이트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서비스의 사업자간 품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 ‘와이즈유저(Wise User)’ 운영

위원회는 급변하는 방송통신서비스시장에서 이용자들의 현명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하여 방송통신이용자 종합정보포털 사이트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를 200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와이즈유저’에서는 이동전화와 스마트폰, 시내·외 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결합상품, 8개 주요 방송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구제’ 단계별 정보 및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시 알아야 할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서비스를 통해 음성통화, 유·무선인터넷, IPTV 등

이용자들이 해당지역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각종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일반인을 비롯하여 어린이, 중장년층,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 계층을 포함한 계층별 e-learning 교육 콘텐츠, 지역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방송통신 이해도 테스트 등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V-57〉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메인화면



2)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위원회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측면의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연령대별, 주제별 맞춤 교육 자료와 다문화 가정 교육을 위한 다국어 지원 e-learning 교재를 제작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 교육에 힘

쓰고 있다.

2010년 어린이와 어르신, 일반인용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울 YMCA, 경기도 신장중학교, 제주 onestop 독거노인지원센터 등 전국에 걸쳐 11개 기관에서 940명을 교육했으며, 2011년에는 다문화가정, 중장년층 등 정보소외계층대상 e-learning 교재를 신규 개발하여 전국 32개 기관에서 2,354명을 교육하여 현재까지 누적 3,294명을 교육하였다.

〈그림 IV-58〉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e-learning 교재



3) 이용자주간 행사 개최

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역량제고 및 권익 확대 등 '현명한 이용자' 문화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을 운영하여 왔다.

2011년 제3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에서는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시스템 안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캠페인, 유용한 어플 안내,

시청자 방송체험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송통신이용자 나눔마당'을 비롯하여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교육, 국제 방송통신 분쟁포럼, 시청자 권익 증진 컨퍼런스, 방송통신이용자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이용자주간 기념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건강한 이용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가적 차원의 관심 및 지원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생활체험 사례 및 피해예방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제3회 방송통신이용자 콘텐츠 공모전'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주부, 직장인까지 전 계층의 이용자가 참여하여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용자들의 생생한 체험사례 및 직접 고민한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방송통신 이용자미래포럼 운영

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현장의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미래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0년 4월, 제1회 방송통신 이용자미래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4차례 개최하였으며, 매회 시기별 주요이슈를 주제로 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블로거, 카페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포럼을 통하여(분야별 패넌 토론, 기고문 수합) 이용자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발굴에 기여하였다.

2011년에 개최된 제5회~제8회 방송통신 이용자미래포럼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V-118〉 2011년 방송통신 이용자미래포럼 주요내용

주제 및 주요 내용	일자 / 장소
제5회 이용자관점의 이동전화단말기 요금구조 개선방안 - 이용자 관점에서 이동전화단말기 요금구조 개선방안 제언 (패넌) - 단말기구매에 따른 요금불만 및 피해현황, 민원감소를 위한 방안 제언 (소비자단체)	2011.03.29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6회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스마트한 운영 방안 제언 - 블랙리스트 도입추진과 운영,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스마트한 운영방안 제언 (패넌) - '휴대폰 분실보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번호사)	2011.07.05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7회 방송통신서비스 위약금 제도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언 - 국내 통신서비스 위약금 관련 민원 현황 및 개선방안 제언 (KAIT) - 국내 통신서비스 위약금 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단체)	2011.08.25 / 방송통신위원회
제8회 2011년도 주요 통신이슈 및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시연회 - 2011년 통신민원 동향을 통해 본 이용자 주요 피해사례 (한국소비자교육원) - 2012년 이용자관점에서의 통신이슈 Best 5 (패넌) - 2011년도 정보·취약계층용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소개·시연 (사이버MBA)	2011.12.08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5)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예방 활동(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운영)

위원회는 본인도 모르게 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통신

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or.kr)를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 시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및 납부 현황을 한 곳(www.msaf.or.kr)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명의도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이동통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14,756,274건의 통신서비스 개통문자를 발송하였으며, 1,986,106명의 이용자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입 및 납부현황을 조회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또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및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였다.

〈그림 IV-59〉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6) ARS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의 복잡한 메뉴구성, 긴 상담원 연결 대기시간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2009년 11월 '생활공감정책'으로 'ARS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RS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상담원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원 연결기능 강화 ▶서비스 구성 단계 간소화 및 메뉴 표준화 ▶서비스 대기시간 최소화 ▶이용요금의 사전고지 및 요금부담 완화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최

소화 ▶서비스 구성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ARS 운영 우수사례를 공표하는 한편 ARS서비스 우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였다.

2011년에는 공공부문 32개, 민간기업 273개, 총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설문조사와 전문조사원을 활용한 전화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기계적인 항목인 시스템 평가는 2회, 피크타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상담원 연결시 걸리는 시간' 평가는 총 10회를 진행하였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ARS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피 평가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사전 설명회(4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ARS 서비스 운영개선 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5개 항목, 12개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평가결과, 종합 평균 점수는 80.3점으로, 전년도(75.6점)에 비해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광고성 정보 제공, 개인정보입력 최소화, 메뉴 건너뛰기 기능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요금과 ARS구성도 등 정보 제공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추후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공직유관단체, 교육서비스업, 출판영상정보업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다소 영세 업체가 많은 지자체 버스 정보안내시스템(51.5), 제조업(78.9), 운수업(69.4)은 서비스 운영실태가 미흡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9〉 ARS서비스 점검·평가 결과

구분	종합 점수	단계별 상담원 연결	상담원 연결 시간	연결 지연 서비스	콜백 서비스	상담원 연결 0	이전 단계 #	다시 듣기 *	시작시 광고성 정보 제공	메뉴 건너뛰기	개인 정보 입력	이용 요금 분담	구성도 등 정보 제공 정도
공공	76.5	69.7	75.1	65.2	58.7	75.5	89.7	90.3	98.7	92.3	100	39.4	60.0
민간	80.8	81.7	83.4	73.7	61.8	87.9	83.8	85.3	98.1	98.2	98.5	49.6	47.1
전체	80.3	80.5	82.4	72.4	61.3	86.6	84.4	85.8	98.2	97.6	98.7	48.6	48.4

※ 평가항목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지속적인 ARS서비스 점검·평가를 통하여 ARS운영기관들의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으며, 2010년에 이은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로 메뉴 표준

화, ARS구성단계 간소화(3단계 이하 : 115개 기관) 및 상담원 직접 연결전환(29개 기관) 등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 되었다.

또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2010년도 평가 이후 174개 기관 중 71%에 해당하는 124개 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12개 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서비스 추가 개선과 더불어 음성인식 ARS, 화면제공 ARS 등 다양한 ARS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ARS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발신전화번호 표시제도 개선

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대책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발신번호 변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전화에 대해서는 ‘국제전화식별번호(001, 002 등)’를 표시하고, 이동전화 단말기에 ‘국제전화입니다.’를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체국,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의 메뉴 체계를 개선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동응답시스템은 미리 지정된 순서에 따라 모든 메뉴를 들어가면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고의 신고가 늦어져 자금 이체 차단 등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고신

고 전용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 최초 안내멘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신고메뉴’를 신설토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자동응답시스템 메뉴체계를 개선하였다.

현재 자동응답시스템 체계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는데도 1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절차도 매우 복잡하나, 금번 자동응답시스템 메뉴 개선으로 피해를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 정도로 단축되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주로 우체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발신전화번호를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걸려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2011년 12월 1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에게 발신통화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임의로 변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변작된 번호는 정상적인 송신인의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송출하고,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는 수신인에게 연결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전화가 연결되기 전 수신자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발신번호표시창 표시 또는 음성으로 안내(예: “국제전화입니다”)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동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시행 일정에 맞추어 사업자의 구체적 조치방법과 그 밖에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라.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이용자 보호규정 강화

위원회는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 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종래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파기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2011년 2월 28일)으로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전자파 대응체계 강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2011년 5월 31일)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전자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자파로부터 인체와 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2011년 9월)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체보호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20cm이내)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대상기기를 확대함으로써 전자파 인체보호 대책을 강화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1호,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개정). 여기에는 태블릿PC, 노트북 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의 머리에 대한 보호기준을 머리·몸통·팔다리 신체 부위별로 보호기준을 세분화하도록 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개정). 아울러 전자파 측정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위원회(국립전자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표 IV-120〉 개정된 전자파흡수율(SAR)기준

주파수	구분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전신	머리/몸통	사지
100kHz~10GHz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둘째, 기기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다. 우선, 전자기기의 발달에 따라 현행 1GHz 이하 주파수에 적용하던 전자파적합성 규제 주파수를 6GHz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기기단위 전자파적합 인증 대상을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²⁵⁾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GPS 전파 교란 및 고출력 전자기파(EMP) 공격 등 물리적인 전파 공격에 대한 방어기술 개발 및 보호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및 교육·홍보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단기간 일회적으로 추진되어온 전자파 인체 유해성 연구를 중장기 전향적 연구방식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전제품 등 생활주변 전자파 방출기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자파 인체영향 연

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할 (가칭)한국전자파연구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위원회는 방송·통신 서비스 보호를 위해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주전파 관측과 예·경보를 담당할 ‘우주전파센터’를 2011년 11월 16일에 개소(제주시 한림읍)하였다.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전파환경의 변화를 24시간 관측하고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송통신 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우주전파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태양활동 감시를 위해 미국해양대기청(NOAA), EU회원국 및 호주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전문기관으로 성장·발전할 것이 예상된다.

〈그림 IV-60〉 제주 우주전파센터 개소



25) 대형 복합설비 또는 건축물 구축시 전자파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 제도

바. 3D 시청 안전성 제고

위원회는 3D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실험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의 진흥정책과 더불어 시각적 피로나 두통 등 3D 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D 영상 안정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개선하고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였다.

1) 3D 시청안전성 권고안 홍보 및 개선

3D 영상의 안전성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현실 적용 가능한 3D 시청에 대한 지침서가 필요해짐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 5월부터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010년 12월 ‘3D 영상 안정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 1.0)(이하 권고안)’을 제정한 바 있다. 권고안은 3D 영상 시청 시 불편감을 주는 요인과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조명, 화면밝기 등 일반적인 3D 시청 방법, 어린이, 노인, 안과질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권고안, 그리고 3D 시청으로 인한 인체영향성 등 4가지로 나누어 인체영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일반 국민들이 권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보다 편안하게 3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및 3D 실험방송을 통해 배포하였다.

〈그림 IV-61〉 3D 시청안전성 권고안 홍보 사례



또한 양안 시차 크기, 3D 콘텐츠 품질 평가 기술 방법론, 생리적 영향 관련 임상실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권고안(Ver 2.0)을 발표하였다. 권고안(Ver 2.0)에서는 정상인, 어린이, 취약계층(안과질환자, 뇌 질환자 등) 대상 임

상실험으로 구체화된 인체 영향성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3DTV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3DTV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121〉 3D영상 안정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2.0)의 주요 개선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반 시청자 권고안	- 시청 거리, 멀미 감수성, 동공 간의 거리, 입체시력, 연령 등의 항목을 추가 또는 업데이트
취약군 시청 권고안	- 청소년의 시각적 불편 감수성, 사시/난시/부동시/약시의 시청의 이상증상, 3D 취약군의 시청, 파킨슨병 환자의 시청, 광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시청 등을 추가, 삭제 또는 업데이트

2)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시청자가 보기에 편안하고 안전하면서도 3D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는 고품질의 3DTV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3D 영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작업반(WG)’을 구성 및 운영하고,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Ver 1.0)(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고품질의 실감나는 3D 콘텐츠가 제작·방송되고 시청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3D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3D 촬영, CG, 편집 등의 지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3D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촬영 준비단계, 촬영, 편집 등 프로세스별 요구사항이 설명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을 통한 고품질의 3D 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인터넷 문화선진국 구현

가. 선진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1) 아인세²⁶⁾ 범국민운동 전개

위원회는 정부/산하기관(12), 교육계(3), 언론사(9), 인터넷사업자(9), 민간단체(32)가 참여하는 아인세범국민협의회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연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2010년 55개 → 2011년 65개), 표어·포스터·UCC 등 우수한 인터넷윤리 홍보콘텐츠를 공모, 시상하는 인터넷윤리대전 등 아름다운 인터넷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6) 아인세 :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앞의 세글자를 줄인 말로써,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작성된 말임

〈그림 IV-62〉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또한,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 및 범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2011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선포식’ 및 주간행사를 2011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였다. 동 기간 중 아인세 대토론회, 온라인 서약 캠페인, 골든벨 윤리교실, 아인세 거리캠페인, 사랑의 PC보내기, 인터넷 효앨범 증정식, 인터넷 윤리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인터넷 윤리체험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기획, 청소년, 노인, 일반인 등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였다.

2) 인터넷 윤리 교육 추진

위원회는 2008년부터 인터넷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윤리 교실’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인터넷의 주 이용계층인 학생들이 이를 통하여 자발적 학습과 체험을 통해 인터넷 사회의 진입단계에서부터 인터넷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형 교육인 ‘인터넷윤리 순회강연’을 전국단위로 개최하여 전문가 강연,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다.

〈표 IV-122〉 2011년 인터넷윤리 교실 운영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육인원(명)	5,084	2,815	99	7,998
학교수(개)	189	96	6	291

〈표 IV-123〉 2011년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운영 현황

구 분	수도권	충남	충북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계
교육인원(명)	5,220	612	629	239	1,588	1,163	1,110	337	62	10,960
학교수(개)	28	4	3	2	7	6	7	2	1	60

또한, 교과과정 개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해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

였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아 5,976명을 대상으로 ‘유아 인터넷미디어 체험교실’ 교육 사업도 함께 실시하였다.

〈표 IV-124〉 2011년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육인원(명)	854	425	276	1,555
학교수(개)	30	13	10	53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 및 교육 종사자 2,622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교육 접점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상

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진단하고 취약점에 대한 교육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125〉 2011년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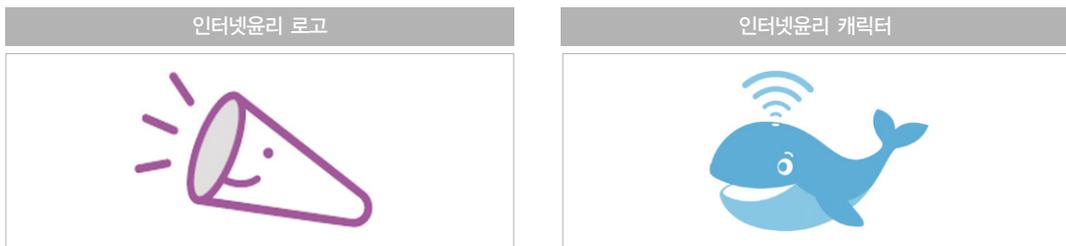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초등	36	260	499	241	735	963	64	335	5,091	693	609	18	9,544
중·고등	70	191	31	119	678	162	29	77	399	776	3,483	149	6,164
대학	430	54	25	61	311	567	239	248	1,082	146	15,092	2,807	21,062
계	536	505	555	421	1,724	1,692	332	660	6,572	1,615	19,184	2,974	36,770

3) 인터넷윤리 로고·캐릭터 개발 및 홍보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

민 인터넷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인터넷윤리 브랜드 개발을 착수하여 로고, 캐릭터, 징글송을 개발하였다.

〈그림 IV-63〉 인터넷윤리 로고와 캐릭터



극장광고, 옥외 전광판, YTN 및 KT 올레 TV를 통해서도 인터넷윤리 광고를 송출하여 로고와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2012년에도 인터넷윤리 로고와 캐릭터를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을 만들기’ 캠페인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범국민 브랜드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4) 한국인터넷드림단 활동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전국 초·중학생이 참여하는 인터넷드림단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선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0년 1기 831명 → 2011년 2기 2,853명) 또한 드림단 발대식 및 지역설명회를 통해 전국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전국 17개 지역, 25개 학교)

연간 사업으로는 사이버 범죄 유형 및 침해 사고 예방 학습을 위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KISC) 탐방, 선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댓글 문화 개선을 위한 한국인터넷드림단 ‘100일간(2011년 6월 16일~9월 23일) 선플달기’ 캠페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컴퓨터 프로그래머, 최초 여성 초계기 비행사 등 6명)를 멘토로 선정,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또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춘천 전국 5개 지역에서 체험형 인터넷윤리체험전을 실시, 드림단

원, 학생 및 일반인 등 약 23만 5천여명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하기 기자캠프, 드림단 활동 내역 및 지역사회 소식 등을 알리는 드림단 기자단 운영 및 웹진 발간, 드림단원의 인문적 소양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드림 백일장’, 인터넷 환경개선 활동 내 유해물 신고 게시판 운영(지킴이), 인터넷 활용 사회공헌활동인 ‘인터넷 효(孝)앨범’ 제작 및 증정,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을 돕고 배려하는 소양 배양을 위한 드림단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불법/유해정보 유통차단 강화

1)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은 어느 누구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내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음란물 유통에 대해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

한 대처방안은 사후 신고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차단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단기간 대량처리가 가능하여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음란물 유통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차단하거나 사업자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자 자율규제의 기틀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 10월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

획과 ▶자본금 3억원 이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스팸감축 및 대응체계 강화

위원회는 스팸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스팸 방지 기술 개발·보급 및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스팸방지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2004년 대비 2011년의 이용자 1인당 1일 스팸수신량은 휴대전화 82%, 이메일 84%가 감소하였다.

(그림 IV-64)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특히,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2008년 이후 둔감하게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1년 1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 시행으로 2011년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스팸방지 종합대책’ 중 휴대전화 스팸 감축 정책의 골자는 스팸발송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제공 사업자 및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강화,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가입자 확대, 불법 성인스팸 전송업체 제재 강화, 실시간 스팸차단 및 이용제한 체계구축·운영 등이다.

2011년 스팸 수신량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발신·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 시범 측정 및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가입자 확대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자의 스팸방지 자율규제를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 측정은 2012년부터 공식 시행되며, 상·하반기의 누적된 측

정결과를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업자 스팸 유통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그간 스팸 관리에 미진했던 일부 사업자의 스팸방지 노력을 환기시키고, 이용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선택 시 스팸을 적게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스팸수신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스팸대책이 국민에게 최종 도착하는 스팸 수신량에만 집중하였다면, 스팸 유통현황 측정 및 공개를 통해, 전송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스팸까지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무료) 확대는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의 스팸수신 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통사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7월에는 만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에 대해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무료)를 모두 가입시켰으며, 2011년 12월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 서비스를 기본 가입시키고 있다.

〈표 IV-126〉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 만명)

이동통신사	SKT	KT	LG U+	합 계
제공 시기	2007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1월	-
전체 이용자 (2011년 12월 기준)	2,655	1,656	939	5,250
서비스 가입자 수 (전체 대비)	581 (21.88%)	712 (43.0%)	102 (10.86%)	1,395 (26.57%)

그 외, 웹상에서 대량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이통사

와 유사한 수준으로 스팸방지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 스팸을 발송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서비스에서 스팸방지 조치를 함으로써 규제가 약한 서비스로 스팸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 왔다.

이메일 스팸방지를 위해서는 주요 ISP와 스팸발송에 취약한 이메일발송포트 25번을 발신자 인증기능이 있는 대체포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메일스팸 수신단인 포털의 스팸차단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이메일 외 게시형태의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영세한 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기술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2012년에는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트위터, 카카오톡 등 신규 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이른바 소셜 스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 이들 주요 서비스별 메시징 기법 및 스팸취약점, 사업자의 스팸대응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 소셜 스팸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표 IV-127〉 DDoS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제공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합계
서비스 이용업체수	52	101	153
DDoS 공격방어건수	25	60	85

DDoS 공격방어를 통해 확보한 좀비PC의 IP와 공격명령서버에 대한 치료 및 차단 등 후속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악성코드 감염 재발방지 효과도 거두었다. 특히, 2011년 3월

5.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 강화

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확립

1) DDoS 대응 및 사이버 대피소 운영

최근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융복합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에 의해 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수준이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09년 하반기에 ‘DDoS 사이버 대피소’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 9월 영세 중소기업의 DDoS 공격을 방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서비스 개시 이후 2011년까지 총 153개 기관이 DDoS 사이버 대피소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총 85건의 DDoS 공격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일 발생한 DDoS(이하 3.4 DDoS) 침해사고에 사용된 총 116,299대의 좀비PC 중 71,508대를 DDoS 사이버 대피소를 통해 탐지하였고, 2011년에만 약 9만 8천여 개에 이르는 좀

비PC를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의 서비스 구축경험과 2011년의 본격적인 DDoS 사이버 대피소 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2012년에는 단순한 DDoS 공격방어에서 나아가 DDoS 공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신지 위조 트래픽을 제거하여 유해트래픽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의 DDoS 공격대응 유관기관 및 정보보호 전문업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DDoS 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과 함께 DDoS 공격의 근본적인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향후 스마트워크 환경, SNS 등의 인터넷 융복합 서비스의 보안수준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망 연동구간에서 DDoS 트래픽을 신속하게 탐지·제거하여 DDoS 공격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 사업자의 보안인식 제고와 정보보호 투자 유도를 통한 DDoS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2009년 7.7 DDoS, 2011년 3.4 DDoS 등 DDoS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에 따라 신속한 탐지 및 대응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2011년에는 2개 ISO·MSO 사업자를 확대하였고 향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표 IV-128〉 인터넷망 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사업자수	사업자명
2008년	3개	LG 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2009년	4개	KT,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온세텔레콤
2010년	7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HCN
2011년	2개	씨엔엠, KINX

2) 이용자 및 웹사이트 보안수준 강화

최근 해커들이 특정 홈페이지를 해킹한 후 악성코드를 은닉시켜, 홈페이지 방문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유도하는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해킹당한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

포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 점검시스템(MC-Finder)을 구축하고 182만개 국내 홈페이지의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삽입된 악성코드를 신속히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국내 홈페이지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11,805개의 홈페이지에 은닉된 악성코드를 삭제 조치하였다.

〈표 IV-129〉 악성코드 유포지/경유지 사고처리 건수

(단위: 건)

구분	2010년 총계	2011년												2011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포지	1,434	163	71	66	109	53	78	180	56	93	105	233	226	1,433
경유지	5,240	730	625	706	1,908	1,496	983	1,409	842	476	416	478	303	10,372
합 계	6,674	893	696	772	2,017	1,549	1,061	1,589	898	569	521	711	529	11,805

※ 악성코드 은닉된 홈페이지는 유포지와 경유지로 구분됨

① 유포지: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방문자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웹사이트

② 경유지: 홈페이지 방문자 모르게 악성코드 유포지로 연결하는 웹사이트

공격자는 홈페이지를 해킹한 후에 해킹서버 재접속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해킹 프로그램인 웹셸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백신 프로그램에서 탐지가 어려우며 일반 웹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알아채기 매우 어렵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해킹 공격을 차단하는 캐슬(웹방화벽)과 웹서버를 제어하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조치하는 휘슬(웹셸탐지도구)의 경우 2011년에 각각 3,543건(캐슬), 1,056건(휘슬)이 보급되었다. 또한, 해킹으로 악용될 수 있는 영세기업들의 홈페이지 취약점을 무료로 원격 점검해 주는 서비스를 2011년도에 3,029건 제공하였다. 영세기업은 이러한 원격 점검 서비스를 통해 홈페이지 취약점을 찾아내어 해커들의 홈페이지 해킹 및 변조에 대응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10년부터 이용자의 안전한 웹

서핑을 도와주고자 방문하는 웹사이트 내에 악성코드 은닉여부 등을 알려주어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고, 신규 취약점 및 워·바이러 스 관련 예방 및 대응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웹체크 툴바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버전 3.1로 업데이트된 이 프로그램은 악성코드 탐지 능력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주요 포털 온라인 광고와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TV 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3)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운영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2010년에 신규 구축한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²⁷⁾'를 2011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공조하여 DDoS 공격 등 침해사

27)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DDoS 공격로그 등 국내 좀비PC IP를 입수, ISP와 공조를 통하여 감염PC를 찾아 인터넷 팝업창으로 감염 알림을 통보하고 전용백신을 보급하는 서비스

고에 악용된 좀비PC 이용자를 찾아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리고 전용백신을 보급하여 대국민 좀비PC 치료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특히 지능화된 범국가적 사이버 공격인 3.4 DDoS 사고 당시 인터넷 이용자(KT, SK 브로드밴드, 티브로드)를 대상으로 감염PC사이버치료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 455만건의 전용백신을 보급하여 인터넷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공조를 통한 스팸발송 악성코드에 대한 중점 치료를 통해 스팸 유통량 감소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EBS 수능강의 사이트 등 DDoS 공격에 이용되는 좀비PC 차단 및 감염 치료를 위한 백신을 개발해 보급하였다.

또한 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을 위해 감염PC 치료체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PC 치료를 원격으로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치료할 수 있는 전용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다.

2012년에도 DDoS 침해사고 신고접수를 통해 확보한 좀비PC에 대해 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정치적 이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이용 등 더욱 지능화되는 악성코드에 대해 맞춤형 전용백신을 개발·보급하여 국내 좀비PC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사이버 공격 수단에 악용되는 좀비PC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 치료체계를 도입하지 못하여 긴급 치료안내를 할 수 없었던 ISP의 망 구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구축방안에 대해 상세

협의를 하여, 향후 ISP 확대 구축을 통해 더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기업의 자율적 신청에 의하여 기업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그간 이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2011년에는 2010년 22건 대비 23% 증가한 27건의 ISMS 인증을 부여하였다. 이는 ISMS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자발적인 인증 취득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보호수준이 높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 되었으며 2013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ISMS 인증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인증심사를 통해 발간된 결함보고서를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취약점 목록을 조치 방법과 같이 배포하여 인증 취득 기업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취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였

다. 2011년에는 736건의 결합사항을 발견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하였다.

〈표 IV-130〉 ISMS 인증서 발급 추이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증서 신규 발급	8	12	19	22	27
인증서 발급 누적	46	58	77	99	126

5) 암호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1999년 국산 암호 SEED²⁸⁾, 2009년 경량 암호 HIGHT²⁹⁾를 개발하여 다양한 IT 서비스에 국산 암호기술 이용 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기 과거 PC 중심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확대되고 있고,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에 암호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협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1년에는 국산 암호기술을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하여 문서관리, 모바일 결제 앱 등에서 중요 정보보호를 위해 국산 암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용 국산 암호 라이브러리를 함께 배포하였다. 이 스마트폰용 국산암호 라이브러리는 PC를 기반으로 개발된 암호 라이브러리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최대 60% 가량 암호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표 IV-131〉 국산 암호 라이브러리 보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SEED	645	1,150	1,370	1,949	5,114
HIGHT	-	166	333	117	616
스마트폰용 암호 라이브러리	-	-	-	654	654
총 계	645	1,316	1,703	2,720	6,384

28) SEED는 메시지를 128비트 크기로 나눠서 암호화하는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하나로 1999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국내 암호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 정보보호의 씨앗이 되라는 의미에서 'SEED'로 명명됨

29) HIGHT(HIGH security and light weight) : 모바일용 64비트 블록 암호화 기술, 2010년 6월 국제표준화 기구 정보보안분야(ISO/IEC)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2011년 개인정보 암호화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암호기술 도입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대용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암호화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를 우려하여 암호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와 달리 데이터 병렬 처리가 가능한 그래픽 카드 프로세서(GPU)를 이용한 대용량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기존 CPU를 이용한 암호화 성능 대비 20배 이상 속도가 빨라, 대용량 데이터 암호·복호화에 따른 응답 시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IT 기술 발달로 기존 32비트 중심으로 동작하던 CPU가 64비트로 변경됨에 따라 국산 암호 알고리즘이 64비트 환경에 최적화되어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64비트용 국산암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였으며 기존 암호 라이브러리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6)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최근 DDoS 공격, 개인정보유출, 스팸 등 인

터넷 침해사고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는 근본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후, 좀비PC로 악용되어 기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DDoS 공격,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기업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정보보호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2010년부터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메시지 전달력이 가장 높은 매체인 TV를 중심으로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1년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통한 TV방송은 지상파TV(KBS), 케이블TV(YTN, MBN, 아리랑TV 등 9개 채널)를 대상으로 교양정보 프로그램, 기획뉴스, 캠페인광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인터넷 침해사고의 피해양상과 예방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표 IV-132〉 2011년도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방송 현황

구분	전달 주제	방송사	일시	회수
다큐멘터리	좀비PC의 위험성과 예방책	KBS, YTN 등 6개사	1~7월	12회
교양정보	무선랜 및 스마트폰 보안	KBS	9월	1회
기획뉴스	해킹방지워크샵 및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예방	YTN	11월, 12월	2회
캠페인광고	정보보호 기본수칙의 생활화	KBS, YTN, 아리랑TV, 육아방송, 리얼TV	6~12월	703회

‘좀비PC, 당신을 노린다’라는 제목으로 KBS, YTN, MBN 등 6개 방송사를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단편적인 정보만 존재했던 좀비PC의 국내의 실태, 실질적인 피해사례 등을 국내 방송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대응 현황, PC 이용자의 예방실천법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또한, KBS 2TV 생생정보통을 통해 국민 생활의 일부분이 된 무선랜과 스마트폰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관련 침해사고 예방책을 전달하였으며, 기획뉴스로는 YTN을 통해 해킹 방지워크숍 개최 홍보와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에 대한 예방책으로 웹체크 툴바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정보보호 수칙 생활화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KBS, YTN, 아리랑TV 등 5개 방송사를 통해 캠페인광고를 방송하였다. 반복적인 노출을 통한 지속적인 인식제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캠페인광고는 총 703회를 방송하였는데, 케이블TV 방송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광고 편성 설득을 통해 이 같은 광고 방송 횟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1.25 사태 이후 사이버침해 및 DDoS 공격으로부터 주요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쇼핑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보호 조치를 위하여 2004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매년 수검 받도록 하여 검증된 정보보호체계를 유지해 왔다.

아울러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배포 및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통하여 수검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연말 쏠림 현상을 해소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11년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는 292개 업체로 2010년(272개)에 비해 7.4%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검을 통하여 제도 시행초기(2004년)에 39%에 머물던 안전진단 대상자의 정보보호 수준이 2010년 평가결과 98.3%로 개선되었다.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3년 2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표 IV-133〉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 사업자수

(단위: 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P)	13	12	12	15	15	11	11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63	69	90	93	102	113	11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66	79	105	124	130	148	169
합 계	142	160	207	232	247	272	292

나. 모바일 보안 위협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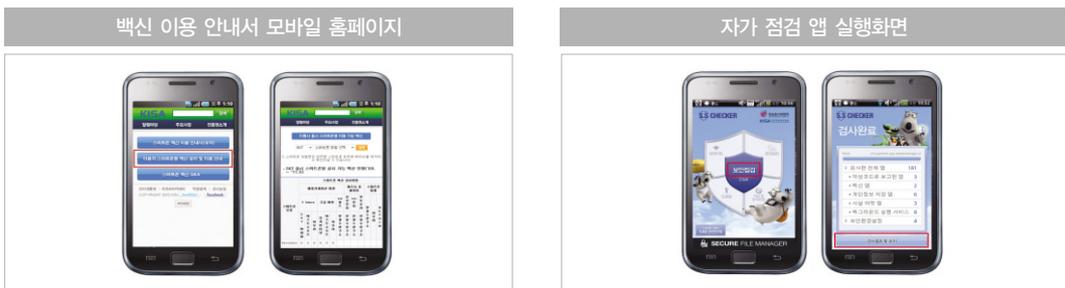
1) 스마트폰 보안 강화

최근 사용자 편의성으로 인한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1년 11월 기준 2,000만명을 돌파하여, 국민 경제 활동인구 2,500만명 중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손안의 PC'의 역할을 하며 24시간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스마트폰은 새로운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500여종(2011년 12월 기준)의 스마트폰 악성코드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안 검증이 취약한 해외 블랙마켓 및 안드로이드 마켓 등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

드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모바일 침해사고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안전한 모바일 이용환경 조성 및 모바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 마련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 운영을 통하여 스마트폰 보안이슈에 관한 정보 공유 및 모바일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6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적합한 모바일 백신을 검색하고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를 개발하여 별도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보급하였다. 또한 2011년 9월, 스마트폰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App)'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그림 IV-65〉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 및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App)



2011년 12월 앱 시장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모바일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되는 블랙마켓 및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악성 앱을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 악성행위 탐지 기술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하였다. 2012년에는 안드로이드 악성 앱 탐지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외 블랙마켓 및 사설마켓을 대상으로 악성 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보안 위협 발생 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악성 앱 보안 공지, 스마트폰 원격관리 기능 등을 추가하여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의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 웹페이지도 개선할 예정이다. 3G, 4G 등 이동통신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모바일 악성코드 유형을 분석하고, 현재 스마트폰 백신에서 진단이 어려운 스마트폰 OS 플랫폼 취약점을 악용한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 및 대응 기술도 확보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 무선랜 보안강화

위원회는 2천만 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 및 인터넷전화기용 무선 공유기, 사설 무선 공유기 등 800만 대 이상의 무선 공유기 사용에 따른 보안대책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일반 이용자들의 무선랜 보안에 대한 인식 조사(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결과에 따르면 50% 이상의 사용자가 보안설정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는 ‘보안설정 방법을 몰라서’로 답하였다. 또한, 무선공유기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무선공유기에 보안을 설정한 후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87.2%가 찬성하였으며, 무선랜 보안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국 63,787개의 무선랜 AP에 대한 보안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안적용 비율이 73.8%로 2010년의 55.2%에서 18.6%가 향상되었다.

〈표 IV-134〉 무선랜 보안 운영 현황

구분	상용 무선랜 AP		인터넷전화용 AP		사설 무선랜 AP (가정용, 기업용)		합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조사대수	2,831	17,106	11,854	14,333	28,312	32,348	42,997	63,787	
보안 적용	有	2,831	17,106	6,178	13,799	14,726	16,171	23,735	47,076
	無	-	-	5,676	534	13,586	16,177	19,262	16,711
보안적용 비율	100%	100%	52.1%	96.3%	52.0%	50.0%	55.2%	73.8%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2011년), ‘광중 무선랜 보안 운영 현황 조사’

또한 지속적인 무선랜 보안강화를 위하여 보호나라 무선랜 보안 안내 사이트에 주요 무선 공유기 제조사의 보안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온라인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무선랜 보안 수칙 제공 등 무선랜 보안인식 제고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무선 공유기 제조사 및 인터넷전화용 무선 공유기 제공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WPA2³¹⁾ 기본 적용, 개별 비밀번호 설정, 보안설정 메뉴 최상단에 WPA2 배치 등 무선 공유기 제조사 보안이 적용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출시되는 무선 공유기는 보안이 적용되어 사용자의 안전한 무선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1)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확산에 따른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보호수준의 검증을 위한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를 2010년 위원회 의결(2010-66-273)을 통해 도입하였다.

2011년은 PIMS 제도 시행의 원년으로 과징

금·과태료 감경혜택 부여, PIMS 구축·운영의 절차와 개인정보보호 법적 준수사항 교육, PIMS 자가진단도구 개발 등을 통해 인증취득 관심기업의 PIMS 구축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이통사·포털·온라인 쇼핑 등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주요 기업 등에 인증심사를 통해 총 10건의 인증을 부여하였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통신부문(ITU-T)과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화기구(ISO/IEC)에 PIMS를 제안하여 신규 연구과제로 채택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국내 국가표준으로 제정(KCS.KO-12.0001, 2011년 12월 30일)하여 PIMS 인증제도의 신뢰성, 공신력 및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47조의3 신설)에 PIMS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활성화하는 자율적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개인정보 유노출 등 사고대응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활용하여 발생하는 명의도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이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

31) WPA2(Wi-Fi Protected Access 2) : 무선랜 보안 표준으로 암호알고리즘인 AES를 사용하는 등 가장 강력한 보안을 제공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2009년부터 공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042개 웹사이트(2011년 5월 공시) 대한 점검 및 제도 등을 통해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토록 하였다. 2011년도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여 미수집 전환시 당해 연도 기준 약 9,631억 원 손실이 발생하나 3.5년 경과 후 순익분기점을 초과하여 이익으로 전환, 5년후에는 8,903억 이익이 됨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인터넷 전송구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수단인 보안서버를 보급하기 위해 2006년 9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서버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에 보안서버 보급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영세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무료 보급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목표 대비 105%에 해당하는 60,067대의 보안서버를 보급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8개 항목의 개인정보와 이미지(주민등록증, 여권),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노출 발견시 즉시 삭제조치 등을 취하였으며 주요 개인정보 관련 단어(이력서, 주민번호, KRRN 등)를 추가 검색하여 삭제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기술 및 인력부족으로 노출 개인정보 삭제에 미온적인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 및 원격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위험성을 교육하였다. 국제협력의 경우 한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 중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 등과 핫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발생시 긴급히 삭제 요청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 및 이슈를 공유하여 협력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 8월 현대캐피탈, SK컴즈, 빅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인터넷 이용자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인식제고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위원회는 2011년 7월 이용자와 사업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교육·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인식을 중점으로 하여 개인정보 개념 및 보호조치를 전파하고 다양한 매체활 용을 통한 전방위 홍보를 강화하였다.

우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을 확대 강화하였다. 순회교육은 전국의 초·중·고생, 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사 진이 찾아가서 집체 및 방송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대응방안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8,149명(691회)을 교육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교육 대상별로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 등 4종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문 제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9월에는 비밀번호변 경, 아이핀전환, 휴면계정 정리 등을 주제로 ‘2011 자기정보보호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일반인에게 친숙한 모델을 선정하여 라디오, TV, 포스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 고를 진행하여 비밀번호 16,603,807건 변경,

아이핀 42,526건 전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이통통신 3사와 함 께 휴대폰 가입신청서 돌려받기 캠페인을 전 개하였다.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고 각 이통사 판매점 및 대리점에 포스터 등을 배포하여 휴 대폰 가입자가 신청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다.

한편 2011년 3월에는 기업 CPO 35명 등 약 325명이 참석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 급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정책방향 설명, 최신정보교류 등을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 871명을 대상으 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여 개인정보보 호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고토 록 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개인정보 보호인의 밤’ 행사를 진행하여 정부와 사업자 등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사업자별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쇼핑몰, 게임사 등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사이버 보안 글로벌 리더십 확보

1) 국내외 침해사고 협력체계 강화

위원회는 국내외 인터넷 침해사고 협력체계

및 공동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에 의거 민·관 합동조사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정보보호 정책’, ‘DDoS’, ‘융합보안’, ‘포렌식’ 등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약 18회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의 대응능력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1년 11월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와 공동으로 제 15회 해킹방지워크숍을 약 198개 기관 6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 침해사고대응협력을 위해 FIRST(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APCERT(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등 침해사고 관련 국제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아시아 최초로 FIRST에 가입하여 꾸준히 FIRST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APCERT 운영위원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APCERT 연례총회 및 컨퍼런스를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 행사에서 국제 침해사고대응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DA) 및 한·중·일 침해사고대응팀(CERT), 맥아피와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대학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 38개 대학 42개의 우수 정보보호동아리를 선정하여 정보보호 실습교육 기회 및 세미나, 학습 기자재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해킹방어대회 참가 동아리 중 대학부 입상 우수 동아리에는 해외컨퍼런스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간 협력

위원회는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2011년 6월 ‘2008년 OECD 장관회의’ 후속으로 개최된 ‘OECD 인터넷 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OECD 고위급회의’는 2008년 OECD 장관회의에서 결의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근거로, 인터넷의 역량과 역동성이 초고속네트워크 접근 용이성, 개방성 및 사용자 신뢰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결정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위원회는 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국제화 되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OECD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 등을 주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사이버 분야 규범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부록

1. 2011년도 회계 결산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3. 2011년도 주요 연월표
4. 영문 약어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부
록

1. 2011년도 회계 결산

■ 결산 총괄

〈부록 표-1〉 2011년도 회계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률(% (C/B)	
세 입	계	856,051	856,454	1,140,358	133.1
	일반회계	311,565	311,565	318,123	102.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방송통신발전기금	544,486	544,889	822,235	150.1
세 출	계	865,277	870,317	1,123,164	129.1
	일반회계	305,017	305,017	293,936	96.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774	20,411	6,993	34.3
	방송통신발전기금	544,486	544,889	822,235	150.1

주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국립전파연구원 지방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공사 지연 때문임 (미집행액 13,418백만원 → 2012년도 이월)

■ 방송통신발전기금

(1) 재정상태

〈부록 표-2〉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A)	2010년(B)	증 감(A-B)	
			금액	비율(%)
자산	1,510,105	1,092,326	417,779	38.2
부채	433,103	24,034	409,069	1,702.0
자본	1,077,002	1,068,292	8,710	0.8

(2) 재정운영

〈부록 표-3〉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A)	2010년(B)	증 감(A-B)	
			금액	비율(%)
프로그램순원가	559,946	335,521	224,425	66.9
비용	215,666	121,686	93,980	77.2
수익	542,564	478,106	64,458	13.5
재정운영결과	233,048	△20,899	253,947	1,215.1

주 :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 기준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로 표시

■ 프로그램별 총괄표

〈부록 표-4〉 프로그램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합 계	869,914	1,123,164
〈일반회계〉	305,017	293,936
1000항 방송통신융합촉진	1,745	1,745
1200항 방송인프라개선	14,657	14,657
1300항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3,920	3,711
1500항 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36,715	35,724
3100항 통신서비스고도화	23,220	23,159
4100항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2,030	1,989
4300항 네트워크고도화	13,800	13,800
4400항 정보보호강화	56,237	56,237
5100항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2,660	12,648
7100항 방송통신행정지원	140,033	130,26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411	6,993
1500항 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20,411	6,993
〈방송통신발전기금〉	544,486	822,235
1100항 방송통신융합촉진	64,926	64,155
1200항 방송통신융합촉진(융자)	20,000	20,000
1400항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4,150	4,150
1600항 방송진흥기반구축	54,174	54,174
1700항 방송진흥기반구축(융자)	22,000	21,070
2100항 방송인프라개선	60,729	59,948
4200항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21,151	21,151
5200항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3,010	2,935
6100항 방송통신연구개발기반조성(R&D)	199,327	199,327
7200항 방송통신발전기금운영비	3,181	3,040
9000항 내부거래지출	50,000	50,000
9700항 여유자금운용	41,838	322,285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부록 표-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1차	1.6(목)	의결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보고	「스마트TV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보고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2차	1.19(수)	의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의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의결	「2011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3차	1.21(금)	의결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건
		의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및 부속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보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
제4차 (서면)	1.21(금)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씨엠비씨 등 2개사
		보고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제5차	1.26(수)	의결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휴회사 등 8개 법인
		의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건
제6차 (서면)	1.31(월)	의결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에스홈쇼핑 등 10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에스트리 등 4개사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의결	「주파수할당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고시)제정안에 관한 건
제7차	2.8(화)	의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대액 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 - (주)신라케이블방송,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의결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
		의결	(주)KT, SK브로드밴드(주), (주)LG U+의 경품 및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제8차 (서면)	2.14(월)	보고	「전파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일괄정비에 관한 사항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9차	2.17(목)	기타	수신료 인상안 검토관련 한국방송공사의 의견 청취
제10차	2.18(금)	의결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
제11차	2.21(월)	의결	(주)KT, SK브로드밴드(주), (주)LG U+의 경품 및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주)농수산홍소핑의 법인분할에 관한 건
		의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제12차 (서면)	2.23(수)	의결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대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아이디지털홈쇼핑
		의결	(주)CJ이엔엠의 법인합병 등에 관한 건 - (주)CJ이엔엠과 CJ미디어(주) 등 5개사의 법인 합병
제13차	2.24(목)	의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의결	(주)케이티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 - (주)지에스강남방송, (주)지에스울산방송
		의결	무선호출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건 - 서울이동통신(주)
		의결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건 -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
제14차 (서면)	3.4(금)	의결	「전파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일괄정비에 관한 건
		의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15차	3.9(수)	의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에 관한 건
제16차 (서면)	3.11(금)	의결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일부 개정 승인에 관한 건
제17차	3.21(월)	의결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의결방송편성책임자 공표·신고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의결	방송 운용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
		보고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 후보도시 선정 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18차 (서면)	3.22(화)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지에스강남방송 등 15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현대에이치씨엔 등 18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케이엠에이치 등 2개사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BBC HD 등 6개 방송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의결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주식취득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 허가·승인에 관한 건 - (주)큐릭스서대문방송의 4개 계열사 합병 및 (주)노원케이بل종합방송 주식취득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한빛방송의 (주)티브로드동대문케이بل방송 주식 취득
제19차	3.23(수)	의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 - 하나방송(주) 등 3개 사업자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 - (주)세종텔레콤 및 K-PEF의 (주)온세텔레콤 주식취득
		의결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의결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건
		의결	KBS-2TV '추적60분' 재심에 관한 건
		의결	춘천문화방송(주)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자판 국가표준 채택에 관한 사항
		보고	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사항 - 안동MBC 등 6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
		보고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보고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제20차	3.28(월)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제21차	3.30(수)	의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에 관한 건
		보고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지상파DMB 정책방안(안)에 관한 사항
제22차 (서면)	4.18(월)	의결	4개법정위원회위원임명(위촉)동의에 관한 건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등 4개 위원회
제23차	4.20(수)	의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제24차 (서면)	4.22(금)	의결	전기통신사업법령 관련 하위고시의 일괄 정비에 관한 건
		의결	무선설비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씨엠비씨 등 4개사
제25차	4.25(월)	의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주)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보고	2010년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스마트폰 품질측정 결과 포함
제26차 (서면)	4.28(목)	의결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 전략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제27차	5.6(금)	의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제28차 (서면)	5.11(수)	의결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안)」에 관한 건
제29차 (서면)	5.13(금)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SK브로드밴드(주)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피에이치미디어
제30차	5.18(수)	의결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주)현대중공업 등 5개 법인
		의결	SK텔레콤(주)과 (주)KT의 요금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방송사 최대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경기방송과 (주)경인방송 등 2개 방송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대액 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낙동방송의 (주)동서디지털방송 주식 취득
		보고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31차 (서면)	5.19(목)	의결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 사업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 - (주)CJ헬로비전드림씨티 등 3개 사업자
		의결	서비스 이용요금의 후불제 미실시 사업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 -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의결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시 가입자 동의 미이행 사업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 - (주)CJ헬로비전경남방송 등 3개 사업자
제32차 (서면)	5.19(목)	보고	창원MBC-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의견청취 계획에 관한 사항
제33차	5.27(금)	의결	2011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2011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2010년도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안) 고시에 관한 사항
제34차 (서면)	6.3(금)	의결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GMA Pinoy TV 등 4개 방송
제35차 (서면)	6.10(금)	의결	SKT(주), (주)KT 및 (주)LG U+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건
제36차	6.22(수)	의결	2012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
		의결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등에 관한 건
		의결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계획」에 관한 건
		의결	EBS-TV '하나뿐인 지구' 재심에 관한 건
		의결	2011년도 지상파·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제37차	6.24(금)	의결	위성방송 수도권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주)에스비에스·(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양사 의견청취(안)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38차 (서면)	6.27(월)	의결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건
		보고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제공에 관한 사항
		의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 홀딩스의 (주)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소유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 허가·승인에 관한 건 - (주)씨엠비 광주방송의 (주)씨엠비 전남방송 합병 및 (주)씨엠비 홀딩스의 (주)씨엠비 광주방송 주식소유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서경방송의 (주)산청케이بل텔레비전 합병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34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엠비동서방송 등 13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씨채널방송 등 4개사
		의결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
		의결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계획(안)에 관한 건 - 극동광주FM방송국, 교통창원FM방송국
		의결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고시에 관한 건
		의결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제39차 (서면)	6.29(수)	의결	기간통신사업의 일부폐지 승인에 관한 건 - (주)KT, (주)LG U+, (주)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무선인터넷 서비스 폐지
제40차	7.7(목)	의결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일간신문의 부수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주)에스비에스와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양사 의견청취 및 행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제41차 (서면)	7.8(금)	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41차 (서면)	7.8(금)	의결	무선설비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42차	7.20(수)	의결	WiBro 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 완료 승인에 관한 건
		의결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창원문화방송(주)과 진주문화방송(주)의 합병
		보고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42차	7.20(수)	보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에 관한 사항
		의결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서경방송 등 2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서경방송 등 5개사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Eurosport SA 등 2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대교 등 2개사
제44차	7.22(금)	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201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서울지역 씨엠비 계열 2개사, 씨앤엠 계열 12개사
		의결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 변경 신청에 관한 건
		보고	「TEIN협력센터 설립·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45차	8.3(수)	의결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행정처분에 관한 건 - (유)애플코리아 등 2개사
제46차	8.8(월)	의결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창원문화방송(주)과 진주문화방송(주)의 합병
		보고	통신사 미환급액 관련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제47차 (서면)	8.18(목)	의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 사업변경 등록에 관한 건 - 씨제이이엔엠(주)의 "엑스티엠(XTM)" 등 4개 채널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방송 관련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웹하드 사업자 등록제 관련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48차 (서면)	8.31(수)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큐큐톡 등 2개사
		의결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의결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에 관한 건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등 3사의 (주)영서방송 주식소유
		보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49차	9.2(금)	의결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건
		의결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 극동광주FM방송국, 교통창원FM방송국
		의결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HD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주)와이티엔 등 3개사
		의결	2012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
		보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안)에 관한 사항
제50차 (서면)	9.6(화)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OBS경인TV(주)
제51차	9.19(월)	의결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안)에 관한 건
		의결	SKT(주), (주)KT, (주)LG U+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공익적 목적의 정보」(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계획에 관한 사항
제52차 (서면)	9.21(수)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주)MBC경남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아론티 등 3개사의 "동화나라" 등 6개 채널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등에 관한 건 - (주)강원방송의 (주)강원네트웍스 합병
		보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추진에 관한 사항
제53차	9.28(수)	의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춘천MBC, 부산MBC
		의결	2012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i-PIN 서비스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건 - NICE신용평가정보 등 3개사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주) 등 21개 사업자
제54차 (서면)	10.5(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고시)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40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4개사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엠비대전방송의 (주)엠비대구동부방송 주식소유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 한국에이치디방송(주)
		의결	1.8/2.1㎓대역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장애인방송 관련
제55차 (서면)	10.12(수)	의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변경에 관한 건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56차	10.13(목)	의결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춘천MBC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57차	10.19(수)	의결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주)이노션 등 6개 법인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웹하드 사업자 등록제 관련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허가조건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담당케이بل방송 등 4개 사업자
		의결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에 관한 건 - (주)연기디지털네트워크, (주)리링네트워크
제58차 (서면)	10.19(수)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한국에이치디방송(주) 등 4개사 5채널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 등 18개사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케이티 등 3개사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에 관한 건 - 노진의 보성케이블네트워크(주) 주식소유
제59차	10.24(월)	의결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등 4개사
		의결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건
		의결	2011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보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60차 (서면)	10.26(수)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의결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제61차	11.11(금)	의결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
		의결	2012년도 공익채널 선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통신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제62차 (서면)	11.11(금)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등 3개사
		의결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제63차 (서면)	11.18(금)	의결	「공익적 목적의 정보」(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OBS경인TV(주)의 '밀러라이트' 및 'Captain Morgan' 방송광고 재심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주)MBC경남의 '새로운 지역MBC 탄생' 재심에 관한 건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64차	11.23(수)	의결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의결	2011년도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주)경인방송 등 5개 사업자
		의결	2011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의결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건
		보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운용시간 규제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65차 (서면)	11.23(수)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이토마토 등 2개사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VTV 등 3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94개사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에 관한 건 - (주)홈앤쇼핑 등 6개사
		의결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66차 (서면)	11.29(화)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소상공인진흥원
		의결	(주)지에스홈쇼핑의 법인합병에 관한 건
		보고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통화권별 행정구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67차	11.30(수)	의결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
		의결	(주)광주방송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종합유선방송사 양측 의견정취(안)에 관한 건
		보고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보고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68차	12.02(금)	의결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시정명령에 관한 건
제69차 (서면)	12.02(금)	의결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씨제이이엔엠(주)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등대문방송등 13개사
제70차	12.05(월)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절차 개선에 관한 건
제71차 (서면)	12.07(수)	의결	국회의원 요구자로 제출에 관한 건
제72차 (서면)	12.15(목)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에스티엔 등 2개사
		의결	방송법신고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놀티비 등 6개사 및 박병윤 등 2명
		의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의결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등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73차	12.16(금)	의결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에 관한 건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한국방송공사의 '오작교 형제들' 재심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등 6개사
		보고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74차 (서면)	12.20(화)	의결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건
제75차	12.26(월)	의결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제3차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DMB사업자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변경에 관한 건 - 춘천 MBC
		의결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등에 관한 건
		의결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고시)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470~806MHz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기본계획(안) 및 공고(안)에 관한 건
		보고	TV 유휴대역(White Space) 활용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보편적업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제76차 (서면)	12.26(월)	의결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의결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 사업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
		의결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망식별번호 관리준칙」 일부개정안 승인에 관한 건
		의결	무선설비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77차 (서면)	12.29(목)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엠비씨플러스미디어 등 2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등 21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등 9개사
		의결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DMB사업자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변경에 관한 건 - 춘천MBC
		보고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시행 계획(안)에 관한 사항

3. 2011년도 주요 연월표

〈부록 표-6〉 2011년도 주요 연월표

● 2011년 1월

일 자	추진 내용
1월 6일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1월 6일	글로벌 스마트워크 강국 구현을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본격 추진
1월 13일	제10차 한-아세안 통신장관회의 참석
1월 13일	최시중 위원장, 동남아시아 WiBro 외교 활동 추진
1월 17일	2011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1월 18일	와이파이(Wi-Fi) 혼신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1월 20일	2011년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
1월 20일	형태근 상임위원, 글로벌 통합 앱스토어(WAC) CEO 면담
1월 21일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내 방송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1월 25일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세계 최초 시연
1월 27일	Smart AD & App Networking Day 개최
1월 31일	지역아동센터, 농어촌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에 보급형 디지털 TV 제공사업 협약 체결

〈2011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세계 최초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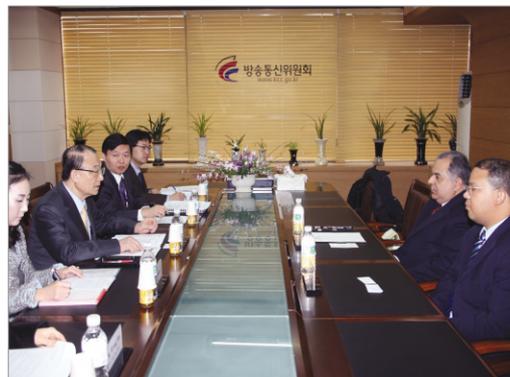
● 2011년 2월

일 자	추진 내용
2월 9일	인터넷기업 CEO 신년 간담회 개최
2월 10일	최시중 위원장, 도미니카공화국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면담
2월 11일	대구 지상파방송 대표와 간담회 개최
2월 11일	방송콘텐츠업계 CEO 간담회 개최
2월 14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2월 16일	국가도메인(.한국) 등록방안 공청회 개최
2월 18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의결
2월 21일	3DTV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 세미나 개최
2월 21일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발표
2월 21일	2011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
2월 23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2월 24일	통신사업자와 보이сп이스 차단 대책협의
2월 28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터넷기업 CEO 신년 간담회〉



〈도미니카공화국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면담〉



● 2011년 3월

일 자	추진 내용
3월 7일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3월 7일	형태근 상임위원, 맬컴 턴불 호주 하원의원과 양자 면담
3월 9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3월 10일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통신 및 전자기기 주의 경보 발령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3월 15일	방통위, GPS훈신관련 복측에 항의서한 발송
3월 16일	디지털전환 지원 관련 취약계층 TV시청실태조사 실시
3월 21일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설치 활성화 업무협약 및 실천서약식 개최
3월 23일	2011년 APCERT 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3월 23일	휴대폰 한글자판 국가표준화 방안 확정
3월 28일	방통위 부위원장에 홍성규 상임위원 선출
3월 30일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 개소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설치
활성화 업무협약 및 실천서약식〉



● 2011년 4월

일 자	추진 내용
4월 4일	MIPTV에서 Korea 3D Content Showcase 개최
4월 8일	방송장비 수요예보제 도입 추진
4월 13일	양문석 상임위원, 방송장비·기술 국제전시회(NAB) 컨퍼런스 기조연설
4월 14일	전국 도서지역 TV 시청환경 실태조사 완료(3월10일 조사완료)
4월 18일	천리안 통신위성 서비스 본격 개시
4월 21일	방통위·문화부, 제1차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회의 개최
4월 21일	2014년 ITU 전권회의 유치제안서 접수 완료
4월 22일	제56회 정보통신의 날 행사
4월 25일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4월 25일	애플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 착수
4월 26일	최시중 위원장, 호주 및 동남아 2개국 방문
4월 28일	최시중 위원장, 한-호-뉴 통신장관회의 참석
4월 29일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
4월 29일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 출범

〈제56회 정보통신의 날 행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회의 개최〉



● 2011년 5월

일 자	추진 내용
5월 2일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구현 전략 수립
5월 2일	최시중 위원장,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장관 면담
5월 4일	최시중 위원장, 필리핀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위원장 면담
5월 10일	최시중 위원장, 브라질 실바 방송통신부 장관 양자회담
5월 11일	2011 방송통신장관회의, 21개국 장·차관 참여
5월 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개최
5월 12일	홍성규 부위원장,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 양자회담
5월 13일	제2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 개최
5월 13일	최시중 위원장, 르완다 및 우루과이와 협력
5월 13일	홍성규 부위원장, 부탄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5월 23일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개소
5월 24일	ITU 전파통신국 위성전문가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5월 24일	최시중 위원장, 에콰도르 정보통신사회부 장관 면담
5월 25일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본격 개시
5월 26일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5월 27일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안 마련 발표
5월 30일	방송콘텐츠 유통 포럼 발족
5월 31일	인터넷포털업계 대표와 간담회 개최

〈2011 방송통신장관회의〉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기공식〉



● 2011년 6월

일 자	추진 내용
6월 2일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발표
6월 9일	인터넷 비즈니스 글로벌 스타트업 본격 육성
6월 13일	국내 통신사·금융(카드)사 CEO, NFC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6월 16일	한국 암호 포럼 창립총회 개최
6월 16일	3D 중소기업 CEO 간담회 개최
6월 17일	방송위-지상파 방송사, 디지털 TV방송 난시청 해소 공동 추진
6월 24일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선언식 및 정책설명회 개최
6월 28일	최시중 위원장,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 회의 참가 및 터키·이란 협력 추진
6월 28일	제3차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 개최
6월 29일	최시중 위원장, OECD 고위급회의에서 인터넷의 역할 강조
6월 29일	신용섭 상임위원,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 상임위원 면담
6월 29일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안) 보고
6월 29일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표
6월 29일	제주도 고품질 디지털 방송 세상으로 진입

〈NFC 민관합동 MOU 체결〉



〈디지털 TV방송 난시청 해소 공동 추진〉



● 2011년 7월

일 자	추진 내용
7월 5일	제16회 정보보호 심포지엄(SIS 2011) 개최
7월 8일	위치정보 앱 & 웹 아이디어 2011 공모
7월 13일	경기도와 디지털전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의정부시와 성남시에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설치
7월 14일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캠페인 전개
7월 14일	통신업계 CEO 간담회 개최
7월 15일	전국 공동시설에 DTV 191대 기증
7월 19일	라오스 우편통신청(NAPT)과 국산 이동전화종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체결
7월 20일	제2회 Smart AD & App Networking Day 개최
7월 20일	2기 방송통신위원회,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청사진 제시
7월 21일	클라우드 · 사물지능통신 · 네트워크 장비 각계 대표 간담회 개최
7월 21일	최시중 위원장, 터너브로드캐스팅시스템 아태 사장 면담
7월 22일	지상파방송 CEO 간담회
7월 26일	해킹으로 네이트 ·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통신업계 CEO 간담회〉



〈지상파방송 CEO 간담회〉



● 2011년 8월

일 자	추진 내용
8월 1일	경기·인천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7만 가구 지원 실시
8월 3일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8월 8일	인터넷 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수립
8월 10일	방통위-포털3사, 블로그 생태계 자정활동 전개
8월 11일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 센터 전국지역 확대
8월 16일	법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 실시
8월 18일	제1회 디지털방송 신기술 발표 및 신제품 전시회 개최
8월 19일	2011 중남미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8월 22일	순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일반 등록 시작
8월 22일	몽골 통신규제위원회와 MOU 체결
8월 24일	제6차 한·중 전파국장회의
8월 27일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대학생 토론회 개최
8월 28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고화질 3DTV 방송 생중계
8월 29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완료
8월 29일	경상북도와 디지털전환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30일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8월 30일	대구광역시와 디지털전환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7만 가구 지원〉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대학생 토론회〉



● 2011년 9월

일 자	추진 내용
9월 2일	스마트미디어시대 광고산업 육성전략 컨퍼런스 개최
9월 2일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 마련·배포
9월 6일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정책협력을 위한 미국 정책기관 및 업계 방문
9월 7일	제3차 APEC 사이버보안 세미나 개최
9월 8일	스마트 앤 클라우드쇼 2011 개최
9월 8일	최시중 위원장, 美 인터넷 및 미디어 업계와 상호 협력방안 논의
9월 9일	추석 연휴,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강화 및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9월 15일	한국, ICT 부문 세계 1위
9월 19일	ITU 기후변화 심포지엄 및 표준회의 국내 개최
9월 22일	2011년 단막극 페스티벌 개최
9월 26일	The Clouds Week 2011 행사 개최
9월 26일	스마트폰 자가 보안점검 앱 개발·보급
9월 26일	2011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 선포
9월 27일	국내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9월 28일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개발 완료
9월 29일	소셜네트워크 미래 포럼 개최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부, 국내 드라마·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위해 공동지원방안 협의

〈미 통신정보관리청 방문〉



〈ITU 기후변화 심포지엄〉



● 2011년 10월

일 자	추진 내용
10월 1일	군 입대 장병 이동전화 일시정지 이용요금 면제
10월 5일	클라우드 SLA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수칙 마련
10월 12일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도시 및 일정 결정
10월 21일	강원도와 디지털전환 공동협력 MOU 체결
10월 24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 추진
10월 24일	2011년 방송평가 결과 공개
10월 24일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 마련
10월 25일	홍성규 부위원장, 세르비아 RTS 사장 면담
10월 27일	2011 제10회 정보보호 대상 공모
10월 27일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발표
10월 27일	광주광역시와 디지털전환 공동협력 MOU 체결
10월 27일	모바일서비스 중소기업과 합동 Job Fair 개최
10월 28일	전라남도과 디지털전환 공동협력 MOU체결
10월 28일	2011 중동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10월 28일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의 본격적 개막 - 가입자 2천만 명 돌파
10월 31일	제3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기념식 개최
10월 31일	최시중 위원장, 그렉 다이크 前BBC 사장 면담

〈 제3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기념식 〉



〈 디지털전환 공동협력 MOU - 강원도 〉



● 2011년 11월

일 자	추진 내용
11월 1일	통합 앱스토어(K앱스), 상용서비스 개시
11월 3일	기업과 함께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 운영
11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상호협력 협약서 체결
11월 7일	이명박 대통령, 에릭 슈미트 구글 의장 면담
11월 10일	명동 NFC Zone 선포 및 서비스 시연행사 개최
11월 10일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장비와 정보보안 업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
11월 11일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11월 11일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 발표
11월 14일	방통위 제2기 PM(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위촉
11월 14일	취약계층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국확대 실시
11월 15일	한-인도네시아, ICT 인증기술 협력을 위한 디지털 미래와 ICT 인증시스템 교육 실시
11월 16일	제12차 아·태 전기통신협약체 총회 개막
11월 16일	우주전파 안전 지킴이, 우주전파센터 개소

〈명동, NFC Zone 선포〉



〈제주, 우주전파센터 개소〉



● 2011년 11월

일 자	추진 내용
11월 17일	신용섭 상임위원, 남아공 텔콤 회장 면담
11월 21일	2011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기념식 개최
11월 21일	최시중 위원장,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관련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과 긴급 조찬 간담회 개최
11월 23일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조건부 승인
11월 25일	해킹으로 넥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11월 29일	2011 동유럽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11월 29일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 개최
11월 29일	IBS 2011 Market Day 개최
11월 30일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

〈2011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기념식〉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



● 2011년 12월

일 자	추진 내용
12월 5일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5일	한국무선전력전송 포럼 창립
12월 5일	방송통신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12월 6일	IPTV 출범 3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 가입자 440만 돌파
12월 7일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편의지수 산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8일	신용섭 상임위원, 제6차 ASEAN+Korea 통신장관회의 참석
12월 8일	SMART! Work & Society 2011 개최
12월 13일	Korea Content Festival 2011 개최
12월 15일	다문화가족을 위한 TV 커뮤니티 서비스 다(多)아름 서비스 시범 개통
12월 19일	2011 재난방송 컨퍼런스 개최

〈IPTV 3주년 기념식〉



〈2011 재난방송 컨퍼런스〉



● 2011년 12월

일 자	추진 내용
12월 19일	2011년 제10회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 개최
12월 23일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을 위한 '2011 인터넷 윤리대전' 개최
12월 23일	Viva! LBS 페스티벌 개최
12월 23일	3D 시청 권고안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간담회 개최
12월 26일	TV 유희대역(White Space) 활용 기본계획 확정
12월 26일	2012~2013년도 케이블TV 콘텐츠 대가 지급기준 결정
12월 26일	올림픽·월드컵 등 중계방송권분쟁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세부기준 심의·의결
12월 26일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12월 27일	방통위, 정부기관중 가장 우수한 재난·위기관리 능력 보유
12월 29일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개최
12월 30일	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발표

〈제10회 정보보호 대상 시상〉



〈2011 인터넷 윤리대전〉



4. 영문 약어

<부록 표-7> 영문 약어

약어	내용
ADB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fDB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PCERT	아시아·태평양지역 침해사고대응팀 협의회(Asia-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APEC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App store	애플사가 개발한 모바일용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
APT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기 통신 개발의 촉진과 지역 전기 통신망의 정비·확충에 대한 국제 협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 기구
ARPU	가입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SEAN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ATSC	북미 TV시스템 위원회(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방송표준 제정 기관으로 ATSC의 방송규격은 1996년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 DTB 방송 표준으로 채택
AT-DMB	지상파 DMB(T-DMB)의 성능을 개선한 모바일 TV 방식. 동일한 주파수 대역폭으로 T-DMB보다 전송량을 2배 정도 향상시켜 다채널 또는 고품질 방송 서비스가 가능
BcN	음성·데이터, 유·무선 등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CAGR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수년간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즉 기하평균) 평균성장률을 환산한 것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의 약어, 유료방송에 가입한 뒤 수신료를 내는 사람만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벨로루시·투르크멘·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우즈베크·키르기스·카자흐·타지크·몰다비아 등 11개국
CP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록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CUG	폐쇄형 사용자 그룹(Closed User Group), 공중 교환망에서 특정의 가입자가 집단을 구성하여 동일 집단 가입자 상호 간에만 접속되며, 집단 이외의 가입자간 접속이 금지되는 기능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의 약어, 콤팩트 디스크와 같은 수준의 고품질은 물론 문자, 그래픽, 동화상 까지 전송이 가능한 오디오 방송으로 지상파를 통해 고정, 휴대용, 차량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DCATV	디지털 방식의 종합 유선 방송(CATV), 고품질, 다채널은 물론 고도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뉴미디어로서 HD급 이상의 고화질과 CD 수준의 고품질을 제공
DD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칭
DDoS	해커가 감염시킨 대량의 좀비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시스템으로 다량의 패킷을 무차별적으로 보내 과다 트래픽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DMB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고정·휴대·차량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DNS	특정 네트워크에 속한 특정 호스트에 접속하기 위해 일일이 숫자로 된 IP주소를 기억하지 않고 도메인 네임만으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메인 네임을 IP주소로 전환시켜주는 시스템
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미디어의 불법 또는 비인가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저작권 소유자나 판권 소유자가 이용하는 정보 보호 기술의 일종인 접근 제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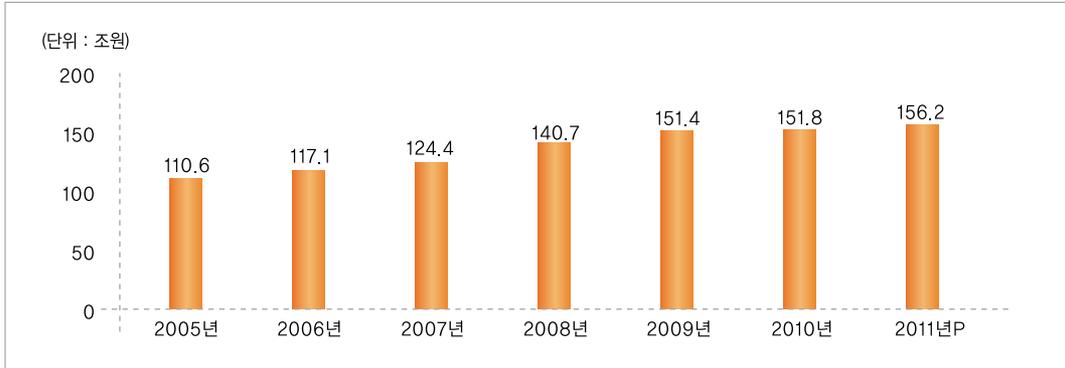
약어	내용
DVB-H	유럽 방식의 휴대인터넷TV 방송기술. IP 데이터그램이라는 신호 처리 방식으로서 신호를 패킷 단위로 보내는 일종의 웹캐스팅인 IP 데이터 캐스팅
ESCAP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상설기구로 운영. 역내의 경제협력, 개발계획, 식량 및 자원에 관한 사업 등 아·태 지역 경제사회문제를 다룸
FIRST	국제 침해사고대응팀 협의회(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FLO	미국 켈컴사가 개발한 휴대폰의 멀티캐스트를 위한 전송기술. 이동휴대방송 솔루션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단방향 지상파 전송기술인 FLO(Forward Link Only)와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인 MediaFLO MDS(Media Distribution System)로 구성
FMC	유무선 융합(Fixed Mobile Convergence),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망, 기술, 사업, 서비스 등의 통합
FTTx	전화국으로부터 광섬유가 도달 되는 지점, 구역, 장비,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광가입자망의 포괄적인 표현
ICANN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를 지정하는 미국의 비영리 사설기관. 1998년도에 창설된 조직으로서 인터넷의 비즈니스, 기술계, 학계 및 사용자 단체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 IP 주소 공간 할당, 프로토콜 파라미터 지정, 경로 서버 시스템 관리 등 업무를 조정하는 범세계적 합의체로서 미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
HD	고화질(High Definition), 화소수가 1920×1080 이상인 화질로 1초 동안 60프레임을 재생하는 것. SD(일반화질)TV에 비해서는 4배의 화질을 구현
HFC	접속망 구성의 한 방식으로, 동축 CATV 전송망의 주요 트렁크 부분을 광케이블로 개선시킨 망. CATV 방송국에서 가입자 광망 종단 장치(ONU)까지는 광선로를 이용하고 ONU에서 가입자 단말까지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구성 방식
HIGHT	모바일용 64비트 블록 암호화 기술. 2010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보안 분야(ISO/IEC)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HSDPA	비동기식 3세대 이동 통신의 하향 링크에서 10Mbps 수준의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송 규격
IEEE	1884년에 설립된 미국전기학회(AIEE : 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와 1912년에 설립된 무선학회(IRE : Institute of Radio Engineers)가 1963년에 현재의 명칭과 조직으로 합병하여 설립된 미국 최대의 학회
IMT-2000	미래 공중육상이동통신시스템(FPLMTS)을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
IMT-Advanced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3세대(IMT-2000) 이후의 차세대 이동 통신(4G)의 공식 명칭
i-PIN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웹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로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도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서비스
IP-USN	USN 기술과 IP기술을 접목시킨 방식. IP 인프라와 USN 인프라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센서 노드에 IP를 탑재하여 광범위한 확장성과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ISDB	Integrated Service Digital Broadcasting의 약어, 디지털방송용 광대역 전송로를 설정해 그 전송로 위에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문자방송, 하이비전, 데이터방송 등을 디지털 신호로 다중화해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시스템
ISMS	정보보호 관리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과 절차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체계
IS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지적 활동이나 과학·기술·경제 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한 국제기구
IT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전기 통신의 개발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고 주파수의 할당, 통신료의 인하 등을 목적으로 설립

약어	내용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국제전기통신연합 부문의 하나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책정
LED	발광 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전압을 가했을 때 발광하는 반도체 소자. 작은 크기에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며 저렴하여 최근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됨
LTE	3GPP 진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3세대 이동 통신(3G) 방식인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CDMA)의 진화 기술로 유력한 4세대 이동 통신(4G) 후보 기술
Mash up	웹 서비스나 공개 API를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데이터를 받아 전혀 다른 새로운 서비스나 융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는 것
MPEG	동·화상 전문가그룹(Motion Picture Expert Group), 비디오와 오디오 압축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 산하의 연구모임
MRA	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시험, 인증 등 적합성 평가절차를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에는 상대국 승인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호 채택하는 협정
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주파수 또는 물리적인 통신망 및 무선국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및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개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M2M	무선 통신을 이용한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어, 전자태그(RFID)의 하나로 13.56M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로 10cm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OECD	1961년 경제발전과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one-seg	일본의 디지털 휴대 이동 방송 서비스 명칭.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ISDB-T) 신호는 6MHz 대역에 13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방송 서비스 품질에 따라 세그먼트양을 가변적으로 사용
Open API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 임의의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프로토콜, 도구 같은 집합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운영 체제의 상세한 기능은 몰라도 공개된 몇 개의 API만으로도 쉽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OUN	방송대학TV, 케이블TV, 위성TV, IP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한 교육전문 공공채널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경제·경영 외국어자격증 등 TV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POS	Point Of Sales의 약어,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매상금액을 정산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매경영에 필요한 각종정보와 자료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PP	프로그램공급자(Program Provider),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PPV	pay per view의 약어로, 시청한 프로그램 수나 시간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함
Pre-IPTV	IPTV의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형태로 IPTV의 전(前) 단계. IP망을 기반으로 VoD(주문형 비디오) 중심으로 제공
PSTN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가입 전화 서비스를 위한 전화망. 근래 발달해 온 공중 가입형의 데이터 통신망(공중 교환 데이터망 등) 또는 이용자 직영의 사설 통신망 등과 비교하여 기존의 전화망을 이와 같이 부름
RFID	전파 신호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RFoG	RF 방식을 도입한 광케이블망. 기존 케이블 방송용 광동축 혼합망(HFC)이 아닌 광케이블망(FTTH)을 통해 RF 방식의 실시간 케이블 방송 신호를 전달하여 케이블 TV의 안정적인 방송 품질을 유지하고 1Gbps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RO	지상파 재송신이 주된 역무인 방송사업자
SEED	메시지를 특정 크기로 나눠서 암호화하는 블록암호 알고리즘의 하나로, 1999년 KISA 및 국내 암호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발, 국내 정보보호의 씨앗이 되라는 의미에서 'SEED'로 명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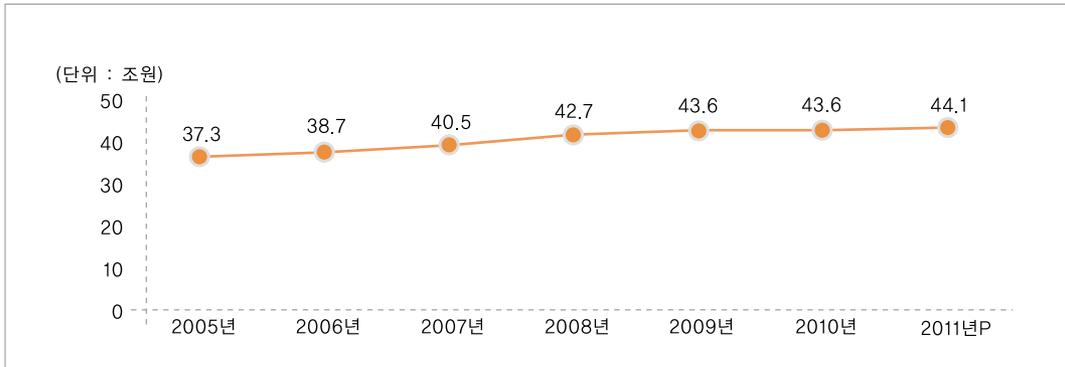
약어	내용
SLA	Service Level Agreement의 약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정량화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약정
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케이블TV를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T-DMB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ITU-R의 DSB System A(Eureka-147)에 기반하여 한국에서 개발한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TOE	ki, t, m ³ , kW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TRS	주파수공용통신 (Trunked Radio Service). 무선통신을 하는 사람이 특정한 주파수를 전용하던 종래의 무선통신방식과는 달리 중계소에 할당된 소수의 주파수를 다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
u-BcN	현재의 광대역 통합망(BcN)보다 10배 빠른 망으로 유선은 최고 1Gbps, 무선은 평균 100Mbps 속도의 ALL-IP망 기반 초광대역 융합망
u-City	도시의 모든 시설물이 정보 기술(IT)로 지능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며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시
UHDTV	초고화질HDTV(Ultra HDTV), 기존의 풀HDTV (해상도 1920x1080) 보다 4배에서 16배까지 선명한 화면 (4k(3840x2160) 또는 8k(7680x4320) 해상도)과 고음질(10.2채널)을 제공하는 차세대 방송기술
USIM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통신 사업자와 사용자 비밀번호, 로밍 정보, 사용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모듈
UWB	중심 주파수의 20% 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가지는 신호, 또는 점유 대역폭과 상관없이 500MHz 이상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
VDSL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전화선을 이용한 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의 하나
VSAT	지름 0.6~1.8m의 소형 안테나를 가지는 위성 통신용 지구국. 주로 미국 내에서 실용화되고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많은 초소형 지구국(VSAT)이 운용
WCDMA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 이동통신-2000(IMT-2000)을 위해 부분할다중 접속(CDMA) 방식을 광대역화하는 기술
WDM-PON	파장 분할 다중(WDM)을 사용한 광 가입자 망(PON). 현재 코어 백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장 분할 다중화 기술을 광 가입자 망에 적용한 것
WiBro	노트북,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스마트 폰 등 다양한 휴대 인터넷 단말을 이용하여 정치 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 와이브로라고도 함
WiBro-Evolution	차세대 와이브로 기술로, 기존 와이브로에 다중입력다중출력(MIMO) 기술, 스마트 안테나, 에러 정정 기술인 LDPC 등을 접목한 기술
Wi-Fi	2.4GHz대를 사용하는 무선 랜(WLAN) 규격(IEEE 802.11b)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적합한 제품에 주어진 인증 마크, 와이파이라고도 함
WLAN	무선 주파수(RF) 기술을 이용한 근거리 네트워크. 무선 랜(WLAN)은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WLAN 카드가 장착된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
W3C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서버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구 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단체. 흔히 WWW 컨소시엄 또는 W3C라고 부름
Zigbee	근거리 통신을 지원하는 IEEE 802.15.4 표준 중 하나를 말한다. 가정·사무실 등의 무선 네트워킹 분야에서 10~20m 내외의 근거리 통신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기술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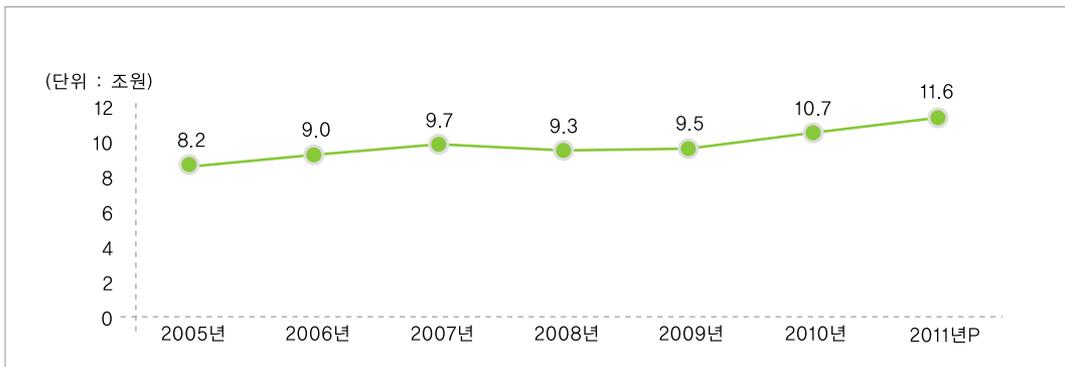
방송통신산업 전체 생산액



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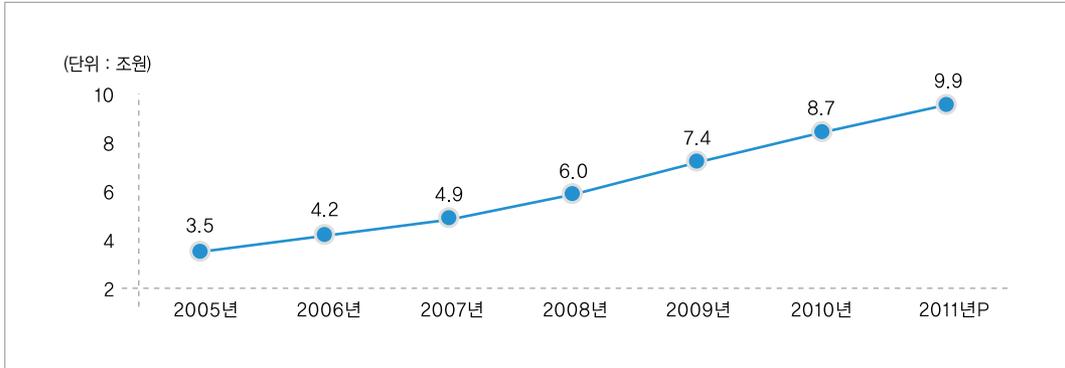


방송서비스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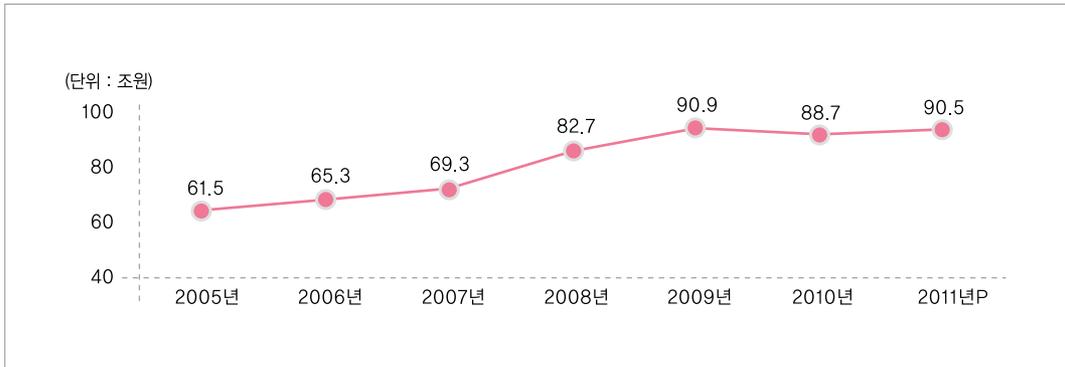


※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2011)',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2011.12)' 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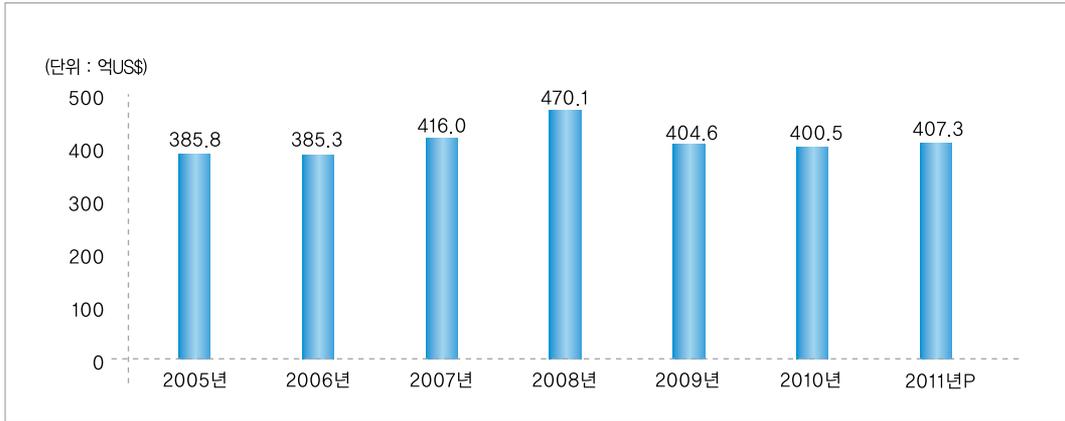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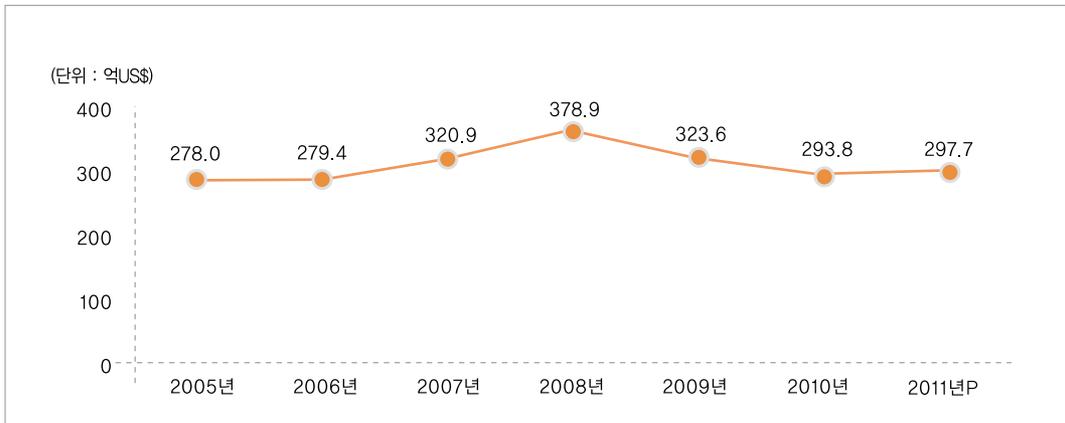
방송통신기기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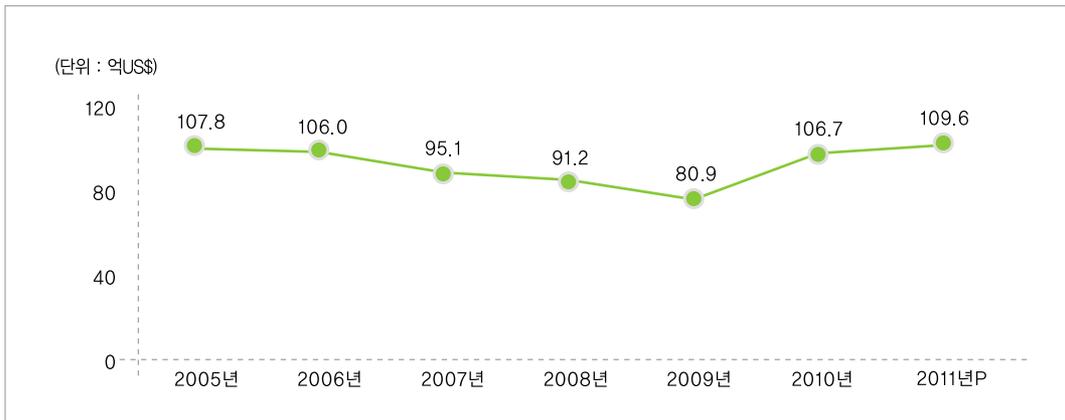
방송통신기기 전체 수출액



통신기기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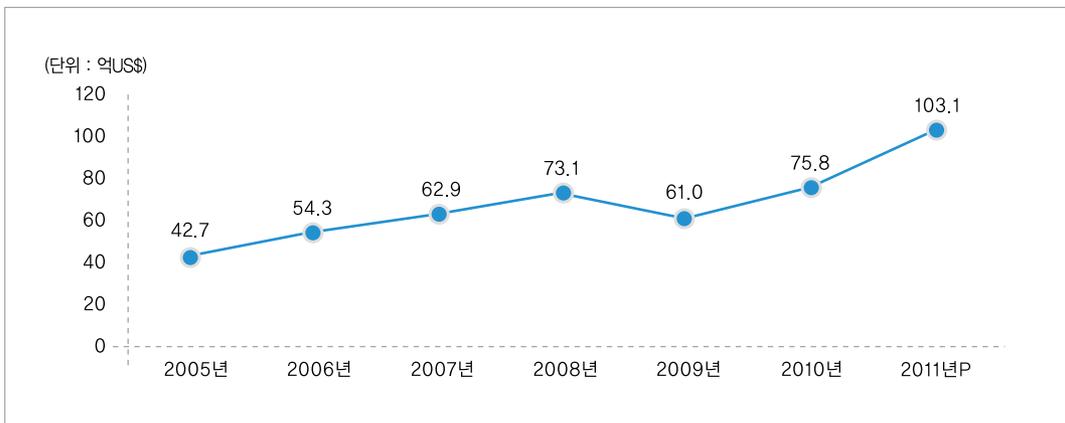
방송기기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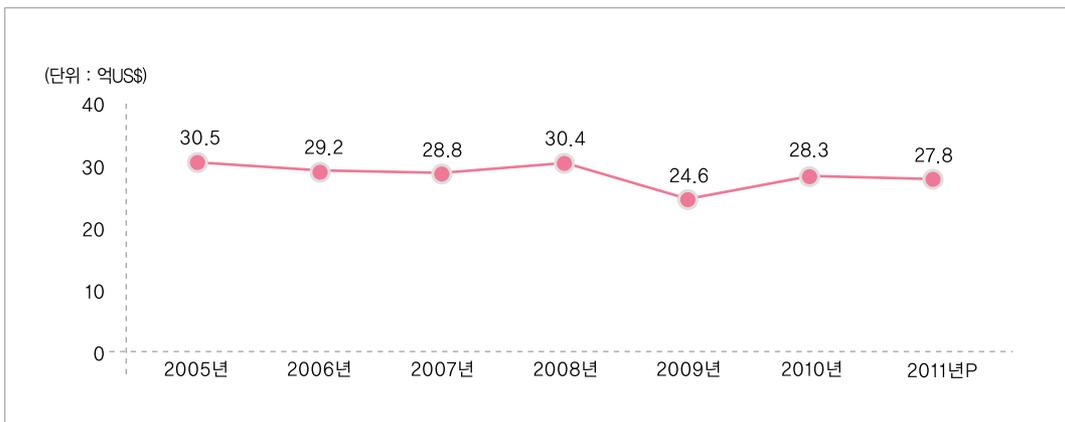
방송통신기기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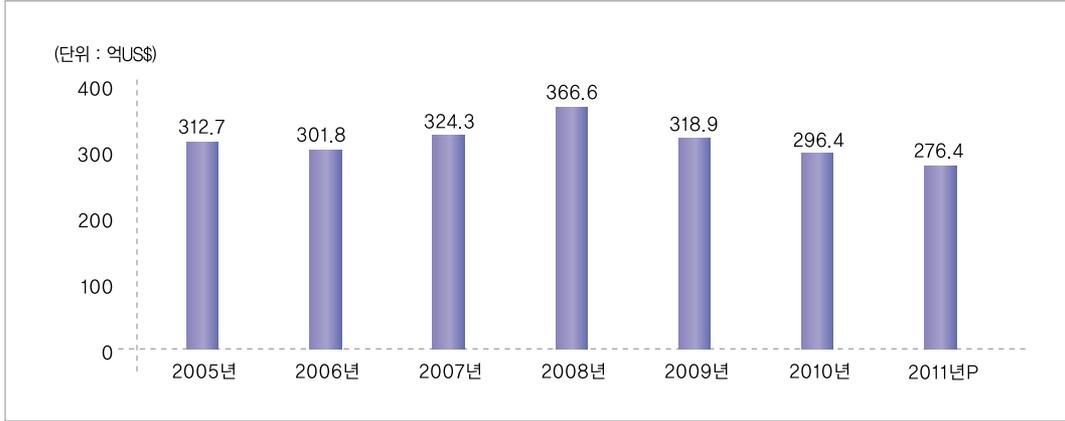
통신기기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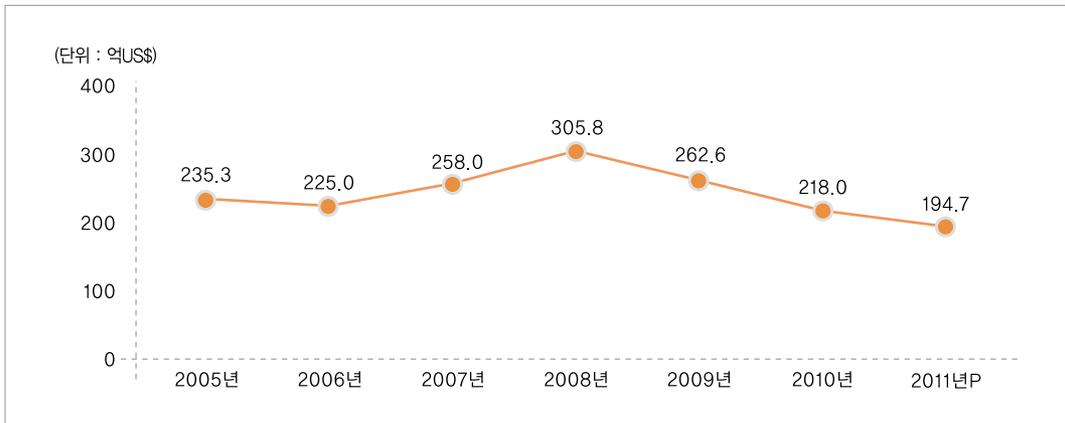
방송기기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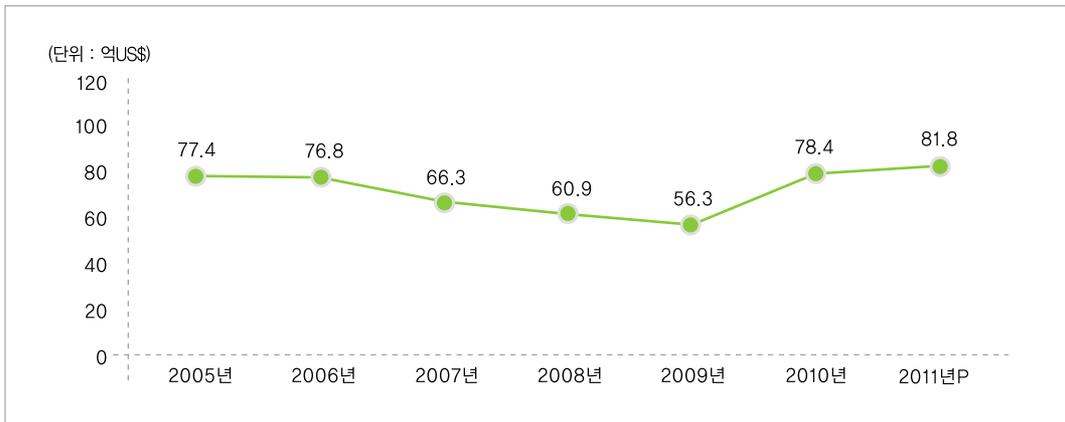
방송통신기기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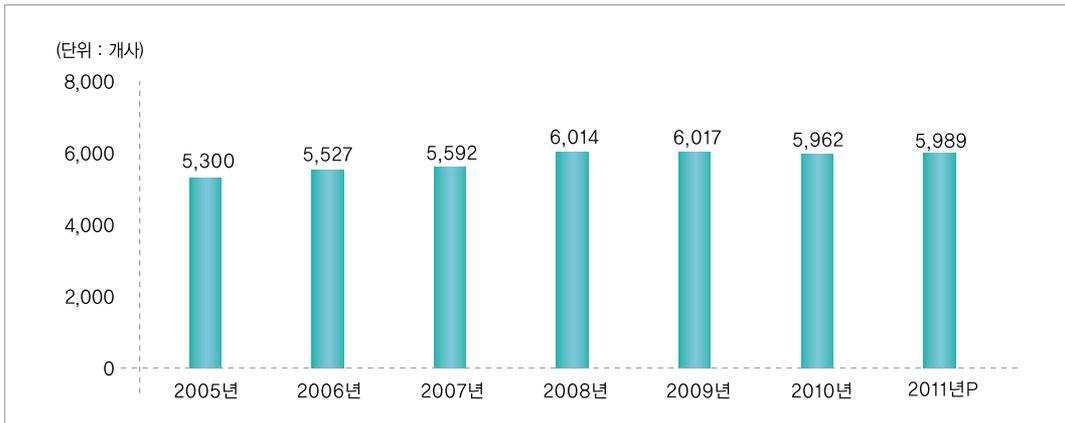
통신기기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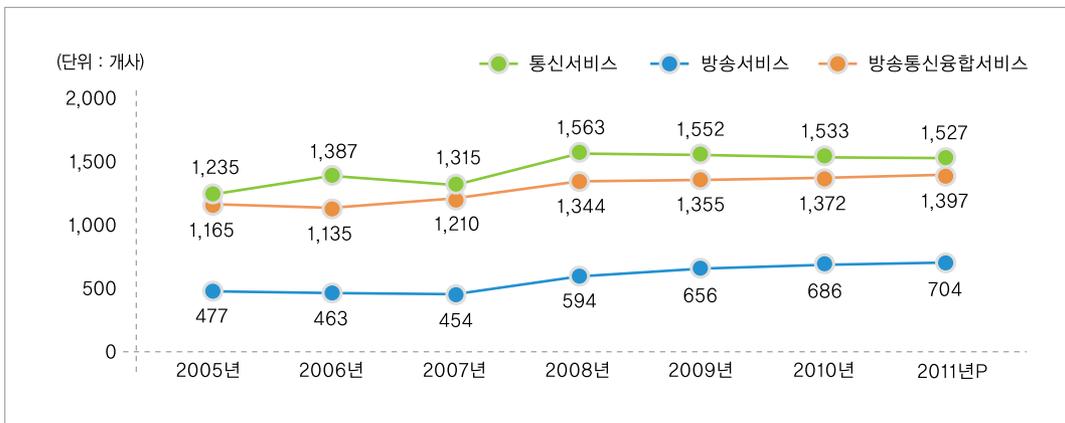
방송기기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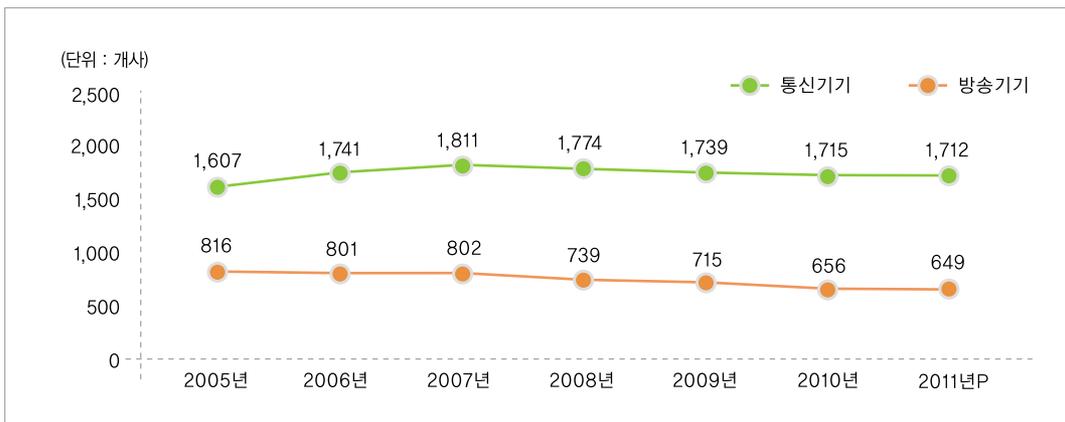
방송통신산업 전체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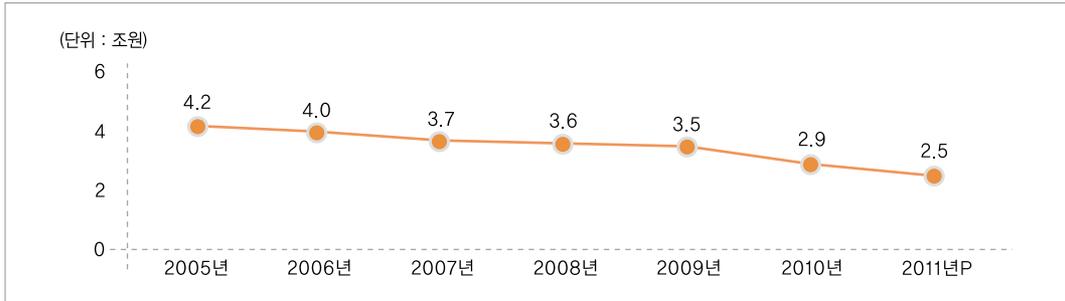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별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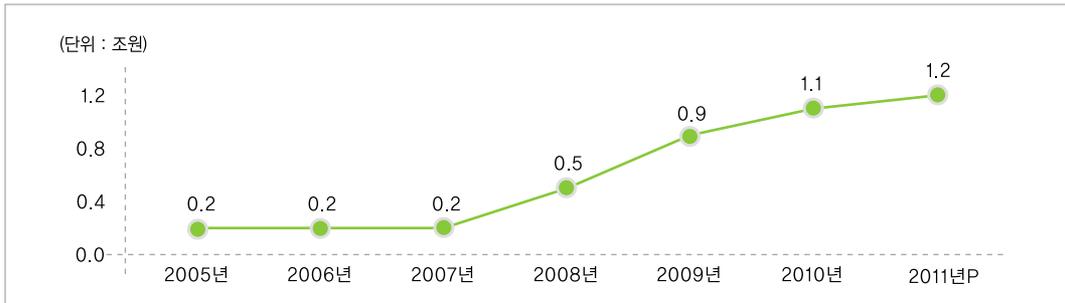
방송통신기기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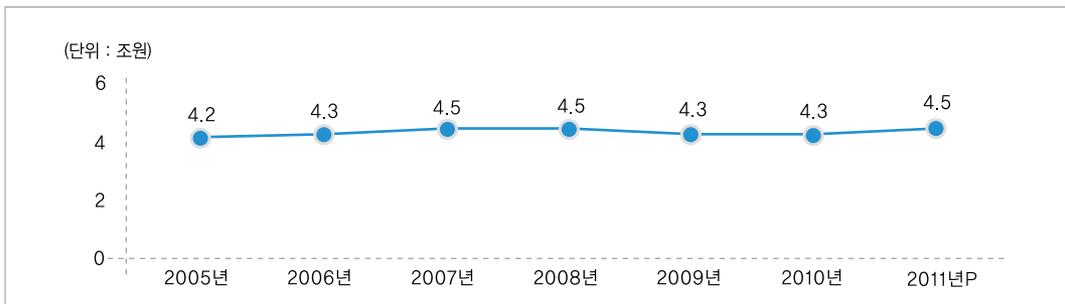
시내전화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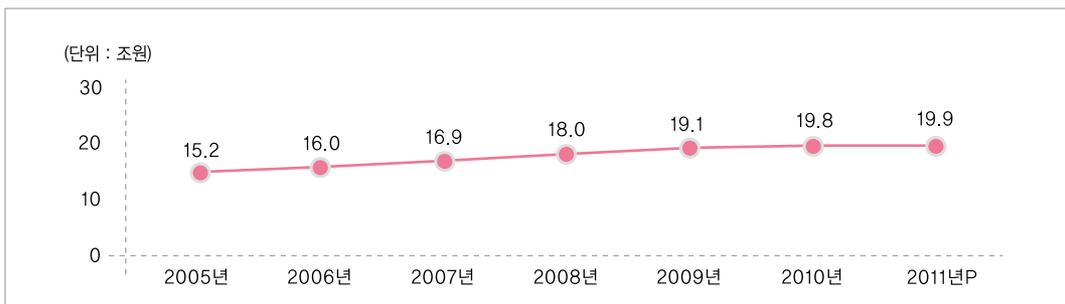
인터넷전화 매출 규모



초고속인터넷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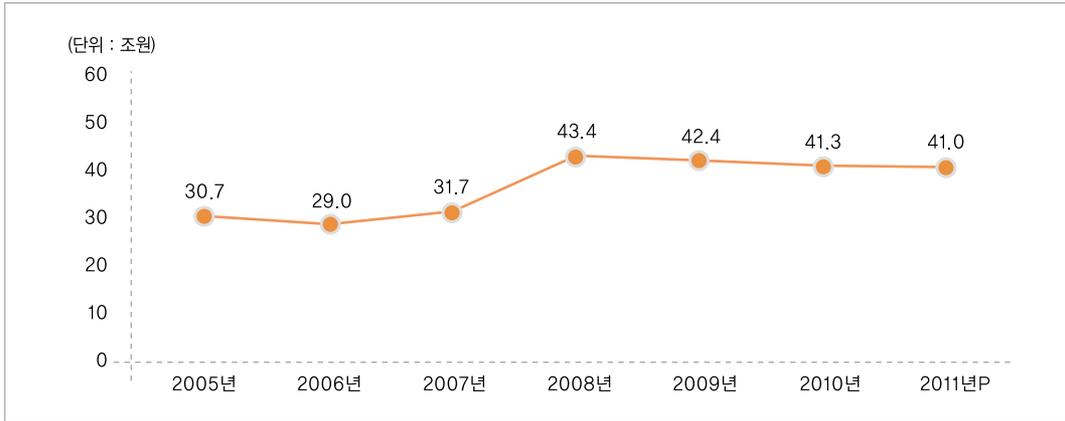


이동전화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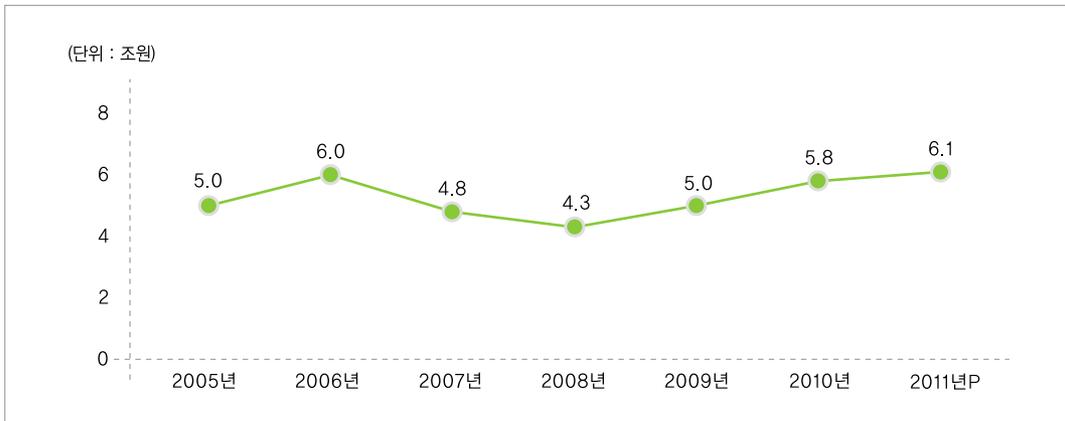


※ 무선망 접속료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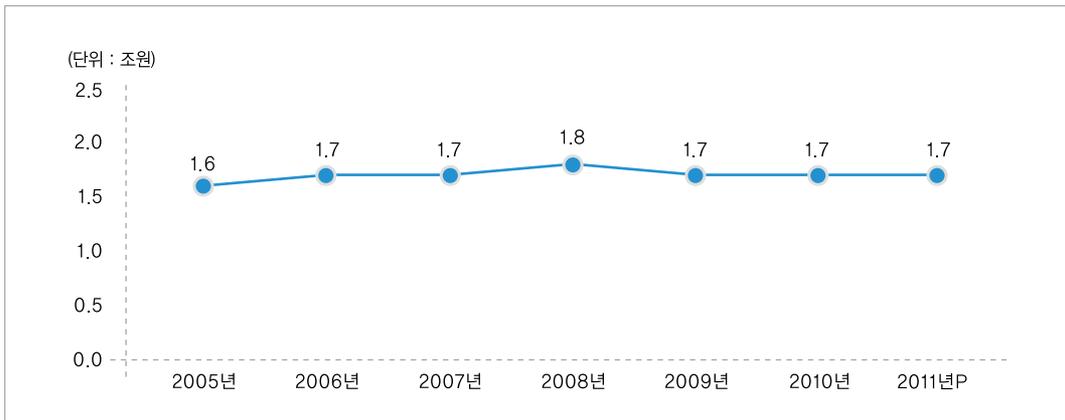
휴대단말기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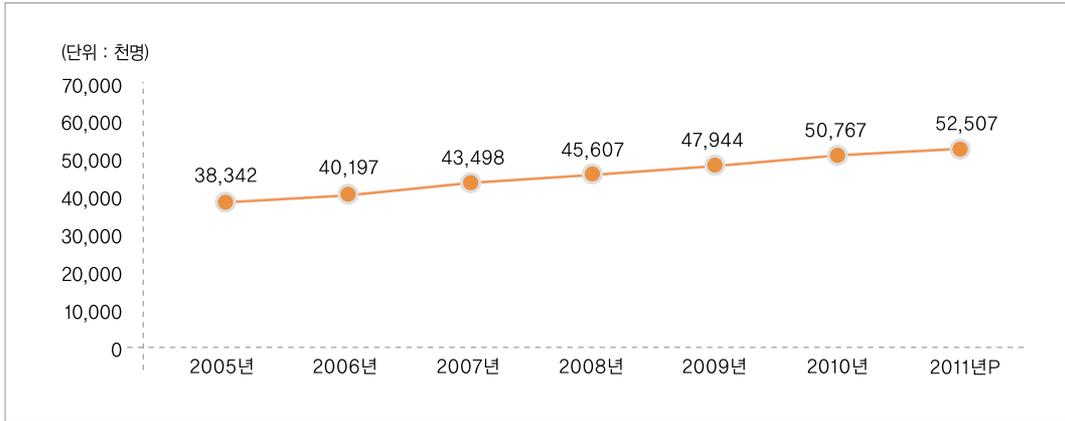
DTV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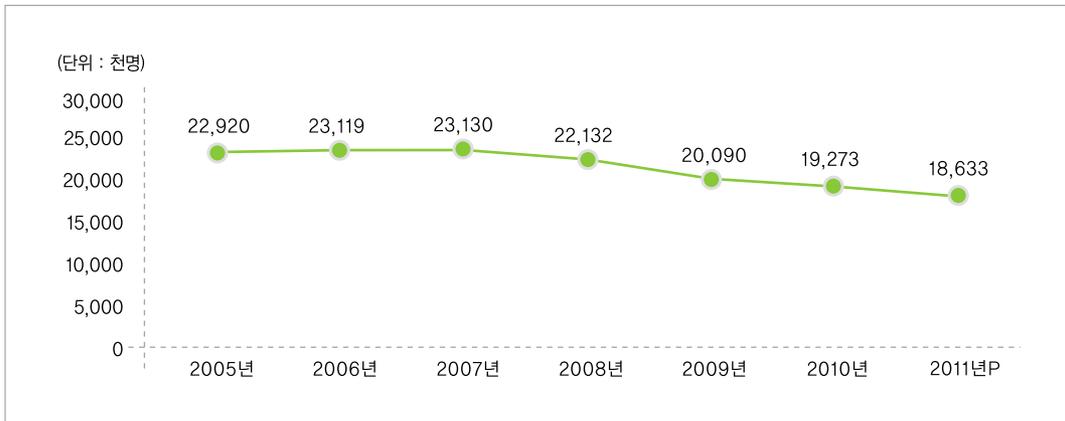
전체 셋톱박스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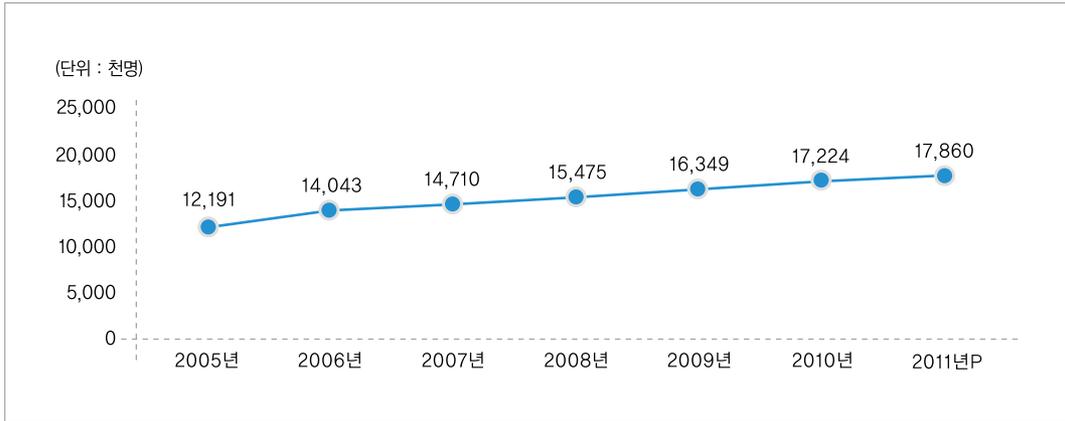
이동전화 가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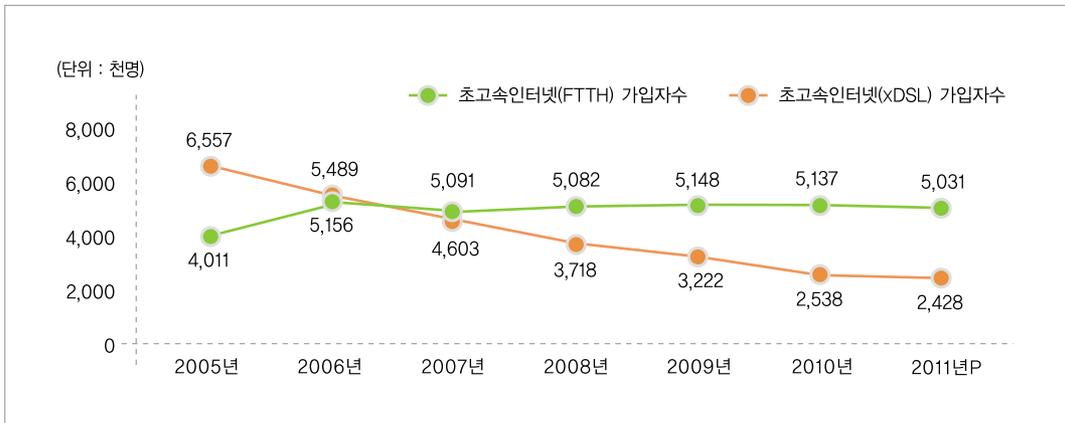
시내전화 가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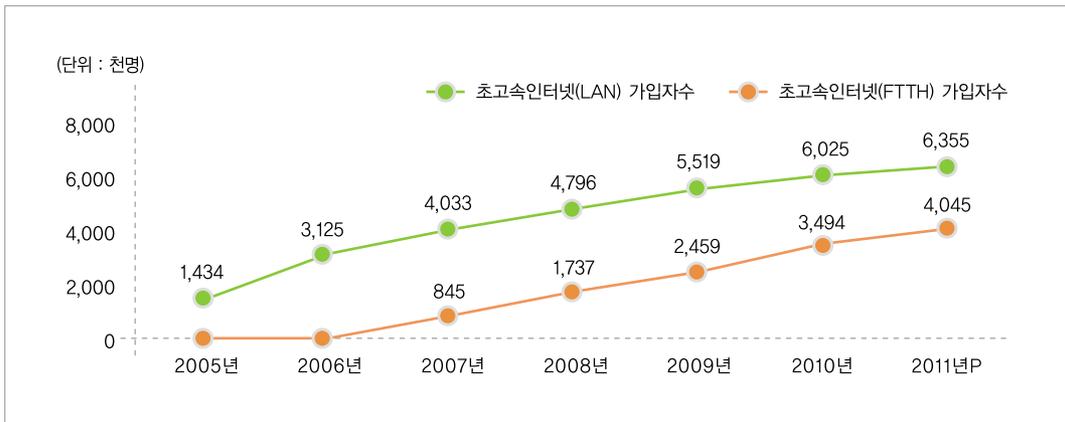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xDSL, HFC(케이블모뎀) 가입자수



아파트랜, FTTH(광케이블) 가입자수



2011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발행일 | 2012년 3월

발행처 |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지

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 webmaster@kcc.go.kr

Homepage : www.kcc.go.kr

비매품

